20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23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기 간	'23. 3. 27.(월) ~ 31.(금)
의 안	**'23년도 경찰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심의안건	**위 의안에 대한 심의**
심의결과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 (30)명 중 (30)명이 (찬성, 반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수정의결, 부결)함
이견사항	없음

대상인원	30명
의결인원	30 명
불참인원	· 명

의결인원 서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송건섭 (위원장)		신승근	
최여경		조은경	
조준억		이동근	
안상현		금현섭	
조순열		박미랑	
이승은		전현정	
임 현		장윤정	
이연주		조진형	
서찬동		김상옥	
이은영		김경희	
박성하		백승엽	
박형준		권태경	
정의석		차 장	
김수진		기획조정관	
장다혜		미래치안 정책국장	

※ 외부위원들이 개별 검토 후 서명한 것을 편의상 취합한 것임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3

2.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 6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경찰청 일반현황 ····· 1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6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 24

전략목표 Ⅱ ····· 147

전략목표 Ⅲ ····· 262

전략목표 Ⅳ ····· 365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442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445

3. 변화관리 계획 ····· 447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449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 451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주요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468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3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든든한 민생치안 확립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수호

□ 사회적 약자 중심의 치안정책 강화

○ **(현장 대응)** 여성 피해자가 다수인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보복 등 추가 피해 최소화에 주력**

- **(스토킹)** △스토킹 대응 경·검 협의회 구축(9.22.) △사건 전수조사(7,284건) 등
-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4,532건, 30.1%↑) △사법처리(구속 486건, 34.3%↑)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15만건)

– 첨단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장치 등 관련 인프라 지속 보급·확충**

- **(피해자 보호수단 고도화)**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 추가 도입(총 3,700대→10,000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경고하는 '지능형 CCTV' 도입
- **(신규 보호수단)** △장기 안전숙소(2.7억원) △민간경호 지원(7억원) 예산 신규 반영

○ **(보호체계 강화)** 사회적 약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현장조치 △법·제도 개선** 등 보호·대응체계 내실화

- **(현장조치)** 전년 대비 △아동학대 임시조치 16.9%↑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30.1%↑
- **(청소년보호)**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도입('21.9.24.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 **(실종자 등)** 자체 경보문자 송출시스템 구축, 제도시행 이래('21.6.9.~'22.10.30.) 1,770명에 대한 문자송출(총 1,740명 발견), 이중 497명(28.6%)은 문자를 통한 신고로 발견

□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 엄단

○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마약류 범죄' 근절을 경찰청장 국민체감 약속**으로 선정하는 등 집중 대응

- **(악성사기* 특별단속)** 총 2,973명 규모의 전담팀 구성, 15,449명 검거(구속 1,013명)
  * ①전세 ②사이버 ③유사수신 ④보험 ⑤전기통신금융 ⑥투자 등 조직적사기 ⑦다액 피해 사기
  – 특히, 전세사기 분야는 국토부 등 공조강화로 검거인원 6.7배↑('21년 30명→'22년 200명)
- **(마약범죄 집중단속)** '21년 10,626명 → '22년 12,387명 검거(전년 대비 16.6%↑)

○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범행수단 차단 등 선제적 대응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총책 검거** 등을 통해 **범죄피해 규모 대폭 감소**

- 전년 대비 △발생 29.1%↓(26,509→18,783건) △피해액 28.3%↓(6,614→4,743억) △총책 등 검거 23.9%↑(602명)
-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5.29.)」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정부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를 위한 총리 훈령 제정(8.30.) 등 법·제도 개선

2 준법질서 확립으로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

○ (사회질서)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정·부패 △건설현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산업기술유출 등에 엄정 대응, **준법질서 확립**

- △다중 위력 등 불법 행위자 311명 검거(최근 3년 평균 대비 15%↑) △4대부패 2,940명 검거
- △2차전지 기술 △반도체 공정 유출 등 산업기술유출 사범 총 199명 검거(전년 대비 123%↑)

– 국민들의 일상이 된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보를 위해 조직 체계를 지속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치안활동** 전개

- **(범죄수사)** △사기 검거 14.9%↑('21년 24,419 → '22년 28,063명) △사이버금융 검거, 30.5%↑('21년 4,290→'22년 5,612명) △사이테러범죄 검거 10.7%↑('21년 619 → '22년 685명)
- **(피해자보호)** 불법촬영물·피싱사이트 등 26,220건 삭제·차단 요청(전년 대비 300%↑)

○ (교통질서)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 **(사망자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 6.1%↓(2,916→2,737명) △보행 사망자 8.3%↓(1,018→933명)
- **(안전속도 5030 개선)** 56개 구간(총 130.6km) 속도 상향(50→60km/h) 완료
- **(제도개선)**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추진 △'22년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등

○ (안보태세 확립) 긴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테러 등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첨단장비 보급 등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

- **(대응)** △안보사범 검거 전년 대비 40%↑(1,181명) △테러의심 인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실시
- **(역량강화)** △전파차단기·드론탐지기·폭발물처리로봇 등 신형장비 27종(137억원) 지급 △'22. 4~11월, 군 교육기관 화생방·레이더·TOD 3개 과정에 148명 위탁교육

3 체계적인 제도 · 시스템 정비로 신뢰받는 경찰행정 구현

□ 경찰역량 제고를 통한 치안정책의 균질성 확보 추진

○ (현장대응력 제고) △위탁교육 확대 △실제상황 기반 교육·훈련 △실효적인 신규 장비 개발·도입 등 경찰 교육·훈련 체계 개편 추진

- **(교육)** △경찰청 자체 위탁교육 예산 46억 증액(교육인원 590명 증가) △신임교육 時 실전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94h→207h, 120%↑) 및 체포술·사격·운전 훈련 강화(137h→201h, 47%↑)
- **(장비)** △'23년 방검조끼 구매예산 124.3억원 반영 △저위험 권총 현장실증 추진

– 직무전문성 중심의 중간관리자 보직인사 체계 마련, **남녀 통합 채용에 따라 체력검사 제도 개편** 등 경찰 전문성 강화

• **(인사)** 16개 계·팀장 대상 보직인증과정 설계, 先 직무교육 後 보직인사 체계 마련('23년 시행)
• **(채용)** '23년부터 일부 분야(경대·경위공채·경찰행정학과 경채) 시행 후 '26년 전면 시행 예정

○ **(책임수사 역량 강화)** 일선 **수사관에 대한 △인프라·포상 확대 △직무 중심의 인사·교육** 등을 실시, 원활한 현장 수사활동 뒷받침

• **(인프라)** △인력증원·재배치를 통해 696명 증원 △사업비 3,377억원 확보(전년 대비 11.8%↑)
• **(인센티브)** 경제팀 수사관 △특진 T/O 확대(5→30명)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시행
• **(인사·교육)** △수사관 자격관리제 정착 △수사경과 인사원칙 확립 △전입 수사관 압축 교육 등

□ 현장 경찰관 처우개선을 통한 경찰제복의 자긍심 제고

○ **(처우개선)** △**열악한 보수·복지 개선** △**고질적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현장경찰관이 책임성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처우)** △공안직 수준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경감 근속승진 횟수 확대(1회→2회)
• **(복지)** △특수건강검진 단가 50%↑ △수련원 신축·리모델링 예산 확보(강릉·신안·남해)
• **(애로 해소)** △시도청 內 정신질환자 현장지원팀 설치 △경찰-전문요원 합동대응팀 시범 실시 등

○ **(법집행 지원)** △경직법 上 형사책임 감면규정* △적극행정 면책 △법률지원 활성화 등 현장의 **적극적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신설, '22. 2.3. 시행

4 보완 필요사항

○ △신당역 살인사건 △이태원 참사 등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 시스템과 조직역량을 혁신**해야 할 과제에 직면

○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당당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준법질서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야 할 시점

○ **미래치안 추진기반이 갖춰진 상황**에서, **'미래비전 전략과제'**가 조속히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제 **이행력 확보가 긴요한 상황**

2. 2023년 정책 추진방향

비 전



전략목표

<든든한 민생치안 확보>

①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한 사회 안전망 내실화
② 사회적 치안약자 보호
③ 민생침해 범죄 엄정 대응
④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준법질서 확립>

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② 고질적 부패 · 비리 근절
③ 선진 교통질서 확립
④ 대테러 방첩 · 안보 역량 강화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

①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구현
② 첨단과학기술 기반 수사역량 강화
③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진취적 조직문화 혁신 >

① 현장 중심 정책 개발 · 지원
② 기본과 원칙 중심 조직문화 혁신
③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핵심가치

긍지 | 명예 **책임** 소통 |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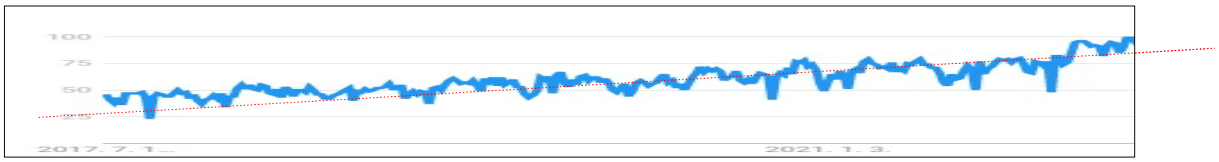
Ⅰ 비 전

□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탁월한 문제해결력과 제복인으로서의 높은 자긍심을 갖추고 국민의 생명 · 기본권을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일 잘하는 경찰상(像)'

○ (중요성) 대규모 재해재난·감염병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 상승***

* 최근 5년 간 '안전' 키워드 검색량(구글트렌드)



– 치안 측면에서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경찰의 유약한 모습**이 비춰진 사건으로 비난 가중

※ '서울, 주취자 귀가 확인 미비 사망사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

– ▵수사권 조정 ▵책임감면 규정 신설 등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개선된 만큼, **실질적인 결과·성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시점

○ (실력 있는 경찰) 경찰 중심의 시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국민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경찰에게 요구하는 치안활동을 전개

– 이는 신고된 사건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역량을 갖춰야 함을 의미

○ (당당한 경찰) **자신감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추고 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떳떳한 '경찰상'**을 의미

– '**당당함**'을 만드는 내적 기반은 ▵제복인으로서 **자부심** ▵한 분야에서 장시간의 숙련 과정을 거쳐 습득되는 **전문성**이 있으며,

– 외적으로는 ▵조직이 구성원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믿음·확신** ▵**일터에서의 보람과 의미**가 업무 주체성과 몰입을 향상

□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사회 총체적 안전을 넘어 개인적 안전인식인 '안심'을 향상하는
동시에, 사회자본으로서 '신뢰'를 높임으로써 공동체 통합 달성

○ (공동체 약화)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사회갈등 심화 현상이** 개인 일탈을 감시·완화해줄 **공동체 유대·안전망 축소**로 이어짐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사회통합 실태 진단(2021)」 >

✓ △**사회 전반 갈등**(79.95%) △**세대 갈등** (52.79%) △**성별 갈등** (44.83%)이 '심각' 하다고 응답

✓ 20·30대 청년층 中 **아플 때 도움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17년 12.3% → '21년 18.7%로 **6.4%p 상승**, **공동체 유대 약화 우려 현실화**

– '**통합**'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다양한 결속의 기반이 갖춰진 상태를 **'공동체'로 개념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찰활동이 중요

* "새정부 가장 중요한 업무" 국민인식조사 : 국민통합이 41.4%로 1위('22.3월, 서울경제 조사)

○ (안심공동체) **우리 사회의 객관적·통계적 안전수준**은 지속 개선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체감안전·경찰에 대한 신뢰** 향상 속도는 미미

※ 미디어 발달 등 초연결사회 등장으로 범죄·위험 확산력 증대 및 불안 증폭

– 경찰활동의 노력과 **'주민안심'의 차이**를 극복,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전의식 향상**에 집중하는 전략적 치안활동 전개

※ 안전에 대한 인식은 사회활동을 증진하고 공동체 응집성을 제고

○ (신뢰공동체)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간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 **공동체 결속** 뿐 아니라 **경제·국가경쟁력에 영향**

– 사기 등 **민생침해사범** 척결 뿐 아니라, 사회 **불신·냉소**를 조장하는 △**불공정·부조리** △**무질서·탈법** △**사회 갈등요인**에 체계적 접근 필요

– 대외적으로 **엄정한 법집행**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인권·청렴·친절의 경찰상**을 확립하여 **법질서에 대한 신뢰 향상**

II 목표와 전략

1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 공동체 협업을 바탕으로 **예방치안 패러다임**을 고도화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치안의 공동생산자'**라는 인식 아래 **융합치안 구현**

○ **치안 약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 피해가 큰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

2 공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준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 **'준법이 곧 이득'**이라는 생각을 확산함으로써, 시대정신인 **공정·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 통합·사회 발전** 뒷받침

○ 법과 원칙에 따라 **균형감 있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갈등 관리의 합리성**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

3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기존의 법·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발굴하여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결방안 모색**

○ **과학기술을 활용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첨단기술을 활용한 각종 신종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대응 시스템을 구축

4 진취적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

○ **업무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경찰관 개개인의 **명예심·자긍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문화 정착

○ 조직 내 묵인되고 있는 부적절한 업무행태를 발굴·개선하고 △**복지증진** △**처우개선** 등을 통해 **사기증진 및 영예심 제고**

Ⅲ 핵심 가치

1 중심 가치 : 책임

○ (개념) 경찰은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로부터 파생하는 '**책임**'은 **경찰의 소명**이자 중심가치

– 즉, '책임'은 경찰관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요청과 요구**에 부응하여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상태

○ (수단가치)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명예'·'긍지'**를 높이고, **관계적 차원의 '소통'·'융합'**을 체질화해야 함



2 개인적 차원 : 명예와 긍지

○ (명예) 제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가치 있게 여기며 국민들이 경찰에게 기대하는 **참된 도리를 다하는 것**

○ (긍지)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에서 나오는 당당**함으로서, 긍지가 높은 사람은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는 특성을 가짐

3 관계적 차원 : 소통과 융합

○ (소통) '막힌 것을 뚫는다'는 의미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경청과 공감, 상호존중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를 좁혀가는 과정

※ 소통은 오해·편견을 해소함으로써 협력을 끌어내고 상호 신뢰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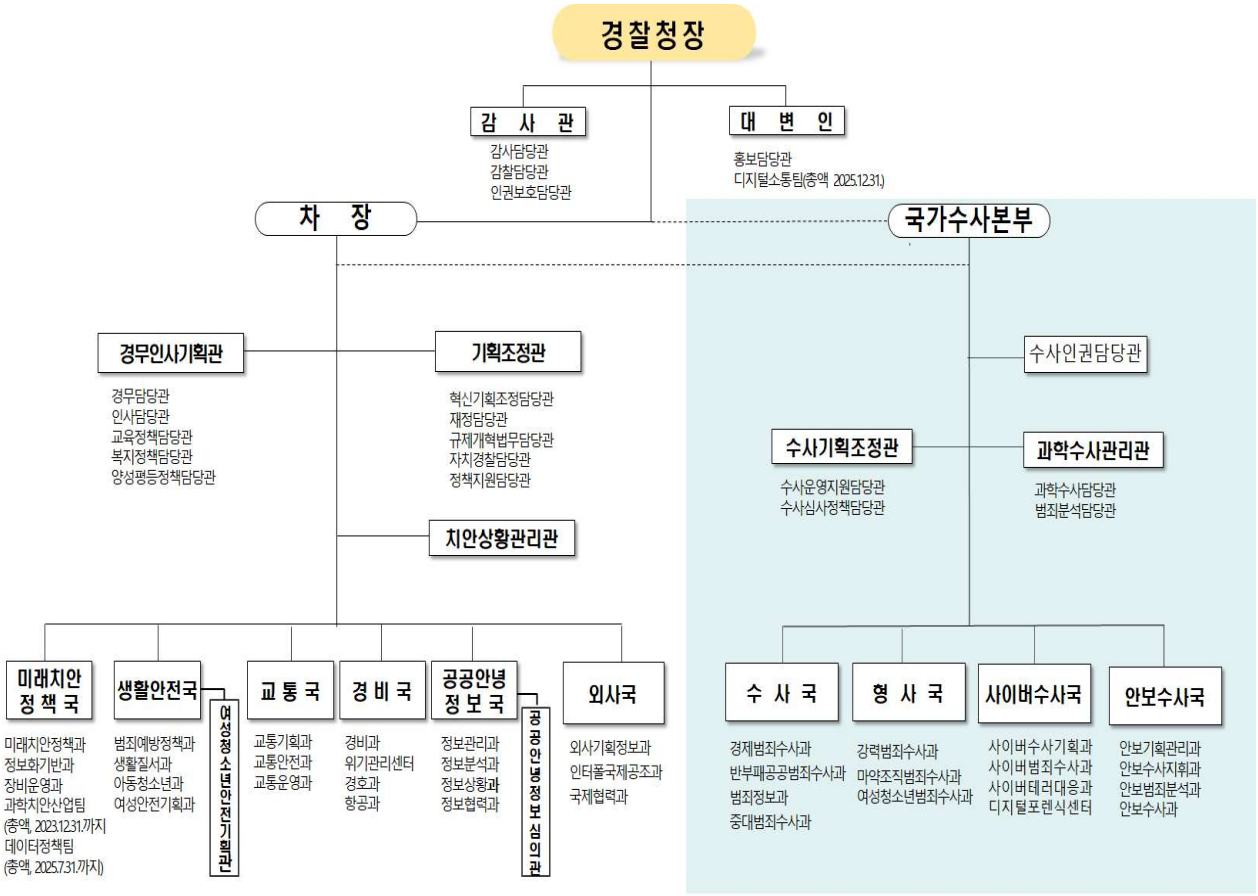
○ (융합) 단순한 협력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융합**'은 두 개 이상이 하나가 되어 '**1+1' 이상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거두는 것

※ 대내적으로 기능 칸막이를 제거하고, 대외적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치안총량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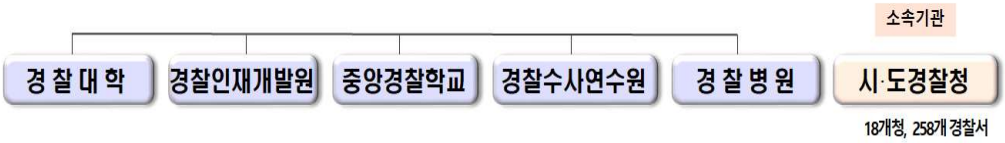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경찰청 일반현황

(1) 조직 ('23.2월 말 기준)



※ .....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불가능하지만, △정책결정 △소속공무원 지휘·감독이 가능한 특수한 관계를 의미



– 본청 1차장 1본부 10국 9관 36과 19담당관 3팀 –

구분	계	대변인	감사	미래치안(정보화장비)	경무(기획)	치안상황	생안	여청	교통	경비	정보	외사	과수	수사	형사	사이버	안보
계	2,040	34	93	159	512	49	31	47	68	81	153	90	220	166	51	150	136
경찰	1,213	21	69	71	166	43	26	35	54	67	128	74	32	131	43	126	127
일반	713	7	14	77	308	5	4	11	14	11	25	12	165	22	8	21	9
임기	114	6	10	11	38	1	1	1	-	3	-	4	23	13	-	3	-

(2) 인원(정원 '23.2월말 / 현원 '23.2월말)

○ 인력구성

구분	총 원	경찰관	의 경	일반직	임기제	교육직
정원	140,755 (100%)	131,004 (93.1%)	2,956 (2.1%)	5,712	1,061	22
				6,795(4.8%)		
현원	139,008 (100%)	132,007 (95%)	1,038 (0.7%)	5,296	645	22
				5,963(4.3%)		

○ 계급별

구분	총계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정원 (직제상 정원)	131,004	1	7	30	80	638	3,064	10,731	15,285	26,739	33,213	41,216
	100%	0.6%(756)					2.3%	8.2%	11.7%	20.4%	25.4%	31.5%
운용* 정원	134,136	1	8	32	93	709	3,149	11,018	15,903	27,715	34,147	41,361
	100%	0.6% (843)					2.3%	8.2%	11.9%	20.7%	25.5%	30.8%
현원	132,280	1	7	32	93	665	3,127	24,248	41,257	21,678	23,997	17,175
	100%	0.6% (798)					2.4%	18.3%	31.2%	16.4%	18.1%	13.0%

○ 관서별

구 분	총 계	경찰청	부속기관	시·도 경 찰 청		
				시·도청	경찰서	지역경찰
정원	131,004 (100%)	1,213 (0.9%)	534 (0.4%)	29,688 (22.7%)	48,928 (37.3%)	50,641 (38.7%)
					99,569(76%)	
현원	132,280 (100%)	1,315 (1.0%)	609 (0.5%)	28,485 (21.5%)	52,798 (39.9%)	49,073 (37.1%)
					101,871(77.0%)	

○ 기능별

구분	총계	대변인	감사	미래치안	경무	치안상황	경비	정보	외사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지역관서	부속기관
										과수	수사	형사	사이버	안보	생안	여청	교통		
정원	131,004	171	1970	880	2807	4601	17863	2984	1102	1371	10613	16797	2508	2273	3515	3362	7012	50641	534
현원	132,595	197	1,762	958	4,529	4,872	16,193	3,016	1,121	1,360	13,146	15,233	2,196	1,969	3,656	4,200	8,190	49,073	609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3	'24	'25	'26	'27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124,548	139,784	147,031	155,448	162,796
(전년대비증가율, %)		12.2	5.2	5.7	4.7
○ 총계	124,894	140,236	147,600	156,077	163,474
(전년대비증가율, %)		12.3	5.3	5.7	4.7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96,160	102,891	110,093	117,800	126,046
(전년대비증가율, %)		7.0	7.0	7.0	7.0
○ 기본경비	3,826	3,941	4,059	4,181	4,306
(전년대비증가율, %)		3.0	3.0	3.0	3.0
○ 주요사업비	24,562	32,952	32,879	33,467	32,444
(전년대비증가율, %)		34.2	△0.2	1.8	△3.1
□ 예산					
○ (총)지출	124,548	139,784	147,031	155,448	162,796
(전년대비증가율, %)		12.2	5.2	5.7	4.7
○ 총계	124,894	140,236	147,600	156,077	163,474
(전년대비증가율, %)		12.3	5.3	5.7	4.7
【일반회계】					
· (총)지출	123,713	138,887	146,100	154,453	161,748
(전년대비증가율, %)		12.3	5.2	5.7	4.7
· 총계	124,031	139,292	146,620	155,032	162,374
(전년대비증가율, %)		12.3	5.3	5.7	4.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총)지출	787	847	879	941	992
(전년대비증가율, %)		7.6	3.8	7.0	5.5
· 총계	833	894	928	991	1,044
(전년대비증가율, %)		7.3	3.8	6.8	5.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48	50	52	54	56
(전년대비증가율, %)		4.0	4.0	4.0	4.0
· 총계	48	50	52	54	56
(전년대비증가율, %)		4.0	4.0	4.0	4.0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전략계획과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과제 선정

○ 「성과관리 전략계획('22~'26년,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120대 국정과제 ▵국정철학(사회적 가치 등)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주요업무 계획 등을 고려**한 과제 발굴

○ 경찰의 기본 사명인 '**국민안전 확보**'에 **충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심 설계**

□ 현장의 노력이 경찰 전체의 성과로 귀결되는 평가체계 구성

○ 연초 **자체평가위원회의 컨설팅**을 거쳐 시행계획 관리과제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치안종합성과평가의 성과지표를 상호 연계

○ 부분적·단편적 성과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업무 전반에서 국정기조와 관서·부서·개인의 성과가 연계**된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및 환류체계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와 성과관리 지원팀* 주관으로 과제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 부진과제 독려 등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관리

* ▵평가지원 총괄팀(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분과별 지원팀(성과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 각 정책과제를 항목별(▵계획수립 적절성 ▵정책추진 노력도 ▵목표달성도·정책효과성 ▵정책홍보) 평가매뉴얼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중심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결과 활용도 제고***

* △성과상여금·성과연봉에 반영 △심사승진·각종 선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 등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비전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Ⅰ	Ⅱ	Ⅲ	Ⅳ
전략목표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공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준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진취적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
성과목표	1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1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확산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1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을 구현한다.	1 현장 중심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고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2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수사기법을 기반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2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높인다.
	3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한다.	3 국민 중심 교통정책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3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3 처우개선·사기진작으로 현장의 활력을 높인다.
	4 당당한 법집행을 지원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4 대테러·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14	16	52	149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성과목표 1.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1 플랫폼 치안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 주변 불안·불법요인 해소	범죄예방정책	국정 63-2 업무 Ⅰ-다
	2 범죄·재난 대비 예방적 정보활동으로 국민안전에 기여	정보분석	업무 Ⅲ-라
	3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	치안상황관리	업무 Ⅲ-가 업무 Ⅳ-가, 추진-다
	4 외사치안활동 고도화를 통해 사회안전 확보	외사기획정보	업무 Ⅰ-나, Ⅱ-라 Ⅲ-라, Ⅳ-라
	5 자치경찰제 내실화	자치경찰	국정 111-5 업무 Ⅰ-다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 한다			
	6 **[핵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고도화	여성안전기획	국정 69-2 업무 Ⅰ-나
	7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업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아동청소년	국정 69-2 업무 Ⅰ-나
	8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여청수사	국정 96-2 업무 Ⅰ-나
	9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확립	수사인권	국정 64-1·2·5 업무 Ⅰ-나, Ⅱ-마, Ⅳ-마
성과목표 3.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10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 수사 활동 강화	경제범죄수사	국정 63-2, 업무 Ⅰ-가, 나
	11 강절도·폭력 등 악성범죄 총력 대응	강력범죄수사	국정 63-2·3, 64-2, 69-1 업무 Ⅰ-가, Ⅱ-다
	12 마약·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조직범죄수사	국정 63-2 업무 Ⅰ-가
	13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	사이버범죄수사	국정 58-1, 63-5, 64-3 업무 Ⅰ-가, 나 Ⅱ-나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4. 당당한 법집행을 지원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14 맞춤형 장비 개발·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장비운영	업무 Ⅰ-라, Ⅳ-가 추진 -다
	15 입법대응 및 현장 법률지원 강화, 국민안전 보호 기반 확충	규제개혁법무	업무 Ⅰ-라, Ⅲ-라
	16 치안현장 항공 지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항공	업무 Ⅳ-가
전략목표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준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성과목표 1.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확산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17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경비	국정 69-4 업무 Ⅱ-가
	18 인권·준법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관리	국정 69-4 업무 Ⅱ-가, Ⅲ-라, Ⅳ-가
	19 상황정보 역량 강화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정보상황	국정 69-4 업무 Ⅱ-가
성과목표 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고 책임수사역량을 강화한다.			
	20 **[핵심]**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반부패 공공범죄수사	국정 69-4 업무 Ⅱ-나
	21 경찰수사의 공정성·책임성·완결성 제고	수사심사정책	국정 04-3 업무 Ⅱ-마
	22 경찰 수사 전문역량 제고	수사기획	국정 04-3 업무 Ⅱ-마
성과목표 3. 국민 중심 교통정책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23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	교통기획	국정 69-1 업무 Ⅱ-다
	24 국민 중심의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운영	국정 69-1 업무 Ⅰ-나, Ⅱ-다 Ⅳ-가, 다
	25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교통안전	국정 69-1 업무 Ⅱ-다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4. 대테러·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26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등 안보역량 강화	안보기획관리	업무 Ⅱ-라
	27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안보수사지휘	국정 101-1 업무 Ⅱ-나
	28 국내외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분석역량 제고	안보범죄분석	업무 Ⅱ-라
	29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강화	대테러위기관리	업무 Ⅱ-라
	30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완벽한 경호행사로 국가안전 확보	경호	업무 Ⅱ-라
전략목표Ⅲ.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성과목표 1.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을 구현한다			
	31 **[핵심]**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조성	미래치안정책	국정 69-3 업무 Ⅳ-가, 다
	32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과학치안 핵심 인프라 확충 토대 마련	과학치안산업	국정 69-3 업무 Ⅳ-가, 다
	33 미래치안을 위한 경찰 정보화 기반 고도화	정보화기반	업무 Ⅳ-다, 추진-나
	34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기반 조성	데이터정책	업무 Ⅳ-가
성과목표 2.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수사기법 기반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35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과학수사	국정 69-3 업무 Ⅱ-마, Ⅲ-다, 업무 Ⅳ-가, 나
	36 책임수사 지원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범죄분석	업무 Ⅱ-마, Ⅲ-다 Ⅳ-나
	37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업무 Ⅳ-나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3.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38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	업무 Ⅳ-라
	39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인터폴국제공조	국정 100-1 업무 Ⅰ-가·나, Ⅳ-라
	40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수사기획	국정 101-5 업무 Ⅳ-나
	41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사이버테러대응	국정 101-1·3·5 업무 Ⅱ-라, Ⅲ-가, Ⅳ-라
전략목표Ⅳ. 진취적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42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혁신기획조정	업무 Ⅳ-다
	43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	업무 추진-가, 다
	44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정책	업무 추진-가
성과목표 2.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높인다.			
	45 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 활동으로 건강한 경찰 의식·문화 확립	감사	업무 추진-나
	46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예방·진단 중심 감찰활동 전개	감찰	업무 추진-나
	47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양성평등정책	업무 추진-나
	48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 구현	인권보호	업무 추진-나
성과목표 3. 처우 개선·사기 진작으로 현장의 활력을 높인다.			
	49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복지정책	국정 14-3 업무 추진-다
	50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지원으로 현장활력 제고	경무	업무 추진-나
	51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	업무 추진-가
	52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신뢰·지지기반 마련	홍보	업무 추진-다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기 본 방 향

◇ 경찰의 기본 사명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예방'에 중점을 둔 경찰활동을 바탕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 내실화, 범죄 피해 최소화

◇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 악성사기·폭력·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대응, 평온한 일상 보호

○ 관련 제도·장비 개선을 통해 현장경찰관의 당당한 법집행을 지원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6	46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5대 범죄 검거율
성과목표 1.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전반적 안전도
	① 플랫폼 치안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 주변 불안·불법요인 해소	플랫폼 치안활동 지수 / 생활질서 단속 지수 /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수
	② 범죄·재난 대비 예방적 정보활동으로 국민안전에 기여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 우수사례 질적 향상 /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 재난 안전정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 정보분석 활동 준법 제고 노력도
	③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112신고 현장업무처리 만족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외사치안활동 고도화를 통해 사회안전 확보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외사정보 활용도 /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5 자치경찰제 내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도 / 자치경찰제 관련 관계기관 협의 활성화 / 자치경찰제 소통·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범죄안전도**
	6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고도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 / 가정폭력 사건대응 지수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율
	7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업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8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원 / 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신청율 /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신청율
	9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확립	수사상 인권보호 제도 개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
성과목표 3.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한다.		**수사·형사 치안고객만족도**
	10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 수사활동 강화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 인원 /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감소 /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건수
	11 강절도·폭력 등 악성범죄 총력 대응	살인·강도·절도·폭력 통합 검거율 / 강·절도 피해품 회수율 /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인피 뺑소니) 검거율
	12 마약·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 조폭 검거성과 / 국제범죄 사범 검거성과
	13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	1인당 사이버범죄 검거지수 /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
성과목표 4. 당당한 법집행을 지원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치안고객만족도**
	14 맞춤형 장비 개발·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장비 성능개선 및 신규도입 / 경찰장비 현장만족도
	15 경찰 법집행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법률지원 확대	입법대응 노력도 / 규제혁신과제 달성도 / 통합법률 및 소송지원 달성도 / 현장법률365센터 대응 노력도
	16 치안현장 항공 지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 예방정비 활동

전략목표 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1) 주요 내용

○ **<예방적 경찰활동>** AI·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분석시스템'에 악성사기·스토킹 등 주요 범죄데이터 접목, **맞춤형 예방치안 전개**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조치 강화,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 **<민생침해범죄 엄단>** △악성 사기 △마약·조직폭력 △사이버 범죄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 집중 단속**

○ **<현장 대응력 강화>** △**법적·제도적 지원** △**경찰장비 개선·보급**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당당한 법집행 활동 지원

⇨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맞춘 전략적 예방·대응으로 국민안전 확보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5대 범죄 검거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5대 범죄 검거율	78.1	78.1	76.8	77.3	76.6	80.0	검거율은 '18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21년 이후 경찰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등 수사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최근 5년 최고치(78.1)보다 1.9%p 상승한 80.0%를 '27년 목표치로 설정	5대범죄* 검거건수 ÷발생건수×100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KICS* 통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을 거치면서 대면 접촉에 토대를 둔 **공동체 의식·사회안전망 약화**,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폭

– 범죄·사건 징후를 사전 포착·제거하는 기존 **예방치안 패러다임**을 **계승·발전**, **피해확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업무 프로세스 정립

– **지역공동체 치안을 기반**으로 범인 검거·환경개선 등 **모든 분야의 안전 확보를 추진**하고, **유관부처와의 협업 등 공동 대응역량 강화**

○ 경제불황을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범죄' 엄정 대응 필요**

– 서민·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주택·중고차 허위매물**과 같은 **민생경제 침해범죄 엄단**

○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며 치안수요 급증, **변화된 치안환경에 부응한 경찰 대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

–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경찰장비 개선**으로 **당당한 법집행 원칙 확립** 및 **현장 경찰관 및 국민 안전 보호**

(4) 참고자료

○ 경찰청, '2023 주요 업무계획'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도 시행계획(교육부)

○ 안전드림홈페이지(www.safe182.go.kr)

성과목표Ⅰ-1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생활주변 불법·불안요인 해소>** 범사회적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예방 치안활동 전개

※ △CPTED 활성화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 △범죄예방협의체 구축 △탄력순찰 고도화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주취자 대응 체계 구축 △풍속(유해업소 등) 단속 △총기안전 강화, **주민 불안요소 근절**

○ **<정보분석 내실화>** 재난·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만큼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의 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고, 특히 현장 정보관의 **민생정보 수집역량 강화**

– **(지역안전)** 중점 정보수집 분야 설정 공지를 정기 실시하고, 全 시도청에 **각종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단 위촉**

– **(민생정보)**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 △**채용비리** 등 **민생침해범죄 첩보 수집 활성화**

○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 112는 경찰과 국민을 연결하는 **치안활동의 출발점이자 핵심 업무**로서 **경찰신뢰 확보의 핵심 요소**

– 지난해 도출된 개선안을 중심으로 정책과제 수립, **'사후대응'에서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로 치안 패러다임 전환**

○ **<외사치안활동 고도화>** 급증하는 **다문화사회 위험요인** 및 **방첩·대테러 분야**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다문화 치안활동 내실화 △외국인 범죄·대테러·방첩 첩보 수집역량강화 △정보공유·국제협력 활성화로 사회안전 확보

○ **<자치경찰제 내실화>** 중앙–지방을 잇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발전 방안 논의**,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도모

– 특히,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시범 실시**(제주·세종·강원) 관련 △**모형 설계** △**특별법 개정** △**예산확보**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전반적 안전도
관리과제	플랫폼 치안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주변 불안·불법요인 해소	플랫폼 치안활동 지수 / 생활질서 단속 지수 /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수
	범죄·재난 대비 예방적 정보활동으로 국민안전에 기여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 우수사례 질적 향상 /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 재난 안전정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 정보분석 활동 준법 제고 노력도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112신고 현장업무처리 만족도
	외사치안활동 고도화를 통해 사회안전 확보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외사정보 활용도 /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자치경찰제 내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도 / 자치경찰제 관련 관계 기관 협의 활성화 / 자치경찰 소통·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전반적 안전도	79.7	79.3	80.4	82.0	'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다 '22년 80.4점으로 상승, '23년 목표치는 지속 상승을 독려하여 추세치 예측값(80.5점)보다 1.5점 더 높은 82.0점으로 설정	국민안전체감도 분야 중 '전반적 안전도' 분야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치안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반면, **안전에 대한 우려**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

※ '5년 전에 비하여 사회가 안전해졌다'는 응답이 2년 전 보다 6.5%p 감소 ('20년 38.8% → '22년 32.3%, 통계청 사회조사)

※ 범죄·감염병 외에도 △이태원 사고('22.10.) △대형 산불·폭우·폭설 등 반복되는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가 국민 불안 가중

– **플랫폼 전략*을 기반**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자원을 집결,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 다양화되는 고객의 요구를 단일 기관의 능력·서비스만으로 대응이 어려우므로, 기관 간 협업를 통해 힘·자원을 잘 조직하여 경쟁력 향상 및 상생하는 전략

– 자연적·사회적 재난의 위험요인 점검·분석을 강화하고, 체계적 교육·훈련을 통해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제고**

○ 자치경찰제에 대한 **외부 인식은 일정 부분 개선**된 반면, **국민 체감효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산견

▸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시민 응답이 60.3→73.9%로 전년 대비 13.6%p 상승 < '22. 12. 자치경찰제 대시민 인식조사(서울) >

▸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응시스템 신뢰도 및 안전성 관련 설문에 '안전함' 응답이 각각 11.9%, 16.1%, 14.4%, 12.2%에 불과('22.6, 부산)

– **자치경찰제 관계기관 범위 확대**, 기관 간 협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우수시책·성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신뢰 확보

(4) 참고자료

○ 경찰청, '2023년 주요업무 계획' '2023 치안전망', '경찰백서'

○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 112 신고·접수 매뉴얼 / 현장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 사이버경찰청 경찰 범죄통계(http://police.go.kr)

○ 법무부 출입국통계(www.moj.go.kr), 국정원(www.nis.go.kr)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www.pcad.go.kr)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플랫폼 치안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 주변 불안·불법요인 해소

□ 추진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활동이 증가하고, 안전 관련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도 보완 및 현장 대응체계 강화 필요**

※ **<통계청 조사>** 5년 전에 비해 사회가 안전해졌다('20년 38.8%→'22년 32.3%)

○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맞춰 **플랫폼 전략*** 등 **공동체 치안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죄안심 공동체** 조성

* 다양화되는 고객의 요구를 한 기관의 능력·서비스만으로 대응이 어려우므로, 기관 간 협업를 통해 힘·자원을 잘 조직하여 경쟁력 향상 및 상생하는 전략

목표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추진 전략	◇ **범죄예방 패러다임**을 일반예방에서 **특별예방**으로 전환 ◇ **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공동체 치안 기반 조성 ◇ IoT·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의 범죄예방활동** 도입 ◇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성과 지표	**공동체 범죄예방 지수** (지자체와 협업하여 수행한 CPTED 사업 건수)	**생활질서 단속 지수** (위반사범 단속 + 근원적 차단활동)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수** (위반사범 단속 + 사용·소지 등 허가자 행정처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공동체 치안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추진]

○ 범죄예방 패러다임을 '일반예방'에서 '특별예방'으로 전환

– ('핀셋형' 예방치안 활성화) 문제해결 순찰 등 **특별예방 전담조직 운영** 및 **지역맞춤형 순찰활동 활성화** 등 체계 재정비

※ △특진·승급 등 확대 △순찰매뉴얼 마련 △홍보자료 제작 등 동력 확보

▸**(전담조직)** 특별예방전담팀(5~6개서 시범운영) / 지역안전경찰(CSO) 등 전담조직 활용

▸**(주요활동)** 100M 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대상 지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 지역 등 피해자 보호 중심 순찰 강화 및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 장려

– **(주요범죄 대응 강화) '범죄예측·분석 시스템*(Pre-CAS)'에** 주요 범죄 데이터 접목, 맞춤형 예방전략 제공 등 대응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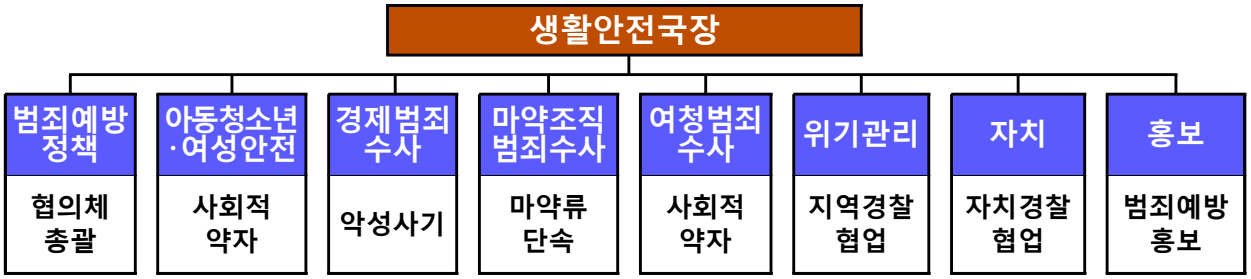
*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위험도를 예측(10단계)·분석해주는 시스템('21년~)

▸현장경찰이 前日 사건 및 위험도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DB(Daily Briefing)' 기능 탑재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 정보를 지도에 표기 등 '신변보호 순찰 기능' 고도화

○ **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등 추진기반을 내실화**

– **(통합 협의체 구축) 중요범죄에 대한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범죄예방 워킹그룹*' 운영**, 산재된 정책을 통합 논의

*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협의체장으로, 주요 범죄 대응과 관련된 기능 참여



– **(대국민 범죄예방교육 지원)** 최근 유행하는 **범죄수법·대처법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국민들의 **범죄예방 대응 역량 향상 도모**

※ '23년 소요예산 확보 후 '24년부터 단계별 추진

▸**(교육자료 제작)** 피싱·스토킹 등 **신종범죄 및 주요범죄**에 대한 수법 및 예방·대응요령 관련 표준 교육자료(영상·교재) 제작 및 시민 대상 교육을 위한 외부 강사료 지원
▸**(체험·관람관 운영)** 주요 범죄 대응 및 CPTED 적용시설·우수 방범제품 등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실습형 범죄예방 교실' 단계적 운영

○ **범죄예방진단팀 중심으로 범죄위험지역에 환경개선사업 추진**

– **(불안요소 개선)**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취약요인 진단→범죄취약·불안환경 개선'** 등 지역문제 선제적 해결 노력

▸CPO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위탁교육 대폭 확대, △**국내단기** : CPTED 심화 과정(5일, 예산 8천만원) △**국외단기** : CPTED 전문화 과정(2주, 예산 1,720만원) 추진

– **(환경개선 사업)** 지자체·시도자치위와 협업, 범죄위험지역에 CPTED사업을 확대하고, IoT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

▸**(협의체)** 경찰청-시도경찰청-시도자치위 간 협의체 구성, CPTED 정책·사업 논의
▸**(부처협업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팀(CPO) 컨설팅을 거친 경우 가점

– **(치안거버넌스)**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범죄예방대상을 매개로 **지자체 예산사업, 사회공헌사업 등 지역사회 적극 참여** 견인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고도화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

– **(준법조력자 지원)** 제정 「자율방범대법」 시행 대비('23.4.27.~), 하위법령 제정 및 **자율방범대 지원·보상 강화 방안*** 마련

* △활동시설·복장·차량 지원 △교육·훈련 △포상 확대 등

▸**(자율방범대 지원 시스템)** 자율방범대 지원, 관리, 정보공유·소통 기능을 갖춘 전산 시스템과 순찰 결과 통보 등 기능이 탑재된 대원용 '스마트폰 APP(앱)' 개발 추진

– **(민간경비 활성화)** 질서유지 등 분야에 민간경비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경비업법」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신설**

*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생활 주변 불안·불법요인 해소]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법·불안 요소 근절**

– **(정신질환자 대응)**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공동대응 인력·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주변 불안요인 해소

▸**(현장지원팀 정착)** 현장지원팀과 전문기관이 협업하는 합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 △인력 보강 △근무여건 개선* 등 안정적 제도 정착 도모

* △현장지원센터 구축 △전용차량 확보 △운영예산 지원 △생활질서 기능 역할 강화 등

▸**(업무협약 체결)** 복지부·소방청 등 협의체 구성, 정신응급 인프라 확충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복지부-경찰청간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 △경찰-전문요원 합동대응팀 구성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등

– **(유관기관 협업 단속)** 시·도청–유관부처(여가부, 지자체 등) 간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성매매 등 풍속 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신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유관부처(교육지원청·지자체) 합동, 매 학기 개학 전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키스방, 성인용품점 등) 지도·단속 기간 운영

▸**(온·오프라인 성매매 단속)** 온라인 성매매알선 사이트(오피스텔 업소) 및 신변종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기간 운영, 사이트 단속 후 방심위에 폐쇄요청(4~5月)

▸**(불법 게임장 단속)** 게임물관리위원회 합동, 불법 게임장, 환전, 개·변조 등 집중단속(6·10月)

* 합동단속 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간 MOU 체결 추

– **(총기 안전 강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과 합동,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체 민유총기 점검 실시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1차: 4~5월/2차: 8~9월) △민유총기 일제점검(6~7월)

○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 **(법령 개정)** 국민안전·범죄예방을 강화하고, 치안약자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대응체계 개선 중심으로 입법 대응**

▸**(생활질서 유지)** 리얼돌 체험방*, 키스방,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 출현 시 관계기관(법무부·여가부·산업부·식약처 등)과 협력,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1.6월 처벌 근거 마련 및 지속 점검·단속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성인 리얼돌 수입이 본격화되면 변종업소 발생 가능성 농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총포화약 안전)** 총포화약법 상 총포·화약류 취급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자 사전 배제

※ 총포 소지 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 전력자 추가, 제조 판매업 허가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의무 명시

– **(업무시스템 구축·정비)** 국민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주요 추진업무에 시스템 도입**, 미래지향적 치안체계 구축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납부시스템)** 기존 우편 고지서 납부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이력 조회 △즉결심판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23년)

▸**(총기 위치정보 시스템)** 총기 악용범죄 사전 방지 및 총기 도난·분실 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기(소지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22.12.~'23.2. 시스템 최종도입을 위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대상 현장 적용 추진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 오토콜 시스템*을 통해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 間 통화를 차단하고 신속한 이용정지로 성매매 예방 → 발신번호 확대(22년 고도화) 등 시스템 지속 개선

* 성매매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 동 번호로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

– **(현장지원 확대)** 법령·제도 개선 변화에 맞춰 현장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전담경찰관 대상 전문교육** 강화

▸**(풍속 담당)**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풍속 담당 경찰관 대상으로 △단속실무(게임장 및 성매매 단속) △범죄수익환수 교육 진행(5일 과정, 100명)

⇨ 기존 '풍속업무 역량향상 과정'(연6회/20명씩) 內 **'알선사이트 수사기법' 신설**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최신 단속기법 전수 교육**(상·하반기 연2회)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경찰청 셉테드 실무 길라잡이 제작·배포	2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3월	
	범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운영 계획	3월	
2/4분기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4월	
	성매매 사범 집중 단속	4~5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정책협의체 구성	5월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5월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	6월	
	불법 게임장 단속 강화를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6월	
3/4분기	경비업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7월	
	민유 총기 등 일제점검	7월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8~9월	
4/4분기	불법 게임장 및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	10~11월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및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경진대회 개최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범죄예방의 대상은 **全 국민**이며, 특히 여성·아동·노인 및 1인가구 거주자 등 **범죄 취약계층이 主 수혜** 대상

○ **(이해관계집단)** 이해관계 집단(단속 업무의 경우 풍속영업자)은 별도 없으나, 여가부·법무부 등 **다수 유관부처*** **및 지자체별 자율방범대 등 지역 공동체와 협업하여 업무 추진**

* 여가부·교육부·문체부·법무부(출입국사무소)·과기부, 지자체·세무서·소방 등 유관부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통신사 등

□ 기대효과

○ 주민접촉 및 문제해결적 순찰 등 **수요자 중심의 예방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치안문제** 해결 노력

○ **범죄예방진단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역 문제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치안거버넌스 기반의 예방정책** 활성화

○ 단속 위주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및 세무조사 의뢰 등 **근원적 차단활동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지자체·기업·사회단체·주민 등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능동적 치안참여**를 통해 보다 **촘촘한 지역안전망** 구축

○ 각종 치안활동에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현장경찰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범죄예방(Ⅰ-1-일반재정①)			
①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1131)		66	73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311)		66	7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플랫폼 치안 활동 지수(50%)	신규	신규	953	1,049	'22년까지 'CPTED사업 참여 노력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목표치를 93.3%(100.0%가 최고치)로 설정하고, 실적치가 93.9%에 달하는 등 더 이상 성과지표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셉테드 사업 총 건수 중 경찰 제안으로 추진된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및 지자체 공문 등 근거자료 첨부

			이에, CPTED사업 기준을 상향하여 새로운 지표 도입이 필요함 기존 성과지표는 경찰 제안으로 추진된 셉테드 사업 건수만을 실적치에 포함하였으나, ① 투입 예산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② 설치된 방범제품의 종류가 2가지 이상(조명, 비상벨, 안내판, 반사경, 로고젝터 등 5개 중) 포함된 사업만을 실적치에 포함하여 성과지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022년은 총 2,060건의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였고,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건수는 총 953건으로 확인되는 바, '23년 목표치는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22년 실적치의 10% 이상을 상향한 1,049건**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전년比 10%이상 목표치 설정 시 上 등급) ※ '21년 이전 수치는 산출 불가	셉테드 사업 건수 (① 투입 예산이 최소 500만원 이상 ② 설치된 방범제품의 종류가 2가지 이상)	
생활질서 단속 지수 (25%)	27.5 32.5 32.4	**31.0**	최근 3년간 실적은 '21년도에 상승하였다가 '22년도에 소폭 하락하는 바,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외'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평균치인 30.8점보다 0.2점 상향한 31.0점**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음(평균치 이상 목표치 설정 시 上 등급)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 + 근원적 차단활동) ÷ 생활질서기능 인원수 (상세내용 하단 참조)	KICS 통계(단속건수) 및 월간보고(인력)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수(25%)	신규 신규 70.4	**77.5**	총포·화약류 위반사범의 지속적 단속 및 인허가 후 정기적 점검을 통해 소지·사용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	총포화약 위반사범 단속 + 행정처분 (상세내용 하단 참조)	수기 취합 및 행정처분 결과보고 등 근거자료 첨부

			이에, 단속 및 행정처분을 내용으로 신규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22년 실적치(70.4점)의 10% 이상을 상향한 77.5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 '21년 이전 수치는 산출 불가		

*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 및 근원적 차단활동** 점수 산출 기준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th><th>근원적 차단활동</th></tr>
<tr><td>성매매</td><td>- 아동·청소년성보호법(§13, §14, §15)</td><td>건당 3점</td><td rowspan="8">① 구속(인원 당 20점)
② 성매매·게임장 건물주 입건(인원 당 10점)
※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만 인정
③ 압수
<table><tr><td>게임기</td><td>5~20↓</td><td>20대↑</td><td>50대↑</td><td>100대↑</td></tr><tr><td>현금</td><td>×</td><td>2~5백↓</td><td>5백만↑</td><td>천만원↑</td></tr><tr><td>점수</td><td>2</td><td>5</td><td>7</td><td>10</td></tr></table>④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결정 금액 기준)
<table><tr><td>신청후 기각</td><td>1천만원 미만</td><td>1~5천만원 미만</td><td>5천만원 이상</td></tr><tr><td>5점</td><td>10점</td><td>15점</td><td>20점</td></tr></table>⑤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풍속시스템)
<table><tr><td>3점</td><td>- 5,000만원 미만</td></tr><tr><td>5점</td><td>- 5,000만 원 이상 통보</td></tr><tr><td>10점</td><td>- 10억원 이상 통보</td></tr></table>⑥ 검거인원(동일 사건, 질서 기능 송치 인원에 한함)
<table><tr><td>인원</td><td>10명↑</td><td>20명↑</td><td>50명↑</td><td>100명↑</td></tr><tr><td>점수</td><td>3</td><td>10</td><td>15</td><td>20</td></tr></table></td></tr>
<tr><td>불법 게임장</td><td>- 사행행위규제법, 게임산업법</td><td>건당 3점</td></tr>
<tr><td rowspan="6">기타</td><td>- 식품위생법</td><td>건당 3점</td></tr>
<tr><td>- 성매매·유해업소 건물주통지문 발송</td><td>건당 0.2점</td></tr>
<tr><td>- 풍속영업규제법, 음악산업법</td><td>건당 1점</td></tr>
<tr><td>- 성매매광고 차단</td><td>건당 0.2점</td></tr>
<tr><td>- 성매매처벌법·아청법
동일 건 알선자만 5명 이상 기소
- 성매매처벌법 §20
사이트운영자 3명 이상 검거
- 성매매처벌법 §22 (범죄단체)</td><td rowspan="2">검거 건당 20점</td></tr>
<tr><td>- 대형업소 단속
(성매매 100평↑, 게임장 200대↑)</td></tr>
</table>

*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단속 지수(위반사범 단속 및 사용·허가자 등 행정처분)** 산출 기준

대분류	중분류	관련법률	배점(건)	산출식
형사 입건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입	제70~71조 위반	3점	(형사입건 +행정처분) / 총포화약 기능 인원수
	△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제72조 위반	3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무허가 소지	제70조 위반		
	△그 밖의 「총포화약법」 위반 행위	제70~73조 위반	1점	
	△사격장 외 사격 △허가 없이 사격장 설치·변경 △그 밖의 「사격장안전법」 위반 행위	제22~23조 위반 (사격장안전법)		
행정 처분	△제조·판매·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화약류 사용자 △사격장 설치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	허가 취소	3점	
		허가 효력정지	2점	
		경고	1점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플랫폼 치안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 불법·불안요인 근절	①플랫폼 치안 활동 지수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셉테드 사업 총 건수 중 경찰 제안으로 추진된 셉테드 사업 건수	1,049	정량	결과	
		②생활질서 단속 지수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 + 근원적 차단활동) ÷ 생활질서기능 인원수	31.0	정량	결과	
		③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수	총포화약 위반사범 단속 + 행정처분	77.5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플랫폼 치안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 불법·불안요인 근절	국정 63-2, 업무 Ⅰ-다

2 범죄·재난 대비 예방적 정보활동으로 국민안전에 기여

□ 추진배경

○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만큼,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대한 경찰의 '알람'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대전 아웃렛 화재('22.9.) ▵안성 물류창고 붕괴 및 이태원 사고('22.10.) 등을 겪으며 **국민의 재난·사고 예방에 대한 눈높이가 더욱 높아진 상황**

< 주요 중대재해 발생 사례 및 통계>
▸ '22.9.26. 대전 아웃렛 화재(사망 7명) ▸ '22.10.21.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망 3명)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망자(고용노동부) : ('21년) 248명 → ('22년) 256명

○ 이에 정보경찰이 '21년부터 추진해온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의 시행 3년차를 맞아 **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고 **현장 정보관들의 첩보 수집역량 등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생침해 범죄나 마약 등 음성적인 범죄의 대응**에 있어, 생활 곳곳에 잠재한 첩보의 **적극적인 수집 활동이 중요**시되는 만큼

– 정보경찰이 단편적인 수사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려운 국민안전·공공분야와 관련된 **유가치한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민생정보 수집의 내실화 노력 지속**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내실화]

○ **(지역안전 견문 분석을 통한 환류 강화)** 매월 시기별·계기별 특성을 감안, **중점 정보수집 분야를 설정해 공지**하는 한편

– 매주 전국 **'지역안전 견문'을 분석**하여 **특별히 취약한 안전 현장을 진단·공유**하도록 관리체계 정교화

※ ① 월간 착안사항 하달 → ② 현장 정보활동 → ③ 주간 현장실태 분석 → ④착안사항 再하달, 긴급 조치 필요 사안은 廳 관련 기능 및 他 부처 통보

○ **(첩보 수집역량 강화)** 안전 분야별 법령·안전사고 사례 등이 담긴 '참고자료' 제작, 안전현장에 대한 정보관들의 이해도 제고

– 또한, 全 시도청에 각종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여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안전'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안전 견문'의 전문성 제고**

▸**(자문위원단 운영)** 본청은 '21. 11월 위촉, 연중 全시도청에 위촉 독려
▸**(현장 컨설팅)** 시·도청 순회 컨설팅 및 시·도청 자체교육 등 계기를 활용, 현지 진출하여 첩보수집 방법·우수사례 등을 공유
▸**(교육)** 본청·경찰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안전정보 전문 교육' 과정을 '22년 5회 → '23년 6회로 확대 시행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로 안전·공정사회 구현]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법질서 확립'**에 발맞춰 **건설현장 내 조직적 불법행위 첩보 수집 강화**

※ **(건설현장 불법행위)** △업무방해(시설점거, 무단침입 등)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마약 및 국민안전·공공분야와 관련된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 **(안전 관련 비리)** △다중이용시설 관련 각종 비리 △부실 허가·건설자재 납품 비리 △화재안전·산업안전 인·허가 관련 제반 불법행위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시장교란행위 △식품안전·의약품 안전 등 불법행위

▸ **(공공분야 부패)** △공공분야 직권 이용 이익추구형 범죄 △정보유출·국고횡령 △공공분야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 및 비밀누설 등 2차 피해 범죄 등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생활 주변 악성 범죄와 불공정·부조리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첩보 수집 노력**

▸ **(생활 주변 악성 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기기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보육시설 아동 폭행·학대·성착취 등 범죄 △노인 요양시설·장애인 보호시설 피보호자 대상 범죄 등

▸ **(불공정·부조리)**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입학 비리 △직위를 악용하거나 사칭한 범죄 △가맹점·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거래 등

○ 정보관들의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화 교육** 및 본청의 **현장 지원 역할 확대**

▸ 경찰인재개발원 범죄정보 교육과정(年 2회, 40명)으로 첩보수집 기법 공유·인권교육 등 실시

[해당 정보활동 관련 전문성 제고 및 준법체제 정착 지원]

○ △분기별 성과보고회 △월별 인센티브(우수정보관 선정·표창 수여) △우수정보관 격려간담회 등으로 적극적인 활동 유도·장려

○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을 위한 정보분석 활동 時 관련 법령 및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을 준수하도록 지속 교육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1/4분기	치안 캘린더 작성 · 배포	1월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추진 계획 수립	2월	
	범죄 및 재난 예방정보 담당자 워크숍 개최	3월	
2/4분기	1분기 정보분석과 성과보고회 개최	4월	
	인재개발원 內 범죄 · 국민안전 정보수집 심화 교육과정	5월	
	시도청별 '지역안전 현장 컨설팅' 점검	6월	
3/4분기	2분기 정보분석과 성과보고회 개최	7월	
	각급 관서별 '지역안전 조치 결과 보고' 점검	8월	
	汎정보부서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汎정보협의체 운영 내실화	9월	
4/4분기	3분기 정보분석과 성과보고회 개최	10월	
	인재개발원 內 범죄 · 국민안전 정보수집 심화 교육과정	11월	
	우수 정보관 격려 간담회 개최	12월	
연중	주간 · 월간 주요치안 현안 작성	매주 · 매월	
	'우수 정보 수집 정보관 선발' 제도 운영	매월	
	재난 · 안전사고 예방정보 착안사안 하달 및 우수사례 선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범죄 · 재난 ·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영위

○ **(정부 부처)**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 및 공공안녕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 대응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경찰 他기능)** 국민 안전 및 공공안녕 관련 경찰활동 時 반영

○ **(일선 정보관)** 재난 · 안전사고 및 범죄정보 수집 역량 향상

□ 기대효과

○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의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선제적·예방적 정보활동**을 전개,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적극 보호**

○ 내실 있는 범죄정보 수집을 통해 **범죄예방·척결에 기여**

○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 정보활동 관련 **일선 정보관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경찰 신뢰도 제고

○ 경찰 전체의 **핵심 정책과제 달성을 지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 우수사례 질적 향상 (45%)	-	27	33	41	2년간 실적의 상승세가 122%인 점을 감안, '22년 재난·안전사고 분야 우수사례 배점 평균인 33점의 124%를 목표치로 산출	재난·안전사고 예방정보 우수사례 평가표 수집난이도 20점 / 중요도충실성 40점 / 활용·확산 40점	시도청 우수사례 + 배점표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35%)	-	35.5%	43.3%	52.8%	2년간 실적의 상승세가 121%인 점을 감안, '22년 범죄정보 제출 건수 대비 배당(열람) 건수 비율의 122%로 설정 ※ 사건첩보만 포함, 범죄정책첩보 제외	(배당<열람> 건수 ÷ 제출 건수) × 100	일선정보관 제출 첩보 및 처리 결과
재난 안전정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10%)	-		80	88	지난해 신설 성과지표임에도 목표치를 초과(114%) 달성, '22년 실적의 110%인 88점 이상을 목표로 설정 ※ 배점 기준 상향	재난 안전정보 분석 내실화(50) + 전문성 제고 노력도(50)	자문위원 자문 회신자료, 교육 자료 등
정보분석 활동 준법 제고 노력도 (10%)	-		100	100	법령·정보활동규칙을 준수한 정보분석 활동이 유지되어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교육	준법 제고 활동 노력도 - 수칙 위반도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위반 징계 요구·수사의뢰 건수

< 지표 [1] :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 질적 향상 (45%) ⇨ 기존 유지) >

○ **매년 우수 정보수집 정보관들에게 경찰청장 표창·장려장 수여**

- (분야) ▲범죄 ▲재난·안전사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등

○ **경찰청장 표창·장려장이 수여되는 우수사례들의 점증적인 질적 향상 필요**

- '21-'22년 재난·안전사고 우수사례를 **아래 배점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상승세가 122%로 산출되어** 올해는 해당 점수의 124%인 **41점을 목표치로 설정**

< 재난·안전사고 예방정보 우수사례 배점표(중복선택 가능) >

① 정보 수집 ⇨		② 정보 분석 ⇨		③ 정보 배포·활용		합계
▸주민제보·민원·112 신고 등 다각화된 방법으로 위험요인 확인	5	▸긴급·중대 사안	10	▸긴급사안으로 관계기관에 개선 통보하거나 소관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치 촉구	10	
▸안전 관련 법규 및 정부지침 위반사항 착안	5	▸정책적 문제점이 포착된 사안	10	▸현안 및 중요사안으로 경찰서별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에 안건 상정	10	
▸외관상 문제가 없어보이나 위험요인이 이면에 숨어있는 경우	5	▸전국적으로 동일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10	▸정책참고자료 주제로 선정되거나 비중 있게 반영되는 등 활용됨	10	
▸다수 관계기관이 관련되나 주무기관이 불분명하는 등 위험요인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	5	▸본청 또는 시도청 자문위원의 자문 활용으로 원인 분석	10	▸통보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서·기관 및 관리 주체를 설득해 개선을 이끌어 냄	10	

< 지표 [2] :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35%) ⇨ 기존 유지 >

○ **범죄정보의 배당률을 기준으로 활용도를 평가하는 지표**

- 범죄정보는 양적 확대보다는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출된 보고서 중에서 배당이 되는 비율'인 '활용도'를 지표로 설정

○ 범죄정보 수집은 공공의 안녕 및 국민 평온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정보경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업무인 점을 고려,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과 별개 지표로 운영

< 지표 [3] : 재난 안전정보 분석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10%) ⇨ 일부 수정 >

○ **측정산식 : 재난 안전정보 분석 내실화(50) + 전문성 제고 노력도(50)**

- 재난 안전정보 분석 내실화(50) : 본청·시도청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문제상황의 구조적 원인이나 위험요소, 법 위반 등이 발굴, 위험상태가 해소·개선된 사례

자문 횟수	0건	10건	20건	30건	40건	50건 이상
배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 전문성 제고 노력도(50점) : 일선정보관 또는 非정보 경찰관들의 재난 안전정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가이드·카드뉴스 등 교육·업무설명 자료 건수에 따라 노력도 측정

자료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 **'23년 목표산출** : '22년 신설 지표임에도 80점 달성, 지난해 70점 이상 달성 시 노력도 100% 달성한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금년에는 **배점 기준을 10점씩 상향 조정**

< 점수분포표 >

합산점수	50점	50점 이상~6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80점 이상
노력도	60%	70%	80%	90%	100%

< 지표 [4] : 정보분석 활동 준법 준수 노력도 (10%) ⇨ 기존 유지 >

○ **정보분석 활동이 관련 법령·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준수하도록 관심·지도 필요**

- ▲경찰인재개발원 집체 교육 ▲본청·시도청 담당자 직접교육 등으로 지속·반복 강조

○ **'정보경찰 준법 제고 노력도'를 지표로 설정**, 전국 258개의 경찰서에 최소 1회 전파되는지를 체크 / **매년 경찰서별 1회 전파는 매우 중요하므로 목표는 100%(점)로 설정**

※ 경찰인재개발원 또는 본청·시도청의 교육을 받은 署 과·계장 등이 실무자에 공유·전수토록 조치(본청·18개 시도청에는 수시 교육되므로 노력도에서는 제외)

전파 비율 (=점수)	50%	60%	70%	80%	90%	100%
관서數	129개	155개	181개	206개	232개	258개

○ **(감점) 위 노력도 점수에서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위반 징계요구·수사의뢰 1건당 –10점**

※ 정보분석 활동은 경찰청 정보관리과 준법지원팀의 심사를 받으며, 법령이나 정보활동규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시행

3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그간, 112는 경찰과 국민을 연결하는 **치안활동의 출발점이자 핵심 업무로서, 가장 신뢰받는 경찰활동**으로 자리매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19년)]

일반 국민 500명 대상 **경찰의 15개 주요 활동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 조사** 결과, **全 분야**(인지도·경험도·중요성·가장 잘하는 활동)에서 **1위**를 차지

○ 작년 이태원 참사는 112경찰의 큰 변곡점으로 **접수 前 위험 단계부터 현장조치까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추진**

['22. 11. 7.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時 대통령 지시사항]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 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경찰의 대대적인 혁신'을 지시**

⇨ **참사 직후 구성된「경찰 대혁신 TF」에서 도출된 과제(20개) 中 다수가 112경찰활동 개선 사항(9개)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여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로 치안 패러다임 전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한 선제적 위험 분석·대응]

○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 도입) 112시스템상 반복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112요원에게 제공,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확인 가능**

- **(개요) 신고 발생시점 반경 50m 이내에서 최근 1시간 內 3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반복신고로 감지하여 **112시스템상 지도에 자동 현출 및 상세 정보* 제공**
  * 신고일시·내용, 접수코드, 죄종 등
- **(추진 사항)**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 시행 중('23. 1. 6.~)으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시도청별 활용 현황 모니터링·점검**

○ (분석대응 기능 강화) 시도청 상황실에서 운용 중인 **분석대응반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위험 상황 대응 체계 구축

- **(개요)** 시도청 상황팀별 분석대응반(평균 2~3명)에서 **매시간 112신고건을 전수 모니터링·분석하여 상황팀장에게 보고 및 특이사항 인지 時 즉시 공유**토록 지시·강조('22. 11. 11.~)
- **(추진 사항)**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시도청별 분석 대응반 운용 실태 점검·우수사례 발굴 및 인력 증원 등 추진**

[시도청 상황팀장 전종제 및 지휘·보고체계 쇄신 등 상황관리 강화]

○ (시도청 상황팀장 전종체제) 실질적 상황관리를 위해 시도청 상황실에 **전문성·책임성을 갖춘 총경급 전종 상황팀장 배치**

- **(현황)** 금년 상반기 인사 時 **3개 시도청(서울·부산·경기南)에 상황팀장 전원**을 총경급 전종 상황팀장으로 배치하고, **여타 시도청(제주1, 세종 제외)도 2명씩 총 39명 발령**
- **(추진 사항) 기존 유지 중인 시도청 순번제 상황관리관 폐지, 총경급 상황팀장 수당 검토 등**을 통해 제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지휘·보고 체계 정비) **現 경찰 지휘·보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새로운 전파수단을 도입**하여 상호 보완을 통해 완결성 제고

- **(지휘·보고 체계 강화) 이태원 참사 직후 △보고의 중첩성 확보('상황'·'지휘'·'기능' 보고) △보고 수신 여부 확인 △차상위자 직보 체계 확행('22. 11. 11.~)**
- **(112사건 전파 앱 도입)** 중요 상황 時 **'앱'을 통해 △관서장 △지역관서장△출동 경찰관 등의 폰(공용)에 자동 전파**, 관련 내용을 인지·공유하는 체계 개발 추진

[다목적 당직 기동대 운영 등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역량 확보]

○ (다목적 당직 기동대 운용) 유사 時 상황실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시도경찰청 타격대 개념의 **경찰부대**를 운용하도록 권한 부여

- **(개요)** 시도청별 기동대 中 적정 규모의 **야간·휴일 당직근무 부대**를 **지정하여 주요 상황 발생 時 시도청 상황팀장이 직접 동원·지휘**
- **(추진 사항)** '23. 1. 1.기준 全시도청 편성 완료, **우수 사례 발굴·공유를 통해 활용성 제고 추진**

○ (기능별 상황대응팀 활용) 형사·여청·교통·정보 등으로 구성된 **경찰서 기능별 상황대응팀을 지휘관 사전 보고 없이 상황관리관이 동원·운용**

- **(개요) 유사 時 경찰서 상황관리관**이 기능별 상황대응팀을 **직접 동원, 지휘·조정**하여 선제적 초동조치 및 총력 대응 가능
- **(개선 사항)** 실무상 '긴급현장상황반', '기능별 상황팀' 등 용어가 혼재, 이를 **'기능별 상황대응팀'으로 통일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 예방**

[교육·훈련 및 경찰·소방 공조체계 강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제고]

○ (위기 대응 훈련 효율화) 범죄 현장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시나리오를 활용한 훈련 추진**

- **(시나리오 개발)** 위기상황을 중대성(피해 정도), 동원 규모(기관·기능) 등에 따라 등급화(A·B·C)하고, **관련 기능간 분담하여 유형별 시나리오 제작**
- **(훈련 실시 및 평가·환류)** 시나리오 작성단계에서 旣분류한 **등급(A·B·C)별로 주체·참여 범위·방법 등을 달리하여 차별화된 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환류**

○ **(현장 경찰 전문성 제고)** 치안 현장의 최접점 **112·지역경찰의 업무 전문성·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체계 개선**

- **(112)** △**신규 인력 전문성 강화**(시도청별 전입자 교육 내실화, 전입 1개월 內 업무 역량 평가) △**인재 개발원 內 전문화 과정 확대**(전문요원 인증 과정, 데이터 분석 요원 과정)
- **(지역경찰)** △현장 **사례집 정비** △관서별 **OJT(상시교육훈련) 체계 개선** △인재 개발원 內 **교육과정 직책·직급별 신설 개편**(전문성 확보 및 교육인원 확대)

○ **(경찰·소방 공조체계 강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112·119신고의 신속·정확한 초동대응을 위한 兩기관 협업** 체계 구축

- **(공동대응 내실화)**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신고 접수 時 △**공동대응 강화** △**사례별 가이드 라인 마련** △**분기별 정기 합동 훈련 실시**
- **(상호 교류·협업 제고)** △경찰·소방간 **간담회 정례화** △兩기관 **연락관 파견 등** 추진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112·지역경찰 현장 대응 정교화]

○ **(현장 대응 체계 고도화)**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통합 관제상황판** △**지자체 CCTV 연계** △ **위치측위 개선** △**지능형 신고접수체계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신고 대응 체계 구축

-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순찰차에 영상전송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경찰과 112상황실間 실시간 현장 영상을 공유, **기능 개선(음성송출) 및 드론캠과 연계 추진**
- **(통합관제상황판) 전국 경찰관서 112치안종합상황실 통합관제상황판 교체**를 통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지휘 체계 구축
- **(지자체 CCTV 연계)** 국토부와 협업, **신고자 주변 최근접 5개소 CCTV 영상을 실시간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로부터 제공**받아 112시스템에서 조망
- **(신고자 위치확인 개선)** 현행 신고자 위치 확인 방식(기지국·GPS·Wi-Fi)에 **복합측위 기술 도입 및 휴대용 Wi-Fi 송신기 활용 등**을 통한 위치 측위 시스템 정교화
- **(지능형 신고접수체계 연구) 미래치안정책국·치안정책연구소와 협업, AI·STT 기술을 기반으로 한 '112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지역경찰 업무 시스템 개선)** 기능 구분 없이 현장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 업무 특성을 고려, **지능화·고도화된 근무 여건 조성**

- **(지역경찰포털 고도화)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통해 '지역경찰포털' 접속 時 해당 포털 내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토록 시스템 최적화 및 편리성 강화
- **(움직이는 지역경찰관서 구현) 112폰·태블릿 등 개선**을 통해 이동수단인 순찰차에서 112신고 결과 처리 및 각종 제반 행정 업무가 가능한 '움직이는 오피스'로 확장

[신고 접근성 제고 및 112홍보 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회복]

○ (112 접근성 개선) 112는 연간 1,800만여건의 다양한 신고 상황을 취급,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

- **(외국인 112신고 편의성 제고)** 경찰청 자체적으로 통역수요가 많은 영어·중국어 대상 통역전문요원 4명을 직접 채용하여 **외국인 112신고 통역 전담 센터 설치·운영**
- **(인터넷 112포털 서비스) 앱 설치없이 다이얼(112*)을 누르면 112포털에 자동 접속,** △112신고 △순찰차 출동정보 △처리결과 환류 등 서비스 제공
- **(112신고 앱 리뉴얼)** '12년부터 도입된 112신고 앱을 최신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맞게 최신화하여 **△112요원과 채팅△출동 경찰 실시간 확인△영상 신고 기능 도입 추진**

○ (유관기관·국민 참여형 홍보) 기관간 협업 및 국민 참여식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 금번 참사로 실추된 112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회복

- **(제66주년 '112의 날' 기념식)** 제정 추진 중인 112기본법에 '112의 날'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11월 2일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초청하여 협업의 場 마련**
- **(제3회 올바른 112 공모전)** '21년부터 영상·홍보 포스터 분야 대상 매년 개최, **그간의 미비점 보완하여 경찰 홍보의 대표 '컨텐츠'로 정착되도록 노력**
- **(우수사례 모음집 제5집 발간)** '19년부터 매년 112의 날에 맞춰 **현장 미담·우수사례를 담은 '소리로 보는 사람들' 제작·배포**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인프라 구축]

○ (법적 체제 정비) 범죄 및 각종 재해·재난 등 주요 상황 발생 時 적극적 현장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및 매뉴얼 등 제·개정

- **(법률 제정)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112기본법'), 현재 국회 계류 중 ('22. 4월 상정)으로 공청회 등 입법 절차 진행 예정
- **(규칙 개정)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지휘·기능 보고 규정 △위기 발생 징후 단계부터 관계기관 통보 △대외비 해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코드 분류 기준 수정 등)
- **(업무 매뉴얼 제작·정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매뉴얼** 신설, **치안상황처리매뉴얼** 정비(기능별 상황대응팀 등 임무 명확화, 용어 현행화 등)

○ (지역경찰 체계 개편) 全 경찰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경찰 인력 운용의 유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한 체계 정비**

- **(지역경찰관서 정비)** △관할 인구 △112신고(코드0~3) 등 치안여건을 고려, 관련 기준에 맞게 **지역관서 형태 정비 및 불필요한 치안센터 폐지**로 인력 효율성 제고
- **(근무 제도 개선) 지역실정에 따라 △도심 지역은 5조 3교대 △농어촌 지역은 '중심 지역관서(4조2교대)+주간 파출소(일근)'** 체제 운영을 통해 효율적 인력 운용 및 신고대응 체계 유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12신규 전입자 교육 내실화 추진	2월	
	총경급 전종 상황팀장 배치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조치		
	지역경찰 업무시스템 ISP 사업 계획 수립	3월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경찰-소방 간담회 등 협업 강화		
	유형별 시나리오 제작 완료 및 교육 계획 수립		
	치안센터 실태점검을 통한 운영 효율화(폐지 등) 계획 수립		
	지역경찰 주요 정책 이행 실패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상반기)		
2/4분기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개정	4월	
	112전문 통역서비스 센터 개소·운영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 결과보고		
	유형별 시나리오 기반 위기대응 훈련 실시		
	(상시교육) 1차 현장점검		
	'23년 112치안종합상황실 교육종합계획 수립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총7개) 분석 및 개편안 마련	5월	
	112사건 전파 앱 전국 시행	6월	
3/4분기	인재개발원 內 전문요원 인증과정 및 데이터 분석 전문화과정 시행	8월	
	(상시교육) 개선방향 시범운영		
	지역경찰 주요 정책 이행 실패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하반기)		
	「현장사례 100선」 재정비	9월	
	(상시교육) 2차 현장점검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개정		
4/4분기	전국 경찰관서 112상황실 통합관제상황판 설치	10월	
	112포털 서비스 사업 진행		
	112신고 앱 리뉴얼 사업 진행		
	전국 경찰관서 순찰차 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시도청 심신안정실 구축 및 환경개선 사업 등 근무여건 개선		
	치안수요에 맞는 지역경찰관서 형태(지구대·파출소) 정비 계획 수립		
	제66주년 '112의 날' 기념식	11월	
	제3회 올바른 112공모전 개최		
	우수사례 모음집 '소리로 보는 사람들' 4집 발간·배포		
	지역경찰 업무시스템 ISP 사업 결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全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없음

□ 기대효과

○ 112신고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 징후 단계부터 현장 초동조치까지 全 과정을 고도화된 상황관리체계 및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대응**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도출된 여러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보완·개선해나감으로써, **재발 방지 및 국민 안전 사회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2]				
치안상황관리(1431)				
① 범죄대응및재난안전관리(1431-311)	일반회계			238.17
■ 112상황운영(1431-311)		128.25	153.15	153.98
- 접수요원 헤드셋 교체(210-01)		0.91	0.91	1.83
- 상황실 노후상황판 교체(430-01)		10	12	21.5
- 심신안정실 구축(210-01 / 210-09 / 430-01)		2.2	2.2	2.2
- 상황실 환경개선(210-09)		3.9	17	7.92
- 112의 날 66주년 기념식(210-14)		1	1	1
■ 지역경찰 운영(1431-311)		사무이관	24.83	27.6
- 지역경찰 교육훈련(210-01)		2.96	2.96	2.96
- 순찰팀장 리더십교육(210-01)		1.01	1.01	1.01
- 지구대·파출소 업무추진비(240-02)		10	9.72	972
- 지역관서 CCTV 및 냉난방기 교체 등(430-01)		22.1	22.1	22.1
- 지역경찰 장비(유리파쇄기 등) 지원(210-01)		6.1	6.7	8.9
② 112시스템 운영(1431-511)	일반회계	285,8	250.92	226.13
■112시스템 유지보수(210-09)		44	44	44.6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260-01/430-01)		00	81	59.5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구축(210-02/430-01)		71.15	125.5	119.6
■지역경찰 포털 고도화(260-01)		-	-	2.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112신고 접수 처리 만족도 (50%)	87.4	89.3	90.1	**90.9점**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 (50%)	신설		88.0	**88.8점**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개요)** 경찰 112신고접수에 대한 국민 만족 수준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치안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 만족도 제고

○ **(구성)** 112신고 접수 신속성·성실성·전문성·전반적 만족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

○ **(측정산식)** ①신속성·성실성·전문성 등 요소 만족도+② 전반적 만족도 수치를 가중치(7:3)에 따라 환산

○ **(측정방법)** ▵기간 : '23. 1. 1. ~ '23. 10. 31. 종결민원 기준 ▵ 기관 :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 센터

▵조사 방법 : 카카오톡·문자 이용, 설문조사시스템 접속 안내하여 112신고접수처리 분야 문항에 점수를 부여

▵조사 대상 : 2023년도 경찰 112신고자 전원(관서별 code0, code1, 신고)

○ **(목표치)** 해당 성과지표의 최근 2년간 실적은 '21년 89.3, '22년 90.1점으로서 0.89% 상승하였으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상승세 이상(0.89%↑, 0.8점↑) 점수 증가한 90.9점을 최종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 적극성 판단 가이드 上 **'상' 수준**인 **2년간 실적치의 상승세 이상**을 목표치로 지정

○ **(목표 관리 방안)**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업무 매뉴얼 신규 제작, 접수·지령 매뉴얼 개선, 교육 ·훈련 강화 등 112경찰 역량 제고, 체계적 목표관리 추진

【112신고 현장 업무처리 만족도】

○ **(개요)** 경찰 112신고로 접수된 긴급사건의 현장조치에 대한 국민 만족 수준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지역경찰 활동의 개선·보완을 통한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

○ **(구성)** 112신고 현장 처리 시 출동 신속성·처리 신속성·지원성·성실성·청렴성·전문성·공정성·전반적 만족도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

○ **(측정산식)** ① 신속성·지원성·성실성·청렴성·전문성·공정성 등 요소 만족도+② 전반적 만족도 수치를 가중치(7 : 3)에 따라 환산

○ **(측정방법)** 112신고 접수 처리 만족도와 동일

○ **(목표치)** 해당 성과지표의 최근 2년간 실적은 '21년 87.2, '22년 88.0점으로서 0.9% 상승하였으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상승세 이상(0.9%↑, 0.8점↑) 점수 증가한 88.8점을 최종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 적극성 판단 가이드 上 **'상' 수준**인 **2년간 실적치의 상승세 이상**을 목표치로 지정

○ **(목표 관리 방안)** 지역경찰의 112신고 처리 전 과정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선·현장종결 시스템 등 효율적 제도 마련과 함께 상시적인 교육체계 확립, 매뉴얼·지침 정비 등 인적역량강화로 현장대응력 제고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①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112신고자 전원 대상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측정	90.9점	정량	결과	경찰청 치안 고객 만족도 지표
	② 112신고 현장업무처리 만족도		88.8점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2-2. 현장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 **2-2-1. 보고체계 및 상황전파 개선**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업무 Ⅲ-가-2, Ⅲ-나-1, Ⅲ-나-2, Ⅲ-나-3, Ⅲ-라-2, Ⅳ-가-2, <추진기반>-다-3	'2023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4 외사치안활동 고도화를 통해 사회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체류외국인 증가)** 최근 10년간 지속 증가(연평균 +7%) 추세,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 감소하였던 **외국인 수는 엔데믹 이후 회복세로 전환**

–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이민정책* 및 외국인력 활용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외사 치안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정책)

연 도	**'22.12월**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체류외국인	**2,245,912**	1,956,781	2,036,075	2,524,656	2,367,607	2,180,498	2,049,441
불법체류자	**411,270**	388,700	392,196	390,281	355,126	251,041	208,971
결혼이주민	**169,633**	168,611	168,594	166,025	159,206	155,457	152,374

○ **(다문화사회 위험요인 증가)**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차별·혐오·갈등 등 **다문화사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증가**

–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불만 세력 또는 범죄화되지 않도록** 지역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 **체류외국인과 치안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외국인 범죄, 집단화·세력화 및 불법행위 등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차단이 중요**

○ **(공관 안전확보 필요성 증대)** 외교적 분쟁 등 주요 이슈 발생 시 대사 등 **주요 인사 및 대사관을 겨냥한 기습시위**가 꾸준히 발생

※ △'리퍼트' 前 미국대사 피습('15.3월) △미국 대사관저 월담('19.11월) △프랑스 대사관, 무함마드 풍자 교사 참수 1주기 추모행사 관련 안전활동 요청('21.10월)

– 특히, **공관 대상 차량 돌진 등 돌출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주한 공관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관계 유지 및 예고정보 활동 강화 필요**

* △'19.6.25. 美 대사관 정문으로 차량 돌진, 차량 내에서 방화 시도(신나·부탄가스 발견)
△'22.2.5. 미국 정부에서 본인ID를 도용하였다며 빈 소주병을 美 대사관 정문에 투척

○ **(우수 치안정책 수요 증가)** AI ·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신종범죄 증가 △법익침해 양상 분화*** 등 **치안 영역이 급격히 확대**

* 딥페이크, AI·로봇·블록체인·자율주행기술 이용 범죄, 사물인터넷 해킹, 네트워크 감염, AI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 가상현실 속 법익침해, 디지털 이용 범죄 등

–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경찰의 **우수 치안시책을 수집·분석·공유,** 현장에 필요한 **치안정책 수립 지원 필요**

○ **(국내외 테러단체 활동변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각국의 국경봉쇄 완화로 **테러단체 연계세력들의 이동·활동 증가**가 전망

– 국제 테러단체들은 최근 △조직 정비 **△주요 활동 지역 변경, △온라인상 선전·선동**으로 활동 전략을 수정

테러단체	세력 재결집 움직임
ISIS	아프리카를 차기 본거지로 결정, 추종자들에게 이주를 독려하고 주변 지역 장악
알카에다	영문 선전지(원 움마)를 발간, 세계 각지에 있는 무슬림 대상으로 테러 선동

– 국내에서는 극단주의에 심취한 **외국인들이** 가상화폐 등 새로운 방식으로 **테러 지원 자금을 모금·세탁·송금하는 사례**가 **발생**

– 테러 예방을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외국인 공동체 동향 관찰 △국내외 정보협력을 통한 **테러위험인물 파악이 필수**

○ **(방첩정보 중요성 증대)** 중국의 국내 비밀경찰 운영 의혹 등 **외국의 주권·국익 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두**되고

※ 국정원·경찰청 등 방첩 기관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 및 합동 대응 중

– 최근 **각국의 정보요원***들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 및 군사 기밀·첨단기술을 수집하기 위해 **공직자에게 접근, 포섭 시도**

* 주한 외국공관 소속 백색요원뿐만 아니라, 외신기자·주재원 등으로 신분을 숨긴 흑색요원도 활동 중이며 자국민·아국인을 이용해서도 첩보 수집

– 고도화·은밀화되는 외국의 국내 정보활동에 대해 적의 대응하기 위해 외사요원 포함, **全 경찰관의 방첩의식 함양**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비한 외사치안활동 내실화 추진]

○ **(전략적 다문화 치안활동 추진)** 외국인 유입 급증에 따른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다문화 치안활동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 다문화 치안활동 운영목적 및 방향성을 제시하여 **현장 외사경찰의 다문화사회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전문성을 향상**

○ **(다문화 치안활동 내실화)** 변화된 치안환경에 맞게 기존 **운영지침을 수정·보완**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류외국인과의 치안 네트워크 강화**

- **(외국인 범죄 피해지원 협의체 내실화)** 협의체 △명칭 변경 △운영 방향 △위원정비 등 운영지침을 개선하여 외국인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
- **(외국인밀집지역 관리)** △지역별 치안수요 분석, '외사안전구역' 정비 △전담 경찰관 활용, 치안위험요소 발굴 △외사치안협력위원회 활성화로 민·관·경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도움센터 정비)** 全 시도청 운영현황 및 실적을 분석해 세부 운영지침을 수정·보완하여 외국인 범죄상담 및 신고창구를 내실화
- **(외국인협력단체 활성화)** 외국인 자율방범대·치안봉사단 활동을 적극 지원, 공동체 참여치안을 활성화하고, 합동순찰 실시로 지역사회 안전 확보
-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체류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 **(수사통역 전문성 강화)** 통역수요가 높은 **36개 언어에 대한 민간인 통역요원 운용**,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시 **통역서비스 적극 제공**

– 개정 법령 및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사통역 준수사항'** 및 **'종합지침서' 개편 추진**, 수사통역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 <수사통역 준수사항> 국수본 협업, 수사관·통역요원·통역대상자별 준수사항 제작·배포('22년),
<종합지침서> 국수본 협업, 통역이론·수사절차·전문용어 등 교육 지침서 제작·배포('20년)

○ **(치안역량 강화)** 급증하는 **초국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美 대학*과 협업,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교육' 추진**

* 美 Saint Peter's 대학, 국제형사정책·국제범죄 이해도 제고 및 국제기구 공조방안 등 교육·연구

– 체류외국인 유입 및 외사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외대와 협업, **특수외국어 대면·집중교육** 추진

[선제적 외사정보 활동 강화 추진]

○ **(공공안녕 위험정보 수집)** 체류외국인 밀집지역 및 외국 관련 기관·단체 대상 **선제적·예방적 정보활동을 통해 치안안정 확보**

– **<위험정보>** 체류 외국인의 **집단화·세력화 움직임, 내·외국인 갈등** 등 공공안녕 위험요소 사전 파악으로 치안부담 요인 제거

– **<범죄정보>** 외국인 조직범죄·국제범죄·집단폭행·마약 등 **범죄 첩보 수집·분석** 및 **수사기능 통보**, 외국인범죄 사전 차단에 기여

○ **(대테러·방첩정보 수집)** 안보정보 전담인력 운용을 통해 대테러·방첩 등 안보정보 수집, 유관기관과 공유·협업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

– **<대테러 정보>**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테러 전투원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입수, 입국 차단 및 강제퇴거 조치**

– **<방첩정보>** 외교관·주재원 등의 신분으로 위장한 **스파이 활동, 공관원 비위·방첩 첩보**를 지속 수집해 **국가안전 보호기능 수행**

○ **(주한공관 협업 강화)** 외국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요인사 방한 시 안전 확보 △법 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를 지원

– **주한 외국공관 보안담당관 협의회**(DSOA)*를 개최, 국제성 범죄·외국인 범죄에 대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교류·협력**을 도모

* Diplomatic Security Officers Association : 주한공관 보안업무, 국제성 범죄 및 외국인 범죄 예방·수사 등 정보교류를 위해 '06년 창설된 경찰청-주한 공관 보안담당관·경찰 주재관 間 협의체

○ **(적시성 있는 외사정보 발굴)** 주요국 경찰이 시행 중인 **과학 치안*** **등 우수시책을 적시에 소개, 국내 치안정책 마련·시행** 지원

* 과학기술 발전을 악용한 범죄의 지능화·첨단화 및 신종범죄 증가,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경찰업무 전 분야에 접목·활용하는 것을 의미

– 특히, 경찰개혁·정책과제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관련 법제도·정책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자료 제공**

[인프라 확대를 통한 대테러·방첩정보 업무 고도화]

○ **(안보정보 시스템 체계화) 본청-시도청-경찰서별 역할을 강화**하고, 수직적·수평적 협업을 제도화하여 유기적인 프로세스 확립

▸ **(경찰청)** 주요 사건 관리 강화(디브리핑* 제도 신설 등), 한국형 방첩 교육과정 개발 등
* 사업담당자로부터 경과·종결방안 청취,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답보상태의 사업은 방향성 전환 및 新전략 수립
▸ **(시도청)** 관내 경찰서 외사요원 역량 강화(멘토링 등), 시도청 간 협력 사업 발굴 등
▸ **(경찰서)** 방첩·대테러 중심 정보활동 전개, 외국인 협조자의 체계적 관리 등

○ **(대테러 국제협력 확대) UN에 韓 경찰관을 파견**, 대테러 실무 연수에 참여하고, **테러위험인물 정보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

▸ **(UN)** '테러리스트 이동경로 추적팀'(헝가리 소재)에서 대테러 정보활동 연수 등 수행
※ '23년 상반기에 韓 경찰관 첫 선발·파견 예정
▸ **(인터폴)** 국제 테러위험인물 명단을 입수,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전입국 금지 지속

– 해외 대테러 기관들과 실무회의를 통해 **테러 위험인물 정보 및 우수사례·기법을 습득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회의결과를 시도청·유관 기관에 공유**

▸ **(미국)** FBI 요원들을 초청, '테러위험인물 온라인 모니터링 기법' 실습
▸ **(인니)** 경찰청 테러 정보 분석관들을 초청, '테러 정보분석 기법' 회의
▸ **(우즈베크)** 내무부 '대테러 실무회의' 참석, 滯韓 테러위험인물 정보 공유

○ **(방첩 인식 강화)** 全 경찰관 방첩의식 함양 및 방첩신고 이행 의무화를 위해 **방첩업무에 대한 기본 훈령 제정을 추진**

※ 현재 시행 중인 「외사방첩업무 지침」('12년 신설, '21년 개정)을 바탕으로 변화된 방첩 환경을 반영하여 내부방첩·방첩신고·교육방식을 명시

– 또한, **방첩 인식이 저조**한 **非외사 기능**(사이버·안보수사 등)과 **시도청을** 대상으로 **집체교육·현장 간담회**를 실시, **홍보 및 지도**

○ **(전문가 양성) 한국형 심화교육 과정 개설 및 '외사 안보정보 연구회' 2기* 운영** 등을 통해 외사요원의 안보 역량 강화

* 경찰서 외사 요원 중 시도청 추천을 받아 구성, △전담 멘토-멘티 지정 △국내외 전문교육 참여 △전문 자료 공유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국내)** 한국형 안보 전문가 양성 교안 개발, 대테러 정보활동 온라인 교육 개설
▸ **(해외)** 美·러 등 주요국 주최 교육과정에 참여, 안보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특수외국어 역량 강화 대면·집중 교육 계획 수립	2월	
	인터폴 Project PACIFIC 대테러 실무회의 참석	3월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협의체' 표준 운영지침 개선 계획 수립	3월	
	전국 외사정보 부서 대상 업무추진 방향 설명	3월	
	외사 안보정보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3월	
	'대테러 정보활동 연수' 위탁교육 계획 수립	3월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위탁교육 계획 수립	3월	
2/4분기	'외사 안보정보 연구회' 2기 구성·운용	4월	
	'외사치안 협력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및 내실화	4월	
	특수외국어 대면·집중교육 실시	4월	
	베스트 외사경찰 선발계획 수립	5월	
	「다문화치안활동 종합 추진계획」 수립	5월	
	외사요원 대상 상반기 외사첩보 수집·작성 요령 교육	5월	
	대테러·방첩·공항만 인력 전문화 위탁교육 계획 수립	5월	
	외국인 도움센터 일제 정비	6월	
3/4분기	민간인 수사통역요원 인력풀 재정비 계획 수립	7월	
	테러 선전·선동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7월	
	해외 대테러 기관 국내 초청회의 개최	8월	
	외사요원 대상 하반기 외사첩보 수집·작성 요령 교육	8월	
	'외국인 범죄예방 가이드' 리플릿 제작	9월	
	테러 분야 사이버 직장교육 제작·실시	9월	
	전국 '외사 안보정보관' 현장 간담회 개최	9월	
4/4분기	민간인 수사통역요원 전문화 교육 계획 수립	10월	
	경찰청 소속 직원 대상 소집교육(「외사 방첩활동의 이해」)	10월	
	외사안전구역 재정비	10월	
	「2023 해외 우수 치안시책」 책자 발간 계획 수립	12월	
	'23년도 외사보안 활동 평가 및 '24년도 중점 업무 방향 설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내국인 및 해외 우리 국민, 국내 체류외국인

○ 이해관계집단 : 법무부, 국정원 등 방첩기관, 외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각국 주한공관,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외국경찰 등

□ 기대효과

○ **체류외국인 대상**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내·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치안공동체 구현**

○ 외국인 밀집지역·커뮤니티 내 집단화·세력화 움직임 등 **위험정보 집중 발굴**, 치안부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다문화사회 안정 확보**

○ **국내 중점 추진 치안정책 및 긴급현안** 관련 해외사례를 적시에 수집·분석·공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시책마련에 기여**

○ 대테러·방첩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안보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차단, 국가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외사경찰활동(Ⅲ-1-일반재정①)			
① 외사경찰활동(3132)	일반	145	145
		(145)	(145)
■ 외사경찰활동(311)	일반	145	145
국제교류협력활동(Ⅲ-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50	67
		(72)	(92)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50	6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30%)	0.36	0.392	0.43	0.47	- 외사경찰의 대표적 다문화치안 활동에 해당하는 범죄예방교실, 운전면허교실, 도움센터 상담 등을 유형화하고, 각 활동의 난이도별 가중치를 산정, 연간 상승률을 성과지표로 반영 - 다문화치안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계대비 평균증가율('20~'21 : 8.9%, '21~'22 : 9.7%→추세치 9.3%)인 추세치(9.3%) 이상 향상	- 월별실적* 합계 / 실적산출 월수 ×100 * Σ 활동별 점수 (가중치×수혜자수) / 체류 외국인수 ※ 활동별 가중치는 하단 참조	외사포털시스템을 통해 각 시도청·경찰서 월별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취합
외사정보 활용도 (40%)	1,719	2,274	2,775	3,530	- 외사정보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생산한 정보보고서와 활용된 정보보고서를 기준으로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병행 합산하여 성과지표 반영 - 3년간 추세치(27.1% 증가)를 상회하는 적극적 목표치(27.2% 증가) 설정	- 양적평가(건당 1점) + 질적평가(평가 주체별 3~10점) ※ 상세기준 하단 참조	① 외사정보 보고서 목록 ② 활용된 사례 목록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30%)	-	834	1053	1,330	- 대테러·방첩 활동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외사 보안사업 개척 점수'와 대테러·방첩·공항만 업무 전문화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교육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 2년간 실적치('21~'22 : 26.26%)를 상회하는 적극적 목표치(26.3%) 설정	하단 참조	① 외사 보안사업 목록 ② 교육 계획·결과

【측정산식】

(1)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월별실적* 합계 / 실적산출 월수 × 100

* ∑(활동별 가중치 × 수혜자 수) / 체류외국인 수

※ 활동별 가중치

활동	운전면허교육	범죄예방활동	도움센터 상담	자율방범대·치안봉사단
가중치	0.3	0.2	0.2	0.3

(2) **외사정보 활용도** : 양적평가(건당 1점) + 질적평가(평가 주체별 3~10점)

- ▸ 양적평가: 외사기획정보과에서 생산한 보고서 건당 1점 부여
- ▸ 질적평가: 외사정보 보고서가 활용된 경우, 활용한 주체에 따라 추가로 3~10점* 부여

* 경찰청장·타부처 10점 / 국장 7점 / 타국관 5점 / 시도청 3점

⑶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건당 10~40점)’ + ‘교육 점수(건당 1~3점)’

▸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 난이도별 건당 A급 40점, B급 20점, C급 10점 부여

등 급	분류 기준	평균 진행기간
A급	‣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사보안사업 ‣ 타 방첩기관 공조 또는 해외연계 활동이 필요한 외사보안사업	1년 6개월
B급	‣ 국내 여러 지역에 걸쳐 활동이 이루어지는 외사보안사업	1년
C급	‣ 관할 지역에서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외사보안사업	6월

▸ 교육점수: 교육 시 건당 ‘해외 연수·국제회의’ 3점, ‘전문 교육’ 2점, ‘현장 교1육’ 1점 부여

구 분	세부 유형
해외 연수·국제회의	▵ 해외 기관(및 국제기구) 방문·초청 연수 ▵ 국제회의* ▵ 모의·합동 훈련 등
전문교육	▵ 전문기관 위탁교육 ▵ 경찰교육기관 교육과정 ▵ 각종 세미나 참여 등
현장교육	▵ 현장방문 교육 ▵ 워크숍 ▵ 자체 직무교육 등

* 단, 국제회의 중 교육목적 없이 교류활동에 집중한 ‘행사성’ 회의는 제외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외사치안활동 고도화를 통해 사회안전 확보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30%)	- 월별실적* 합계 / 실적산출월수×100 *∑활동별(가중치×수혜자수)/ 체류외국인수	0.47	정량	산출	
		외사정보 활용도 (40%)	- 양적평가(건당 1점) + 질적 평가(평가주체별 3~10점)	3,530	정량	산출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30%)	-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 (건당 10~40점) + 교육 점수(건당 1~3점)	1,330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외사치안활동 고도화를 통해 사회안전 확보	‣ 업무 Ⅰ-나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비한 다문화치안활동 고도화 ‣ 업무 Ⅱ-라 외사 대테러 · 방첩 정보활동 강화 ‣ 업무 Ⅲ-라 외사분야 선제적 예방정보 활동 강화 ‣ 업무 Ⅳ-라 국제기구 등 파견 확대

5 자치경찰제 내실화

□ 추진배경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에 따라,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관련 법령 보완·정비 △자치경찰사무 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 **△중앙-지방 간 소통 활성화 △소통·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에 기여 中

○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가 선정**된 만큼('22. 7월),

– 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자치경찰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추진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자치경찰제가 보다 **발전적인 제도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주력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이원화 모델 마련]

○ **(모델 설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및 **시범 실시를 권고**한 만큼,

– △인구 △범죄 현황 △관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이원화 시범실시 모형 설계**

○ **(법안 마련)** △경찰청 관련 기능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주·세종·강원 지역별 시범실시 모형이 반영된 특별법* 개정안 마련**

* 「제주특별법」('06.6. 시행) / 「세종특별법」('12.7. 시행) / 「강원특별법」('23.6. 시행예정)

1단계('22~'23년)	▶	2단계('23년)	▶	3단계('24년)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 마련		시범실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원화 시행 대비 재원방안 마련		시범 실시 및 성과 분석

[現 자치경찰제 안정적 운영]

○ **(제도 개선·발전 논의 상시화)** 주요 현안 논의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개최 중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회의**의 **참석범위를 확대**, 국가 전반의 **치안협력 논의의 장으로 활용**

※ 현재 참석 중인 생안·교통 기능 외 필요시 국가·수사사무 기능도 논의에 참여

○ **(자치경찰사무 R&D 구체화)** 지역 주도의 과학치안 생태계 조성과 자생적 사회안전망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수요를 바탕으로 한 R&D 사업*** 추진

* '22~ '27년(6년), 총 300억원('23년 예산 15.5억원 확보) 규모

–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책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R&D사업을 활용토록, **예산 적극 확보·지원**

○ **(대내·외 소통·협력 활성화)** 現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우수시책·성과**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동시에,

– **연구 분야에서도** '거점대학–시·도연구원(지자체)–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발전연구원(경찰청)' 間 **4각 공조체계를 구축**, 관련 학계와 긴밀한 협력 도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 발표 관련 내부 직원 간담회 개최	3월	
	사무국장 원탁회의 개최, 자치경찰제 개선·발전 방안 논의	3월	
2/4분기	시범실시 재정적 지원방안이 포함된 예산안 제출	5월	
	지역별 자치경찰 R&D과제 공모	6월	
3/4분기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실시 방안(시범 지역 3곳) 마련	9월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내·외 협의체 구성	9월	
4/4분기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관련 지역대학 등 공조체계 구축	11월	
	자치경찰 R&D 사업 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12월	
연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관련 해외사례 분석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경찰과 경찰관 개인, 시·도 공무원,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국회,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 등), 지방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 기대효과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에 부여함으로써 국정목표인 **경찰권 분산과 자치분권성 담보**

○ 지역 특성 및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치안 시책 추진**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치안 서비스 제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도 (30%) <신규>				80점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공문, 검토보고서 등
자치경찰제 관련 관계기관(중앙·지방) 협의 활성화 (30%) <신규>				80점	〃	〃	〃
자치경찰제 소통·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40%)			111	85점	〃	〃	공문, 언론보도, 세미나 자료집 등

< 지표 1 >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 (신규지표)

○ '23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측정 산식

- 새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고, 이후 '경찰제도발전위'에서 후속조치 차원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을 권고**
- 경찰청은 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중 **△이원화 모델 설계 △관련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 설계의 경우 정량평가 방식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정성지표 신설 후 노력도*를 평가**할 예정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활동 △추진계획 이행 정도 △대내·외 협업 등 그간 노력을 성과보고서 방식으로 작성·제출, 평가위원들은 아래 표에 근거하여 개별 평가 후 평균값 산출

노력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 수	90점	80점	70점	60점

- 이원화 모델 도입은 경찰청 내부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 및 모든 국민에게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추진에 일부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23년 80점 목표**

< 지표 2 > 자치경찰제 관련 관계기관(중앙·지방) 협의 활성화 (신규지표)

○ '23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측정 산식

-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는 **△이원화 모델 도입 △현행 자치경찰제 개선·보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2년 평가지표인 **'경찰청-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間 정책협의체 운영'**보다 **폭넓은 협업 체계 구성**이 필요한 시점
- 이에, 협력 기관의 범위를 **중앙부처 및 지방까지 확대**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량지표 신설, **'23년 80점 목표**

목표	중앙부처(총리실·행안부·기재부 등) ※만점: 60점			지방(지자체·시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거점대학 등) ※만점: 40점		
80점	장관·청장	국장급	과장급	지방 기관장급	지방 국장급	지방 과장급
	1회당 10점	1회당 7점	1회당 5점	건당 8점	건당 5점	건당 3점

< 지표 3 > 자치경찰제 소통·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 '23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측정 산식

- 자치경찰제는 치안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대내·외 이해도 제고**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지표 유지
- 단, '22년 지표의 경우 일부 **평가 위원이 "100점 만점이 아니여서 달성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22년 11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 점수 산식 및 지표 체계도를 일부 수정, **'23년 85점 목표(전년도 실적을 '23년 지표로 계산시 70점)**

목표	홍보·소통 (100점)					
85점 (100점 만점)	보도자료	설명자료 배포	홍보물 (리플릿 영상 등)	교육·세미나	폴넷을 이용한 공지 (공지문 등)	직원간담회
	건당 5점	건당 3점	건당 5점	건당 5점	건당 3점	건당 5점
	총 50점 만점				총 50점 만점	

※'23년의 경우 새로운 자치경찰제 설계를 주력하는 해로 사정변경이 있을 때 지표 구성 · 산식 수정가능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자치경찰권 강화	①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활동, 추진계획 이행 등 노력도를 정성 평가, 위원별 평가 점수의 평균값 산출	80점	정성	결과	
		②자치경찰제 관련 관계기관(중앙·지방) 협의 활성화	중앙·지방부처의 ▵기관장 ▵국·과장급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 누적점수 산출 **(상한치 지정 → 만점 100)**	80점	정량	산출	
		③자치경찰 소통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소통·홍보수단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 누적점수 산출 **(상한치 지정 → 만점 100)**	85점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자치경찰제 내실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국정 111-5)

성과목표Ⅰ-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1) 주요 내용

○ **<여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고도화>** 재범 차단·피해자 보호에 중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리·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예방-수사-치료·상담' 체계 마련

○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 ▵위탁 전문교육 ▵표준 강의안 마련 등 분야별 전담인력 역량 제고를 토대로 **시기별·대상별 맞춤형 선도·보호활동 전개**

○ **<여청수사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신고접수·사건 수사·사후관리 등 **현장 대응체계 전반을 한층 정교화**

– ▵아동학대 영상 검출 시스템 개발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편의성 강화 등 **과학기술 접목, 수사역량 강화**

○ **<인권·피해자 중심 수사>** 수사 절차상 피해자 인권보장에 필요한 각종 제도·정책 정비, 경찰 단계에서의 추가 피해 방지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강화**, 조속한 일상 회복 도모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범죄안전도**
관리과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고도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 / 가정폭력 사건 대응 지수 /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업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원 / 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신청률 /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신청률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확립	수사상 인권보호 제도개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범죄안전도	83.2	83.3	83.0	84.0	국민 범죄안전도는 지속 상승하고 있었으나 작년인 '22년에는 점수 하락(0.3점↓),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22년 실적보다 1.0%p 높은 84.0을 목표치로 제시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중 '범죄안전도' 분야	경찰청 주관 대국민 전화조사 (외부 조사업체 이용, 일반 국민 총 51,600명 대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관계성 범죄(스토킹·가정폭력) △강간·추행 등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물론, 학교폭력·아동학대 등 안정화 단계에 있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도 증가 추세**

※ 전년 대비 △스토킹 신고 103.8% △가정폭력 신고 3.2% △강간·추행 11.4% △학교폭력 20.6% △아동학대 3.1% △실종아동등 19.9% 각각 증가('22년 기준)

–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공동대응** 추진

○ **경찰 수사 패러다임**이 '범죄진압'에서 **'국민 권익 보호'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 회복 지원 △인권 친화적 수사 요구 증대

– 수사 과정상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고도화**를 통해 **인권·피해자 보호 중심 수사체계 확립**

(4) 참고자료

○ 경찰청,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 국정과제 및 '23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 안전드림홈페이지(www.safe182.go.kr)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 사이버 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페이지 (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jsp)

6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고도화

□ 추진배경

○ 신당역 살인사건, 불법촬영 등 연이은 여성대상범죄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한편,

–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뿐 아니라 강간·추행 등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도 증가 추세**('22년 기준 전년 대비)

※ △**<스토킹 신고>** 14,509→29,565(103.8%↑) △**<가정폭력 신고>** 218,680→225,609(3.2↑)
△**<강간·강제추행>** 20,267→22,582(11.4↑) △**<카메라 등 이용촬영>** 6,212→6,882(10.8↑)

○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양해지는 안전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빈틈없는 여성 안전망**을 구축하여 **보호 체계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피해자 중심의 스토킹 대응 체계 정착]

○ **(법·제도 개선)** 재범 방지·피해자 보호 중심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대응, △매뉴얼 정비 △업무 인프라 확충 등 현장 대응체계도 개선

▸ **(법령)**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잠정조치 위반 처벌 상향 △피해자보호명령 등
▸ **(제도)** APO 시스템 內 가해자 이력관리 체계화 및 지역경찰포털 연계(PDA현출)

○ **(피해자보호법·조례 제정)**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제정 대응

– 경찰·지자체·자경위·여성단체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신설되는 각종 피해지원 제도 연계 활성화

※ △스토킹 예방업무의 자치사무규정 명시 → 지자체 협력 유도 및 조례 제정 지원
△협의체 운영비 예산 확보 △112 단순상담 신고시 1366센터 직접 연계 등

○ **(업무 역량 제고)** △현장사례집 △실무절차 동영상 △모니터링 질문 모델 개발 등 교육컨텐츠 개발, 수요자 맞춤형(기초·심화) 전문위탁교육 추진

[약물 성범죄 예방 활동 및 협업·대응체계 구축]

○ **(대응체계 구축)**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 △체크리스트 개발 등 **현장대응지침** 마련 △**휴대용 마약 탐지키트** 현장보급을 위한 실증연구(~'24)

○ **(협업체계 강화)**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자 신속 연계 △'예방－수사－치료·상담' 체계 마련 등 **협업을 통한 안심공동체 구축**

- **여성단체**와 협업하여 약물 성범죄 후기 및 약물 판매 등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핫라인 구축하여 **신속 신고접수 및 피해 발생 시 연계·대응**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하여 △약물 성범죄 예방 자료 공동 제작 △피해자·가해자 수사 시 연계 △상담·중독 치료 등 추진
- 대학 내 성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성폭력 예방정보 제공체계'(경찰청-교육부-대학) 활용**

○ **(예방·보호활동)** 교육·홍보를 통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약물 성범죄 △수법·증상 △예방 및 대처요령 △처벌내용 등 홍보물 제작하고, '성범죄 상담 챗봇' 등 활용 예방·홍보 및 학생 등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클럽·유흥가 주변 성범죄 예방 캠페인 실시 및 약물 성범죄 첩보 수집 등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발견, 지원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APO 시스템 활용,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 플랫폼 구축 추진]

○ **(관리 강화)** 스토킹 업무 전산화 확대 및 가정폭력 위험성 정보 분석기능 개발, 스토킹·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관리 기능 구축

- **(스토킹)** 가해자 긴급응급조치 현황·위반이력, 과태료 처분 이력 조회 및 업무 전산화
- **(가정폭력)** 연구용역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과 관련된 행위자위험요인 7개 / 피해자취약요인 7개 총 14개 요인을 근거로 재발 위험도(고·중·저)를 분석하는 평가척도 개발
- **(데이트폭력)** △신고 △안전조치 이력 등 관리메뉴 신설('22年) → 사용자 편의성 위주 개선

○ **(기관 연계)** 가폭·스토킹·학대 등 보호조치 이력을 警-檢-法 실시간 연동(KICS), 복지부(행복e음) 및 지자체(서울 소나무 시스템 등) 와 공유체계 구축

○ **(시스템 활용교육)** 全 기능(상황실·지역경찰·수사관 등)이 시스템 內 입력된 가·피해자 이력*을 토대로 면밀한 사건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교육

* 112신고가 아닌 고소·고발 등으로 접수된 사건도 APO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관리

[치안약자 보호 정책 공유·협업 체계 강화]

○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치안 약자 보호정책 공유·협업체계 강화**

– **(우수시책 공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시책 경진대회**(가칭)' 개최, 정책교류의 장 마련

– **(정책자료집 작성)** **'사회적약자 보호 치안백서'** 등 정책자료집 정기 제작·활용, 분야별 업무 성과, 미비점 및 정책 개선 방향 등 공유

– **(협의체 활성화) 정책자문단 분과체계**(여성, 아동청소년)를 통한 각계 의견 정책 반영, **생안·국수본 간 전략협의체** 등 내부협업 강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회적약자 보호시책 경진대회 운영·평가 계획 수립	3월	
	신학기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3월	
	여성청소년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3월	
	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3월	
2/4분기	장애인 시설점검 등 성폭력 예방활동 추진	5월	
	스토킹전담경찰관 전문화 위탁교육 실시	6월	
	APO 국외 교육과정 실시	6월	
	대학 내 성폭력 안심 소식지 제작	6월	
	약물 성범죄 예방·홍보물 제작	6월	
3/4분기	하계기간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7월	
	여청기능 현장 컨설팅 추진	8월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2호) 제작	9월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정식 시행	9월	
4/4분기	APO 국내 교육과정 실시	10월	
	사회적약자 보호시책 경진대회 개최	11월	
	KICS 연계 등 APO시스템 개선 사업 완료	12월	
	스토킹 가해자 이력관리 개선	12월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범죄 가해자 위치추적 제도 관련 연구 추진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여성대상범죄 피해자 등 국민 전체

○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여 14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여가부·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방통위·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대검찰청

– 유관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긴급전화1366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 기대효과

○ 여성폭력 예방·보호를 위한 법·제도 등 치안 인프라 확충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여성안전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을 통해 **국민 체감안전 및 치안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범죄예방 및 사회적약자보호(Ⅰ-1-일반재정②)			
① 사회적약자보호(1132)	일반회계	10	17
■ 사회적약자보호활동(311)	일반회계	10	1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40%)	46.6	53.2	59.7	55.9	- 3년간 실적 평균 대비 5% 향상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건수(20%) + 피해자 보호지원 건수(80%)) / 성폭력 발생건수] ×100	- 성폭력 보호·지원 월보 - 성폭력 발생통계(CSS)
가정폭력 사건대응지수(40%)	56.8	58.3	64.9	62.8	- 3년간 실적 평균 60 대비 평균 증가폭 4.6% 상승한 62.8를 '23년도 목표치로 설정	(가정폭력 현장대응 점수+사후조치 점수) / 가정폭력 실신고 건수] ×100	- 가정폭력 검거통계(CSS) - 가정폭력 보호·지원 월보 - 가정폭력 112신고통계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율(20%)	-	26.5	36.7	34.8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10. 이후 2년간 실적 평균에서 10% 향상한 34.8을 목표치로 설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스토킹 112신고 건수 × 100	- 스토킹 통계월보 - 스토킹 112신고통계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고도화	①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공통)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연계 건수(20%) + 피해자 보호지원 건수(80%) / 성폭력 발생건수] ×100	55.9	정량	산출	
		②가정폭력 사건대응지수(공통)	[(가정폭력 현장대응 점수 + 사후조치 점수) /가정폭력 실신고 건수] ×100	62.8	정량	결과	
		③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율(공통)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스토킹 신고 건수 × 100	34.8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고도화	국정 69-2, 업무 Ⅰ-나

7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업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 추진배경

○ '22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학대범죄 검거인원은 다소 증가

– 또한, 최근 3년간 실종아동등*의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대·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적 예방·대응활동** 필요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아동학대 신고)** 14,484건'19년 → 16,149건'20년 → 26,048건'21년 → 25,383건'22년 (2.6%↓)
▸ **(아동학대 검거)** 5,179명'19년 → 6,164명'20년 → 12,725명'21년 → 13,116명'22년 (3.1%↑)
▸ **(실종아동등 발생)** 42,390건'19년 → 38,496건'20년 → 41,122건'21년 → 49,287건'22년(19.9%↑)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현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상회, **학교폭력에서 소년범죄·비행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특히, 최근 촉법소년 증가 등 **저연령화 및 범죄 다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선도정책 추진 필요

▸ **(촉법소년)** 8,615명'19년 → 9,176명'20년 → 11,677명'21년 → 16,436명'22년(40.8%↑)
▸ **(범죄소년)** 66,204명'19년 → 64,584명'20년 → 54,074명'21년 → 61,220명'22년(13.2%↑)
▸ **(학교폭력)** 13,584명'19년 → 11,331명'20년 → 11,968명'21년 → 14,432명'22년(20.6%↑)

➡ **최근 사회현상·정책환경을 반영, 학대·실종·소년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선도·보호정책 추진 필요**

< 성과목표 및 추진전략 >

성과목표	**아동·청소년의 현재와 미래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성과지표	**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율 20.6%↑** **②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40.4%↑,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율 16.2%↓**

추진전략	**위기아동·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위기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소년범죄 대응 현장역량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인프라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위기아동·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유관기관 합동 고위험 아동 및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지원

– **(고위험군 발굴)** 반복·수사경력 **고위험군 아동 합동점검 정례화** (아보전 등, 반기1회) 및 예비소집 불참 아동 합동점검(교육부) 실시

▸**(반복신고 점검)**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간 협업, 아동학대 고위험군 대상 아동에 대한 합동 방문점검 실시(반기별 1회)

▸**(예비소집아동 점검)** 교육부와 협업, '23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 아동 중 불참아동 대상 점검(학교·지자체) 후 소재 미확인 시 경찰에 수사의뢰

– **(정보 공유)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보호정책의 플랫폼 역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합동 워크숍 개최**로 소통·정보공유 강화

▸**(협의체 구축)** 저연령화 등 소년범죄 대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전문가·NGO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청소년비행대책협의체' 구축 추진

※ 경찰서는 지자체·교육기관·NGO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중

▸**(합동 워크숍)** 경찰-교육당국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해 △시·도경찰청 △교육청 △학교 간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정례화(연2회)

– **(조기 감지)** 소년범죄 다변화 추세에 맞춰 사전감지 활동 강화 및 신종유형범죄 발굴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한 확산 방지

▸**(정보입수·공유)** SPO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등 참여 △학생·교사 상담 △117처리 시 신종유형 범죄 정보입수 △학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상시화

▸**(신종유형 경보발령)** 첩보수집 등을 통해 신종유형범죄 발굴,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 제작·공유 및 학교에 안내로 사전 차단 및 추가피해 방지

○ 인식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 추진

–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표준 강의안***을 **마련**, 균질화된 정보제공 및 신고활성화를 통한 **피해아동 조기발견 도모**

* 신고의무자 등 대국민 교육 시 균질화된 교육자료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 반영

– **(소통·정보공유)**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을 활용, **경찰의 청소년보호정책 홍보 및 대내·외 소통·정보공유 강화**

※ '유스폴넷'을 청소년경찰학교(55개소) 홈페이지 연계를 위해 순차적 개선

▸ **(정보 제공)** △소식(보도자료 등) △정책(청소년활동 분야별 업무·주요시책 등) △정보공개(치안통계·법령) △소개(청소년경찰학교·SPO활동) 등 통합 정보 제공

▸ **(대내·외 소통)** △청소년 참여 코너(체험 소감, Q&A 등) △내부 인트라넷(본청 중점 추진업무·시도청 우수사례, 질의응답 등)

▸ **(교육·홍보)** △예방교육자료·프로그램 △홍보자료 등 실무에 유용한 자료 탑재

≪ 유스폴넷 화면 구성 ≫

소식	정책	정보공개	청소년경찰학교	소개	인트라넷 (직원 전용)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홍보자료 (카드뉴스·동영상 등)	▸ 청소년보호 분야별 업무 ▸ 주요정책 ▸ 예방교육	▸ 주요 통계 ▸ 관련 법령 ▸ 교육자료	▸ 학교 소개 ▸ 교육 소개 ▸ 체험 신청	▸ 플랫폼 소개 ▸ SPO 소개 ▸ 주요연혁 ▸ 자주하는질문	▸ 우수시책 ▸ 우수사례 ▸ 자료실 ▸ 질의응답

– **(학대예방 캠페인)** 유관기관과 협업, 아동학대 인식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한 국민적 관심 환기

▸ **(복지부)** 5월(가정의 달), 11월(아동학대 예방주간),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 운영,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

[위기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능력 제고]

○ **전문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 전담인력 현장대응역량 강화**

– **(학대전담인력)** △학대영향평가 제도 신설 △신고의무자 표준강의안 △교육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 매뉴얼·사례집 개정

▸ **(학대영향평가)** 아동학대는 장기간·지속적·음행적으로 행해지는데 반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확한 평가지표가 없어 학대영향평가 제도 신설

▸ **(신고의무자 표준강의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표준강의안 제작으로 균질화된 정보제공 및 신고활성화 도모

▸ **(매뉴얼·사례집 개정)** 현장의견 및 개선된 정책 등을 반영한 매뉴얼 개정 및 현장대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 포함 사례집 개정

▸ **(교육과정 내실화)** △시도경찰청 현장강사 협조, 아동학대 이해, 대응 사례집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 강의 △전문기관 위탁교육 내실화 △유관기관 합동교육 실시

– **(학교전담경찰관)** ‘경찰교육 개혁의 元年’을 맞아 **SPO를 ‘청소년 전문경찰관’으로 양성**하기 위한 활동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신설**

▸**(강의기법)** △강의기법 △강의안 작성요령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노하우 등
▸**(면담기법)** △청소년 심리 이해 △청소년 면담요령 △면담시 유의사항 등
▸**(법령·절차)** △「소년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제도 △소년사건 진행절차 등

– **(교육자료 제작)** 최근 **소년범죄 경향을 반영**한 **유형별·대상별 예방교육자료** 및 **SPO 역량 향상**을 위한 **사이버 콘텐츠 제작**

▸**(예방교육)** 사이버범죄·마약·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유형에 대한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저연령화 추세를 반영, 초등학교용 예방교육 자료 개발
▸**(소통기법)** 청소년미디어 이용 증가추세 고려, 청소년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 트렌드 이해 △SNS 특성별 업무 활용팁 등 콘텐츠 제작
▸**(기초과정)** 신임 SPO의 현장 조기 적응을 위해 SPO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 지식과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영상자료로 제작, ‘SPO 입문과정’ 콘텐츠 개발

○ **신속·정교한 현장조치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경고장 제작)** 조사 후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자를 예의 주시함을 고지,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나 안전 위협 상황 방지**를 위한 **경고장 제작**

– **(학대영향평가)** APO와 아보전·심리전문가가 함께 피해자의 신체·심리·2차 피해를 종합적 평가하는 **학대영향평가제도 신설 추진**

– **(실종정책협의체) 실종정책·수사·장비 등** 관련 기능간 소통·협업을 위해 **유관부서·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격월)

※ △일제수색 등 부서합동 추진 정책 △법령 개선 방안 △드론 등 장비개선 사항 등

○ **시기별·대상별 맞춤형 학대·소년범죄예방 활동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매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부터 연말까지 집중추진기간 운영, **아동학대 가정 전수점검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소년범죄 예방)** 학사일정에 맞춰 △신학기 △방학기간 △수능 등 **시기별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추진**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시스템 확대·개선]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유관부처 間 아동·청소년 정보공유 강화**

– **(APO 시스템개선)** 아동학대 정보를 부처간 상호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대내) 112모바일·경찰KICS (대외)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 **(SPO 업무관리)**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구축된 **'SPO업무지원시스템' 기능·디자인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 △키워드 통합검색 △달력기능 개선 △항목통폐합 △결재알림 등

○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로 소년범 재범방지 효과성 제고**

– **(유형별)** 폭력성 감소 및 사회성 강화에 치중되었던 **기존 선도프로그램**을 **소년범죄 다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

※ △절도 등 다발범죄 △성범죄 등 최근 증가 범죄 등 2~3개 유형 개발

– **(연령별)** 소년범죄·비행 저연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초등학생 등 저연령 청소년에게 특화된 선도프로그램 표준안 개발·보급** 추진

○ **실종자 신속 조기발견 등 현장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실종경보문자)** '22년 구축된 **'실종경보문자 전송시스템' 전면 운영 및 기술 개선**으로 실종아동등 신속 발견 도모

▸ **(도입 효과)** '문자송출시부터 발견시'까지 평균 4시간 8분 소요, 24시간내 97.5% 발견
▸ **(시스템 개선)** 경찰의 독자적인 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운영('23년上~)하고, △송출지역 세분화(시·군·구) △송출문안 증가(90자→157자) 등 고도화 추진('24년~)
※ 현재 행안부 시스템 사용 중으로 경찰청 독자 시스템 구축 예산 2억원 확보

– **(유전자분석시스템)** 2촌이상 유전자분석기술 도입을 통해 보호자 대상군을 형제자매까지 확대, 실종자 발견율 제고

* 부모가 고령 등 사유로 사망하는 추세로 형제자매 등의 유전자 대조 필수적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예비소집 불참 아동 합동점검	2월	
	'청소년소통기법' 교육 콘텐츠 제작·공유	3월	
	상반기 SPO 강의역량 향상과정 전문교육 진행	3월	
	「실종정책협의체」 발족·운영	3월	
	신학기 학교폭력예방 집중활동기간 운영	3~4월	
2/4분기	경찰청-교육부 합동 워크숍 개최	4월	
	SPO 면담기법·법령 등 전문화 교육 실시	5~6월	
	'가정의 달'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5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표준 교육안 마련	6월	
3/4분기	하계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7~8월	
	실종경보 문자 송출시스템 전면 운영	8월	
	마약범죄예방 교육자료·자체선도프로그램 표준안 제작	8월	
	하반기 SPO 강의역량 향상과정 전문교육 진행	8월	
	아동학대 정책자료집 공유	9월	
	학기 초 학교폭력예방 집중활동기간 운영	9~10월	
4/4분기	경찰청-교육부 합동 워크숍 개최	10월	
	아동학대 가해자 경고장 제작·배포	10월	
	복지부 협업, 만 3세 아동 합동점검	10~12월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기간 운영	11월	
	SPO 업무지원시스템·청소년경찰학교 홈페이지 개선	12월	
	동계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12월	
	학대예방평가제도 연구용역 완료	12월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12월	
	유전자분석시스템 고도화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관계부처**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법원 등

⇨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관계(교육부),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발굴·연계(여가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협력 관계(복지부·법무부), 소년범 선도·보호(법원) 등 분야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기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연계),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사후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

– **유관단체** : 청소년육성회·푸른나무재단 등 청소년단체,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등 아동학대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 협업 강화** 및 실질적인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체 치안체계 구축**

○ 아동학대 현장점검, 인식개선 홍보 활성화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각지대 해소**로 아동보호 공백 방지

○ 아동·청소년 전담인력 전문역량 강화 및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시스템 구축·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22	'23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일반회계)			
① 사회적 약자보호(1132)		32	-
■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311)		32	-

* '23년부터 자치경찰사무는 시·도별 자치예산으로 편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기존목표치)	36.3 (35.7)	37.7 (38.2)	43.6 (37.8)	40.4	- 일상회복으로 학교폭력·소년범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상회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과 병행,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계율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37.7%→43.6%) - 다만, 소년범 선도 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도프로그램 연계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참여 독려는 프로그램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 ⇨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위해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3년간 실적의 평균값(39.2%) 보다 3% 향상된 40.4%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전체 소년범) × 100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월보) ·소년범(202 통계)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기존목표치)	21.5 (19.7)	16.7 (20.6)	12.8 (19.3)	16.2	- 선도프로그램 표준모델 개선('21년) 및 이수인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최근 3년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 중 재범인원 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 (21.5%→16.7%→12.8%)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방지를 위해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3년간 실적의 평균값(17.0%) 보다 5% 향상된 16.2%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재입건인원 ÷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100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월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시스템)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 '21년 신규지표	10.9 (-)	21.7 (12.7)	26.1 (14.7)	20.5	- 최근 3년간 피해아동 보호조치율은 지속 상승 추세이고, '21년은 아동학대의 사회적 이슈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적이 급증한 바 있으나, 보호조치는 아동의 분리조치가 주된 내용인 만큼 아동의 인권과 원가정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현 수준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상승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인 3년간 실적의 평균치(19.5%)를 5% 초과하는 20.5%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보호조치 ÷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 × 100	·APO업무지원 시스템 사후지원 통보건수 ·사후지원 관련 공문 ·아동학대 월보 ·112신고 시스템 ·KICS 시스템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업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①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전체 소년범) × 100	40.4	정량	결과	
		②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재입건인원 ÷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100	16.2	정량	결과	
		③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보호조치 ÷ 아동학대 112신고건수) × 100	20.6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업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 사회적 치안약자 보호(업무 Ⅰ-나)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보호 강화 (국정 69-2)

8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 추진배경

○ ('23년 치안여건) 피해자 안전조치 등 국민의 안전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일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

▸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해)** '22. 9. 14. 21시경 앞선 스토킹 사건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서울 신당역 소재 화장실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

▸ **(충남 서산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22. 10. 4. 16:03경 충남 서산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이 결정된 피해자(妻)를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로 **대면접촉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의 약화**에 따라 여성·아동 등 **약자의 범죄 노출 위험도 증가**

– △결손가정 증가 등에 따른 아동·노인학대와 가정폭력 △빈부격차, 사회적 좌절이 불러올 **증오·보복범죄 증가 등도 우려**

○ ('23년 업무추진방향) 신속·집중수사 제도 등 **현행 정책과 제도를 피해자 관점에서 재정비·보완**하여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

–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사 초기부터 강력범죄로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력 대응하는 업무절차를 확립**하되, 더욱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 보완**

– 피해자 안전조치 등에 있어 **전문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시사**, 피해자 보호 등 대응체계 고도화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 정교화]

○ **(대응체계 강화)** 미흡한 현장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全 단계의 현장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

▸ **(반복신고 대응체계 안착)** 반복신고의 경우 '署 팀·과장 – 경찰서장 – 시도경찰청'으로 이어지는 3重 점검·보고체계가 완전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 현장점검 실시

▸ **(신속·집중수사 제도 고도화)** △신속·집중수사 대상 사건 범위 정립 △서장 지휘·감독 체크리스트 마련 △신속·집중 대상 사건 시도청 인력 활용·지원 방안 검토

○ **(관계성 범죄* 대응)** 스토킹·가정폭력 등이 강력범죄 등 2차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스토킹·가정폭력 등은 긴밀한 관계 속 갈등으로 인하여 위험성 높은 폭력 수반 및 재범우려가 높음

▸ **(스토킹)** 경-검間 스토킹사범 행위자 특성, 스토킹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정보 신속한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등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관련 법무부·여가부 등 소관 부처와 적극 논의 → 法 개정에 따른 현장경찰 대응체계 개선 및 상시 교육 추진

▸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긴급)임시조치·구속영장 등 가해자 격리 기준 구체화 △가해자 위험성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수사서류 작성 방법 추가 등 매뉴얼 개선

- 수사결과보고·검찰처분결정서·임시조치결정문 등을 취합, 원인과 피해 수준 및 경찰의견-검찰처분 대조 분석 등 세밀한 수사 방향성 제시토록 사건처리 현황 분석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점검방법 구체화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 등 매뉴얼 개선('22년말)에 이어, 고위험군 관리 환경도 마련

▸ **(전담팀 운영)**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인원 과다 관서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전담팀' 시범 운영, 효과·보완 분석 후 확대 검토

- 年2회 신상대상자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검거기간도 운영

▸ **(업무 효율화)**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업무 경감 △경찰청-법무부 間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24년 차세대 KICS 도입 시 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

* △사진파일 및 점검 결과가 KICS를 통해 법무부로 자동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개명 등록 대상자 이중 관리 문제 개선 등을 통해 현장 불편 최소화

▸ **(법령 개정)**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대상자에게 점점 협조 및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법령 개정* 검토

* '17.2.14. 수인 의무를 부과(점검불응時 과태료 300만원)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김명연 의원)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 입법조사관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 필요 의견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

○ **(피해자 전문조사관 양성)** 성폭력처벌법제30조 제6항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법무부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수사관만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

▸ **(성폭력처벌법 위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도 진술 영상 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21. 12. 23.)

▸ **(법무부 법령 개정 추진)** 법무부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기관장이 지정한 전문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마련, '22. 6. 29. 국회 제출되어 법사위 심사 中

– 수사관(年 100명 내외) 대상 '피해자 전문조사관 양성과정' 위탁 교육 실시(기본 2주, 심화 2주)로 **피해자 조사 전문가 양성 등 사전대비**

※ 동국대학교·한국 법심리학회 등 관련 교육기관과 교육 방향·계획 수립 협의 中

○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매뉴얼 개선·배포 ▵전문가 인력 확충 등으로 **진술분석전문가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아동·장애인 관련 전문지식 보유 및 석·박사 보유자 선발·운영 / 아동·장애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자료로 전문가 의견서를 활용 중

- **(의견서 매뉴얼 개선·배포)** '22.12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춘 의견서 양식 및 세분화·전문화된 진술분석 의견서 작성 매뉴얼을 개발
- **(전문가 인력 확충)** [신규 전문가 양성·위촉] ▵한국심리학회 등 공고·홍보 추진 ▵신규 후보자 발굴 및 선발 인원 확대 [기존 전문가 전문성 강화] ▵개정내용 의무교육 ▵전문 강사 및 중요사건 분석 전담 위한 동료슈퍼바이저 양성

○ **(성착취 대응 강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매매와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해서 **적극적 수사를 통한 선제적 대응**

- **(위장수사 활성화)** 적극적인 위장수사 전개를 위해 ▵위장수사관 인력 확충(시도경찰청별 +1명) ▵위장수사 우수사례 적극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강화)** 사이버수사 기능과 협업,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주요통로인 채팅앱 등에서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행위자를 집중단속·검거
- **(사례집 제작)**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 태양 ▵위장수사 적용 사례 ▵관련 판례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

○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피해자가 '별도 공간'에서 안정을 취한 후 진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 조사환경 개선사업(53개署) 시행**

– ▵가·피해자 동선 분리 ▵사무·조사 환경 구분 ▵피해자 통합지원 공간 신설 ▵사무실 출입문에 경찰관 호출 시스템 마련

[과학기술을 통한 수사역량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아동학대 수사 전문화)** ▵영아급사 조사 개선으로 아동학대 암수화 방지 ▵아동학대 검출시스템 개발 지원 ▵비속살해 통계 체계 구축 등 추진

- **(영아급사 조사 개선)** 영아용 변사 체크리스트 배포로 아동학대 사망의 암수화 방지, 국과수·인하대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문교육과정 등 개발 추진
- **(아동학대 영상 검출 시스템)** 폴리스랩 2.0 사업 25개 과제로 선정 / 아동의 안면 인식, 이상행동 분석 기술 등으로 학대 의심 상황을 감지, 필요한 부분만 검출·요약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 개발 중으로 수사 활용 가능성 등 검증 추진
- **(자녀 살해 후 자살 통계 정비)**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나 공식 통계는 부재, 복지부와 협의하여 통계 정비 및 위기감지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제도보완 추진

○ **(시스템 고도화)** ▵필수질문 누락 여부 점검 ▵'전화음성 속기 기능' 추가 등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편의성 강화 중**으로,

* 성폭력 수사時 조사관이 피해자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문답을 AI음성인식을 통한 자동 조서 작성으로 증명력 높은 피해진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방지



全 2급서 확대(DB 축적)



피해진술 분석 툴 고도화



AI 전화음성 속기록 개발

– 금년에도 ▵구성요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작성 기능 추가 ▵사투리 등 인식률 향상을 위한 딥러닝 진행 등 **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현장 전문성 제고 및 내부 사기진작]

○ **(수사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단계·테마·시기별 교육 추진

< 여청수사 교육체계 >

1	**민간전문가 사례회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례회의 개최, 우수·미흡사항 분석
2	**내부전문가 양성**	▸여청수사 전문수사관을 활용한 동료강사제 실시
3	**수준·직급별 맞춤 교육**	▸신규전입자·팀장 등 수준별·직급별 맞춤형 교육 ▸피해자표준조사모델 등 전문조사기법 특화교육
4	**테마별 현장점검 등**	▸시기·대상별 유의사항 사전 교육, 수사과오 차단

○ **(수사인프라 확충)** 수사관 개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전문적 수사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환경을 조성**

▸ **(인력)** 행안부 대상으로 <시도청> 여청범죄수사대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관 <경찰서> ▵스토킹전담수사관 ▵여청강력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요원 증원 요청

▸ **(장비)** 여청수사 수사차량 순차 증차 중이나 현재 191대 추가 필요, '23년 48대 증차* 추진

* 스토킹수사차량 임차 예산(약 4억원, 1대당 月 35만원 기준)도 추가 확보해 68대 증차 효과 도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여청수사관 증원을 위한 소요정원 요청	2월	
	개정 진술분석의견서 매뉴얼 배포	3월	
	성착취 목적 대화 적발을 위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	3월	
	'23년 여청수사 교육계획 수립·시행	3월	
2/4분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전담팀 시범 운영	4월	
	상반기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일제점검 및 집중검거기간 운영	5월	
	진술분석전문가 역량강화 및 내실화 등 계획 수립	6월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사업 계약	6월	
3/4분기	아동학대 영상 검출시스템 현장 시험 검증	7월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사업 점검	8월	
	하반기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일제점검 및 집중검거기간 운영	9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 현장 지도방문	9월	
4/4분기	여청수사 전문수사관 선발	10월	
	우수 여청수사관 및 여청수사팀 선발	11월	
	성착취 목적 대화 사례집 제작	12월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12월	
연중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등 여청수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전체

○ (이해관계집단)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시민단체

□ 기대효과

○ 접수부터 종결까지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대응으로 국민 눈높이 충족

○ 신속·집중 대응체계 및 수사인프라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치안 사각지대 및 공백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범죄수사활동(Ⅰ-1-일반재정②)			
① 수사지원및수사역량강화(1231) ■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313)	일반회계	102.3	88.66

* 관련 재정사업에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관련 예산만 산출한 것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원 (30%)	52.0	69.7	56.7	59.4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 이상인 59.4%를 '23년 목표치로 설정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 속기사 참여 (건) / 강간·강제추행 (건) X 100	▸월별 통계 취합

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신청율 (30%)	31.8 48.9 55.4	60.9 (%)	▸'20년 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대대적 국민적 관심 증대로 갑작스럽게 아동학대 신고 및 사건이 증가한 '20→'21년은 실적치에서 제외 ▸전년('22년) 실적인 55.4%의 10% 이상인 60.9%를 '23년 목표치로 설정	아동학대 임시조치 신청(건) / 아동학대 송치(건) X 100	▸범죄통계시스템 ▸월별 통계 취합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신청율 (40%)	- - 55.4	60.9 (%)	▸'21.10.21.「스토킹처벌법」시행으로 그간 스토킹 처벌 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 ▸전년('22년) 실적인 55.4%의 10% 이상인 60.9%를 '23년 목표치로 설정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건) / 스토킹 검거(건) X 100	▸범죄통계시스템 ▸월별 통계 취합

※ (가정폭력 지표 관련) 가정폭력 임시조치 관련 지표를 고려하였으나,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성과지표인 '가정폭력 사건대응 지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미선정

* (가정폭력 검거건수 +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가정폭력 실신고 건수] × 100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①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원 (30%)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 속기사 참여(건) / 강간·강제추행 (건) X 100	59.4%	정량	산출	
		②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신청율 (30%)	아동학대 임시조치 신청(건) / 아동학대 송치(건) X 100	60.9%	정량	산출	
		③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신청율 (40%)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건) / 스토킹 검거(건) X 100	60.9%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 (사회적 치안약자 보호, 업무Ⅰ-나)

9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확립

□ 추진배경

○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경찰 수사 패러다임이 **'범죄진압'에서 '국민 권익 보호'로 전환**됨에 따라 △수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수사권 남용 방지 등 **인권 친화적 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수사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 '20년 18건 → '21년 16건 → '22년 21건

○ 또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요구도 **적극적 회복 지원**까지 확대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21년 24,810건 → '22년 29,372건 (15.5%↑)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원스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등

○ 이에, **수사 과정상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고도화**하는 등 **인권·피해자 보호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상 구현**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수사상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제도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제도의 현행화 추진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 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장 원칙을 총망라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훈령 제정 추진

▸**(민원처리 절차 개선)** 국민신문고로 경찰에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민원 관련 年약 5,100여명의 국민이 불필요한 과잉수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지자체에서 위법성 확인 후 종결될 사안이 수사 사건으로 접수되어 혐의 없는 피민원인이 피의자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인권침해 발생

▸**(인권진단)**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결과 통지 등 인권보장 제도 운영실태 점검, 수사 과정상 인권보호 체계의 현장 안착 추진

○ **(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법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권리보장 내실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신뢰관계인 동석 실질화)** 사회적 약자 피의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권한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 신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교육 강화)** 발달장애인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전 중심 교육·훈련 체계 구축

○ **(인권 친화적 수사 인프라 구축)** 조사환경부터 구금시설까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인권 최우선 환경 조성 추진

▸**(영상녹화 활성화)**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확대* 및 영상녹화실·진술녹음 장비를 지속 확충,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 중요범죄 피의자 외 △비문해자 △시각·청각 장애인 △외국인 피의자도 의무적 영상녹화

▸**(유치장 환경개선)** △쇠창살→강화플라스틱 투명창 △밀폐형 화장실 △지능형 CCTV 설치 등 인권 친화적 유치장 환경 조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고도화 】

○ **(데이터·과학기술 기반 안전조치)** 위험성 판단체계 정교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 수단 고도화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개선)** 통계·사례분석을 통해 추가피해 위험도를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안전조치 효과성 제고

▸**(안전조치 대시보드)** 빅데이터 플랫폼에 △안전조치 건수·기간 △추가신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개발, 안전조치 관리 강화

▸**(첨단기술 활용 맞춤형 안전조치)** △위치확인 성능 및 배터리 효율성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워치 운용(6,300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경고하는 '지능형 CCTV' 지원 확대(1,000대) 등

○ **(형사절차 참여 및 회복지원 강화)** 회복적 경찰활동·범죄피해 평가제도 **全 경찰서 운영 확대** 및 정부 **원스톱 지원체계** 참여

▸**(지원시책 운영 확대)** △가·피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피해 상황을 가해자 구속·양형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확대('22년 230개서 → '23년 全 경찰서)

▸**(원스톱 지원체계 참여)** 국정과제 관련 법무부가 추진 중인 '원스톱 지원체계' 참여, 긴급단계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각종 지원제도 연계 허브 역할 수행

○ **(피해자 보호·지원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자치경찰위)·민간 참여 활성화로 피해자 보호 공백 방지 및 회복 지원 협업

▸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대상 민간업체 경호서비스 지원,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23년 수도권 시범운영)

▸ **(지자체·민간단체 협업)** △자치경찰위 협업을 통한 지역별 보호·지원 사업 발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단체 긴급지원 연계 등 추진

【 수사인권·윤리교육 및 반부패 대책 고도화 】

○ **(인권·윤리 교육 강화)** 단순 이론 전달 교육에서 탈피, 체험 사례 중심의 학습 강화를 통해 수사관들의 인권·윤리의식 제고

▸ **(교육·홍보 강화)** 인권보호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사관들 대상 수사인권윤리 교육과목* 신설·운영(수사연수원) 등 교육 강화

* 사적접촉 통제·사건문의금지제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수사관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국가인권위 시정권고 사례 등) 등으로 구성

▸ **(사이버 강의 제작)** '수사과정상 인권보호'(인권위·권익위 등 실제사례 위주) 등 현장 중심의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 추진

▸ **(체험·사례중심 학습 강화)** 청렴선도그룹, 시민청문관 등을 구심점으로 학습조직 결정 △동료간 부패개입·저지 프로그램(EPIC) 활용 교육 △청탁신문고 모의신고 훈련 △청렴 북콘서트 등 체험·사례 중심 학습

▸ **(청렴문화 조성)** 청렴행동·환경 설계를 통해 윤리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통해 구성원의 청렴인식과 기준 제공

※ △청렴 모범사례 게시 △청렴 상징물 부착(청렴·인권 미술작품 게시 등) △청렴 통화 연결음 △청렴 명함 등

○ **(반부패 대책 고도화)** 부패방지 관련 제도·정책 강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수사 실현

▸ **(사적접촉·사건문의 금지제도 강화)** 사적접촉 통제, 사건문의 금지 관련 '청렴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사건청탁 등 부패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수사의 공정성 제고

▸ **(수사과정상 변론활동 투명화)**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금지 및 신고를 강화하고, KICS에 '변호활동내역란'*신설, 모든 변호활동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여 변론활동 투명화 도모

* △변호인이 방문(면담) 또는 전화 등 구두변론 △신문조사·면담 참여 △서면제출 등 변호활동시 그 내역을 KICS에 기재(활동유형별 선택방식)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벨트형 포승 도입	2월	
	영상녹화 진술녹음 저장장치 통합 관리 추진	2월	
	全 경찰서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확대	3월	
	'23년 수사인권·윤리 교육과목 신설·운영(수사연수원)	3월	
2/4분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훈령 제정	4월	
	안전조치 대시보드 운영 개시	4월	
	全 경찰서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4월	
	동료간 부패개입·저지 프로그램 활용 교육	6월	
3/4분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시범운영 개시	7월	
	개선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개발 완료	8월	
	자동차관리법 민원 국민신문고 접수시스템 개선	8월	
	장기사건 일몰제 일제 정비	8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	8월	
	유치인 머리보호장비 전국 확대 운영	9월	
	청렴 자진 신고기간 운영(사건문의금지·사적접촉 자진신고)	9월	
	시도청 인권진단	9월	
4/4분기	영상녹화·진술녹음 업무처리지침 개정	11월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관련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	12월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지침) 개정	12월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개최	12월	
	인권수사 매뉴얼 제작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범죄피해자 및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

○ **(이해관계집단)**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하는 △본청 각 기능 △시·도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 법무부, 검찰,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

□ 기대효과

○ **경찰수사 全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사법 서비스 수준 향**상

○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으로 대국민 신뢰 제고 및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상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①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일반예산	59.6억	57.8억
■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	일반예산	15억	15억
■ 유치장 관리 및 운영	일반예산	30.8억	30.7억
■ 영상녹화·진술녹음 확대 사업	일반예산	13.8억	12.1억
②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범피기금	31.6억	37.7억
■ 신변보호용 위치확인장치	범피기금	20.7억	24억
■ 피해자 임시숙소	범피기금	6.8억	9.6억
■ 강력범죄 현장정리	범피기금	4.1억	4.1억
③ 피해자 보호활동	일반예산	30.1억	40.29억
■ 지능형 CCTV	일반예산	9.3억	13.9억
■ 민간경호서비스	일반예산	-	7억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일반예산	5.4억	5.4억
■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일반예산	3.8억	3.8억
■ 응급지원물품 제공	일반예산	2.6억	2.6억
■ 피해자 권리고지	일반예산	2.3억	2.3억
■ 피해자 여비	일반예산	3.1억	3.1억
■ 피해자 상담공간 조성	일반예산	1.5억	0.09억
■ 심리상담 통역비	일반예산	0.7억	0.7억
■ 교육·홍보비	일반예산	0.6억	0.6억
■ 맞춤형 사례회의 운영	일반예산	0.5억	0.5억
■ 신고자 등 임시숙소	일반예산	0.3억	0.3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수사상 인권보호 제도개선 (50%)	신규	신규	신규	85	'22년 제도개선 및 영상녹화 진술녹음 실시율 대비 10%이상 목표치 설정 ※ 평가매뉴얼 상 적극성 "상"	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건수 + 홍보 및 교육	공문, 보고서 등 추진관련 근거자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 (50%)	37,731	41,649	46,590	51,808	최근 3년간 추세치(11.9%) 이상 ※ 평가매뉴얼 상 적극성 "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 회복지원제도 연계 건수	케어포털 통계

< 수사 상 인권보호 제도개선 세부 측정산식 >

구분	영상녹화·진술녹음 실시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수사 상 인권보호 및 윤리의식 확립 관련 교육·홍보		
배점	30점 상한			50점 상한			20점 상한		
유형	10%이상	10%미만 ~ 7%이상	7%미만	법령 제·개정	행정규칙 지침 수립·개정	인권보호·윤리의식 관련 전국 단위 계획 수립	언론홍보 (보도자료 등)	교육활동 (영상·현장 모두 포함)	교육자료 제작,배포 (강조공문, 업무연락 포함)
점수 (100점)	30	25	20	10 (건당)	5 (건당)	3 (건당)	3 (건당)	2 (건당)	1 (건당)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확립	①수사상 인권보호 제도 개선	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건수 + 홍보 및 교육	85	정량	결과 산출	
		②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 회복지원제도 연계 건수	51,808	정량	결과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인권·피해자 보호 중심 수사체계 확립	• 첨단기술 · 민간융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고도화(업무Ⅰ-나) • 뉴노멀 수사인권 시스템 구축(업무Ⅱ-마) •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립

성과목표 Ⅰ-3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한다.

(1) 주요 내용

○ **<경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전세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들의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성 사기 범죄 근절**

○ **<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살인·강절도·폭력 및 교통범죄 등 **악성범죄 엄단**과 함께, **피해품 회수 등 회복적 형사활동 강화**

– 안전사고 등 **중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수사체제 정착**, 법률검토 지원·소송과정 모니터링 등 수사역량 강화

○ **<마약·조직·외국인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유통·반입 차단 ▵조폭 활동 근거지 와해 등 근원적 대책 마련·추진

○ **<사이버공간 안전 확보>** 사이버치안 상황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집중단속**으로 사이버수사 역량을 극대화, **주요 사이버범죄 근절**

– 계좌 지급정지, 불법콘텐츠 삭제·차단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로 재범 의지를 차단**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수사·형사 치안고객만족도**
관리과제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 수사 활동 강화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년대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감소 /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건수
	강절도·폭력 등 악성범죄 총력 대응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 / 강·절도 피해품 회수율 / 특가법상 도주 치사상(인피 뺑소니) 검거율
	마약·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 조폭 검거성과 / 국제범죄사범 검거성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	1인당 사이버범죄 검거지수 /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수사·형사 치안고객만족도	67.4	64.7	64.6	65.1	전 3년도 실적 평균값(65.5)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62.7)을 고려, '23년 목표치는 추세치의 중위값(64.1)보다 1.0%p 상승한 65.1로 설정	치안고객만족도 수사·형사 분야 조사결과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대국민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기침체 국면을 틈타 전세사기·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 등 각종 **악성 사기범죄**가 지속 발생, **서민경제 위협**

– 집중단속 활동과 함께 진화하는 범행 수법에 대응하여 수사기법 개발·제도개선·피해예방 홍보 등 종합대책 추진화

○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유통** 범죄 증가, 청소년까지 마약류의 유혹에 노출되는 등 **국민안전 위협요인으로 대두**

– 국내외 공조수사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연중 테마별 집중 단속을 통해 **마약류 국내 유통 근절 추진**

○ 사회·경제 중심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각종 **사이버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수사여건*은 지속 악화

* △초국가적 사이버범죄 증가 △다크웹·가상자산·VPN 등 회피수법 다변화

– 민·관·학 협업을 바탕으로 예방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해외기관·기업과의 공조 강화로 **적극적 수사·검거활동 지원**

(4) 참고자료

○ 경찰청, '2023 주요 업무계획'

○ 경찰백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

○ 마약류 범죄 수사 매뉴얼, 경찰 범죄통계(http://police.go.kr)

10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 수사활동 강화

□ 추진배경

○ **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

– 특히, 최근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는 **각종 전세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서민들의 필수적인 생활 요소인 주택 · 중고차 분야에서 **각종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광고 및 고질적 · 조직적 사기 범죄 지속**

– 또한 국가 ·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불법사금융 등 다양한 경제범죄에 대한 단속 필요성 증대

○ 수년간 지속 증가하던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작년 감소추세로 전환* 되었으나, **여전히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일으키는 대표적 민생범죄

* '17년 2,470억 원 → '18년 4,040억 원 → '19년 6,398억 원 → '20년 7,000억 원 → '21년 7,744억 원 → '22년 5,438억 원

– **피해액 감소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화하는 범행 수법에 대응하여 단속 외 수사기법 개발 · 제도개선 · 피해예방 홍보 등 **종합대책 필요**

– 또한, 부처별로 산재된 **전화금융사기 신고 · 조치 대응 기능을 통합하여 처리**할 별도 기관 신설 필요성 대두

○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22. 1.)으로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범의지 박탈 및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수익추적수사**의 중요성 증가

* **(개정 前)** 200여 개 범죄→**(개정 後)** 장기 3년 이상 전체, 3년 미만 11개 범죄

– 특히, **소규모 민생범죄까지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全 수사관이 직접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정비 및 전문역량 제고 필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포함, 각종 기획수사 추진

– **(전세사기 특별단속)**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사기,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지정, **특별단속 실시**

※ 이외 서민 필수 생활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각종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광고 및 사기 근절을 위해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계획」 별도 수립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국고보조금 관련 △허위 신청, △부당 특혜제공,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단속 실시**

–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다단계,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주요 금융범죄 관련 단속 실시**

– **(보험사기 단속)** 각종 공영·민영보험* 제도를 악용한 고의·허위사고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 실시**

*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건강보험 등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상표권 침해 상품 제조·유통 행위,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실시

○ 전화금융사기 척결

– **(종합대응계획 수립)** △각종 범행수단 유통 차단, △신규 수사기법 발굴, △법제 개선 및 피해 예방 홍보 등 **다각적 접근을 토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 추진**

–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23년에 센터를 구축**, 경찰(112), 금감원(1332) 등 기관별 분리된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센터에서 접수해 통합 처리

○ 전 수사부서 범죄수익 보전 활성화

– **(활성화계획 수립)**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뿐 아니라, 경찰서의 **全 수사관들이 직접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역량강화)** △전국 수사관 대상 몰수·추징보전 전문화 교육, △전담팀 대상 회계법인 위탁 교육, △가상자산 추적기법 교육 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현황 추이 분석	1월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하달	2월	
	'23년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계획 수립 · 하달	3월	
	全 수사부서 범죄수익추적수사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하달	3월	
	'23년 전국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대상 워크숍 개최	3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계획(案) 수립·하달	2월	
	'23년 전화금융사기 종합대응계획(案) 수립 · 하달	3월	
	'23년 전화금융사기 대책 수립 관련 유관부처 합동 회의	3월	
2/4분기	국고보조금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 계획 수립·하달	3~4월	
	경찰서 과·팀장 대상 범죄수익추적수사 순회 강연	4~6월	
	'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활동 평가계획 수립 · 하달	4월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영상 송출	4~5월	
	긴이진술서·추적 수사보고서 등 가상자산 필수 수사서류 표준화· 배포	5월	
	'23년 범죄수익 보전활동 평가 및 포상계획 수립 · 하달	5월	
	Defi·NFT 등 신규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거래 추적기법 교육	6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회계법인 위탁교육 추진	6~7월	
3/4분기	'23년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단 1차 특별단속	4~6월	
	'23년 전화금융사기 특별 지수 · 신고기간 운영	5~6월	
	'23년 하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 계획 수립 · 하달	7월	
	범죄수익 성과지표 중간점검, 직접 보전성과 저조 관서 대상 집중 교육	7~8월	
	가상자산 관련 추적 프로그램 계약 및 신규 추적기법 전파	9월	
	'23년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영상 제작	7월	
	전화금융사기 대응 실적 저조 시도경찰청 점검 · 교육	7~9월	
	2023년 국내 석사과정 위탁교육(경제·금융) 실시	7~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 대응센터」 개소식	7~10월	
	'23년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8~10월	
4/4분기	연간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우수사례 공유	11월	
	각 활동 · 단속 성과 분석 및 포상 실시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관련 현장 대응 매뉴얼 제작	11월	
	23년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영상 송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全 국민

□ 기대효과

○ **각종 사기범죄 및 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 검거활동 외 각종 예방 홍보활동, 법령·제도개선, 유관기관 협업 등 **종합 대응을 통해 범죄피해 감소**

○ 범죄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기소 前 몰수·추징보전으로 **불법 재산을 조기에 박탈**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피해회복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범죄수사활동(Ⅰ-2-재정②) [2]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3]	일반회계	4,753	5,432
		4,753	5,432
■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4,753	5,4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가중치 40%)	10.2	10.2	13.7	12.5	하단 참조	'23년 주요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국 수사관 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시도 경찰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감소 (단위 : 억원) (가중치 30%)	7,000	7,744	5,438	6,054		'23년 전화금융사기 사건 피해액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건수 (단위 : 건) (가중치 30%)	234	858	1,204	1,324		'23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건수	

< 목표치 산출근거 >

○ '23년 성과지표 설정 배경

- 현재 추진 중인 악성사기 및 경제질서 교란행위 척결 뿐 아니라 범죄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보전 활동을 통해 피해회복 활동을 병행하고, 추진 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총 3개 지표를 설정
- **(가중치 부여)** '23년 추진 업무에 따른 각 지표의 중요성, 대표성을 감안하여 가중치 부여

  ⇨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강화' 과제 총 성과 달성도(%)

  =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달성도(%) × **0.4**) +

  =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감소 달성도(%) × **0.3**) +

  = (범죄수익 추적수사 지원건수 달성도(%) × **0.3**)

○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지표 산출 근거(업무Ⅰ-가 지표화)

- 악성사기 근절대책 등 중점 추진 중인 악성사기 특별단속(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및 경제질서 교란행위(불법사금융,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등 **중점 추진하는 기획수사 검거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 본 지표 산출방법에 따를 때 '20년~'22년간 1인당 기획수사 검거인원은 유지 후 증가하는 추세('20년 10.2명 / '21년 10.2명 / '22년 13.7명)
- 민생을 위협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최근 3년 평균치 11.3명의 110%(12.5명)를 상회하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감소’** 지표 산출 근거(업무Ⅰ-가 지표화)

-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경우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한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검거 및 회복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검거활동 외에도 홍보활동, 범행수단 차단 등 피해예방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감소**를 ’23년 성과지표로 선정
- 본 지표 산출방법에 따를 때 최근 3년간(’20~’22년)의 피해액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증가(’20년 → ’21년) 후 감소(’21년 → ’22년) 추세를 보이고 있음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피해액(억원)	7,000	7,744	5,438

-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 감소는 단속, 홍보, 법령·제도개선, 기관협업 등 다방면으로 추진하는 노력의 결과물임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피해액인 6,727억 원에서 10%를 추가 감소시킨 ‘6,054억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건수’** 지표 산출 근거(업무 Ⅱ-나 지표화)

- 수사 단계에서 범죄피해 회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찰청은 ’19. 1월부터 본청 및 각 시도청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 中

  * ’19년 43명 → ’20년 78명 → ’21～’23년 현재 149명(정원 기준)

- 특히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 가능한 범죄가 대폭 확대되어 경찰서 사건 中 다소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全 수사부서 대상 보전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환경 정립 필요**
- 따라서, 실질적인 범죄수익 추적·보전활동 성과를 책정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건수’를 ’23년 성과지표로 선정
- 본 지표 산출방법에 따를 때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그간 인력증원 등 역량강화 추진 결과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실적 1,204건의 **110%를 상회하는 ‘1,324건 이상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20년 234건 → ’21년 858건 → ’22년 1,204건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 수사활동 강화	①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가중치 40%)	'23년 주요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국 수사관 인원	12.5명	정량	산출	
		②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감소 (가중치 30%)	'23년 전화금융사기 사건 피해액	6,054억 원	정량	산출	
		③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건수 (가중치 30%)	'23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건수	1,324건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 수사활동 강화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국정목표 3-약속1-2-63) - 국민이 체감하는 「악성사기 근절대책」 추진(업무 Ⅰ-가-1-①) - '23년 전화금융사기 종합대응계획 추진 (업무 Ⅰ-가-1-②) - 사기방지 기본계획 수립 (업무 Ⅰ-가-1-③) - 보조금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업무 Ⅰ-가-1-⑥) - 全 수사부서 범죄수익 보전 활성화 (업무 Ⅱ-나-1-③)

11 강절도·폭력 등 악성범죄 총력 대응

□ 추진 배경

○ 연이은 재난·사건사고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 증가**

– 경제상황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증가**와 **빈부격차** 등 **사회적 갈등에 의한 범죄** 등이 **치안 이슈로 부각될 우려**

▸ **(주요 사건)** △광주 붕괴('22.1월) △이천 병원 화재(8월) △이태원 사고(10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9월) △일산 동거녀·택시기사 살인(12월)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23.1월) 등

※ '22년 통계청 조사결과 과거에 비해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답변율 감소('5년 후 더욱 안전해질 것' – '20년 38.8% → '22년 32.3%, 6.5p%↓)

▸ **(여건 전망)**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인점포 확산 등 변화된 생활방식에 편승한 절도 범죄 등 기승 △빈부격차, 사회적 좌절이 불러올 증오·보복범죄 등 우려

○ 강절도·폭력 등 **강력범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신속 수사를 통한 조기 해결이 매우 중요**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피해품 회수 및 안전조치·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피해회복** 등 **국민 입장**에서의 실질적 **'사건해결' 추진, 체감치안 제고 필요**

▸ **(중요성)** 살인·강절도 등 강력범죄는 국민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민생치안의 核」으로 스토킹 행위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최근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면, 단 한 건이라도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

▸ **(문제해결)** 흉악범죄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꾸준히 발생,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상당 → 피해정도·범행수법·상습성 등 고려한 엄정 대응

- 아울러, 피해자의 입장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절도 피해품 회수, △피해자 안전조치 및 심리·경제·법률지원 등 병행 △당사자 갈등 해소 등 '회복적 사법' 추진

– 아울러, **'안전사고 전문 수사체계' 고도화**를 통해 인명피해 사고 야기 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과 불법행위 관행 근절 추진

○ '인피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 교통범죄로,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 사고 초기부터 집중 대응하여 **'도로 위 국민 안전' 확보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강·절도' 범죄 근절]

○ **(적극적이고 밀도 있는 단속)** 연중 상시단속과 병행하여 다발 시기 **「집중검거 기간」 운영***,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주력**

* 상·하반기 年 2회 -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 등 중점 단속

– 주요 사건 발생 **時** 가용경력·장비 집중 투입 등으로 신속 검거체제를 가동, 조기 해결 및 추가 범행 차단

○ **(장물범죄 연계 종합수사) 장물 처분·유통경로 逆추적 등 장물범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절도범죄 수익 창구 봉쇄

– 장물거래가 용이한 중고거래 사이트·스마트폰 앱 등 모니터링과 함께, 금은방 등 귀금속 취급업소 상대 첩보수집 강화

○ **(피해회복 등 공동체 복귀)** 피해품 매입·유통업자 등 **다각적 수사로 피해품 회수율 제고**, 실질적 피해회복 집중

– 소액 절도 등 '생계형 경미사범'은 즉결심판 청구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재범 방지 및 공동체 복귀 유도

※ 최근 5년 사이 61세 이상 고령층에 의한 절도 범행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51%↑), 100만원 이하 경미절도 비중 높은 수준('21년 기준, 피해금 100만원↓ 비중 62.3%)

[상습 주취폭력 등 '악성폭력' 엄정 대응]

○ **(전담수사팀)** 경찰서별 전담수사팀 편성, 생활 주변 악성폭력 사건에 대한 첩보수집·수사 전담하여 연속성·전문성 확보

※ 중요 사건은 시도청에서 직접수사 또는 법리검토 등 경찰서 지도·지원

○ **(중요사건 신속·집중수사) 상·하반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가시적 성과 거양 및 대내외 관심도를 제고하고,

※ '22년 하반기 집중단속기간(9.1.~10.31.), 일반기간 대비 검거인원 19.6%↑

–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흉기 범죄, 재범·보복 우려 등 **고위험 사건 발생 時 가용경력 총동원**, 집중 수사로 신속 해결

– 112신고 이력 및 범죄·수사경력 조회 등을 통해 상습성 판단, 피해정도·범행수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

○ **(피해자 안전조치)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안전조치 실시, 경제적·심리적 지원제도 안내 등 **피해회복 지원**

[안전사고 전문 수사체제 고도화]

○ **(수사과정 내실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시행('24. 1월) 등에 대비*, **안전사고 '全 수사과정' 내실화**** 추진

* '24. 1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 예정

** 법률 적용 → 경영책임자 수사 → 소송과정 · 결과 모니터링

– 사망자 발생 등 중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시도청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에서 집중수사 및 지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 전국 17개 시도청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편성(총 112명, 세종청은 제외)

– 경찰청 담당자 법률검토 지원, 경영책임자 수사 착안사항 공유 및 소송과정 ·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역량 제고

▸ **('경영책임자' 수사 착안사항 공유)** 고용부 협의를 통해 그간 수사한 중대 산업재해 사건 '경영책임자' 수사 노하우 및 기법 등 공유

▸ **(소송 모니터링)** 중대해채처벌법 송치 후 기소·재판과정 및 결과 모니터링, 향후 수사에 반영

○ **(전문교육 강화)** 재난사고 분야 경력경쟁채용자(총 28명) 대상 연합세미나 개최 및 커뮤니티 개설, 전문연구 · 분석 활성화

– 경찰 수사연수원 **'안전사고 수사' 교육과정에 고용노동부 ·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가 특강**, 중처법 해설 등 콘텐츠 강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인피 뺑소니' 교통범죄 엄단]

○ **(대응체계 강화)**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사망 등 중요 사건은 시도청 중심 사건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전담수사를 통해 초동조치 – 추적수사 – 피의자 특정 · 검거까지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도청 집중 지휘를 통해 검거율 제고**

※ 각종 법 개정(난폭운전 금지 · 초과속 등 신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수사 업무량 및 난이도 증가 → 시도청 지휘 · 지도 必

○ **(엄정 대응)** 사안의 중대성 · 피해정도 · 상습성(음주전력 등) · 증거인멸 여부(블랙박스 삭제, 차량 수리 등) 등 종합적으로 고려, **구속영장 신청 및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

※ 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 사건은 체포(긴급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

▸ **(초동조치)** 인피사고 시 가용경력 동원하여 현장증거 확보, 2차 사고 방지 등 현장조치

▸ **(피의자 특정 · 검거)** 사고장소 연결지점 블랙박스 · CCTV 분석, 주변 탐문 등 신속 추적

▸ **(신병 등 처리)** 혐의 확인(블랙박스, 차량 흔적 등) 되는 경우 구속수사 적극 검토하고, 차량 압수 요건(상습 음주운전자) 충족되는 경우 압수 추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정비]

○ **(중요 미제사건)** 시도청 중심 수사기록 집중관리, 전문가 참여 사건분석·연구, DNA 증거 등 주기적 감정 등 수사체계 정착

▸ **(시도청 집중관리·수사)** 2년 경과 미제 살인사건은 모두 시도청 미제사건 수사팀으로 이관 → 수사기록 DB시스템 관리, 전문가 참여 사건 분석·연구, DNA·지문 등 주기적 감정을 통해 수사단서 확보 주력

※ 수사기록 영구 보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제사건 276건 수사기록 18만 페이지, 영상 700GB 등 등록·관리('21. 11월) → '01년 대전 총기 은행강도 검거('22. 8월) 등

○ **(전자장치 훼손 사건)** 전자장치 훼손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부**(보호관찰소)와 **적극 정보공유 등 공조수사 체계 강화**

▸ **(공조수사)** 사건 발생 시 협조 중심경찰서 지정, 실시간 정보공유하며 추적수사 공조

▸ **(교육 등 협조)** 보호관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연수원 교육 참여, 추적기법 교육 강사 중

○ **(교통사고 관련 범죄수사)** △교통 관련 법령 이해 △차량운동학 △사고데이터 추출·분석 등 사고원인 판단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정비, 보험연수원 위탁교육 및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교통수사관들의 전문성 제고**

▸ **(교육과정 정비)** 수사연수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 중인 교육 중 중복되는 과목 정비·개편

▸ **(위탁교육)** 보험연수원의 보험사기 교육과정 中 교통사기 관련 과정에 위탁교육 추진

▸ **(합동워크숍)** 금감원·보험사 보험사기 전담팀(SIU) 합동 워크숍 정례화, 공동 대응체계 강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 전후 특별 형사활동 실시	1월	강력
	교통수사 폴리그래프 위탁교육계획 보고	2월	교통수사
	성범죄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DNA 수사 활성화 지시	2월	강력
2/4분기	도로교통공단 위탁교육 시행(교통사고조사 전문화 과정 등)	4월	교통수사
	상반기 강·절도 및 악성폭력 집중검거 기간 추진	4~6월	강력, 폭력
	부처님오신날 전후 형사활동 강화	5월	강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기법 공유 등 고용노동부 협의	6월	폭력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계획 하달	6월	교통수사
3/4분기	강절도, 악성폭력, 교통사고 등 주요 단속분야 성과 평가 포상	7월	강력, 폭력, 교통수사
	하계 휴가철 형사활동 강화	8월	강력
	추석 전후 특별 형사활동 실시	9월	강력
	하반기 강·절도 및 악성폭력 집중검거 기간	9~10월	강력, 폭력
4/4분기	강절도, 악성폭력, 교통사고 등 주요 단속분야 성과 평가 포상	11월	강력, 폭력, 교통수사
	과학적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분석장비 구매	11월	교통수사
	연말연시 특별 형사활동 추진	12월	강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 기대효과

○ '원인을 면밀히 분석·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형사활동'을 통해 **범죄 위험요인 선제적 제거**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인피 뺑소니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감치안만족도 제고**

○ 강절도 피해품 회수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 도모** 및 **사회적 약자 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살인·강도·절도·폭력 통합 검거율(50%)	71.0%	71.2%	70.7%	71.0%	최근 3년간 평균치(70.9%) 보다 0.1% 높은 71.0%로 설정 ⇨ 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상회하는 '상'에 해당**	{(살인·강도·절도 CSS 검거건수 + 절도 즉심 처리건수) / (살인·강도·절도 CSS 발생건수 + 절도 즉심 처리건수) x 70} + {(폭력 CSS 검거건수 + 폭력 즉심 처리건수) / (폭력 CSS 발생건수 + 폭력 즉심 처리건수) x 30}	범죄통계시스템(CSS), 즉결 및 통고처분시스템
강·절도 피해품 회수율(25%)	35.4%	40.2%	37.7%	37.8%	최근 3년간 평균치(37.7%) 보다 0.1% 높은 37.8%로 설정 ⇨ 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상회하는 '상'에 해당**	{(강·절도 피해품 CSS 회수건수 + 절도 즉심 회수건수) / (강·절도 CSS 발생건수 + 절도 즉심 처리건수) x 100}	범죄통계시스템(CSS), 즉결 및 통고처분시스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인피 뺑소니) 검거율	93.6%	87.9%	86.8%	89.5%	최근 3년간 평균치(89.4%) 보다 0.1% 높은 89.5%로 설정 ⇨ 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상회하는 '상'에 해당**	(특가법 도주치상) 발생건수 / 검거건수	범죄통계시스템 및 TCS(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민생침해 범죄, 중요 사건사고 신속·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①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50%)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71.0%	정량	산출	
		② 강·절도 피해품 회수율(25%)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37.8%	정량	산출	
		③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인피 뺑소니) 검거율(25%)	범죄통계시스템 및 TCS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89.5%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민생침해 범죄, 중요 사건사고 신속·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강절도·폭력 등 악성범죄 척결(업무Ⅰ-가-3-①) 교통범죄 근절 집중단속 활동 전개(업무Ⅱ-다-1-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국정 63-2,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국정 64-2)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정 69-1)

12 마약 · 조직폭력 · 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 추진배경

○ 최근 **인터넷 등 비대면을 통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 근절 위한 강력대응** 필요

– 일시적 단속에서 벗어나 마약류 범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정부기관 간 합동 총력 대응**

○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세력화·집단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및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로 체감치안 제고 필요성 대두

○ **체류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국제범죄사범 집중단속활동**

– 코로나19로 인한 체류외국인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15년 이후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는 지속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 또한 적극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불법체류자 인원)** '20년 392,196명 → '21년 388,700명 → '22년 411,270명

** **(외국인 피의자현황)** '20년 39,139명 → '21년 32,470명 → '22년 34,511명

– 체류외국인의 세력화·집단화로 외국인 범죄조직이 결성되어 보복 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 치안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 △'21. 6월 구소련권 외국인 범죄조직 검거 (검거 53 · 구속 24) / 경기南 · 국수계
△'21. 10월 외국인 마약 유통 사범 검거 (검거 47 · 구속 33) / 서울 · 국수계

– 위드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출입국사범(불법입출국, 브로커) 등 국제범죄사범에 대한 선제적 단속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마약류 범죄 근절]

○ 작년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387명을 검거**하여 전년(10,626명) 대비 **16.6%(1,761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검거 인원 기록**

※ **(최근 5년간 검거 현황)** 2018년(8,107명) → 2019년(10,411명) → 2020년 (12,209명) → 2021년(10,626명) → 2022년(12,387명)

○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생활 속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보건을 위협**

– 시기별·테마별 단속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

○ 최근 접근이 쉽고 비대면 및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 증가 추세

<인터넷 이용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검거	8,107	10,411	12,209	10,626	12,387
인터넷마약사범 (총검거 대비)	1,516 (18.7%)	2,109 (20.3%)	2,608 (21.4%)	2,545 (24.0%)	3,092 (24.9%)
다크웹·가상자산 (총검거 대비)	85 (1.1%)	82 (0.8%)	748 (6.1%)	832 (7.8%)	1,097 (8.9%)

※ 서울청 등 6개 시도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全 시도청으로 확대 운영

○ 일시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마약류 범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정부 기관 간 합동 총력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 분위기 사전 차단**

○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증가**에 적극 대응을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시 유관기관 논의 지속 추진

○ 국내외 마약수사기관 간 협력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유통 정보교류 등 공조수사 강화**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폭력 척결]

○ 서민생활 주변에서 각종 치안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 지속 단속**,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생활 안전 확보**

※ 조폭은 존재만으로도 국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신고유도를 통한 단속 및 재범 차단

○ 조직폭력배 개별범죄는 물론 범죄수익 동결을 통한 **자금원 차단 및** 광범위한 단속으로 조직폭력배 **활동 근거지 와해** 추진

※ 직접수사부서 책임수사체제에 따라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중심의 조직폭력배 단속으로 전문성 및 집중도 제고

– 단속과 더불어 조직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폭력조직원의 활동성·범죄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제점검 병행

– 보복 및 재범여부 상시 모니터링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 '23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선정, 첩보 수집 강화 및 상반기 집중단속 추진

‣ 폭력조직의 자금원 차단을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범죄수익 몰수

○ **전략적 홍보 및 다양한 신고채널·신변보호 제도**(국민제보앱·신고명함, 가명조서, 면책제도 등)를 활용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국제범죄사범 집중단속으로 체감치안 제고 및 법질서 확립]

○ 외국인 집단폭력·조직성 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3~6월), 불법 입출국·국제범죄 사범에 대해 하반기 특별단속 활동 실시

※ 국정원·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국제범죄 첩보 적극 수집

– 외사기능과 협업, 지역사회 내 국제범죄 관련 여론 수렴 및 수집된 범죄 첩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수립

[선제적 범죄예방과 실질적 피해회복 등 회복적 형사활동 병행]

○ 보복 등 추가범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피해자 신변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건 처리절차·진행·결과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품 회수, 생활비·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지원

○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를 통한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로 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 구제 ▵추가범죄 발생 예방 ▵불법체류 외국인 치안 사각지대 방치 해소 ▵인권 보호 향상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3월～7월	마약범죄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3월～7월	조직범죄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	3월～6월	조직범죄
2/4분기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 성과분석	7월	조직범죄
	국제범죄수사 현장 컨설팅	상반기	조직범죄
	국내 마약류 유관기관 공조회의	6월～7월	마약범죄
3/4분기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성과 분석	.8월	마약범죄
	하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8월～11월	마약범죄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성과분석	8월	조직범죄
	하반기 조직폭력배 집중단속 실시	9월～12월	조직범죄
	하반기 국제범죄 특별단속	8월～9월	조직범죄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 개최	9월～10월	마약범죄
4/4분기	하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성과 분석	12월	마약범죄
	조직폭력배 집중단속 결과 및 조폭 동향 분석	12월	조직범죄
	국제범죄 특별단속 결과 및 외국인 범죄 동향 분석	12월	조직범죄
	마약·조직폭력·국제범죄 등 주요 단속 분야 성과 평가·포상	11월～12월	마약조직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 기대효과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조직폭력·외국인 범죄 강력단속을 통해 **체감치안안전도 제고**

○ 마약·조직폭력·국제범죄 수사 시 **피해자 신변보호와 적극적 대응을 통한 범죄의지 차단으로 안정적 치안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40%)	10,544명	9,077명	10,988명	9,698명	**최근 5년 검거인원 중 최고, 최저 검거한 년수를 제외한 3년 평균치(9,508명) + 2%(190명)를 초과하는 9,698명으로 산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초과하는 적극성 '상'에 해당** **<'22년 성과 목표치(8,592명) 대비 13% 상향치(+1,106명)>** ※ '18년까지 마약류 검거인원 감소 추세였으나, '19년 강남클럽 사건, '20년 VIP특별지시 단속, '22년 경찰청 5개월 총력 대응으로 검거인원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5년 검거인원 중 최고, 최저 년수를 제외하고 3년치 평균치를 목표치로 산정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설정임	범죄통계시스템 검거인원	범죄통계시스템
	'18	'19					
	6,821명	8,904명					
조폭 검거성과(30%)	2,817명	3,027명	3,231명	3,064명	**최근 5년 검거인원 중 최고, 최저 검거한 년수를 제외한 3년 평균치(2,974명) + 3%(89명)를 초과하는 3,064명으로 산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초과하는 젖극성 '상'에 해당** **<'22년 성과 목표치(2,990명) 대비 2.5% 상향치(+74명)>** ※ 조직폭력배의 소규모·지능화 경향 등 단속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임	조직폭력배 검거인원	검거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 특진, 특별승급 등 포상을 위해 실적을 검증하므로 통계의 진정성이 담보됨
	'18	'19					
	2,694명	3,077명					
국제범죄 사범 검거성과(30%)	1,659명	2,032명	1,970명	1,906명	**최근 3년 평균치(1,887명) + 1%(19)를 초과하는 1,906명으로 산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초과하는 적극성 '상'에 해당** **<'22년 성과 목표치(1,829명) 대비 4.2% 상향치(+77명)>** ※ 국수본 체제 개편으로 산업기술 수사와 인터폴 국제공조 인력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인력을 제외한 국제범죄수사 인력의 1인당 검거인원을 산출하여 목표치 환산, 3년 평균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국제범죄수사계(팀) 검거인원 ※ 시도청 중심 전문수사체제 운영에 따라 국제범죄수사계 평가	범죄통계시스템 및 검거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 특진, 특별승급 등 포상을 위해 실적을 검증하므로 통계의 진정성이 담보됨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마약·조직폭력·국제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①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40%)	범죄통계시스템	**9,698명**	정량	산출	
		② 조폭 검거성과 (30%)	검거인원 수기 통계 (월보) 취합	**3,064명**	정량	산출	
		③ 국제범죄사범 검거성과(30%)	검거인원 수기 통계 (월보) 취합	**1,906명**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마약·조직폭력·국제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국정63-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업무 I -가

13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 추진배경

○ IT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의 중심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일상 범죄가 **사이버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최근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자산·리딩방 사기' 등 경계가 모호한 **신종범죄도 출현**

○ 특히, 민생 범죄인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 추세**이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사이버성폭력**과 대표적 중독성 범죄인 **사이버도박도 꾸준히 발생**

분류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체 사이버범죄	149,604	180,499	234,098	217,807	230,355
사이버사기	112,000	136,074	174,328	141,154	155,715
사이버금융범죄	5,621	10,542	20,248	28,123	28,546
사이버성폭력	3,833	2,690	4,831	4,349	3,201
사이버도박	3,012	5,346	5,692	5,505	2,997

○ **사이버범죄의 발생건수는 증가 추세**이나 있으나, 통합수사팀 시범 시행으로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 인력은 증가하지 못함

※ 사이버 수사관 현원 : '20년 2,058명 ⇨ '22년 2,070명(통합수사팀 제외)

– 또한, 가상자산·다크웹 등의 사용으로 수사 난이도는 높아짐

※ 사이버범죄 검거율 : ('20년) 67.5% ⇨ ('21년) 64.7% ⇨ ('22년) 62.5%

○ 사이버수사 역량을 집결한 집중단속 추진 및 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생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검거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확산방지 및 예방 활동 병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집중단속)** 사이버치안 상황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집중단속 추진으로 사이버수사 역량 극대화, 주요 사이버범죄 근절 도모

<'23년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계획>

집중단속	기간	중점 단속 대상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23. 3. 1. ~ 5. 31.(1차)	▵중고거래 빙자 사기 ▵공동구매·쇼핑몰사기 ▵가상자산 등 신종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23. 7. 1. ~ 9. 30.(2차)	▵메신저피싱·몸캠피싱·스미싱 범죄 조직 총책, 중간 관리책, 인출책 ▵범행 이용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23. 3. 1. ~ 9. 30.<案>	▵보안메신저·웹하드 등 사이버성폭력 불법 유통망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공급·유통사범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23. 5. 1. ~ 9. 30.<案>	▵스포츠토토, 경마·경륜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프로그램 개발·유통 ▵사이트총판·홍보조직

※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사이버저작권 단속 등 현안에 맞춰 추가 단속 추진

※ 사이버사기·금융범죄·성폭력 집중단속은 기간을 구분, 2회에 걸쳐 평가 예정

<'22년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현황>

집중단속	기간	실적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22. 3. 1. ~ 10. 31.	89,957건 / 25,616명 검거 (구속 1,391명)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22. 3. 1. ~ 10. 31.	1,612건 / 1,694명 검거 (구속 99명)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22. 3. 1. ~ 10. 31.	2,644건 / 2,534명 검거 (구속 163명)
「경찰청-문체부-인터폴」 저작권 침해사이트 합동단속	'22. 6. 1. ~ 11. 30.	2건 / 10명 검거 (구속 3명)

○ **(사이버사기·금융범죄)** 대규모·조직적 범죄는 시도청에서, 민생범죄는 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단속 전개

– 사이버미제사건수사팀을 2개청(서울·경기南)에 운영, 수사단서 통합 연관분석을 통해 사이버금융범죄 조직 척결을 위한 책임수사

▸ **(집중단속)** '22년에 이어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및 포상을 별도로 실시, 죄종에 치우침 없이 우수한 사건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단속·평가를 추진하여 사이버사기·금융범죄 단속동력 확보
※ '23년에도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예정

▸ **(사이버미제수사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 메신저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미제사건수사팀'(2팀, 12명)을 신설('22년)
- 관리미제 등록·수사중지되는 사건의 수사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범죄 조직을 추적·검거하고, 효율적인 수사기법 개발·공유를 통해 사이버수사역량 강화

○ **(사이버성폭력)** 「수요·공급요인 억제·차단」을 목표로 집중 단속(위장수사 활용), 피해자보호(삭제지원), 제도개선(예방·홍보) 노력 등 전방위적 정책 추진

▸ **(종합적 단속 전개)** 진화하는 범죄수법·유통구조에 맞춰 아동성착취물·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유통사범을 면밀히 추적하여 관련자 전원 엄정 사법처리
※ '23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 추진('23. 3. 1. ~ 9. 30. <案>)
※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은 기간을 구분하여 총 2회에 걸쳐 평가 예정
※ 여성청소년·형사 등 관련 수사부서가 사이버 추적수사 기법을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성폭력 수사연구회('20. 3월부터 운영 중)' 참석범위 확대 추진
▸ **(피해자 보호 강화)** 유관기관(여가부-방통위-방심위)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공동 활용 중인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지자체 운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시스템 간 연계 확대
※ (서울·인천·경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경찰청)과 '피해지원 시스템'(지자체) 연계 완료, 다만 현재 업무 연계 범위 등에 대해 협의 中 / (부산·대전) '23년 중 '피해지원 시스템'(지자체)을 연계 추진
▸ **(제도개선)**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의 제언과 시민단체 모니터링 내용이 관련 부처·기관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 지속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21. 9. 24. 시행)가 본격화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안착,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점검 진행

▸ **(위장수사관 선발·교육)** 전국 시도청 사이버·여청 기능 합동하여 '23년 20명 추가 선발·배치 및 직무교육 실시
※ '22년 하반기 기준 전국 시도청에 위장수사관 55명 배치(사이버 37명, 여청 18명)
▸ **(현장점검)** 내부 점검단 구성, 시도청 현장점검을 통해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여부 점검하고 수사기법 보완

○ **(사이버도박)** 대표적 중독성 범죄인 사이버도박의 전문적 대응을 위해 시도청 사이버도박수사팀 확대 설치('23년 상반기 인사), 시도청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조직 근절 추진

▸ **(전담조직 강화)** '19년 사이버도박수사팀 최초 신설(6개청) 후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 22년 소요정원 16명 시도청 배정을 통해 4개팀(울산·충북·전북·전남) 신설 및 증원(강원)하여 세종청을 제외한 전국 시도청에 사이버도박수사팀 설치

○ **(기타 사이버범죄)**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저작권 침해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23년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공정선거에 기여

○ **(피해확산 방지)** △범행수단 차단 △악성프로그램·불법콘텐츠 삭제·차단을 통해 2차 피해 차단 및 피해확산 방지

▸ **(범행수단 차단)**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신고 즉시 범행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등 범행수단을 차단

▸ **(삭제·차단 강화)**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한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을 탐지, 삭제·차단 요청

-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경찰청)에 악성프로그램 분석 및 보고서 생성 기능 탑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연계해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 지원

○ **(범죄수익 환수)** 단속에 병행하여 범죄수익 환수, 재범의지 차단

▸ **(범죄수익 추적·환수)** △범죄수익금 압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 범죄가 금전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

- △집중단속 평가 시 범죄수익 환수에 가산점 부여 △상·하반기 범죄수익 추적 우수사례 선발·포상을 통해 적극적 범죄수익 환수 독려

○ **(관련 기관 협업)** 전문가·시민단체·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공동 대응, 시민과 소통하는 수사·예방 전개

▸ **(자문단)**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시민단체·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 운영, 단속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제언을 통해 정책으로 환류

▸ **(단속 공조)**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이버성폭력) △문화체육관광부(사이버저작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사이버도박)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단속 공조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분위기 조성 및 단속 효율화

▸ **(피해자 보호 공동대응)** 경찰청 운영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 대응 공조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간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및 지자체(서울·인천·경기)와도 연계 확대로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지원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계획 수립·시행	3월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계획 수립·시행	3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계획 수립·시행	3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3월	
	1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회의 개최	3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고도화 관련 시장조사 및 계획 수립	3~4월	
2/4분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계획 수립·시행	5월	
	디지털 성범죄 수사지원 시스템 활용방법 매뉴얼 작성·교육	5월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도청 현장점검	6월	
	2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회의 개최	6월	
3/4분기	상반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 평가 및 포상	7~8월	
	'23년 상반기 탑 사이버팀 선발	8월	
	하반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도청 현장점검	9월	
	3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회의 개최	9월	
4/4분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10월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고도화	10월	
	하반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 평가 및 포상	10~11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평가 및 포상	10~11월	
	4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회의 개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및 정부, 공공·민간기관

○ **(이해관계집단)** 관계부처(여가부, 방통위, 방심위 등) 및 민간기업(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등), 학계, 시민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 기대효과

○ 민생과 밀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통해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향상**, 사이버 치안에 대한 **시민의 체감만족도 제고**

○ 사이버범죄 조직 와해, 불법 유해정보 차단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 및 피해확산 방지**

○ **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II-1 범죄수사활동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일반회계	3151	3547
■ 사이버수사역량강화(315)		(82)	(90)
② 수사업무정보화(1232)		226	174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513)		(125)	(1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1인당 사이버범죄 검거지수 (70%)	41.4	32.5	32.8	33.5	하단 참조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의 합계/ 사이버수사인력 현원 ※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제외	사이버범죄 현황통계 (KICS 시스템 자료)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 (30%)	33.79	43.47	65.63	82	하단 참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 + 사이버금융범죄 발생건수)	피해 보호조치 통계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자료), 사이버범죄 현황통계 (KICS 시스템 자료)

【1인당 사이버범죄 검거지수】

가. 측정산식

-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 검거인원) / 사이버수사인력 현원

※ 통합수사팀 인력은 통합수사팀 내 사이버수사팀 인력(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나. 지표설정 사유

- 온·오프라인이 혼재된 범죄 양상이 증가하여 사이버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나, 내부적으로 경찰서 통합수사팀이 대폭 확대('21년 2개청 → '22년 8개청) 운영되어 본청 중심의 일률적인 검거율 상승 견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또한 △사이버도박 △사이버성폭력 등 일부 사이버범죄 죄종은 경찰서 통합수사팀에서 수사하지 않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함으로써 전체 사이버범죄 검거 인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사이버수사관의 1인당 검거 성과를 측정,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수사팀 시행으로 인한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의 하락을 방지하고 국민과 밀접한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 만족도 제고

  ※ 통합수사팀은 경제, 지능, 사이버범죄를 모두 담당하므로 통합수사팀 전체 현원을 기준으로 1인당 사이버범죄 검거지수를 산출하여 이전 연도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합수사팀은 통합수사팀 내 사이버수사관 인력(정원)을 기준으로 1인당 사이버범죄 검거지수를 산출.

다.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 '21년 1인당 사이버범죄 검거지수는 32.5점, '22년 1인당 사이버범죄 검거지수는 32.8점으로 2년간 실적치는 상승세(0.9%↑)임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목표치 구분 '상'에 해당하도록 상승세 이상인 33.5점을 목표치**로 설정

  ※ '20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사이버범죄가 급격하게 증가('20년 전체 사이버범죄는 234,098건으로 '19년 180,499건 대비 29.7% 증가)하였고, '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수사환경에 대폭 변화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 갑작스러운 증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년 실적을 목표치 산출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2년치 실적을 활용하여 목표 수립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21년 자체평가 정책과제 본평가 계획)>

구분	3년간 실적치		2년간 실적치		전년도 실적치
	상승세	그 외	상승세	하향세	
상	추세치 이상	평균치 이상	상승세 이상	가장 높은 실적 이상	전년 대비 10% 이상
중	추세치 수준	평균치 수준	상승세 수준	가장 높은 실적 수준	전년대비 10% 수준
하	추세치 이하	평균치 이하	상승세 이하	가장 높은 실적 이하	전년 대비 10% 이하

※ 추세치 : 통계기간 대비 평균 증가율('16~'17 : 5%↑, '17~'18 : 7%↑ ⇒ '19 추세치 : 6%)

※ 임계치 도달, 갑작스런 증감 등 예외적인 경우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 점수부여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가. 측정산식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피해영상물(아동성착취물 · 불법촬영물 · 허위영상물) 및 해당 URL 삭제 · 차단 요청 건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연계 건수) +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사이버금융범죄 피해 URL 삭제 · 차단 요청 건수)} /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 + 사이버금융범죄 발생건수)

나. 지표설정 사유

- 사이버범죄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불법콘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삭제·차단)를 수행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본 지표가 필요함
  ※ 시스템을 통한 삭제·차단 분류 중 '악성코드'는 사이버테러대응과 성과지표이고, '불법성영상물'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이므로 본 지표에서 제외함
- 피해자 보호조치는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 해당 시스템으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URL 포함)과 피싱·파밍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이용된 URL을 유관기관(방심위·KISA)에 삭제·차단 요청
- 일선 수사관들이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추가피해 예방조치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독려 및 성과평가가 필요함

다.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 최근 3년간 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은 '20년 33.79%, '21년 43.47%, '22년 65.63%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증가 추세치는 15.92%*임
  * 9.69%('20～'21 증가율) + 22.16%('21～'22 증가건수) / 2 = 15.92%
  ※ ┌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20) 8,473건 → ('21) 14,117건 → ('22) 20,836건
  └ 사이버성폭력·금융범죄 발생건수 : ('20) 25,079건 → ('21) 32,472건 → ('22) 31,747건
- **'23년도 목표치가 적극성 '상' 등급을 충족**하도록, '23년도 적정 보호조치율은 **'22년도 실적치(65.63%) + 추세치(15.92%)를 초과하는 82%을 '23년도 목표치로 설정**함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①1인당 사이버범죄 검거지수(70%)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의 합계 ÷ 사이버수사인력 현원 ※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제외	33.5	정량	산출	
		②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30%)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 + 사이버금융범죄 발생건수)	82%	정량	산출	

성과목표Ⅰ-4 당당한 법집행을 지원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경찰장비 개발·지원>** 첨단기술 활용, 친환경 차량 및 미래형 장비를 도입하고 각종 **장비의 성능개선·개발·지원을 강화**

– 개인 맞춤형 **희망품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 품질 향상 추진, 경찰장비에 대한 내부만족도 제고**

○ **<법률지원·입법대응 강화>** 현장경찰관의 **적극적 법집행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담·소송지원 등 **현장법률 지원 강화**

– 국정과제 등 **주요 법안 입법을 주도**하는 한편,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현장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

○ **<항공지원 확대 및 역량 강화>** 각종 위기·위급 상황에 현장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항공 지원활성화

– 최근 국내·외 항공사고 등을 감안, **분야별 전문교육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당당한 법집행을 지원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치안고객만족도**
관리과제	맞춤형 장비 개발·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장비 성능개선 및 신규도입 / 경찰장비 현장만족도
	입법대응 및 현장 법률지원 강화, 국민안전 보호 기반 확충	입법대응 노력도 / 규제혁신과제 달성도 / 통합법률 및 소송지원 달성도 / 현장법률 365 센터 대응 노력도
	치안현장 항공 지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 예방정비 활동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치안고객 만족도	83.9	82.8	82.9	84.0	치안고객만족도는 '20년 역대 최고치(83.9) 경신 이후 하락세, 국민에 대한 경찰의 기대가 커진 것을 감안, '23년 목표치는 역대 최고점인 84.0으로 도전적 설정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치안고객만족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치안현장에서의 위협요인이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실효적이고 당당한 경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현장 요구 증대

– ▵미래형 방검복 ▵저위험 권총 등 **국민과 경찰관 모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담보할 수 있는 장비 도입 추진

– **관련 법령 제·개정 노력**과 함께 ▵법률상담 ▵각종 소송지원 ▵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법률지원 강화**

(4) 참고자료

○ 대한민국 청와대(www.president.go.kr)

○ 경찰 항공 운영 매뉴얼

14 맞춤형 장비 개발·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 추진배경

○ (현장중심 성능개선) 흉기피습, 교통사고, 재해재난, 군중관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경찰장비 개발 및 성능개선 필요

○ **(경찰장비 만족도) 개인 맞춤형 희망품목 시스템 지속 고도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 **품질향상과 경찰장비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현장경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비 개발]

< 현장경찰관 보호장비 개발>

○ **(미래형 방검복 플랫폼) 치안 환경·필요에 따라 상시착용 또는 신속한 착용이 가능한 방검복 착용 시스템** 개발, 불시피습·근접 위험 등 다양한 돌발상황으로부터 현장경찰관을 적극적 보호

– ▵지역경찰관을 위한 방검복+인체공학적 외근혁대 △삽입형 방검패드+일체형 외근조끼 ▵베임방지 방검복 등 다양한 위험 및 근무에 맞춤형 방검복 선택권 부여

○ **(112신고대응用 중형방패) 흉기피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야 확보 가능**한 경량 중형방패* 개발 보급

* 대형방패는 흉기 등으로부터 안전성은 높으나 크기와 무게의 불편함으로 사실상 지역경찰은 휴대가 불가, 소형방패는 방어면적이 작아 부상 위험성↑

○ **(인파관리 장비) 군중관리 중요성**을 감안, **집회 등 다중운집 상황**에서 내부 경력 지휘와 군중 질서유지·안내 등에 최적화된 확성기를 구매·보급

※ 기존의 LED 전자호루라기는 효과적 인파관리 활용을 위한 음량 향상을 추진

인파관리 장비		신체보호 장비					
휴대용 확성기	LED 호루라기	미래형 방검 장비 시스템(案)					지역경찰 중형방패(案)
							

[희망품목 보급기간 단축 및 절차 개선, 희망품목 품질 향상]

○ 개인 맞춤형 희망품목 적기보급 등 불만 요구 해소

– 상·하반기 인사 발령에 맞춰 신청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보급 기간 단축을 위한 계약시스템 변경 등 MAS* 구매 추진

*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구매

– 현장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하여 희망품목 지속 개선·개발

※ 수렴 창구: 장비포털 내 장비과에 바란다, 폴넷 현장활력소 등

○ 현장 소통을 통한 희망품목 품질 향상 추진

– 현장에 적합한 장비 개발을 위해 경찰마스터(자문단 형태) 구성·적극 운영

– 희망품목 보급상황 및 장비사용·관리법 등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친밀하게 안내 및 소통

[검거지원 장비 개발·도입 지속추진]

○ **(저위험권총 도입) 38권총보다 가볍고**(680→512g)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저위험권총** 현장실증·시범운용을 거쳐 장비 도입 추진

– **(현장실증)** 개발단계와 양산단계의 제품 간 성능과 안전성 유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 100정으로 성능검증

※ 치안정책연구소와 협업, 개발 및 양산단계 제품간 성능 동일성 테스트 실시

– **(시범운용)** ’23년 상반기 저위험권총 900정을 추가 구매하여 1,000정으로 시범운용 추진

○ **(한국형 전자충격기 보급)** ’22년 구매장비 2,755정 안정적 현장도입

– **(사전교육)** 교육 동영상 등 자료 제작 및 모든 사용자 대상 **사용 前 실사훈련 실시**

– **(현장배치)** 전국 지역관서의 노후 전자충격기 비율과 치안 수요를 감안, **단계적으로 보급 추진**

○ **(보험개선)** 숙원사항이었던 공무수행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한 보상액수와 보장범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장업무 지원 강화

< ’23년 보험 주요 개선내용 >

구분	기본 보장				특별 약관				
	대인	대물	자동차상해		탑승자 상해	공무수행 중 다른차량 운행 특약			
			사망·장애	부상					
’22년	무한	5억	5억	5억	5억 / 5억 (자동차 상해)	경찰관 한정	렌트카지원 X	5억/ 5억 (자동차 상해)	5억 (자차손해)
’23년	전년동					경찰청 소속 모든 공무원	렌트카지원 O	전년동	

○ **(유료도로 무정차통과)** **긴급차량**이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납부를 요구**받는 등 **신속 출동에 장애**, 지속적인 불편 초래에 대한 대책 마련

– 국토부·도로공사와 협의, 면제대상 차량을 112순찰차 및 범죄수사 등 **全 경찰차량에 하이패스 면제카드 장착 추진**

< 경찰작전 차량의 신속출동 장애 주요 사례 >

- 고속도로 내 실종자 구호를 위해 출동한 112순찰차가 통행료 납부 **<강원청 동해서>**
- 피의자 신병인계를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고조사 차량이 통행료 납부 **<경남청 양산서>**
- **비노출 수사차량이 범인검거를 위해 고속도로를 진입시 통행료 납부 <경남청 마산동부서>**
- **화물연대 관련, 에스코트를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교통순찰차량이 통행료 납부 <부산청 강서서>**

○ **(모바일 오피스 추진)** 순찰차에서 온나라 및 각종 조회시스템 등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 환경 추진, ‘움직이는 사무실’ 시범 운용

○ **(승합형 지휘차량 시범운용)** 지휘차량이 현장 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세단형’을 ‘RV형’으로 변경해 시범운용 추진

○ **(순찰차 안전강화)** 순찰차 후면 하단과 측면에 **보조경광등 추가**하여 긴급자동차의 **시인성 향상과 현장 경찰의 안전 강화**



번호판 형



사이드미러형

※ 개선된 리프트경광등을 형사순찰 등 도색 승합순찰차에도 적용

○ **(드론 운영관서 확대)** 산악, 개활지, 섬 지역이 많고 면적이 넓은 도 단위 경찰관서 및 희망관서 대상 신규 기체를 보급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확보 추진 강화**

– 운영관서 드론 담당 및 인력풀에 대해 조종기 작동 방법, 유형별 비행 기술 등 기체 특성에 맞는 **드론 전문화 교육과 주기적인 비행 조종 훈련 강화로 역량 향상**



'22년 거점관서(총 17개 경찰관서)



'23년 거점관서 확대(案)(총 34개 경찰관서)

○ **(소형 드론 등 치안장비 첨단화)** 실종자 수색 등 현장에서 안전성 및 편의성을 강화한 소형 드론과 확성기, 조명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보조장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현장 실증 추진**



소형드론



확성기 임무장비



탐조등 임무장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경찰차량 보험 시행	1월	
	저위험 권총 성능검증 계획 보고	2월	
	'23년 1차 희망품목 신청기간 운영	3월	
	'미래형 방검복' 보급 계획 수립	3월	
2/4분기	'23년 경찰차량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무정차 통과추진	4월	
	저위험권총 900정 구매계획 수립	4월	
	한국형 전자충격기 교육 동영상 제작	4월	
	미래치안장비 첨단화를 위한 소형드론 시범운영	5월	
	'미래형 방검복' 2차 시범운영 계획	5월	
	한국형 전자충격기 사용자 실사훈련 실시	6월	
	저위험권총 현장 적합성 검증계획 수립	6월	
	실종자수색용 드론, 거점관서 확대 추진	6월	
	112현장대응형 중형방패 안전성 검사 등 도입준비 완료	6월	
3/4분기	'23년 2차 희망품목 신청기간 운영	7월	
	저위험권총 시범운용 계획 수립	7월	
	승합형 지휘차량 시범운용	8월	
	'미래형 방검복' 구매 추진	8월	
4/4분기	저위험권총 900정 납품 시범운용 중간 점검	11월	
	친환경 업무용 전기차 보급	12월	
	수소전기버스 보급	12월	
	'미래형 방검복' 현장 보급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장비(피복·장구·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찰관

□ 기대효과

○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미래형 방검장비 시스템(가디언 플랫폼) △검거지원장비 개발·보급 △경찰보험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현장 경찰관 및 국민 안전을 보호**

○ 첨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차량 및 고품질의 친환경피복, 드론운용으로 현장에 가장 유용한 최신의 장비를 보급

○ 개인 맞춤형 희망품목제도 지속 개선·개발으로 품질을 향상 및 신속 보급을 통한 내부 만족도 향상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2]			
① 경찰장비현대화(4231)[3]	일반회계	2,849	3,149
■ 경찰기동력강화(311)		843	885
■ 차량관리(312)		1,158	1,313
■ 피복관리(313)		553	671
■ 장비관리유지(314)		295	28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장비 성능개선 및 신규도입 (50%)	14	17	16	17	· 현장활동에 적합한 장비 개선개발 지표로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에 해당하는 평균치(최근 3년 실적이 상승세가 아닌 경우 평균실적 15.6을 목표치)이상의 도전적 수치인 17건으로 목표 설정	기존 장비의 성능개선(규격의 제·개정) 및 신규장비 도입 건수	경찰규격심의 위원회 결과 제·개정하여 반영된 수치를 정량 적용
경찰장비 현장만족도 (50%)	88.13	85	86.6	88.2	· 경찰 장비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A/S 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에 해당하는 평균치 및 지난 3년간 최고 실적을 고려, 도전적인 수치인 88.2로 목표 설정	(피복 만족도 × 0.3) + (장구류 만족도 × 0.3) + (차량 만족도 × 0.4)	기획조정담당관실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전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맞춤형 장비 개발·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① 장비 성능개선 및 신규도입	기존 장비의 성능개선(규격의 제·개정) 및 신규장비 도입 건수	17	정량	결과	
		②성과지표명(공통)	(피복 만족도 × 0.3) +(장구류 만족도 ×0.3) +(차량 만족도 × 0.4)	88.2	정성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맞춤형 장비 개발·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업무 Ⅰ-라
		업무Ⅳ -가
		추진 -다

15 입법대응 및 현장 법률지원 강화, 국민안전 보호 기반 확충

□ 추진배경

○ ’23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과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찰 관련 **법령 총괄 대응부서**로서 **국정과제**와 **경찰청 주요 정책**에 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 달성 필요

○ ’22년 **규제개혁**이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된 가운데, **’23년**에는 개선 성과의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각 부처의 **종합적 노력**이 더욱 요구

– 이에, 경찰업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의 안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불편과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필요

○ 재난·안전사고와 신종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직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일선 현장의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청 소관 법령) ‘23년 경찰청 주요 업무계획’** 및 **‘국정과제’**, **‘경찰 대혁신 T/F 추진과제’** 등과 **연계**된 **주요 법안**을 선정, 법령안 입안부터 국회 심의까지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 전략으로 입법 주도

▸**「경찰청 주요 법안」, 「’23년 경찰청 법률안 입법계획」** 등 **법안별 입법대응 계획**을 **사전**에 **수립**, 입안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 검토·지원과 법안별 설명자료 작성 등 **선제적**으로 **법안 심사**에 **대비**하여 **입법 지원**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사기방지기본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선정

▸경찰 관련 **입법 진행경과** 등 **내부 공유***를 **강화**, **정책부서**의 **입법 관심도**를 **제고**하여 **신규 입법과제 발굴**에도 노력

* △내부망 포털 안내글 게재(격주), △차관·국무회의 안건 진행상황 전파(매주) 등 정보 수시공유

○ **(타 부처 소관 법령) 경찰에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他 부처 법안도 해당 부처의 법안 제·개정 논의 시부터 국회 입법과정까지 **적극 대응**

※ 부처 간 이견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 검토 뿐 아니라, 필요시 소관 기능의 개별 부처·법제처·국회 설득 등 대외입법 대응 집중지원

○ **(규제개혁)** ’23년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23년 경찰청 주요 업무계획 등에 맞춰 **국민편익 효과**가 높은 경찰청 자체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한 가운데 **과제 100% 달성**을 **목표**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규제개혁** 추진

▸ **(’23년 정부 규제혁신 방향)** △**신산업 활성화** 등 중점추진 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 규제혁신 제도 이행과제 △**덩어리 규제** 등 다수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 중심의 정비 필요

▸ **(경찰청 자체 개선과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 확대 △경비지도사 선임·배치기준 완화 등 **국민 편익효과**가 **높은 자체 개선과제 11건** 선정

- 또한, △자율주행 로봇 보도통행 허용,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운전신호시스템 규격서 배포 등 **신산업 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며 개선에 노력할 방침

○ **(현장지원)** 현장 경찰관 시각에서 **선제적·능동적**으로 **기존 지원체계**는 수시로 **보완·보강**하고 **내부홍보**를 **적극 확대**하여 현장의 **제도 활용성** 제고

▸ 직무수행 중 피소위험이 높다는 경찰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 책임보험」 재계약**(1월) 시 **형사사건 1심 지원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 그 밖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존 제도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지원체계 고도화 지속**

* 수사치안 및 교정,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형사사건 1심 지원 한도 확대 추진(현행 1,000만원 ⇒ 변경 1,500만원)

▸ 현장에서 각종 법률지원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존 **‘동료지킴이’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홍보**에도 **노력**하여 현장의 지원제도 **접근성 제고**

* △관서별 담당자 정비(’23년 상반기 인사 반영), △워크숍·간담회 등 직무교육, △관련 업무 해설서 하달 등

또한, **국민보호**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돕기 위해 ❶경직법상 **위험발생 방지 규정** 관련 **교육자료 제작·배포**와 함께, ❷소송지도·지원 강화 등 **경찰 송무역량 제고**, ❸현장 **지원정책 확대** 등 추진

❶ 현장에서 위험성 여부 판단 및 조치 등 **경찰권 행사 판단**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령 및 판례·학설 등**을 **분석**하여 **‘위험방지 요건·사례집’**(가칭) 제작·배포

❷ △송무 교육 및 법률 소양 **교육*지원** 확대 △**시·도청**별 **소송사무처리 지침**** **점검** 등

* △단기위탁 전문교육(법제처·법무연수원), △자체 실무교육(본청, 시·도청 주관) 등 /

** 지난해 경찰 소송사무 체계를 정비(훈령 제정 및 편람 개정)한 가운데, 시·도청별 사무처리 지침 등에 상위규정 개정내용 반영 여부 등 점검

❸ △**실무수습 변호사 인력 확대**배치(19명→26명) 및 **송무관 결원 충원** 추진, 정책·현장부서 **법률사무 지원** △**최신판례·주요사례 분석** 활성화, 현장 경찰 **법무역량 도모** 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무원 책임보험' 재계약 추진	1월	완료
	경찰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수립	1월	완료
	연간 국가경찰위원회 상정안 법제심사 사전 수요조사	2월	
	'현장법률 365센터' 운영성과 분석	3월	
	국가 송무과정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 지원(상반기, 대면)	3월	
	위험방지 요건·사례 분석집 제작·배포	3월	
2/4분기	경찰청 송무교육 실시계획 수립	5월	
	'22년 하반기 손실보상 심사자료 및 결과 보고	5월	
	소송지원단 및 법률보험 추진단 정기총회 개최	5월	
	동료지킴이 담당 정비 및 관련 직무교육	5월	
	'경찰 법률보험' 재계약 추진	6월	
	경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및 운용	6월	
3/4분기	일몰규제 일제 점검 및 개정	7월	
	'23년 상반기 국가·행정소송 현황 분석	8월	
	동료지킴이 등 지원제도 해설서 마련 및 하달	8월	
	규제혁신 발굴과제 중간점검	8월	
	국가 송무과정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 실시(하반기, 대면)	9월	
4/4분기	규제개혁 국조실 최종평가 대비 자체 예비평가	10월	
	'23년 상반기 손실보상 심사자료 및 결과 보고	11월	
	'23년 하반기 국가·행정소송 상황 분석	12월	
	최종보고서 제출 및 '23년 규제혁신 실적보고회 발표	12월	
연중	자체 법제심사 및 타 부처 제·개정안 검토·협의	수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대응	수시	
	종합법률지원 체계 내부 홍보 등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경찰 조직**과 **경찰관 개인, 일반 국민**과 **기업**(규제개혁) 등

○ **(이해관계집단)** 국회 및 관계부처, 국회 법안심사 관련 이해당사자 등

□ 기대효과

○ 국민안전을 위한 경찰의 법집행 기반 확충,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입법대응 노력도 <30%>	28%	64.4%	81%	90.9%	'23년 경찰청 소관 법령·행정규칙 제·개정 심사 수요조사(44건) 대비 상회 회신율 90.9%(84건)을 목표치로 설정	{(심사 회신건수/ 심사 수요조사 건수) × 100} - 100	온나라 공문 기준
규제혁신과제 달성도 <20%>	92%	100%	92%	100%	"하단 참조"	(달성과제 / 자체 규제개선 선정과제) × 100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평가
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달성도 <25%> 가. 이용자 만족도 (80%)	79.5	80.2	81.0	81.8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경찰청 고객만족센터 설문조사
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달성도 <25%> 나. 홍보 노력도 (20%)	신규			75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온나라 공문 기준
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 <25%>	99.1%	99.2%	100%	100%	"하단 참조"	질의사안 중 답변건수/ 질의 건수 × 100	KICS 시스템 통계

① 입법대응 노력도【목표치 90.9%(84건) / 반영치 : 30%】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법치행정의 원칙상 주요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법령·규칙 제·개정 등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2023년 경찰청 주요 업무계획의 상당수 과제에 법제 관련 협조부서로 지정되는 등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여 지표로 선정

• 목표치 산출 근거

- '23년 수요조사 건수 대비 심사회신율: {(심사 회신건수 / 심사 수요조사 건수) × 100} - 100

연도	수요조사 건수	목표 심사회신 건수(목표 회신율)	실제 심사회신 건수(실제 회신율)
'20년	-	60건(0%)	77건(28%)
'21년	59건	77건(30.08%)	97건(64.4%)
'22년	43건	74건(72.09%)	78건(81%)
'23년	44건	84건(90.9%)	-

• 목표치 수준 및 적절성 여부

- '24년 총선을 비롯한 국회 상황 등으로 '23년에는 입법활동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입법 추진이 녹록지 않은 여건이나,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인 자세로 목표치 설정
- 최근 3년간 급격한 상승세(28%→64.4%→81%)를 보인 가운데 추세치를 적용할 경우, 임계치(100%)를 초과하므로 목표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상 예외사항을 고려하여 '22년 실적대비 10%p를 초과하는 **90.9%(84건)**을 목표로 설정

② 규제혁신과제 달성도【목표치 100% / 반영치 : 20%】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규제개혁이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되고, '23년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각 정부부처의 종합적 노력이 요구되는 등 업무의 중요도가 특히 높아지는 가운데 지표관리를 통해 규제개혁에 역량 집중 필요
- 이에, 기업 부담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 관점에서 발굴한 국민 편익 효과가 높은 자체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개선 달성도를 지표로 설정

• 목표치 산출 근거 타부처 소관기능 협조 등

- 국무조정실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인 경찰청 소관 규제혁신 과제 **11건**에 대해 **달성률 100%**를 **목표치로 설정**(다만,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검토 중으로, 검토과정에서 경찰청 과제 변경 가능성 존재)

• 목표치 수준 및 적절성 여부

- 타 지표에 비해 외부요인(타 부처, 소관기능 협조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그간 실적과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 **적극적인 자세로 100% 달성** 설정

※ 최근 3년간 지표 달성도: '20년 92% ⇒ '21년 100% ⇒ '22년 92%

연도	과제 설정건수	목표 달성건수	실제 정비건수
'20년	12건	12건(100%)	11건(92%)
'21년	9건	9건(100%)	9건(100%)
'22년	11건	11건(100%)	10건(92%)

③ 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달성도【반영치 : 25%】

• 성과지표 수정 사유

- 지난해 송무관 결원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인 법률지원 정책을 추진해 **최근 3년간 최대 상승치**를 기록(80.2→81.0)하였으나 목표치(81.8)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 조사 분석결과, 이용경험 없는 사람들은 이용 만족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도 측정 대상 표본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무경험자들은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유경험자만큼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등 양자 간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 체감

※ 외부평가위원도 일정 한계점에 달한 것으로 보여져 지표 수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컨설팅 제시

- 이에, 기존의 '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노력도' 지표를 △만족도(기존 정성지표)와 △노력도(신설 정량지표)로 구분하고, **반영**에 **차등**을 두어 **8:2로 비율 조정**

※ **노력도 지표 신설**을 통해 지난해,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에 대해 **보완**(홍보 강화)

• 측정 산식

- **③-가 이용자 만족도(80%)** + **③-나. 홍보 노력도(20%)**

예) '23년에 ③-가. 이용자 만족도는 81.0점(목표 대비 99%)을 달성하고 ③-나. 인식도·체감도 제고 노력는 70점(목표 대비 93%)을 달성하게 될 경우,
- ③-가. 지표 목표달성도 등급(S)에 따른 점수 = 18 X 0.8 X 0.25= 3.6점
- ③-나. 지표 목표달성도 등급(S)에 따른 점수 = 18 X 0.2 X 0.25= 0.9점
➡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반영점수 = 3.6점 + 0.9점

③-가. 이용자 만족도【목표치 81.8점 / 반영치 : 80%】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현장법률 365센터', '공무원책임보험·경찰법률보험 등 소송지원제도', '소송수행 지원' 등 각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과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 활용경험 등 이용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성과지표로 지속 유지하되, **조사 대상**을 **실제 이용자**로 **변경**

※ 또한 '현장법률 365센터', '공무원책임보험·경찰법률보험 등 소송지원제도', '소송수행 지원'은 부서의 주요 추진업무를 포괄하는 만큼 **유지·관리가 불가피**

• 조사 대상 : 법률 및 소송지원 제도 이용 유경험자(일반직 공무원 등 포함)

• 측정 산식(지원활동별 만족도의 평균)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점수	0	25	50	75	100

• 목표치 산출 근거

- 만족도는 최근 3년간 계속 상승세(79.5→80.2→81.0)를 보인 가운데, 목표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상 '上'을 기준으로 추세치(0.75) 이상을 적용, **81.8점 목표**에 **재도전**

③-나. 홍보 노력도【목표치 75점 / 반영치 : 20%】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법률·소송지원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체감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 제도 성격상 직접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는 제도의 필요성 등을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지난해 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원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해당 제도의 존재·이용 방법 등을 잘 몰랐다며,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일부 표출

- 이에, 각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홍보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

· 측정 산식(교육·홍보 등 실적)

목표	교육		설명회·간담회·세미나 등		자료 제작·공유		기타 홍보	
75점	사이버	오프라인	주관	참여 지원	해설서	리플릿 등	카드뉴스	설명자료
	컨텐츠당 20점	회당 15점	회당 15점	회당 5점	건당 20점	건당 10점	건당 5점	회당 5점

· 목표치 산출 근거

-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측면에서 **신규지표**임에도 불구, **도전적인 자세**로 **75점을 목표**로 설정

※ (참고) 유사한 측정 지표를 갖고있는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지표가 '22년에 2년치 상승세를 적용해 80점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

④ 현장법률 365센터 대응 노력도 【목표치 100% / 반영치 : 25%】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현장경찰관들이 법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법리 판단을 뒷받침하는 현장법률 365센터 업무 특성상, 답변의 품질 향상을 위해 대해 지표관리를 통한 주기적인 운영성과 등의 측정이 필요

※ 전화상담에 대한 고객 만족도 등은 '③ 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강화'를 통해 관리 중

· 측정산식

- KICS(형사사법전자화시스템) 內 현장법률365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한 질의 대비 답변율(산식: 성과기간 질의건수 중 답변건수 / 성과기간 질의건수 × 100)

· 목표치 산출 근거

- '20년→'21년 증가율이 0.1%p에 불과했고, 365센터 근무자 4명이 13만 경찰의 실시간 법률상담을 담당해야 하는 등 목표를 높이기 쉽지않으나

- '22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대응 노력도 100%를 旣 달성한 만큼, **올해도 도전적으로 100% 답변을 목표치로 산출**

※ 최근 3년간 노력도 달성 현황('20년: 99.1%→'21년: 99.2%→'22년: 100%)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입법대응 및 현장 법률지원 강화, 국민안전 보호 기반 확충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집행 기반 확충 (업무 Ⅲ-라) 경찰 법집행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 (업무 Ⅰ-라)

16 치안현장 항공 지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고가의 국가자산인 헬기를 **치안현장에 최대한 활용**

▸ 헬기 1대 가격 : 국산 참수리헬기(KUH-1P) 기준 **250억원**
▸ 경찰헬기(19대) 유지 비용 : 정비비·유류비·보험료 등 年 **105억원**

○ 최근 국내·외 사고 등 감안, 비행·정비 **완벽한 안전관리 필요**

▸ '18.7.17. 해병대 헬기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 발생(사망 6명)
▸ '19.10.31. 소방청 헬기 독도 환자이송 중 사고 발생(사망 7명, 헬기침수)
▸ '22.4.8. 해경청 헬기(S-92) 제주도 이어도 임무 중 추락사고(사망 3명, 헬기대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 범인추적·교통관리·인명구조·실종자수색 등 헬기 활용한 공중치안 전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

○ 대테러·작전, 재해·재난 상황 및 대규모 국가적 행사 경비 등 **국가·사회안전 확보에도 만전**

○ 전년도 대비 경찰헬기 운용실적 및 분석

구 분	합 계		민생치안		경비작전		일반지원		항공업무	
	횟수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시간
'22년	2,066	3,557	696	1,235	673	1,064	118	311	579	947
'21년	2,420	3,511	898	1,534	896	905	146	381	480	691
증감	-354	+36	-202	-299	-223	+159	-28	-70	+99	+256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찰보유 대형헬기 3대(MI-172) **운항이 어려워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21년 68.8% → '22년 65.1%)**한 여건**

– 전쟁이 계속될 경우 가동률은 낮지만 헬기요청 간소화 및 24시간 출동태세 유지로 **'23년 목표치는 상향조정 성과추진**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조종사·정비사 대상 분야별 **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 **(조종사)** 기종별 모의비행 훈련, 각종 돌발위기 상황 대처훈련

– **(정비사)** 정비품질 향상을 위한 정비 전문화 교육

– **(설문조사) 교육생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교육계획에 반영**

○ 항공요원 직무능력 향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항공관련 자격증(수료증 포함) 취득 노력

[예방정비 활동]

○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첨단장비 도입, 예방정비 강화, **현장중심 안전활동 활성화**

○ 항공 정비요원들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을 통해 항공기 고장 원인을 자체 발견, **대형 항공사고 사전 예방**

⇨ **1993년 이후 이어온 경찰항공 무사고 30년 전통 계승**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2년 상반기 항공요원 인사관련 보직관리 위원회 개최	1월	(추진계획, 의견)
	시·도청 항공대 현장점검 및 간담회, 워크숍 계획수립	2월	(협업, 정책)
	신규 도입 중형헬기 2대 규격심의 및 도입계획수립	3월	(정책, 추진계획)
2/4분기	시·도청 항공요원 특수피복 계약 및 도입헬기 2대 제안서 평가	4월	(정책, 추진계획)
	헬기운용 국가기관 '항공 종합보험' 가입 및 기관협의	5월	(협업, 정책)
	대형재난대비 범부처 헬기 독도함훈련	6월	(협업, 추진계획)
3/4분기	상반기 경찰헬기 운용결과 분석 및 활성화 계획수립	7월	(정책, 추진계획)
	모의비행훈련장치 중간 점검 및 정비사 안전 심화과정 교육	8월	(정책, 추진계획)
	전국 시·도경찰청 항공대 사고예방을 위한 '항공안전 현장점검'	9월	(정책, 추진계획)
4/4분기	시·도경찰청 항공대 자체 치안종합성과 평가	10월	(정책, 추진계획)
	'23년 헬기 예방정비 분석 및 향후 개선대책 등 계획수립	11월	(정책, 추진계획)
	'23년 경찰항공 교육훈련분석 및 '24년 이후 교육 계획수립	12월	(추진계획, 의견)
연중	월별 항공경찰 우수사례 마일리지 심의 및 외부 교육훈련 강화	연중	(추진계획, 의견)

< 경찰청 주요 업무계획 추진 >

○ 미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대비한 **대외협력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위기대응을 위한 **세종경찰청 항공대 신설 추진**

○ 노후헬기를 **첨단헬기로 교체**하여 항공 임무수행 역량 강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헬기 운용 국가기관, 외주업체(헬기제작, 정비업체)

□ 기대효과

○ 국민 생명·신체 보호 및 국가·사회안전 확보에 기여

○ 경찰항공 무사고 안전비행 전통 계승으로 경찰 신뢰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헬기운용 및 현대화(Ⅳ-2-재정②)			
① 헬기운용 및 현대화(4232)		420 (420)	430 (430)
■ 헬기운용 및 현대화(311)		420	4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3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20</th><th>'21</th><th>'22</th><th>'23</th></tr>
<tr><td>① 치안 현장 헬기 지원 성과
(40%)</td><td>694</td><td>1,113</td><td>1,246</td><td>1,371</td><td>하단 참조</td><td>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심의 결과(월1회)에 따른 항공대별 점수 합계</td><td>폴넷 게시판, 시·도청 보고문서, 본청 심의 결과 공문(매월)</td></tr>
</table>

【 산출근거 】

□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40%)

○ 다양한 치안현장에 헬기를 활용한 실적 중 우수사례에 점수를 부여하는 지표로서 내부망 게시판(칭찬플랫폼) 또는 문서 보고로 확인 가능(매월 심의·집계, 항공대 평가자료로 활용)

< 점수부여 기준 >

항 목	내 용	평가점수
주요 범인검거	헬기수색으로 범인을 발견(추적), 지상경력과 공조하여 검거	5~10점
인명구조	헬기로 요구조자를 구조하거나 수색을 통해 발견한 경우	5~8점
실종자 발견	헬기 수색으로 실종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	3~5점
대테러·작전훈련	헬기 활용 대테러·작전 훈련 및 긴급 상황관리	2~5점
주요상황관리	재난·재해 및 주요 경비상황 현장 출동·훈련 및 상황관리	2~4점
교통관리	헬기를 이용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거나 주요 교통사범 단속	2~4점
단순이송	수사관, 피의자, 경미한 환자, 변사체 등을 이송한 경우	2~5점
기 타	- 항공전체 인명사고 없이 무사고 비행시 매월 1점 부여 - 조종, 예방정비 등 주요활동 사항, 방송·SNS 홍보 노력도 등	1~10점

※ 평가점수는 범인검거, 인명구조 등 국민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항목에 고득점 부여, 대테러·작전 훈련 추가, 기타 활동은 중요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월 1회 경찰청 항공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全 항공대에 결과 하달

○ '22년도 실적(1,246점) 보다 **10% 이상 높은 도전적 목표치(1,371점) 설정**

< 목표치 산출근거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달성**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점)	694	1,113	1,246	**1,371**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3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20</th><th>'21</th><th>'22</th><th>'23</th></tr>
<tr><td rowspan="2">②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30%)</td><td>106</td><td>109</td><td>139</td><td>153</td><td rowspan="3">하단 참조</td><td rowspan="3">교육훈련 인원·자격증
취득건수, 교육생 만족도(점수)</td><td rowspan="3">교육공문 및 자격증</td></tr>
<tr><td>46</td><td>109</td><td>139</td><td>153</td></tr>
<tr><td>-</td><td>-</td><td>-</td><td>70
(신규)</td></tr>
<tr><td colspan="8">【 산출근거 】
□ 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및 항공관련 자격증 취득 건수
○ 항공요원(조종사·정비사) 직무능력 향상과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교육인원, 자격증 취득, 교육생 만족도 조사결과을 산출
- 교육생들의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타의견도 수렴(주관식)
*전문기관(항공관련) : 군·산림청 등 국가기관, 항공대학 및 헬기·엔진 제작사 등 민간전문기관
**항공관련 자격증(수료증) : 항공조종·정비·안전 등 관련 개인별 자격증 또는 수료증 취득(이수·유지포함)
***교육생 만족도 조사 : ①매우만족(5점) ②만족(4점) ③보통 (3점) ④불만족(2점) ⑤매우불만족(1점) 기타의견
○ '23년은 전년대비 10% 이상 목표치인 교육인원 153명과 항공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취득건수 153건, 추가로 '교육생 만족도 조사'로 설정
< 목표치 산출근거 >
<table>
<tr><th>구 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h>'23년 달성</th></tr>
<tr><td>교육훈련 인원(명)</td><td>106</td><td>109</td><td>139</td><td>153</td></tr>
<tr><td>자격(수료)증 취득 건수</td><td>46</td><td>109</td><td>139</td><td>153</td></tr>
<tr><td>교육생 만족도 조사(점수)</td><td>-</td><td>-</td><td>-</td><td>70</td></tr>
</table>
</td></tr>
<tr><td rowspan="2">③예방정비 활동
(30%)</td><td>132</td><td>135</td><td>133</td><td>147</td><td>하단 참조</td><td>헬기 고장요인 발견 건수</td><td>항공대, 정비대 정비결과보고(공문)</td></tr>
<tr><td colspan="8">【 산출근거 】
□ 헬기 고장요인 발견 건수
○ 자체 정비능력 향상과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사들의 정비역량을 평가하는 신규지표로서 고장요인 발견 건수*는 공문으로 확인 가능
* 외주정비(제작사·정비업체) 또는 감항검사에서 발견한 건수는 제외하고, 경찰 자체정비 중 헬기 고장요인(고장·결함)을 발견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한 건수만 포함(사례, 특별검사)
○ '20년은 최근 3년간 평균(133건) 대비 11% 높은 도전적 목표치(147건) 설정
< 목표치 산출근거 >
<table>
<tr><th>구 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h>평균</th><th>'23년 목표</th></tr>
<tr><td>고장요인 발견건수(건)</td><td>132</td><td>135</td><td>133</td><td>133</td><td>147</td></tr>
</table>
</td></tr>
</table>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심의 결과(월1회)에 따른 항공대별 점수 합계	1,371점	정량 정성	결과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및 관련 자격증 취득 건수, 교육생 만족도 조사	153명 153건 70점	정량	결과	
		예방정비 활동	헬기 고장요인 자체 발견 건수	147건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주요 추진과제 Ⅳ - 4 - 4

전략목표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준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기 본 방 향

◇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부패·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이룩

○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불편 최소화

○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제고

◇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각종 테러·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정 유지

○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패러다임을 확고하게 정착하고 국민편익 제고

○ 안보·테러 대응 역량 제고를 통해 사회 불안 요인 해소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5	4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준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기관 신뢰도
성과목표 1.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확산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법질서 준수도
	⑰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전국 경찰부대 교육훈련 / 집회현장 법집행 기준 확립 / 경찰관기동대 근무 만족도
	⑱ 인권·준법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준법정보활동 노력도 /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
	⑲ 상황정보 역량 강화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상황정보 활동 지수 / 국민평가 / 상황 대응역량 강화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고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부패인식지수**
	20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공공분야 공직자 부패사범 검거인원 / 건설현장 불법행위 검거인원
	21 경찰수사의 공정성·책임성·완결성 제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계 구축 노력도 /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사건 및 수사 제도 점검·환류 내실화 노력도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22 경찰수사 수사 전문역량 제고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 전문 수사 인력 확보 / 전문 수사인력 양성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 경검 협력관계 및 책임수사시스템 안착을 위한 실무 상담·제도 연구 / 수사권 개혁에 따른 국민중심 경찰수사의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성과목표 3. 국민 중심 교통정책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교통문화지수**
	23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등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지수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
	24 국민 중심의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25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최근 3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 최근 3년 대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성과목표 4. 대테러·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사회안정성 인식**
	26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등 안보역량 강화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 탈북민 보호체계 강화 / 현장 중심의 유기적 안보상황 관리
	27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중요 안보사범 검거지수 / 사이버안보 대응활동 지수 /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 지수
	28 국내외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분석역량 제고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 /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 안보정세 분석 고도화
	28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강화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 / 위기대응 역량지수
	30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완벽한 경호행사로 국가안전 확보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 /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전략목표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준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1) 주요 내용

○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집회시위 관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에는 엄정히 대응

○ **<수사 전문성·공정성 제고>** 사회 전반에 걸친 성역 없는 수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선진 교통질서 확립>**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부응하여 법령·제도·인프라를 개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교통활동 전개**

○ **<안보·대테러·재난 대응역량 강화>** 강화된 책임에 걸맞게 안보 수사·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테러·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과 국민중심 교통문화 조성 및 안보·재난 대응역량 강화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및 공정사회 구현**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기관 신뢰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기관 신뢰도	2.3	2.2	2.4	2.5	2.5	2.7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2.2~2.4점을 반복하고 있는데, '21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 ※ 해당 조사는 4점 만점으로 0.1점 차이도 의미가 있음 '27년 목표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7점으로 설정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속 제고	'기관별 신뢰 정도 - 경찰'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96	94	100	98	100*	100	매년 20~50건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며, 이는 '15년 이전 수용률(85%)보다 크게 상향된 수치임. 정책권고는 작년 기준 100% 수용, 올해도 정책 권고 수용을 독려하기 위해 100%를 '27년 목표치로 산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경찰 정책권고 수용건수 ÷전체 정책 권고건수 × 10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건수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불법 집회시위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가 지속, **우리 사회의 공정·정의에 대한 국민적 확신 저해**

– 불법·무질서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준법이 곧 이득'**이라는 **사회적 인식 각인**

○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사역량 요구**

– 인권친화적 수사환경을 조성하고 역량 중심 인사·교육체계 확립,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 확보**

○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감소('22년 2,735명) 하였으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하위권**

–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부응하여 법령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행자를 비롯한 교통약자 중심의 공감받는 교통활동 전개**

(4) 참고자료

○ 경찰청, 「2023 주요업무계획」

○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단속 관련 자료」

○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 대통령실)

○ 안보수사국, 「경찰 안보수사 역량강화 3개년 계획」

○ 안보수사국, 「대공수사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종합계획」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www.nctc.go.kr)

성과목표Ⅱ-1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확산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1) 주요 내용

○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집회시위 참가자의 안전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법행위에는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

– ▵안전차단 장비(접이식PL·차벽 트럭) 개선 ▵'팀' 단위 운용 ▵경찰관 혼성기동대 확대 등 현장 대응력 제고

○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에 중점, **집회의 자유와 인권·안전이 선순환하는 정보활동 전개**

– 집회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능별·단계별(기초-심화 전문화)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역량 함양

○ **<상황정보 역량 강화>** 법과 원칙에 따라 준법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선제적 정보활동 역량 강화로 국민불편 최소화**

– 신고단계부터 교통체증·소음 등 국민불편 최소화를 유도(행정지도)하고, 분석회의·대화경찰관 운영을 통해 집회현장 안전 사전 확보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확산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법질서 준수도
관리과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전국 경찰부대 교육훈련 / 집회현장 법집행 기준 확립 / 경찰관기동대 근무 만족도
	인권·준법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준법정보활동 노력도 /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
	상황정보 역량 강화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상황정보 활동 지수 / 국민평가 / 상황 대응역량 강화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법질서 준수도	73.3	67.2	76.1	78.0	법질서 준수도는 '21년에 감소하다가 '22년 반등,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2.2)을 고려, '23년 목표치는 법질서 준수도 지속 상승을 위해 작년보다 1.9p 높은 78.0로 설정	국민체감안전도 조사 분야 중 '법질서 준수도' 분야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링센터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정부 2년차로 국정과제 추진 본격화, 지난해보다 **분야별·이슈별 찬반(贊反) 집회 등 공공갈등 상황 증가 예상**

– 선제적 정보활동을 통해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굴, **관련 기능·기관에서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집회시위 등 현장에 대화경찰 적극 배치, ▵공공질서 유지 ▵안전·인권보호 활동 전개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

(4) 참고자료

○ 경찰청, '2023년 주요업무 계획'

○ 경찰관 직무집행법

17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 추진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로 잠복되었던 집단적 갈등이 표출되며 **집회참가 인원이 '22년에 크게 증가**

※ **('21→'22년)** 집회건수 71,335→61,513건 / 인원 992,882→2,459,240명(2.5배↑)

○ 집회시위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엄정한 법집행 기조 견지) 집회 주최 단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에 입각한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기조'**를 지속 견지

- **(고질적·반복적 불법행위 엄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폭행·업무방해·손괴 등 고질적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현장 검거' 원칙으로 엄정 대응
- **(신고된 대로 관리)** 국민의 통행권 보장 및 시민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주최 단체를 불문하고, 장시간 도로점거 불법 집회·행진은 엄격하게 현장 관리

○ **(집단적 불법행위 엄단)** 건설현장 등 **다중의 위력으로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대응, 신속·엄정하게 **사법 조치**

-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단)** 집단적 폭력행위, 경력 폭행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대응, 불법행위 全 과정 면밀한 채증 철저
- **(사법조치 강화)** 집단적 불법행위는 필요시 시도청별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현장 폭력행위자 이외에 주동자·공모자까지 신속·엄정 사법조치

○ **(소음관리 강화) 악의적·반복적 집회소음**은 **엄격 관리**,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에서 기준치 초과 소음유발시 **즉각적인 실효 조치 확행**

- **(집회소음 엄격관리)** '21년 대비 소음측정 17.6%↑, 현장조치 62.6%↑
- **(즉각적인 실효조치 확행)**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에서 기준치 초과 집회소음 유발시 소음유지명령을 생략하고, 곧바로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 또는 일시보관 조치

○ **(경찰관기동대 운영 고도화)** △**혼성경찰관기동대 확대** △**기동·안전차단장비 확충**으로 경력운용을 효율·고도화

▸**(혼성기동대 확대)** '23년 상반기, 여경부대 운영 중인 6개 시도청 전부 편성
▸**(중형승합차 도입)** '팀'단위 경력운용, 기동성 강화 위해 도입('22년 3대, '23년 26대)
▸**(안전차단 장비 개선)** △<접이식 P/L> 소재개선(알루미늄→스테인레스) 내구성 강화 △<차벽트럭> '09년 도입된 노후장비를 경량·자동화 및 LED 전광판 설치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3회 조합장선거 경비안전대책 수립·시행	2월	
	경찰부대 상반기 인사교체기 집중점검	3월	
	4.5. 재·보궐선거 경비안전대책 수립·시행	3월	
2/4분기	경비경찰 길라잡이 발간	4월	
	경찰부대 집중교육·훈련(상반기)	4월	
	경찰관기동대 상반기 모바일 근무 만족도 조사	6월	
3/4분기	경찰관기동대 하반기 인사교체기 집중점검	8월	
	개선된 안전 차단장비(접이식P/L) 확대 보급	9월	
	경찰부대 집중교육·훈련(상반기)	9월	
4/4분기	경찰관기동대 하반기 모바일 근무 만족도 조사	11월	
	전의경 인사기록표 등 전산화 사업 완료	12월	
	폴리스랩2.0 R&D를 통한 보호장구(방패 · 보호복) 개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기대효과

○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과 함께 인권·안전의 확보

○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치경비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경비경찰역량강화(Ⅱ-1-일반재정①)			
①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 경비경찰활동(311)	일반회계	530.2	556.1
■ 의경운영및관리(312)	일반회계	438.1	42.8
■ 의경대체지원(314)	일반회계	628.5	69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전국 경찰부대 교육훈련(40%)**			신규	65시간	하단참조	▸경찰관기동대 교육훈련시간 평균	교육훈련 통계
② **집회현장 법 집행 기준 확립(30%)**			신규	30점	하단참조	▸전국단위 워크숍 : 건당 10점 매뉴얼 제작·배포 : 건당 10점 훈령·지침 제·개정 : 건당 15점	본청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③ **경찰관기동대 근무 만족도(30%)**			7.09	7.0점	하단참조	▸외부 여론조사 업체 통해 전국 경찰부대원 대상 ▵교육훈련 ▵시설·장비 ▵부대 만족도 등 조사(10점 만점)	외부업체 통한 여론조사 결과

① 전국 경찰부대 교육훈련(40%, 목표치 65시간 ➡ 최종 40점으로 환산)

- **(개 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폭력행위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평상시 경찰부대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대응역량 강화가 중요함
- **(목표치 산출근거)** 전국 경찰부대 교육훈련 실적 65시간은 '23년 경찰청 주요정책 과제(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로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지표임. **국정과제와 성과평가지표의 연계를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함.**

② 집회현장 법 집행기준 확립(30%, 목표치 30점 ➡ 최종 30점으로 환산)

- **(개 요)** 집회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의 선결조건은 현장 법집행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가능함.
- **(목표치 산출근거)** '23년 신규지표로 훈령·지침의 제·개정, 각종 매뉴얼 등을 **적극적으로 제작하도록 30점을 기준으로 설정**(경찰서 및 경찰부대까지 배포해야 점수 인정)

③ 경찰관기동대 근무만족도(30%, 목표치 7점<10점만점> ➡ 최종 30점으로 환산)

- **(개 요)** 올해까지 기동대에 의무경찰 배치가 만료되고 전 부대원이 경찰관으로 대체될 예정임. 경찰관기동대원들의 직장(근무)만족도는 업무의 친밀도 및 성실성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장 기동경찰을 지원하는 본청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임.
- **(목표치 산출근거)** '22년 신규 성과지표로 최초 목표치를 6점으로 설정하려 하였으나 외부위원들의 적극적인 목표치 요구에 따라 7점으로 설정하였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집회·시위 등 경비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년보다 높은 만족도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만 올해도 **적극적인 성과달성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인 7점으로 설정하고**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법과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① 전국 경찰부대 교육훈련	▸경찰관기동대 교육훈련시간 평균	65시간	정량	결과	
		② 집회현장 법 집행 기준 확립	▸전국단위 워크숍 : 건당 10점 ▸매뉴얼 제작·배포 : 건당 10점 ▸훈령·지침 제·개정 : 건당 15점	30점	정량	산출	
		③ 경찰관기동대 근무만족도	▸외부 여론조사 업체 통해 전국 경찰부대원 대상 △교육훈련 △시설·장비 △부대 만족도 등 조사(10점만점)	7.0점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법과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국정과제 69-4)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18 인권·준법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 추진배경

○ 국정운영 방향 및 **국정과제·경찰청 주요업무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업무 체계 개선

► 【국정과제 69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실천과제】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 【주요업무계획】 △집회·시위 대응체계 내실화 △정보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고도화 △AI를 활용한 차세대 치안 시스템 도입

○ 본청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준법 정보활동 체계 안착**으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 **집시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사생활 평온**을 보장, **집회의 자유와 공공안녕질서의 조화**를 도모

○ '23년은 **경찰교육 대개혁의 원년**으로 인재개발 기본계획과 '22년 정보교육 계획을 토대로 **연속성 있는 교육과제를 설계**,

– 정보 경찰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경찰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현장 정보 역량**을 강화

> • 합법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한다는 대원칙 아래 **공정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경찰의 핵심적 사명입니다.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중략)
> •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다가올 치안 문제를 미리 감지하여 해법을 마련**하고, **최첨단장비와 빅데이터·AI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미래치안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
> **('23. 1. 1. 경찰청장 신년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준법역량 강화)** '23년도 **준법 정보활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자료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등 **현장점검 지속 추진**

– 특히 올해는 **본청 주도의 '준법관리'**에서 **시·도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본청은 '준법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

► **(본청·시도청 합동 점검)** 본청 - 시도청 합동 점검단 구성, 全 정보관이 지난해 작성한 정보자료 전수 점검 및 컨설팅 진행

► **(시도청 준법지원관 역할 강화)** 시도청(소속 署 포함)에서 생산하는 모든 정보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행정지도 권한 강화

► **(시도청 정보활동 토론회)** 시도청 주관으로 '준법 정보활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정보활동 노하우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시도청 준법지원 전담인력 확보)** '21년 全 시도청 준법 담당 신설(他 업무 병행) → '24년 소요정원을 통해 준법 전담 인력 확보 추진(22명)

※ 서울·부산·인천·경기南 각 2명, 여타 14개청 각 1명

○ **(집시법령 개정)**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시법령 개정 추진 ⇨ **'23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핵심과제**

– **(집시법)**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중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間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 선별, 개정 추진

※ '22～'23년 총 14건 발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예외사유 신설 등

– **(시행령)** 집회·시위 소음관리 강화 및 주요도로 재정비 등

► **(집회소음)**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시민의 평온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측정방식을 개선 추진

※ **(등가소음도)** 측정시간 10분→5분 / **(최고소음도)** 위반기준 1시간 內 3회→2회

► **(주요도로)** △ 도로여건 △ 통행량 △ 집회·시위 개최 현황 △ 주요시설 이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1 주요도로 범위 재정비

※ 기존 유지 76개 <연장·변경 4개 포함>, 신규 지정 11개 ⇨ 現 88개→87개

○ **(정보경찰 전문성 강화)** 본청 주관 **전국 신규전입자·중간관리자 교육**을 시작으로 **기능별 직무교육을 연중 실시** 예정(3월~)

> ► **(신규전입자 교육)** 전국 정보부서 전입자들의 정보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상·하반기 인사 이후 1개월 내 1일 과정 온라인 교육 실시
> ► **(중간관리자 교육)** 전국 정보관리자 워크숍 시, '일선 정보의 역할(大令 제3조 대상정보의 범위)'과 '안전정보'에 초점을 맞춰 대면 교육(인재원, 3.7 예정)

– **인재원(11개 과정, 40회) 및 외부기관**(△국민안전<건설기술교육원, 교통대, 성신여대 등> △대화경찰<단국대> △군중심리<동국대> △국가안보<통일교육원>)과 **협업, 단계별 과정(기초-심화-전문화)을 운영**

– 특히, 올해는 시도청별 지역치안 여건과 업무수요에 따라 자체 설계하는 **'지역현안 정보역량 향상 과정(교육센터)'을 신설**하고

※ 유관기관과 강사 초빙 등 적극 협업,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

– 정보경찰의 직무 전문성과 연계한 **퇴직설계 교육과정**을 도입(9월 예정, 퇴직예정 5년 이내 40명),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구현**

– △**정보교육 발전방안 정책연구** △廳 교육장 내 **局 전용강의장 개소** △**시도청 강의지원**을 위한 **局 동료강사 정비** △**사이버콘텐츠(24편) 보강 등 교육 인프라 지속 강화**

○ **(신원조사* 정확도 제고)** 신원조사 **결과의 오류는 국가·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중요사안인 만큼, **오류 차단을 위한 선제적 관리 필요**

*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 조사

– 신원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내실화**하고 **현장 소통·지원을 강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오류 최소화하여 경찰행정 신뢰도 제고**

※ (역대 오류율) '17년0.31% → '18년0.1% → '19년0.12% → '20년0.06% → '21·'22년0.03%

○ 또한, △인적오류 방지 △예산 절감 △국민편의 증대를 위한 **AI-신원조사업무시스템 구축** 3개년 사업(100억4,700만원)을 올해末 완수(상반기 중 시도청 사전 테스트), '24년 운영 개시

	1차년도('21년)		2차년도('22년)		3차년도('23년)
인프라	인프라 설계·구축	▶	제1차 고도화	▶	**제2차 고도화**
업무포털	**Paperless 온라인 접수 (의뢰기관·대상자 사용)**	▶	**AI 기반 신원조사 (관계망 자료 자동입력)**	▶	**디지털 기록관리 (블록체인 적용 암호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보교육)** '23년 정보교육 종합 운영계획 수립	2월	
	(신원조사) 신원조사 담당자 실무자 직무연수	3월	
	(정보교육) 전국 신규전입자 및 중간관리자 전수교육	3월	
	(준법역량 강화) 시도청 준법지원관 소집 교육	3월	
	(준법역량 강화) 상반기 전입자 준법 특별 교육	3월	
2/4분기	**(준법역량 강화)** 시도청 자체 행정지도 강화 간담회	4~6월	
	(준법역량 강화) 본청 · 시도청 합동 현장 점검	4~6월	
	(정보교육) 시도청 정보교육 담당자 간담회	6월	
3/4분기	**(준법역량 강화)** 하반기 전입자 준법 특별 교육	7월	
	(정보교육) 국가안보 분야 전문화 교육 실시	7월	
	(준법역량 강화) 하반기 2 · 3급지 현장 교육	7~9월	
	(정보교육) 국민안전 분야 전문화 교육 실시	9월	
4/4분기	**(신원조사)** 전국 신원조사 담당자 직무연수	11월	
	(정보전산)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12월	
	(준법역량 강화) 시도청 준법 책임 · 지원관 워크숍	12월	
연중	**(준법역량 강화)** 시도청 주관 정보활동 토론회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안녕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안전 확보**

– 집시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국민 인권 신장** 및 **국민의 사생활 평온 보장**

□ 기대효과

○ **(준법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 본청-시도청-경찰서 間 준법역량 균질화를 통해 정보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원천 차단

○ **(집시법령 개정)**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의 조화를 도모하는 집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과도한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 선도

○ **(신원조사 업무 전산화) 신원조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온라인化**로 **경찰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기본권 침해가능성 최소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3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20</th><th>'21</th><th>'22</th><th>'23</th></tr>
<tr><td rowspan="2">①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50%></td><td>준법관리 역량강화 <30%></td><td></td><td>129회</td><td>180회</td><td>252회</td><td rowspan="2">하단 참조</td><td>(준법지원계 점검)+
(시도청 자체 점검)</td><td rowspan="2">· 경찰청·시도청 점검·간담회 등 건수
·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 자료</td></tr>
<tr><td>행정지도 건수 <20%></td><td>27회</td><td>35회</td><td>39회</td><td>47회</td><td>행정지도 건수</td></tr>
<tr><td colspan="2">②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 <50%></td><td colspan="2"></td><td>139.53</td><td>143.66</td><td>하단참조</td><td>(교육 이수율×50%)+
(발전 노력도×30%)+
(교육만족도×20%)</td><td>· 교육 계획, 결과보고서 등
· 본청-인재원 협업과정 수료자 대상 설문조사</td></tr>
</table>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세부 설명자료】

①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50%>

○ 측정 산식

– 준법관리 역량강화(30%)

(준법지원계 현장 점검 횟수) +(시도청 자체점검 횟수) = **'252회'** 달성 목표

– **정보자료 행정지도(20%)** : 행정지도 건수

○ 목표값 산출 근거

1 **<준법관리 역량강화>** 준법지원계는 일선까지 준법 정보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서별** ▵**계급별 맞춤형 현장점검 및 간담회 지속 추진**

– 올해는 시도청의 준법 역량 제고를 위해 **본청·시도청 합동 현장점검과 더불어 시도청 자체 점검 등 활성화** 예정

⇨ '23년 목표치는 올해 강화된 준법 관리 기조에 맞게 전년 대비 40% 증가한 **'252회'**로 **공격적인 목표 설정**

※ '21년 129회(본청 87 · 시도청 42) → '22년 180회(본청 68 · 시도청 112), 2년간 증가율인 '상승세' 반영

2 **<정보자료 행정지도>** 준법지원계는 현장 정보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규칙 일탈 소지 확인, 정보관 대상 행정지도 실시**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행정지도(① 용어수정 → ② 당사자 교양 → ③ 당사자 주의 → ④ 소집교육), ▵관리자 주의 ▵사실조사 ▵감찰조사 · 수사의뢰

– 올해는 정보경찰 활동으로 인한 논란 등을 원천 차단하고자 **시도청에 자체 행정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등 **행정지도 강화 추진**

⇨ 따라서 '23년 행정지도 목표 건수 또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47회'**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20년 27회 → ▵'21년 35회 → '22년 39회, 3년간 평균 증가율인 '추세치' 반영

②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 <50%>

○ 측정산식

– 정보경찰 교육 평가지수 (50%)

(교육 이수율 × 50%) + (발전 노력도 × 30%) + (만족도 × 20%) = **'143.66'** 달성 목표

※ 교육 이수율 50%, 발전 노력도는 30%, 만족도는 20% 배점

○ 목표값 산출 근거

1 **<정보경찰 교육 이수율(%)> = (교육 참석 연인원 ÷ 정보경찰 현원) × 100**

– 정보경찰 교육 수료율은 1인당 **정보경찰 연간 교육 횟수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량지표**로서, 제한된 교육장·강사 수 등을 고려하면 이미 임계치에 달한 지표로서 **목표달성 난이도가 높고 도전적인 성과 지표**임

– 올해는 **인재교육원 교육과정 수강 정원이 10%가량 축소**돼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신규 전입자 △관리자 교육 등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작년 이상의 교육 이수율 달성을 추진**

⇨ 사실상 임계치에 도달한 지표이나 최근 3개년 중 가장 높은 연간 교육 이수율인 171.5%*('22년)를 상회하는 수준인 **175%를 목표치로 설정**

* '22년 교육참여 연인원 5,087명, 정보경찰 현원 2,966명

2 **<정보교육 발전 노력도> = 분야별 수행 노력 총점**

– **'22년 신규지표**로 △교육시스템 개선 △대내외 협력 △교육과정 발굴 등 **정보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 노력도 123.2점을 목표로 설정(전년 대비 10% 향상)**

【 분야별 배점 기준 】

분야	교육시스템 개선	대내외 협력	교육과정 신설
배점	건당 15~25점	회당 5~10점	과정별 10~15점
기준	‣ 인프라(인력·예산·전산) 구축 25점 ‣ 교육 체계·제도 개선 20점 ‣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15점	‣ 他 기관 10점 ‣ 교육기관(경대·인재원) 7점 ‣ 대내(본청-시도청) 5점	‣ 他 기관 직무교육 15점 ‣ 본청 주관·교육기관·사이버 교육 콘텐츠 10점

※ 각 분야 달성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대내외 기관·부서 및 전문 교수진과 유기적 협력을 해야만 결과가 도출되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지표임

3 **<교육 만족도> =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 평균 × 20**

- 교육의 효과성·현장 활용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정성지표로, '20년 최고치 도달 후 **하락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달성 난이도가 매우 높은 지표**임

- 목표 달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보경찰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근 3년 만족도 평균('20년 4.82, '21년 4.81, '22년 4.74)인 4.79점(5점 만점)보다 높은 **4.8점으로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 올해 목표치를 위 측정산식에 대입할 경우 '143.66'

※ (교육 실적<175> × 50%) + (발전 노력도<123.2> × 30%) + (만족도<96> × 20%) = 143.66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인권·준법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①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50%>	준법관리 역량강화 <30%>	(준법지원계 점검) + (시도청 자체 점검)	252회	정량	산출	
			행정지도 건수 <20%>	행정지도 건수	47회			
		②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 <50%>		(교육 이수율 × 50%) + (발전 노력도 × 30%) + (교육만족도 × 20%)	143.66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인권·준법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국정과제 69번】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정69-4) ▸【실천과제】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국정69-4) ▸【주요업무계획】△집회·시위 대응 체계 내실화(업무Ⅱ-가) △정보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고도화(업무Ⅲ-라) △AI를 활용한 차세대 치안 시스템 도입(업무Ⅳ-가)

19 상황정보 역량 강화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 추진배경

○ 새정부 집권 2년차로 국정과제 수행이 본격화되며, 前年보다 분야별·이슈별 찬반집회 등 공공갈등 상황 증가 예상

※ 통상 1년 차보다 집회 증가(박근혜 정부 43,071→45,391건 / 문재인 정부 43,161→68,315건)

– 특히, 정부는 금년을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원년으로 선포, 노동·교육 등 관련 단체와 정부간 갈등도 심화 우려

– 또한, ’24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간 촛불·맞대응집회가 계속, 정치 이슈 등 다양한 변수요인에 따라 확산·격화 가능성

○ 선제적 정보활동 및 상황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법질서를 준수하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등 정책과제 목표달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3년은 ’22년 대비,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의 빈도·규모가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사전 정보활동 및 상황대응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제(성과지표) 설정

※ ’23년 성과지표 주요 변화 : ‘상황정보활동 지수’ 지표 內 ‘사전 정보활동’ 비율을 50%→60%로 상향 / ‘상황대응 역량 강화율’ 지표 內 ‘분석역량 향상도’ 비율을 50→70%로 상향

○ **<선제적 정보활동>** 공공안녕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집회시위 및 사회현안 등 관련 공공갈등에 대한 사전 정보활동 강화

– **(집회신고 대응강화)** 집회신고 단계부터 불법·교통체증·소음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등 대응 강화

– **(정보분석회의 개최)** 대규모 집회 및 불법 변질 우려 時 정보상황과(계)장 주재 회의 활성화,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침 수립

– **(대내외 정보공유)** 집회시위 등 관련, 적시에 유관기능 및 유관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 강화

- **(대화경찰 적극 활용)**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 배치율 제고, 적극적인 소통·협력 활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안전 보장 강화

- **(현장 法집행 지원)** 경비·수사·법무 등 관련 기능 협업, 집회시위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검토 및 소송 등 지원

○ **<상황정보 역량강화>** 현안별 교육·간담회 등 본청-일선간 수시 소통·교류, 상황 분야 정보수집·분석 등 업무역량 제고

- 집시법령·판례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석사 과정·해외연수 등 전문화 교육도 추진, 현장 대응역량 강화

※ 대면 교육 뿐 아니라 사이버 컨텐츠 제공 등 온라인 교육 적극 활용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 중	유관 기능 및 기관 간 정보 전파·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수시
	법집행 과정상 논란 발생 時 유관기능 협조하여 법률검토 후 법집행 지원	수시
	대규모 집회 · 시위 前 본청·시도경찰청 등 합동 정보분석회의 개최	수시
	집회 · 시위 현장에 대화경찰을 배치, 기본권 보장 및 불법행위 자정 강화	수시
	본청-인재개발원 협업, 교육과정 운영	수시
	대화경찰 집회시위 현장 활동요령 등 사이버 교육자료 제공	수시
1/4분기	전문 정보관 육성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3월
	연간 대화경찰 운영계획 수립	3월
	분야별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	2~4월
2/4분기	분야별 담당 정보관 교육 · 간담회	4~6월
	경비 기능과 협조, 집회 · 시위문화 대국민 여론조사	5~10월
3/4분기	분야별 담당 정보관 교육 · 간담회	7~9월
	분야별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	7~9월
4/4분기	분야별 담당 정보관 교육 · 간담회	10~11월
	집회 · 시위 문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	10월
	국내외 기관 위탁 전문화교육	9~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 이해관계집단: 정보의 수요자인 경찰 각 기능 및 유관 기관

□ 기대효과

○ 공공안녕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함으로써

–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및 국민불편 최소화

○ 집회·시위 자유와 국민 안전의 조화를 통해 사회안정에도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상황정보 활동 지수 (50%)	50.90	55.46	65.22	74.35	상승세이므로, 전년 실적에 3년간 추세치(13.27%)를 상회하는 상승률(14%) 적용	①사전 정보활동 60% [법률지원 실적 40% + 합동분석회의 실적 20%] ②대화경찰 운영 실적 40% [배치율 20%+활동실적 20%]	집회 법률검토 등 자료 건수 합동분석회의 건수, 대화경찰 배치율·활동실적 통계자료 등 활용
국민평가 (25%)	34.90	74.9	67.93	68.00	전년 실적 대비 상향	여론조사 내용 중 집회시위 보장、안전 확보 노력、대화경찰 활동의 효과성 등 주요설문의 답변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 활용·산출	경비국 여론조사 결과
상황 대응역량 강화율 (25%)	47.5	54.01	76.50	84.91	전년 실적 대비 11% 상향	①분석 역량 향상도 70% (산식은 하단 참조) + ②교육 이행률 30%, (年 교육인원 / 목표인원)	상황분야 정보관 제출자료·평가 /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결과자료 등 활용

【 산출 근거 】

1.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상황정보 활동 지수

○ 금년 집회시위 빈도·규모 확대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공공안녕 위험요인 분석 강화를 위해 '사전 정보활동' 비율을 前年 보다 상향(50%→60%)

– '사전 정보활동' 지표 內 '법률지원 실적' 반영 비율도 前年보다 상향(20%→40%), 집회신고부터 상황 종료 時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관련 검토 등 지원),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 노력 강화
– '대화경찰 운영 실적'은 시행초기에 비해 안정화에 접어든 단계('22년 집회시위 현장배치율 89.3%)로, 前年 대비 반영 비율 하향(50%→40%)

○ **(측정산식)** ①사전정보활동 60%(㉠법률지원 실적 40% + ㉡합동분석회의 실적 20%) ②대화경찰 운영실적 40%(㉠현장배치율 20% + 활동실적 20%) 합산

①사전정보활동(70%) = ㉠법률지원 실적 40%[(법률지원 건수 / 대규모 집회·시위)×1,000×0.4] + ㉡정보합동분석회의 개최 실적 20%[(합동분석회의 개최 건수 / 대규모 집회·시위)×1,000×0.2]
※ 대규모 집회·시위 기준: 1천명 이상

②대화경찰 운영 실적(30%) = ㉠현장배치율 15%[(대화경찰 배치 건수 / 집회·시위 건수)×100×0.2] + ㉡활동실적 15%[(갈등완화 등 활동성과 건수 / 집회·시위 건수)×100×0.2]

○ **(목표값 산출근거)** 최근 3년간 상승세이므로, 전년 실적에 3년간 추세치(13.27%)를 상회하는 상승률(14%) 적용(**평가 기준의 '상' 등급**에 해당)

⇨ 금년은 정부 집권 2년차로 국정과제 수행이 본격화(노동·교육·연금개혁 원년의 해 선포)되는데다, '23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집회시위 빈도·규모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도전적인 수치임

2. 국민평가

○ △준법 집회시위 보장 노력 △불법집회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평가 △대화경찰활동의 효과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설문으로 여론조사 후 실적에 반영

※ 설문 조사대상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中 2023년 한해 동안 집회시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집회시위 현장 주변 거주자

○ **(측정산식)** 리커트 5점 척도 활용 : 설문 답변(1~5점 배점)의 평균 × 20

○ **(목표값 산출근거)** 최근 3년간 등락이 있었던 만큼, 3년간 실적치의 평균(59.24)보다 상향된 목표치만 설정하더라도 **평가 기준의 '상' 등급**에 해당하나, 법질서 확립·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경찰 노력 배가를 위해 전년(67.93)보다 상향(68.00)

⇨ 전년보다 집회시위의 양적·질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에도 교통 불편 등 초래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기가 쉽지 않은 여건으로, 집회 신고단계부터 대응단계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매우 도전적인 수치임

3. 상황 대응역량 강화율

○ 상황정보 고유의 공공안녕 위험에 대한 알람(ALARM) 기능 강화·고도화를 위해 '분석역량 향상도'에 대한 지표 내 비율을 상향(50%→70%)

– '교육이행률'은 前年보다 반영비율을 하향(50%→30%)하되, 자체 법률·판례 교육 뿐 아니라 인재개발원·대학 등 내·외부기관과 연계, 대화경찰·경제·사회·공공 등 분야별 전문화된 교육 진행 등 내실화 추진

○ **(측정산식)** ①분석역량 향상도 ②교육 이행률(年 교육인원 / 목표인원) 합산

– ①분석역량 지수는 시도청 소속 정보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활용도 등에 따른 평가로, 시도청별 획득 점수를 소속 정보관 인원으로 나누어 지수를 산출하며,

– 전체 시도청(18개) 中 평균점수를 9.5점 이상 획득한 시도청이 60%(10개) 이상이면 S등급(100점), 40%(7개) 이상인 경우 A등급(90점), 25%(5개) 이상인 경우 B등급(80점), 25% 미만(4개 이하)인 경우 C등급(70점)으로 평가

점수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산식	[평균점수(시도청 자료 총 획득점수/각 시도청 정보관 현원)] > 9.5점↑			
기준	10개 이상 시도청	7개 이상 시도청	5개 이상 시도청	4개 이하 시도청

○ **(목표값 산출근거)** 최근 3년간 상승세이므로 추세치를 적용해야 하나, ’22년 실적 급상승(41.64%)으로 추세치(27.67%)가 과도하게 높아 적용 곤란,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전년도 실적(76.5)을 기준으로 11% 상향(**평가 기준의 ‘상’ 등급**에 해당)

– ①분석역량 향상도는 ‘S등급’ 기준을 ‘22년 9개청 이상’에서 올해 ‘10개청 이상’으로 상향 ②교육이행률 중 ‘목표인원’은 전년 교육 목표인원(447명)을 10% 상회하는 491명을 목표치로 설정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상황정보 역량 강화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상황정보 활동 지수 (50%)	①사전 정보활동 60% [법률지원 실적 40%+ 합동분석회의 실적 20%] ②대화경찰 운영 실적 40% [배치율 20%+활동실적 20%]	74.35	정량	산출	
		국민평가 (25%)	여론조사 내용 중 집회시위 보장·안전 확보 노력·대화경찰 활동의 효과성 등 주요설문의 답변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 활용·산출	68.00	정량	결과	
		상황 대응역량 강화율 (25%)	①분석 역량 향상도 70% + ②교육 이행률 30%, (年 교육인원 / 목표인원)	84.91	정량	산출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상황정보 역량 강화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국정과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업무 Ⅱ-가

성과목표Ⅱ-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고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부패·공공범죄 근절>** ▵공직자 등 부패범죄 ▵건설현장 폭력행위 ▵선거사범 등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법 지속 발생**

– 특별단속 추진 등 모든 역량을 집중, **지위고하를 불문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

○ **<경찰 수사 책임성·완결성 제고>** 수사 관련 법령·지침을 원점에서 진단·점검, **경찰수사 공정성·완결성 제고를 뒷받침**

– 내·외부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계'를 통해 책임수사역량 제고

○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 **인권친화적 수사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역량에 따른 인사·교육훈련 체계 확립, **전문성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고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부패인식지수**
관리과제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공공분야 공직자 부패사범 검거인원 / 건설현장 불법행위 검거인원
	경찰수사의 공정성·책임성·완결성 제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계 구축 노력도 /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사건 및 수사 제도 점검·환류 내실화 노력도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경찰수사 수사 전문역량 제고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 전문 수사 인력 확보 / 전문 수사인력 양성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 경검 협력관계 및 책임수사시스템 안착을 위한 실무 상담·제도 연구 / 수사권 개혁에 따른 국민중심 경찰수사의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부패인식지수	61	62	63	64	부패인식지수는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2년은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전 3년도 실적 평균값(62)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64)을 고려, '23년 목표치는 역대 최고치인 64점으로 도전적 설정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전문가 평가 결과를 집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주관 발표 ※ e-나라지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정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사정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

※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17년 24위 → '19년 20위 → **'21년 18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8년 45위 → '20년 33위 → **'22년 31위**

–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수사·특별단속 추진**

※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건설현장 폭력행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별단속 실시 △부패·공공범죄 분야 특별단속 추진 예정

○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중한 업무로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현 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요구**

– 수사관이 **당당하고 책임있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시각에서 **각종 법령·제도 등을 원점에서 진단·개정 추진**

– 수사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사교육 체계를 현장 수요 중심으로 개편

(4) 참고자료

○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단속 관련 자료」

○ 공공청렴지수 및 부패인식지수 관련 자료

○ 경찰청, '2023 주요업무 계획'

○ 국정과제 [04-3]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20 반부패 · 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회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고 **국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는 **고질적 불법행위 지속 발생**

– **'공직자의 부정청탁 · 금품수수', '건설현장 갈취 및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통해 사회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에게 상실감·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관행·부조리 만연**

○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공직자의 직위, 죄명 불문 모든 반부패 · 공공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표 수사기관'으로

– **종합적 · 체계적인 반부패 · 공공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부패사범 검거) 공정사회 청렴 ·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종 부정부패 및 특권의식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

– 특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 전개** 및 **고질적 토착비리 근절**

<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

4대 부패범죄	개 념	유 형
①금품수수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 등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②재정비리	공직자의 공공재정 등 편취·횡령·배임 등	공공재정·보조금·국고손실 등
③권한남용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각종 불법행위 등	직권남용, 공무방해 등
④불법알선·청탁	공직자의 부정·불법행위 알선·청탁 등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건설현장 안전을 담보**로 공사업체 대상 갈취 및 채용 강요, 이권을 목적으로 한 일부 단체들의 **무소불위식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특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선정, **중점 단속**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사법처리

< 중점 단속대상(5대 불법행위) >

5대 불법행위	개 념
①업무방해	출근방해, 시설점거, 각종 폭력·손괴 행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②갈취	공사방해 자제 등을 조건으로 명칭 불문, 월례비 등 요구
③강요	自 노조원 채용강요, 自 노조 건설기계 사용 등 요구
④불법집회·시위	미신고·금지집회 개최, 소음기준 위반 등 각종 집회·시위와 관련 불법행위
⑤보복행위 등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에 대한 보복 목적 폭행·상해

○ **(공명선거 구현)** ’23년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8.)」**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5.)」** 관련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수사를 통해 **공명선거 뒷받침**

※ **(중점단속 대상)**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금품선거 ▵공무원개입 ▵단체 동원 ▵선거폭력 ▵현수막 훼손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全 국민)** 공직 부패 근절 및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 ⇒ 공직·시민 사회 전반의 신뢰 고취**

□ 기대효과

○ **(경찰의 책임성 강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공공범죄 분야** 검거 활동을 통한 **국민의 기대 부응, 전문성·책임성 제고**

○ **(사회질서 보호)**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중 단속**’ 등을 통해 노동자 안전 등 **국민들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사회 질서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1차 평가계획 수립	1월	
	제3회 조합장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2월	
2/4분기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평가 및 포상	4월	
	반부패·공공범죄 특별 단속 추진	4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1차 평가 및 포상	4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2차 평가계획 수립	5월	
3/4분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2차 평가 및 포상	8월	
	반부패·공공범죄 특별 단속 평가 및 포상	9월	
4/4분기	제3회 조합장 선거 관련 평가 및 포상	10월	
	'24년도 총선 대비 「공직선거법 해설서」 개정	12월	
	각 테마별 단속 결과 등 현황 분석 및 개선점 검토	12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공공분야 공직자 부패사범 검거인원	659	777	780	800	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중추적 사정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고려하여 공공분야 공직자 부패사범 검거인원을 성과지표로 산정,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 등으로 공직자 부패사범 수사에 경합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23년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및 부패범죄 기획수사 적극 전개 예정, 3년 평균 실적(738명) 기준 평균 증가율(약 8%)을 상회하는 도전적 목표치(검거인원 800명) 설정	'23년 1월~12월 공공분야 공직자 부패사범 검거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시도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검거인원	392 111	400	고질적 불법행위 척결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여,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악순환 단절하고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검거인원을 평가 기준으로 산정, 보복성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자의 소극적 신고 등 원인으로 '22년 검거인원이 '21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나, 엄정 수사를 통해 불법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 기대되는 점 등 고려, 최근 2년간 실적치를 상회하는 검거인원(400명)을 목표치로 설정	'23년 1월~1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검거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시도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등)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① 공공분야 공직자 부패사범 검거인원 <비중 50%>	성과목표별로 제시한 측정방법 등을 인용하여 제시	800	정량	산출	
		②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검거 인원 <비중 50%>	성과목표별로 제시한 측정방법 등을 인용하여 제시	400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부패·공공범죄 엄정단속 (목표II.-나 - 1 - ②)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목표II - 나 - 1 - ①<핵심>)

21 경찰수사의 공정성 · 책임성 · 완결성 제고

□ 추진배경

[경찰수사의 공정성 · 책임성 강화]

○ 수사권 개혁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체감 지표는 상승한 반면, 복잡한 수사절차 등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공정성·신뢰도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공정성) '19년 40.5점 → '20년 53.9점 → **'21년 58.5점 (전년 대비 4.6점 ↑)**
(신뢰도) '19년 36.5점 → '20년 46.4점 → **'21년 55.3점 (전년 대비 8.9점 ↑)**

※ (평균 사건처리기간) '20년 55.6일 → '21년 64.2일 → '22년 67.7일

○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용하는 각종 법령·제도 등을 원점에서 진단·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현장에 맞게 개정 추진

[3중 심사체계를 통한 경찰수사의 완결성 확보]

○ '21년 도입한 '3중 심사체계'는 경찰수사의 공정성 · 완결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 통제장치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운영 중

< 3중 심사체계 개요 >

내부 심사체계		외부 심사체계
① 경찰수사 종결 前	② 경찰수사 종결 後	③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수사감찰)	

①, ② <심사·점검건수>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6.1% 증가('21년 115.1만 건 → '22년 139.7만 건)
③ <개최횟수> 전년 대비 62회 추가 개최('21년 156회 → '22년 218회 / 39.7% ↑)

○ 3중 심사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다져 국민이 경찰 수사의 공정함을 믿고 신뢰하도록 면밀한 사건심사·점검을 통해 책임수사 구현

[수사 전문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 수사 전문성 향상과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지침 등을 수립·개선

<'22년 프로그램 개발 현황>

▸ **(3종 개발)** ▲수사자료 분석포털 ▲지능형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 ▲알뜰폰 통신수사자료 송·수신 시스템

○ 올해도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경찰수사의 공정성 · 책임성 강화]

○ **(법령정비)** 수사정책 총괄 부서로서 수사 실무현장과 법령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적 경찰수사가 되도록 법령을 정비

–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수사준칙(대통령령) 개정이 예상되는 만큼, 이와 연계된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개정 추진

▸ **(국정과제)** '고소·고발 등 민원은 민원인의 동의 여부 불문하고 모두 접수'를 국정과제로 선정('국정04' 中 3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증가되는 업무량에 대비하고자 현장 업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사 관련 법령에 반영 추진

▸ **(각하 사유 확대)** 고소·고발이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수사규칙 각하 사유 신설

▸ **(입건유예 도입)** 경미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는 '입건유예' 결정 도입

▸ **(사건통지 절차 개선)** 고소·고발 수사기간(3개월)을 고려, 진행상황 통지주기를 변경(현재 1개월마다 → 3개월마다)하도록 경찰수사규칙 개정

○ **(현장진단)** 기존 시행 중인 각종 수사지침 등에 대해 책임수사지도관(수사감찰)의 정책진단 결과 및 자체 현장안착도 및 이행도 등을 재진단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진단시기)** 기존 제도의 현장 수용성 등 전반적으로 진단·점검

▸ **(점검사항)**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절차 개선방안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방법 명확화 지침 ▲입건 전 조사 사건 관리개선 등

○ **(신뢰도 향상)** 최근 수사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

– 최근 5년간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총 18.8일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7.7% 상당 증가하고 있음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평균 사건처리 기간	48.9	50.4	55.6	64.2	67.7

– 사건처리 기간증가는 ▵범죄수법 다양화 ▵인권의식 향상(각종 영장 요구 등) ▵수사절차 변화 등 다양한 요소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다만, 신속한 사건 해결은 수사경찰이 추구해야할 핵심가치인 만큼, 사건처리 기간 증가율을 연 평균(7.7%) 미만(72일)으로 관리하여 국민 신뢰도 향상 도모 필요

[3중 심사체계를 통한 경찰수사의 완결성 확보]

○ **(개요)**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내부)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외부)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계'를 통해 종결사건의 완결성 확보

▸ **(수사심사관)** 경찰청·시도청 직접수사 부서를 포함한 全 수사부서 ▵영장신청 ▵불송치 종결사건 등 대상, '수사단계'에서 사건심사·분석

▸ **(책임수사지도관)** 해당 청 내 종결사건 대상, 수사 과정·결과 적정성 정기(분기 1회)점검 등 '수사종결' 후 사건심사 + 주요 수사 제도·정책 점검

※ 책임수사지도관은 수사감찰 업무도 병행 中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경찰수사 전반에 대한 외부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사건 ▵종결사건 등 수사 과정·결과의 적정성·타당성을 위원회에 상정·심의

○ **(주요 추진사항)** 면밀한 사건심사·점검과 수사제도 및 정책 진단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3중 심사체계의 내실화 추진

– **<수사 완결성 확보>** 심사체계의 본연의 역할인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심사 현황 및 교육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 **(면밀한 사건심사)** 사건심사·점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송치 결정 사건의 심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심사관 교육)** 수사심사관의 심사 역량을 상향 균질화하기 위해 수사연수원 교육, 시·도청 교육센터 등 자체교육 활성화 및 점검

– **<수사 제도·정책 진단>** 수사현장과 국수본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수사지도관(수사감찰)을 통해 수사제도·정책 진단 활성화

▸ **(제도·정책점검 정례화)** 국수본과 수사현장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정책·제도의 현장안착도 등을 정기적 진단·점검 ⇨ 국수본 감사 기능 수행

▸ **(감찰정보 수집 강화)**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에 따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수사제도·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각 기능에 통보·환류할 수 있도록 감찰정보 수집을 활성화

※ [경찰감찰규칙 제20조 2호] 불합리한 제도·시책 등 개선사항 제출 규정

– **<심사인력 역량 강화>** 우수 심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연계된 우수심사관 선발 제도를 마련하고, 심사관 평가제도 도입

▸ **(우수심사관 선발)** 정량지표(심사 건수 등) 및 정성지표(검사 요구·요청 관리)를 종합, 역량·열정 있는 우수심사관을 선발(반기별) ⇨ 승급,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심사관 평가)** 대한변협의 법관평가 등을 참고, 정책수요자인 일선 수사관이 심사관을 평가하고 심사관이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 방안 마련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활성화>** 1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23.4.경), 그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활성화 추진

▸ '22년부터 증액된 위원회 자문료(3.5억 → 7.3억)를 바탕으로, 시·도청별로 최소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 사회적 쟁점·이슈가 되는 중요사건에 대한 심의를 더욱 활성화 추진

[수사 전문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기준·원칙 제시) 수사환경의 변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무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수립·정비

- **(수사실무지침)** 법령 개정, 수사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각종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사실무지침(現 제4판) 주기적 개정
- **(통신수사길라잡이)** 통신수사의 개념·종류·절차를 총 망라한 메뉴얼, 새로이 개발한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정
- **(현행범 체포 가이드라인)** 현행범 체포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 가이드라인, 신규 판례 등 보강하여 개정

○ (현장지원)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을 도입·개발 및 개선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

- **(지능형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 (*A*1))** 기존 *i*1의 기능을 개선하여 새롭게 개발한 *A*1, 사용 편의 대폭 개선
- **(알뜰폰 통신수사 자료 송·수신 시스템)** '22.12월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인 자료 송·수신 시스템의 각종 오류 및 현장 요청사항 등을 개선
- **(DB형 수사자료 종합분석 프로그램, (*i*-base))** 통화내역·금융거래내역 등 다양한 형태의 수사자료를 하나의 DB로 구성하여 팀 단위 종합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추가 도입

○ (교육 강화) 프로그램 교육 수요를 대폭 확대하고, 각종 교육 자료 제작·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추진

- **(사용자 교육)** 많은 현장 수사관들이 수사자료 분석 프로그램 등을 쉽게 습득·활용하도록 교육수요를 대폭 확대 (각 500명 이상)
- **(교재 제작)** 현장 수사관을 위한 「(가칭) 수사자료분석 길라잡이」 및 수사자료 분석 강의 표준 강의안 등 관련 교재 제작
- **(워크숍)** 상향식 교육이 아닌 수평식 교육으로 프로그램 사용자 간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최초 개최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사자료 표준화 프로그램(*A*1) 기능 고도화	2월	
	2023년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 운영 계획	2월	
	23년 수사감찰 제도 운영 내실화 계획	2월	
	우수 수사심사관·팀 선발 및 포상 계획	3월	
2/4분기	현장수사 지원을 위한 천공 복사 용지 보급	4~5월	
	책임수사지도관 제도·정책 진단(요구·요청 등) 계획	5월	
	경찰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 개정	5월	
	수요자 중심, 수사심사관 설문평가 계획	6월	
	수사자료분석 길라잡이(일반 수사관용) 제작	6월	
3/4분기	현장진단 점검 및 제도 개선책 수립·시행	7~8월	
	DB형 수사자료 종합분석시스템 도입	9월	
4/4분기	수사자료 분석포털 기능 고도화	10~11월	
	우수 수사기법 발표 대회	12월	
	'23년 경찰서 사건기록 보관실 구축(60개서)	12월	
	울산경찰청 사건기록관 구축	12월	
상시	종합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수사를 직접 접하는 사건관계인(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및 안전한 사회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

○ 경찰 인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 기대효과

○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 수사지원(311)	일반회계	139	157
② 수사자료분석시스템	일반회계	13.5	13.7
■ 일반수용비(210-01)	일반회계	-	2.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일반회계	2.5	4.2
■ 일반연구비(260-01)	일반회계	8.8	-
■ 자산취득비(430-01)	일반회계	2.2	7.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국유기금②)			
① 청사(5131)」			
■ 경찰청 경기남부 사건기록관 신축(449)	국유기금	0	2
■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320)	국유기금	0	1

1」 회계구분란에는 회계명 또는 기금명 표기

2」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의 관리과제명과 관리코드(일반재정 · R&D · 정보화 구분) 표기

3」 단위 · 세부사업명 옆의 괄호에는 사업코드를 기재(예 : 1101, 101)

4」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관리과제)을 모두 포함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가 재정사업내 하나의 단위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비, 회계 표기(세부사업명 나열 불필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가 재정사업내 2개 이상의 단위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해당 단위사업에 대해 각각 사업비, 회계 표기(세부사업명 나열 불필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 (40%)	신규	신규	70	77	① 경찰 수사 관련 법령·훈령 정비(40) ②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30) ③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노력(30)	법령·훈령 개정 횟수, 현장점검 횟수, 제도 개선 지침 시행 등 시행 건수, 평균 사건처리기간 <지표1 참고>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추출/ 시행 공문 / 수기취합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사건 및 수사 제도 점검·환류 내실화 노력도 (40%)	신규	신규	90	92	① 불송치 결정사건 심사·점검(50%) ② '심사관' 전문교육 실시(30%) ③ 제도·정책 첩보 수집 및 환류(20%)	사건심사 건수, 교육이수율, 첩보 건수 등 <지표2 참고>	시행 공문 / 보고서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20%)	신규	신규	70	80	① 수사 절차상 지시·지침 등 수립 및 제·개정(60%) ② 수사자료 분석 등 교육(40%)	지시·지침 수립 건수, 교육 건수 등 <지표3 참고>	시행 공문/보고서 등

< 지표 1 :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 >

■ 설정 배경 : 피의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를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대국민 신뢰 제고

■ '23년 목표산출 : 각 지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목표치의 77점 이상 달성 시 만점(25%)

- '22년도에 달성한 실적(70점)보다 10%로 향상된 점수를 목표로 설정

점수	25%	22.5%	20%	17.5%	15%
노력도	77점 이상	74점 이상~ 77점 미만	71점 이상~ 74점 미만	68점 이상~ 71점 미만	68점 미만

■ 측정산식 : ① 경찰 수사 관련 법령·훈령 정비(40점) + ②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30점) + ③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노력도(30점)

<table>
<tr><th>구분</th><th>① 경찰 수사 관련
법령·제도
총괄 정비(40점)</th><th>②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30점)</th><th colspan="4">③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노력(30점)</th></tr>
<tr><td>기준</td><td>- 기존 제도 진단·점검
(공문기준)
-「경찰수사규칙」(부령) 및
「범죄수사규칙」(훈령) 개정</td><td>-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 시행(공문 기준)</td><td colspan="4">- 평균 사건처리기간 향상</td></tr>
<tr><td rowspan="2">점수
(100점)</td><td rowspan="2">-개정 횟수
·<부령> 1회당 20점,
·<훈령> 1회당 10점
-현장점검 횟수
·1회당 10점(2회 이상 20점)</td><td rowspan="2">- 개선책 수립·시행 건수
·1건당 10점
-공정성 향상을 위한 kics 등 전산시스템 개선
·1건당 10점</td><td>72일 미만</td><td>72일 이상
75일 미만</td><td>75일 이상
777일 미만</td><td>77일 이상</td></tr>
<tr><td>30점</td><td>28점</td><td>26점</td><td>24점</td></tr>
</table>

① 경찰 수사 관련 법령·훈령 정비(40점) : 경찰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수사현장을 진단·점검하고 확인된 개선사항을 법령(「경찰수사규칙」 및 「범죄수사규칙」)에 반영

※ **(법령 개정)**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공통) 및 행안부 검토(행안부령) 등 외부 검토과정이 필요한 점과 법령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훈령(반기 1회), 부령(연 1회) 포함 연 3회 개정을 목표로 설정

※ **(현장점검)** 현장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규 점검 연 1회 이상 추진(필요시 수시 진단 가능)

②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30점) : 현장진단 등을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향상

※ **(수사의 공정성 확보 관련 제도 개선)** 현장진단·점검을 통해 도출될 개선사항에 대해 각종 개선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사현장에 환류될 수 있도록 진단·점검과 제도 개선을 연계

< 제도 개선책 예시 >

▸ '23년 고소·고발 접수 처리절차에 대한 현장진단을 통해 확인된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 → 고소·고발 접수 처리절차 이행 확행 지시 하달 / 불송치 결정서 작성 매뉴얼 작성·배포, 교육 강화 등

- 수사공정성 향상을 위해 수립한 개선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이와 연계된 전산개발(KICS 등)도 병행하여 추진

< 전산개발 예시 >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한 민원인이 제출한 사건이 수사관의 임의로 반려 등을 할 수 없도록 민원접수창구에서 자동으로 KICS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③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노력도(30점) :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평균 사건처리기간을 관리하여, 국민에게 신속한 경찰 수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향상

※ **최근 5년간 평균 사건처리기간 :** 연 평균 7.7% 상당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음

▸ '18년(48.9일) 기준 '22년 처리기간(67.7일)이 총 18.8일(38.4%) 증가

▸ 5년간 7.7% (38.4% / 5년) 상당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평균 사건처리기간	48.9	50.4	55.6	64.2	67.7

- 전년도 평균 처리기간(67.7일)에서 처리기간 증가폭이 7.7% 미만으로 관리

72일 미만	72일 이상 ~ 75일 미만	75일 이상 ~ 77일 미만	77일 이상
30점	28점	26점	24점

< 지표 ② :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사건 및 수사 제도 점검·진단 내실화 노력도 >

■ **(지표 선정)** 3중 심사체계는 '21년 신설된 제도로 재수사요청 비율 감소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현재 안착단계로,

- 해당 제도를 기반으로 국수본 內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건 및 제도 점검·환류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심사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설정

■ **('23년 목표)** 사건점검 및 제도 진단·환류 노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중점 요소들을 지표로 선정하고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합계 92점 이상 달성 시 만점으로 설정

■ **(측정산식)** ① 불송치 결정사건에 대한 심사·점검(50%) ② 심사관 전문교육 실시(30%) ③제도·정책 첩보 수집 및 환류(20%)

■ **(측정방식)** 해당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 차등화

구분	① 불송치 결정사건 심사·점검				② 심사관 전문교육							③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기준	심사대상 불송치 사건 대비 사건심사·점검 건수				전체 심사관 대비 교육이수자				심사관 교육자료 제작(가점)			제도·정책 첩보 기능 통보 건수		
점수 (100점)	90% ~	84~89%	78~83%	~77%	76%~	70~75%	64~69%	~63%	3건	2건	1건	65건 이상	60건~65건	60건~
	50	46	42	38	30	26	22	18	10	7	4	20	16	12

※ **(① 불송치 결정사건 심사·점검)** 수사권 개혁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 빈틈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90%로 설정(KICS 시스템을 통해 통계를 산출하여, 산출 오차 등을 감안)

※ **(② 심사관 교육)** 年 최대 4,000명 상당만 교육할 수 있는 수사연수원 여건 등을 고려, 전체 심사관(726명) 중 정원으로 반영된 인원(554명)이라도 교육하기 위해 만점을 76%(554/726명) 설정

※ **(③ 제도·정책 첩보 수집 및 환류)** 국수본과 수사현장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수사지도관(수사감찰)을 활용하여 수집한 제도·정책 첩보를 각 기능에 통보·환류한 건수를 지표로 산정('21년 50건 → '22년 57건 기능 통보 완료하였고, '23년 목표는 적극적인 70건으로 설정)

< 지표 3 : 수사 전문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

■ **(지표 선정)**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준·원칙을 제시하였는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선정

- 정책부서의 특성을 반영, 지시·지침 수립 건수(단건), 매뉴얼·가이드라인 등 제·개정 건수, 이와 더불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교육 건수 등을 통해 성과평가

■ **(측정산식)** 수사 절차상 지시·지침 등 수립 및 제·개정(60) + 수사자료 분석 등 교육(40)

■ **(측정방식)** 해당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 차등화

구분	① 지시·지침 수립 및 매뉴얼 제·개정						② 수사자료 분석 교육·지원*					
기준	지시·지침 수립			매뉴얼·가이드라인 제·개정			교육 건수			교육 인원수		
점수 (100점)							전년 대비			전년 대비		
	1~2건	3~5건	6건 이상	1건	2건	3건 이상	80~100%	100~120%	120% 이상	80~100%	100~120%	120% 이상
	10점	20점	30점	10점	20점	30점	10점	15점	20점	10점	15점	20점

* ▲'20년 없음 ▲'21년 교육건수 12회 교육인원수 231명 ▲'22년 교육건수 18회 교육인원수 395명 ('21년도부터 교육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22년에는 교육건수와 교육인원수 각각 150%, 170% 증가하였으나, 지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설정)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국민·인권·현장 중심으로 수사제도 개선 추진(100%)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 (40%)	법령·훈령 개정 횟수, 현장점검 횟수, 제도 개선 지침 시행 등 시행 건수, 평균 사건처리기간 <지표1 참고>	'22년 실적(70점) 보다 7점을 높여 **77점 달성 목표**	정량	결과	전략 목표 지표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사건 및 수사 제도 점검·환류 내실화 노력도 (40%)	사건심사 건수, 교육이수율, 첩보 건수 등 <지표2 참고>	'22년 실적(90점) 보다 2점을 높여 **92점 달성 목표**	정량	결과	전략 목표 지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20%)	지시·지침 수립 건수, 교육 건수 등 <지표3 참고>	'22년 실적(70점) 보다 10점을 높여 **80점 달성 목표**	정량	결과	전략 목표 지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경찰수사의 공정성 · 책임성 · 완결성 제고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국정04-3)

22 경찰수사 수사 전문역량 제고

□ 추진배경

○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정법령 시행 등에 따른 다양한 현안*을 해소하고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 시점

* 수사 완결성·공정성에 중점을 둔 관리·통제 강화의 영향으로, 민생범죄 수사부서의 보유건수·처리기간 증가추세는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

– 과중한 수사업무와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現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과 조치**가 필요

○ 더욱이 수사권 개혁의 영향이 큰 부서에서는 대거 타부서 전출이 이루어지고, 수사경력 없는 신임 직원들이 다수 전입하는 등 수사 품질 향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분위기

– 現 상황 대응을 위한 다각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바, **인사운영 및 교육 분야에서도 수사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일선 현장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추진** 필요

○ **역량강화 과제 추진**을 통해 확충한 **수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사부서 전출률**$^{2.4\%p\downarrow}$**, 신임수사관 비율**$^{2.6\%p\downarrow}$ **감소** 등 계속 근무환경 조성

– 사건종결에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수사관 역량관리**는 **조직전체의 수사품질 확보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핵심과제**

○ **지식전달, 공급자 중심의 現 수사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현장수사,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수사품질을 균질화**

– 책임수사기관 위상에 걸맞은 **교육 채널과 인프라를 구축**, **최고의 수사전문가를 키워** 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전면 재설계 추진**

○ **수사권 개혁 이후 경검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책임수사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필요

※ '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시행 / 제정 대통령령 · 부령 시행

– **국정과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수사 완결성을 향상**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 권익 보호** 필요

*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검·경 협력도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현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시스템 지원]

○ **(KICS 개편 사업)** 출입국 규제절차와 개선된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 처리절차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수사관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지원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정지, 긴급출국금지·정지, 입국시통보 등 출입국 규제 신청 절차를 KICS로 처리, 법무부 승인 후 출입국청 신청 과정을 신속처리
▸**(경찰수사규칙)**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 수리의무 규정 등 개정, 고소·고발 접수창구 일원화, 수사민원상담센터 개편, 즉일조사 체계 마련

○ **(개선 범죄통계 활용)** '23. 1. 1.부터 **최신 범죄 특성을 반영한 「개선 범죄통계」 시행**, 진화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석 기틀 마련

▸**(활용성 제고 방안)** 「개선 범죄통계」 안정화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안정책연구소의 통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특정 테마 선정, 분석보고서 작성
▸**(신뢰성 제고 방안)** 범죄통계 원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2회 통계원표 보정 △원표 입력 시 논리적 오류 자동 점검 기능 강화

○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등 사업 확대

▸**(시도청 수사동<별관동> 구축)**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기준을 시도청에도 적용, 全 수사 기능을 통합한 '수사동' 구축 추진 중(5개청 완료, 12개청 진행 중)
* '22년부터 수사동 사업에 '사건기록관' 반영(5개청)
▸**(경찰서 수사부서 환경개선)** △조사·사무 환경 분리 △피의자·피해자 동선 분리를 위한 통합수사당직실·호송차고 설치 등 조사환경 개선 사업 추진 ('15년~)
* '23년까지 전국 258개서 中 199개서 개선완료 예정

[수사경찰 인사·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 **(역량 중심 수사경찰 인사체계 확립)** 수사경과제를 기반으로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인사와 연계, 전문가 경력채용 및 전문수사관 선발

* '20년 12월 최초 시행, '예비→일반→전임→책임' 順으로 자격등급 부여, '22. 12월 기준 책임수사관 178명, 전임수사관 6,485명 선발

▸ **(인사운영 연계)** 책임수사관은 희망하는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 전임수사관은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과·팀장에 우선 보임하도록 인사제도와 연계, 정책 신뢰도 제고

▸ **(전문가 경력채용)** 공개채용이 어려운 특정 분야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이버 분야 석·박사 취득자 등 우수 인재를 수사경찰로 경력 채용 지속

▸ **(전문수사관 선발)** 사회·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 대응을 위해 전문수사관 분야를 정비하고, 우수한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22년 103개 분야 777명 신규 선발)

○ **(수사경찰 교육훈련 강화) 수사완결성 제고를 위해 신임수사관**부터 과·팀장, 경찰서장까지 수사경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 **(수사품질 상향 균질화)** △신임수사관 先 교육 後 배치 △신임·전문가·수사지휘자 교육체계 재설계, 활용가능한 매뉴얼 보급, 전문자료 교육포털 공유 · 수사연수원 등 상시학습 기반 플랫폼 구축

▸ **(수사전문가 집중육성)** △외부 위탁교육 및 수사특화 위탁과정 확대△국내외 관련기관 학회와의 세미나 협력 강화 △FBI 등 해외연수 확대 △최고전문가 과정 설계 및 전문자격증 취득지원

▸ **(교육인프라 확충)** △국가수사본부 총괄부서 신설 △수사연수원을 국가수사교육원으로 발전 △권역별 현장 수사교육센터 설치 △ AI기반 조사 트레이닝, VR·XR활용 현장실습 시스템 구축

- 현장의 수사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사연수원 증축 및 교수요원 증원(교육주기 6.3→3년 단축), △국수본 인증 수사교재 발간 추진

[경검 협력관계 및 책임수사시스템 확립 지속 추진]

○ **(경검 협력관계의 정착)** 수사 실무 상담·지원 체계를 운영, 부당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확립

○ **(일선 현장과의 소통)** △현장 의견 청취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현장 자문단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실시

○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업무추진)** △수사권 개혁 홍보·강연 △학계·전문가·유관기관 등 협력 △수사제도 연구 등 추진

○ **(일선 수사 경찰의 역량 향상)** 수사 실무 참고자료 발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사예산 집행지침 수립	1월	
	'23년 상반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	2월	
	'23년 상반기 수사경찰 인사결과 및 과.팀장 자격제 준수현황 분석	2월	
	'23년 수사경과 해제계획 실시	3월	
	「수사부서 조사환경 및 유치장 환경 개선 계획」 수립 및 하달	3월	
	수사준칙 개정 관련 후속 조치	3월	
	수사 실무 참고자료 (가칭 '책임수사 핵심법률지식') 발간계획 수립	3월	
2/4분기	민간조사 분야 민간자격 현장점검 계획서 작성 및 전수조사	4월	
	수사 실무 참고자료 내부망 연재 개시	4월	
	'23년 수사교재 각론 제작	5월	
	'24년도 예산안 요구서 작성 · 제출	5월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5월	
	제4회 책임수사관 선발시험 실시	6월	
	제11회 형사법 능력평가 실시	6월	
3/4분기	'23년 하반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	7월	
	경검 협력 우수 · 부당사례 발굴 및 정책 추진	7월	
	'23년 하반기 수사경찰 인사결과 및 과.팀장 자격제 준수현황 분석	8월	
	'22년 범죄통계 책자 발간	8월	
	현장 자문단 초청 간담회 개최	9월	
4/4분기	'KICS개편 사업 완료	10월	
	수사 실무 참고자료 책자 발간	10월	
	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10월	
	'23년 전문수사관 선발	11월	
	'23년 예비수사경과 선발	12월	
연중	경검 협력관계 관련 실무 상담 · 지원체계 운영	연중	
	전문가 면담 및 학술세미나 발제 · 참석	연중	
	수사제도 연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수사를 직접 접하는 사건관계인(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및 안전한 사회와 공정한 수사경찰을 기대하는 일반 국민

○ 경찰 인원의 약 25%를 차지(약 3만 3,000명)하는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수사경찰

□ 기대효과

○ 국민중심 수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 제고

○ 수사권 개혁 이후 경검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책임수사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 경찰수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정확하게 밝혀내는 책임있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위상 확립

○ 신종·최첨단 범죄 등 현대범죄 특성에 맞는 통계원표 개선, 이에 따른 항목·수법 추가 및 분석기능 강화 등「범죄통계시스템」고도화를 통해 과학적 수사정책 수립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범죄수사활동(II-1-재정①, ②)		
합계		2,386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 수사지원(311) ※ 舊 범죄수사 역량강화, 현장수사활동	일반회계	2,352
② 수사업무 정보화(1232)		
■ 형사사법업무전산화(512)	일반회계	3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25%)	-	-	100	90	①수사예산 확보 노력도(50%) ②국민 수사기여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25%) ③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노력도(25%) ※ '22년 실적치를 반영, 세부지표 점수표를 상향하는 등 현행화한 만큼, 전년과 같이 '90점 이상'을 23년 목표로 설정	예산 확보 수준, 관련 예산 집행률, 관련 사업 진척도 <지표1>	관련 공문 / 보고서 / 디브레인회계시스템 등

②전문 수사 인력 확보(명) (13%)	-	100점	100점	100점	①자격관리제도 중 전임수사관 선발인원(50%) ②변호사 경력경쟁채용 확대(50%) ※ 이전 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전임수사관 인원, 수사분야 경채자 <지표1>	수사분야 경채자, 전임수사관 선발 명단(공문)
③전문 수사인력 양성(명) (12%)	-	92점	100점	100점	① 전문·심화 교육 수료 인원 - 전문·심화교육의 중요성 및 환경 의존성을 감안하여 전 3개년 평균 대비 90% 이상 수료를 목표로 설정(60%) ② 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 - 책임수사 실현의 주요한 요소로서 과·팀장에 대한 전문 수사교육 또한 그 중요성 및 환경의존성 고려하여 전년 대비 90% 이상 수료를 목표치로 설정(40%)	수사연수원 전문·심화과정 수료 인원, 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 <지표2>	'23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훈련 결과 통보(공문), 과·팀장교육 수료인원(공문)
④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만족도 조사 (25%)	67.8점	64.4점	67.1점	69.7점	최근 3년간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은 66.4점이며, 3년 평균 대비 5% 향상 수치인 69.7점을 목표로 추진	항목별 100점 만점 환산 후 평균값 도출	KICS 사용 全 경찰관·직원 대상 풀넷 및 이메일 조사 (최근 1년 사용자)
⑤경검 협력관계 및 책임수사시스템 안착 위한 실무 상담·제도 연구 (12%)	신규	신규	신규	14.4	①경검 협력 실무 상담·지원 등 개선 필요 사례 대응(25%) ②현장 간담회 등 개최, 정책 추진(28%) ③검경 협력 및 책임수사시스템 안착 위한 수사제도 연구, 검토보고서 작성(33%) ④수사 역량 강화 수사 실무 참고자료 내부망 연재, 책자 발간(14%)	{(경검관계 실무 상담)+(현장 방문 및 간담회)+(정책 추진 및 수사제도 연구)+(수사실무 참고자료 발간)}×0.1	공문, 계획서, 보고서, 연구결과서, 내부망 연재, 책자 등
⑥수사권 개혁에 따른 국민 중심 경찰 수사의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13%)	신규	신규	신규	11	①전문가(언론·법조인·학자) 면담, 유관기관 예방(45%) ②외부강연, 학술세미나 등 개최·발제·참석(55%)	{(전문가 면담 및 유관기관 예방)+(외부강연 및 세미나 등)}×0.1	공문, 계획서, 보고서, 등

< 지표1>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 **설정 배경** : "현장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수사활동 지원 예산 확보 노력도 ▵국민 수사 기여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 ▵수사부서 조사환경 조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측정 산식** : ①수사예산 확보 노력도(50%) +②국민 수사기여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25%) + ③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노력도(25%)

○ **'23년 목표산출** : '22년 적극적인 목표치로 설정한 지표이며, '22년 실적치를 반영하여 각 세부 지표의 점수분포표를 상향하는 등 조정한 만큼, 전년과 같이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을 '23년 목표로 선정

※ 최근 4년 동안 '90점 이상' 달성한 해는 '21년, '22년으로 적극적 목표치임(''19년 72.5점, '20년 85점, '21년 100점, '22년 점)

① 책임 수사 강화 예산 확보 노력도 (50%)

(개요) 현장 수사활동 지원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 증액에 대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노력도 및 반영 성과를 지표로 선정

(산출방법) 예산 확보 및 성과를 점수표에 맞춰 산출 후 점수분포표에 맞춰 점수 부여

※ 현재 수사운영지원담당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 세부사업인 '수사지원', '형사사법업무전산화'를 기준

[항목별 배점표]

구분	예산 확보 노력도	신규 사업 반영	기존 사업 증·감액 ※ 정부안 기준		
기준	국회·기재부 방문 설명 ※ 계장 이상	신규 세부사업 정부안 반영 시	5% 이상 증액	5% 미만 증액	전년동 또는 감액
점수 ※방문횟수·사업당	1	4	2.5	1	0

[컨설팅 내용 및 수정·반영 사항]

▸(금현섭 위원) 세부사업의 규모를 알지 못하지만 5억이라는 특정 규모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호

⇒ 5억이라는 특정 규모를 중심으로 점수를 나누지 않고, 신규 세부사업 정부안 반영 시 사업 건수당 4점으로 지표 수정

<점수분포표>

구 분	50점	47.5점	45점	42.5점	40점
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	45점 이상인 경우	42점 이상~ 45점 미만	39점 이상~ 42점 미만	36점 이상~ 39점 미만	36점 미만

※ 위 점수표로 계산 시 '18년은 40점, '19년 38점, '20년은 41.5점, '21년은 61점, '22년은 48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5년 평균치 45.7점를 고려, '45점'(전년 40점 이상)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분포표 설정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40	38	41.5	61	48
예산 확보 노력도(1회당 1점)		11*1=11	12*1=12	6*1=6	9*1=9	15*1=15
신규사업 반영	5억 이상(사업당 5점)	3*5=15	1*5=5	2*5=10	3*5=15	1*5=5
	5억 미만(사업당 3점)	3*3=9	2*3=6	2*3=6	3*3=9	4*3=12
기존 사업 증·감액	5% 이상 증액(사업당 2.5점)	2*2.5=5	6*2.5=15	7*2.5=17.5	10*2.5=25	6*2.5=15
	5% 미만증액(사업당 1점)	0	0	2*1=2	3*1=3	1*1=1

② 국민 수사 기여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 (25%)

(개요)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수사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인 '검거보상금·참고인여비' 집행률을 지표로 선정·관리

(산출방법) (검거보상금 집행액 / 배정액)×0.5 + (참고인여비 집행액 / 배정액)×0.5

<점수분포표>

구 분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집행률	91% 이상	90% 이상 ~ 91% 미만	89% 이상 ~ 90% 미만	88% 이상 ~ 89% 미만	88% 미만

※ 최근 5년간 실적치가 '18년 88.4%, '19년 86.2%, '20년 91.9%, '21년 94.4%, '22년 97.2% 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5년 평균(91.62%)치를 고려 92%를 만점(전년 97.2% 점)으로 하여 점수분포표 설정

[컨설팅 내용 및 수정·반영 사항]
▸(금현섭 위원) 긍정적인 지표로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도 추가적으로 고려되면 좋을 듯
⇒ 조기집행률을 평가지표로 구현하기가 어렵고, 특히 검거보상금 및 참고인여비는 조기집행보다는 연중 고르게 배정되어야 적정하므로, 수정 필요 없음

③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노력도 (25%)

(개요) 변화된 형사사법구조에 맞춰 경찰수사의 완결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함께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필요, 수사부서 조사환경 완료를 지표로 선정·관리

* 사무·조사공간의 분리, 통합수사당직실 및 호송차고 설치 등 수사부서 내 사무실, 조사실 등 물리적 환경의 인권친화적 개선을 의미함.

(산출방법) '23년 12월말, 기준 수사부서 조사환경 완료(완료 예정) 경찰서 수*

*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물리적 업무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세부사업인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사업'이 전국 경찰서 단위로 진행 중이므로, 23년 실제 개선 완료된 경찰서 수를 평가지표로 측정함.

<점수분포표>

점수	25	22.5	20	17.5	15
사업완료 관서	26개 이상	24개서 이상 ~ 26개서 미만	22개서 이상 ~ 24개서 미만	20개서 이상 ~ 22개서 미만	20개서 미만

※ 최근 5년간 '사업 완료 관서 수'가 '18년 14개서, '19년 19개서, '20년 22개서, '21년 32개서, '22년 35개서로, 5개년 평균치(24.4개서) 및 편성예산 유보금액을 고려, 26개서를 만점으로 하여 점수분포표 설정

[컨설팅 내용 및 수정·반영 사항]

▸(금현섭 위원) 수사환경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식에 대한 설명 필요

⇒ 수사환경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식에 대한 설명 추가(빨간색)

▸(박미랑 위원) ▵유치장 환경개선뿐 아니라 언어적 관행을 넘어서려는 인권친화적 수사 언어 교육 필요, ▵소수자 편하게 수사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수사기획과의 유치장 환경개선과 중복됨

⇒ 언어적 관행을 넘어서려는 인권친화적 수사환경개선, 소수자가 편하게 수사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개선은 현재 수사인권담당관에서 진술녹음·영상녹화제도 등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정 필요 없음

< 지표 2> 전문수사인력 확보

○ 설정배경 : 수사실무자의 수사역량을 제고 하기 위한 전임수사관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률 전문인력인 변호사에 대한 채용 확대를 종합하여 지표로 산정

○ 측정산식 : 자격관리제도 중 전임수사관 선발인원(50%) +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확대(50%)

구분	50점	47.5점	45점	42.5점	40점	37.5점	35점
① 자격관리제도 중 전임수사관 인원(50%)	전년인원대비 90% 이상 확보	88% 이상 90% 미만	86% 이상 88% 미만	84% 이상 86% 미만	82% 이상 84% 미만	80% 이상 82% 미만	80% 미만
구분	**50점**	**47.5점**	**45점**	**42.5점**	**40점**	**37.5점**	**35점**
②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확대(50%)	전3개년 평균대비 10%이상 확대	8% 이상 10% 미만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2% 이상 4% 미만	0% 이상 2% 미만	감소

○ '23년 목표산출 : ① '21년「자격관리제」본격 추진으로 처음 도입되는 전임수사관 선발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의 30% 조기선발을 위해 적극적인 목표 설정

※ '22년에는 전임수사관 3,160명을 처음 선발하였고 올해에는 전임수사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은 '14년 상반기 최초 선발한 이래, 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목표치인 10% 확대를 목표로 설정함

[컨설팅 내용 및 수정·반영 사항]

▸(금현섭 위원) 전문수사인력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경찰서별 전문인력의 균형적 배치도 중요

⇒ 전문인력이 전국에 균형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함. 다만, 성과지표 특성상 계량(수치)화할 수 있어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경찰서별 치안여건이 상이하여 해당 경찰서에 몇 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계량(수치)화하기 어려움. 지표 관리·평가상 위원님의 의견을 성과지표에 반영하기 힘든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참고사항) 현재 전임수사관은 경찰청에서 수사부서 인력,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시도청에 T/O를 배정하면 시도청별로 선발하고 있는데, 위원님을 말씀을 참고하여 전임수사관이 경찰서 단위까지 균형감 있게 선발(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히 관리할 계획이고,
변호사 경력경채는 경찰청에서 일괄 선발 후 정책적으로 치안수요가 많은 수도권·광역시에 집중 배치 중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람(배치 시 대상자로부터 희망 근무지 고려)

< 지표 3 > 전문수사인력 양성

○ 설정배경 : 전문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사교육의 내실화 및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팀장을 포함한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

○ 측정산식 : 수사연수원 전문·심화 교육수료 인원(60%) + 과·팀장 교육 수료인원(40%)

구분	60점	58점	56점	54점	52점	50점	48점
①수사연수원 전문·심화교육 수료인원(60%)	前 3개년 평균대비 90% 이상 수료	88% 이상 90% 미만	86% 이상 88% 미만	84% 이상 86% 미만	82% 이상 84% 미만	80% 이상 82% 미만	80% 미만
구분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30점**	**28점**
②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40%)	전년 대비 90% 이상 수료	88% 이상 90% 미만	86% 이상 88% 미만	84% 이상 86% 미만	82% 이상 84% 미만	80% 이상 82% 미만	80% 미만

○ '23년 목표산출

① 전문·심화 교육 수료 인원

- 전문·심화 교육과정은 전문 수사인력 양성에 가장 주요한 요소임에 의의가 있어, 전 3개년 평균 전문·심화 교육수료 인원 대비 90% 이상 수료를 목표로 설정(60%)

② 과·팀장 교육 수료인원

-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과·팀장에 대한 전문 수사교육 또한 그 중요성 및 환경 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90% 이상 수료를 목표치로 설정(40%)

○ 이전 수치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①수사연수원 전문·심화교육 수료 인원	2,240명	1,053명	1,391명	2,468명
②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	-	405명	785명	776명

< 지표4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만족도 조사

○ 설정배경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全 경찰관·직원 대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를 설문 조사를 통해 정량화하여 평가

○ 측정산식 : 항목별 100점 만점 환산 후 평균 값 도출

■ 설문 조사 대상 선별 및 설문 항목

- **(설문조사 대상)** 최근 1년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사용한 全 경찰관·직원
- **(설문항목)**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처리 속도, 주요 기능 만족도, 사용 편의 개선 노력도 등 20문항 내외의 설문항목 설정

<'22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만족도 조사 항목>

1	실제 업무프로세스가 KICS에 얼마나 적절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안정적 운영(장애 발생요인 사전 조치, 시스템간 연계 처리 등 안정적 IT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사용(조작)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KICS 사용으로 전반적인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	화면구성(메뉴위치 및 화면 디자인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8	운영관리 직원들의 응대 친절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데이터 처리속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9	기능개선 및 건의사항 등과 관련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5	KICS의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매뉴얼(설명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0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KICS 사용 만족도 수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 '23년 목표산출: 최근 3년간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은 66.4점이며, 3년 평균 대비 5% 향상 수치인 69.7점을 목표로 추진

* '23년도 68.4점 목표치 달성 후 목표치 재조정

[컨설팅 내용 및 수정·반영 사항]

▸(금현섭 위원) (KICS만족도조사 관련) 설문 척도가 동일하다면(5점, 7점) 굳이 환산할 필요가 없어 보임

⇒ (수정필요없음) 만족도 조사는 매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만족도 지표의 일관성 유지 및 향후 설문 선택지의 추가·수정을 대비하여 점수를 환산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지표의 계량화 기준을 확보 할 수 있음

< 지표5 > 경검 협력관계 및 책임수사시스템 안착 위한 실무 상담·제도 연구

o **지표 설정의 적절성**

-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화로 단계별 처리절차에서 현장 혼선, 기관 간 의견 대립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례 취합 및 제도 개선 필요
- 현장에서 시행되는 절차·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검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향상 및 국민의 편익 증진
-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의 안착을 위한 수사 제도 연구 및 개선 보고
- 책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선 수사 경찰의 핵심 법률지식 구축 필요

o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 [①+②+③+④] × 0.1**

① 경검 협력관계 실무 상담·지원 및 서류검토 등 개선 필요 사례 대응
(목표치 36점 : 실무관행 개선 상담 및 서류검토 등 대응 1회 2점)

② 권역별 현장 방문 및 현장 자문단 초청 간담회 등 개최, 개선 정책 추진
(목표치 40점 : 현장 방문 및 초청 간담회 1회 5점, 개선 정책 추진 1회 10점)

③ 검경 협력관계 및 책임수사시스템 안착 위한 수사제도 연구, 검토보고서 작성
(목표치 48점 : 연구 및 검토보고서 1회 3점)

④ 수사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 실무 참고자료(가칭 '책임수사 핵심법률지식') 내부망 연재, 책자 발간(목표치 20점 : 내부망 연재 1회 5점, 책자 발간 1회 10점)

[컨설팅 내용 및 수정·반영 사항]

▸(금현섭 위원) 책임수사시스템 안착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나 실제 안착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개발도 필요

⇒ 수사구조개혁계 소속으로 연구관을 두고 있어 제도 연구 자체가 업무에 해당하며, 책임수사시스템 안착을 획일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건수사기일·보완수사요구 비율 등 개별적인 내용은 각 정책 부서에서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지표 6 > 수사권 개혁에 따른 국민 중심 경찰 수사의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o 지표 설정의 적절성

-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 증진을 목표로 경검 협력관계 및 책임수사시스템을 안착시키고, 경찰 수사가 발전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제·개정 법령의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법조계 및 수사제도개선 연구가 진행되는 학계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소통 노력 전개

o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 [①+②] × 0.1

① 전문가(언론·법조인·학자) 면담, 유관기관 예방
(목표치 50점 : 전문가 면담·유관기관 예방 1회 5점)

② 외부강연, 학술세미나 등 개최·발제·참석
(목표치 60점 : 학술세미나 개최 1회 15점, 외부강연·학술세미나 발제 1회 10점, 학술세미나 참석·지원 1회 5점)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예산 확보 수준, 관련 예산 집행률, 관련 사업 진척도	90점	정량	산출	
		전문 수사 인력 확보	- 전임수사관 인원, - 수사분야 경채자	100점	정량	산출	
		전문 수사인력 양성	- 수사연수원 전문·심화 과정 수료 인원, - 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	95점	정량	산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항목별 100점 만점 환산 후 평균값 도출	69.7점	정량	산출	
		경검 협력관계 및 책임수사시스템 안착 위한 실무 상담·제도 연구	{(경검관계 실무 상담)+(현장 방문 및 간담회)+(정책 추진 및 수사제도 연구)+(수사실무 참고자료 발간)}×0.1	14.4	정량	산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국민중심 경찰 수사의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전문가 면담 및 유관기관 예방)+(외부강연 및 세미나 등)}×0.1	11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경찰 수사 전문역량 제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04-3)

성과목표Ⅱ-3 국민 중심 교통정책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1) 주요 내용

○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자율주행로봇 ▵개인형 이동장치 ▵고령운전자 증가 등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 관련 법·제도 개선**

○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를 정립하고, 안전과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교통 규제·인프라 구축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보행자·고령자·음주운전자 등 **주요 취약요인별 맞춤형 대책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견인**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민 중심 교통정책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교통문화지수**
관리과제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등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지수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
	국민 중심의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최근 3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 최근 3년 대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교통문화지수	78.9	80.8	81.1	82.4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0.2) 및 과거 추세를 기준으로 예측한 값(82.4) 고려, '23년 목표치는 전년보다 1.3%p 높은 82.4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교통문화 지수 (국민의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지표를 관측·설문·문헌조사로 지수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교통안전공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교통 관련 제도는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로,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수용도 제고·공감대 형성 필수

○ 우리나라는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높은 상황**

※ **(OECD 평균 기준)**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3배(5.9명)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5배(2.1명) △보행사망자 점유율은 1.9배(18.0%)

– **R&D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 마련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 및 협력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해소**

(4) 참고자료

○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 대통령실)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홈페이지(www.kcsi.go.kr)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홈페이지, 2019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22년판)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도로교통공단)

○ 2023년 교통·물류·항공 산업 전망(한국교통연구원)

○ 2022 고령자 통계(통계청)

23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

□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교통수단의 등장 등 **일상 속 교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

○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극 대응】

○ **(제1종 보통(자동)면허 도입)** 제2종 보통면허와 같이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신설**하여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

※ '22년 하반기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과제 선정(대통령실)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75.8%가 제1종 보통(자동)면허 도입에 찬성(한국 ITS학회, '22년)

– ▵법적 근거 마련 ▵예산(시험용 차량 교체) ▵인력 등 확보 추진

○ **(이륜차 면허시험 강화)** ▵문제은행 문항 확대(500문항→800문항) ▵문제 유형(그림·동영상 등) 다양화 ▵제1·2종 보통면허 시험에도 이륜차 문항 추가 등 **학과시험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의식 제고

※ 현재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 운전면허 취득이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어 제1·2종 보통면허 학과시험도 강화 필요

※ 중장기적으로 이륜차 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코스) 강화 추진

○ **(자율주행로봇)**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인 **자율주행로봇이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도교법을 개정**하여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 보도를 통행하는 **자율주행로봇의 속도·무게 등 안전기준을 규정**(도교법 시행규칙)하여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

※ 현행 도교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 등 보행자 도로 통행 불가

※ '22년 50대 경제규제혁신 과제 선정(기재부), 로봇산업 로드맵 2.0 과제(산업부)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모습】






○ **(차량 관련 정의규정 정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현실에 맞도록 정의 규정 정비 필요**

– 차마의 일부인 **우마(牛馬)를 삭제하여 차에 편입**하고, **자동차의 범주에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규정

※ **(건설기계 포함)** 현행 도로교통법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10종만 자동차 관리

○ **(신규취득자 교육체계 개선) 신규 면허취득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체계 개선안 검토**

✓ **(신규취득자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면허시험 응시 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1시간의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선 필요성)** 1시간짜리 교육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49개 주제)을 다루고 있어 교육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국감·국회에서도 주요 관심사항

※ 신규취득자 교육시간·시점·방법 등 교육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개선 검토안' 마련**

※ 관계기관(학계·산업계 등) 협의, 안전 실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종합 검토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교육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예정(도로교통공단)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종합대책 마련 및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회 공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이행실적 점검·신규과제 발굴 및 정례회의 진행(年 2회)

✓ **(협의회)** 민·관·학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경찰청(교통기획과)은 간사 역할

✓ **(종합계획)** 경찰청은 총 34개 세부과제 중 12개 과제 담당

○ **(고령운전자 표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표지 제작·배포**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前('23.7월)까지 하위법령 개정(표지 디자인 제작) 및 세부 운영계획 등 수립·시행 추진

○ **(조건부 운전면허) 첨단기술(VR)을 활용해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면허에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추진**(R&D 수행 중, ~'24년)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능력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 **(R&D)** △연구명: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평가 시스템 개발 △기간: '22.4월~'24.12월 △연구기관: 서울대 등 △내용: 평가시스템 개발, 조건부과 기준 마련 등

○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면허반납 고령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 및 **대체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협의 추진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브(교통카드·상품권·현금)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진행

※ (국고보조금) 1인당 10만원 = 경찰청 3만원(30%) + 지자체 7만원(70%)

※ **(예산 증액)** '23년 18억(6만명×3만원) → '24년 90억(9만명×10만원)

※ **(대체교통수단)** 교통·지리적 여건에 따른 자진반납 및 교통사고 현황 등을 분석·공유하여 국토부·지자체와 100원 택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확대 적극 협의

– 사업실적 공유 및 향후 사업방향 논의 등 **경찰청·지자체 간 상호 협업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권역별 간담회 실시**

【국민 편익 향상 및 이동권 보장】

○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 **SNS와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및 사용처 확대 지속 추진

※ 현재 정부24, 금융기관, 공유자동차 서비스, 편의점 등 43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 **(해외거주민 편익 향상)**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류하지만,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추진**

✓ **(영문운전면허증)**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를 확대('21년 54개국 → '22년 64개국)

✓ **(국제면허운전면허)** 우리 국민 이동권 확대를 위해 외국과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 추진 중으로, 현재「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협의 中

○ **(운전면허 시스템 고도화)** 금융권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면허 진위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 예방을 위한 선행 조치 필요**

※ **(진위확인)** '19년 8,306만건→'20년 10,814만건→'21년 13,656만건→'22년 28,176만건

– 국민들에게 서버오류 등 없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서버분리)** 기존 정부기관 등과 연계된 운전면허 서버에서 금융기관(63개)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별도 분리하여 시스템 부하 분산

✓ **(이중화)**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소실 및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버를 이중화하여 안정적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이동권 향상)**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 **장애인 면허 교육·취득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

※ 전국 12개 지역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교육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23년 중 1개 지역에 지원센터 추가 개소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배부 등 법적 근거 마련	1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권역별 간담회	2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조금 교부	3월	
2/4분기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기재부 중기예산 협의	4월	
	제1종 보통(자동)면허 신설계획 수립	5월	
	대체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지자체 등 협의	5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R&D 중간 점검	6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개최	6월	
3/4분기	고령운전자 표지 하위법령 개정(표지 제작) 및 추진계획 보고	7월	
	포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	8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확대	8월	
	신규취득자 교육체계 개선안 마련	9월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가 고시	9월	
4/4분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고도화	10월	
	자율주행로봇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추진	11월	
	이륜차 운전면허시험(학과시험) 강화	11월	
	차마 관련 도로교통법상 정의 규정 정비 추진	12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개선 검토안 마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 집단: 특이사항 없음

□ 기대효과

○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

○ 고령운전자, 장애인 등 운전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지원

○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정부혁신과 국가간 인적 교류 증대에 따른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교통사고예방(1331)	일반	(2,947)	(2,947)
■교통안전활동(312)		454	420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330-01)		18	18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교통행정 전산화(1332)		15.6	12.6
■전산시스템 보강(511)		4.4	5.68
- 운전면허 진위확인시스템 보강		-	1.89(순증)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0	실적 '21	실적 '22	목표치 '23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등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50%)	신규	126	173	242	‣ 교통기획과는 법령 등 제도개선과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대국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부서임 ‣ 이에, 교통기획 업무로서 법령개선, 유관기관 협업, 외국과 면허 상호주의 등 노력도를 점수화하여 지표로 설정	① **(법령개선)**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 건당 배점 법률 5 / 대령 3 / 부령 2 / 지침등 1 ※ 전부개정의 경우 가중치(300%) 부여 ② **(기관협업)** 부처별 협업 사항에 대해 기관별 배점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 성과지표 상승세(+37%)를 고려, 이보다 상향된 40% 증가를 목표로 제시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외국기관 / 민간기관 / 정부기관 / 타 국관 = 5 / 3 / 2 / 1 → ①, ②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실적 측정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만 명당) (40%)	1.96 1.77 1.68	1.55	‣ 지난 3년간 고령운전자(65세↑)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은 –9.7%('20→'21년), –5.1%('21→'22년)로, 평균 –7.4% 감소함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추세치 7.4% 감소보다 상향된 8.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 ÷ 총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 × 1만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10%)	신규 신규 3,182	3,500명	‣ '22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3,182명) 대비 10% 상향한 3,500명으로 설정	전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	도로교통공단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	①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등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① **(법령개선)**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 건당 배점 법률 / 대령 / 부령 / 지침등 = 5 / 3 / 2 / 1 ※ 전부개정의 경우 가중치(300%) 부여 ② **(기관협업)** 부처별 협업 사항에 대해 기관별 배점 외국기관 / 민간기관 / 정부기관 / 타 국관 = 5 / 3 / 2 / 1 → ①, ②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실적 측정	242	정량	산출	국회의 안정보 시스템
		②고령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사망자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 ÷ 총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 × 1만	1.55	정량	결과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③장애인운전지원센터 교육실적	전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	3,500명	정량	결과	도로교통공단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정 69-1)

24 국민 중심의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교통안전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 그중 **보행자 안전이 매우 저조**

※ '20년 기준,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5.9명) ➡ OECD 평균(4.7명)의 1.3배 / 10만명 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2.1명) ➡ OECD 평균(0.8명)의 2.5배

– '22년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6.3%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의 비율은 34.2%로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

* '21년 2,916명 → '22년 2,731명(잠정) <185명 감소>

** 보행사망자 점유율은 OECD 평균 18.0%('20년)의 1.9배

○ **도시부 속도규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규제**로 교통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 (보행자 사망) '20년 1,093명 ➡ '21년 1,018명(6.9%↓) ➡ '22년 934명(8.3%↓)
(어린이 사망) '20년 24명 ➡ '21년 23명(4.2%↓) ➡ '22년 18명(21.7%↓)

– 다만, **규제강화에 따른 국민불편** 감안,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안전과 편의 조화 도모

○ 과속·신호위반 외에 이륜차 법규위반과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한 무인단속 요구가 증가**하고,

– 자율차 기술개발 가속화 및 도로상의 실험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선제적 제도·기술 정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

①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

– **(시·종점 신규시설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제고**를 위해 '**시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 도입**

–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준수율* 제고**를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과 관계없이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부과('22. 7. 12. 시행)

② 교통약자 보행안전 환경 구축

– **(마을주민보호구간 도입)**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마을 주민보호구간* 도입**을 위해 도로교통법 상 **법적 근거 마련**

* 마을 주변 일정 구간 설정 → 속도하향 및 시설확충('15년부터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장소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운영**

* 도로교통법·보행안전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제도로 도입('22. 7. 12. 시행)

※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 △차량 통행속도 20km/h 이내 규제 가능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도입】

① 안전한 ICT 첨단교차로 조성을 위한 표준모델 마련

– **교차로 안전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최적의 안전교차로' 조성** 표준모델 제작·배포,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시범사업지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적격성·효과성 등 검증 후 표준모델 확정·배포

< ICT 첨단 교차로 내 주요 시설물 >

-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활주로형 표지병, 투광기 등 횡단보도 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보조장치를 통합 설치
- **(차량·보행자 위험안내)** 차량과 보행자 간 상호 접근을 감지, 접근정보를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스피커, LED전광판 등으로 표출
- **(보행신호 자동연장)** 보행신호시간 내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감지하여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최대 10초)

②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센터연계 중앙제어방식 규격 제정

– **現 중앙제어방식**은 **他 지역의 긴급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아** 경찰청–소방청 間 연계시스템 구축 → 시범운영 후 규격 제정

※ △규격(안) 배포 △경기도 내 7개 市 시범운영 결과 토대로 최종 규격 제정

③ 차량신호등 用 잔여시간 표시장치 도입 검토

- ▵국민·교통전문가 의견수렴 ▵해외사례 분석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검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화 추진과제로 선정(대통령실, '22. 12. 29.)

【국민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는 탄력적 속도규제 시행】

① 도시부 탄력적 속도규제 추진

-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은 제한속도 상향**(50 → 60 km/h) 등 탄력적 조정 추진

- 속도상향 완료 구간에 대한 효과분석(연구용역) 실시, 분석결과를 토대로 **속도상향 기준 보완 후 '속도 매뉴얼' 개정**

②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규제 합리적 개선

- 제한속도 30km/h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별·시간대별 등 교통환경에 따라 탄력적인 속도규제 추진**

- 현재, 진행 중인 시범운영(11개소)* 및 연구용역**을 토대로 **탄력적 속도규제 방안 마련 후 전국 확대 추진**

* ▲간선도로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 하향 시범운영(2개소, 평상시 40~50m/h → 가변시 30~40km/h) ▲야간시간대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9개소, 평상시 30~40km/h → 가변시 40~50km/h)

** 탄력적 속도규제 운영방안 마련('22. 6월 ~ '23. 6월, 도로교통공단)

【무인단속장비 기능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① 신규 무인단속장비 기능 개선 및 확대 보급

- **(기능 개선)** 신규 도입('21~'22년) 속도위반 단속 장비에 버스전용차로 통행 단속기능 추가 등 고도화* 추진

* (차량탑재형) '이륜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통행 단속' (후면) '안전모 미착용 단속' 단속 기능 추가

- **(확대 보급) '후면 무인단속장비' 시범 사업**(5개청)을 통해 시도청별 **이륜차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 유도**

※ 이륜차 교통사고 등 고려, 5개 시도청에 5대씩 총 25대 설치

② 영상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무인단속장비 개발

– **(신규 장비 개발)** 무인단속장비 R&D* 과제와 연계,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위반행위를 기계에 의한 자동화된 단속으로 전환 추진

※ 교통정체 유발 무질서 행위인 '꼬리물기 위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단속장비 개발

* 공공연구성과실용화사업(과기부·경찰청 주관) R&D 과제로 추진 중('22.7월~)

< 추진 일정 >

1단계('22.7월~'23년)	▶	2단계('24~'25년)	▶	3단계('26년~)
신규 무인단속장비 개발		시범운영 및 효과 평가		시도청·지자체 협조, 확대 설치

–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의 교통안전 성과를 분석, 단속장비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무인단속장비 R&D 과제 추진 시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 개선 병행

③ 무인단속장비 관련 법·제도 정비

– **(규격·업무편람 개정)** 신규 장비 시범운영 결과 검토 후 **무인단속장비 규격 개정, 개정 법령 등 반영한 업무편람 개정**

– **(법령 정비)** 무인단속장비 설치·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

* 도로교통법 제4조의2 개정('23. 7. 4.시행) 관련 시행규칙 정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첨단인프라 구축】

①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따른 법·제도 개선 추진

○ **(도로교통법 개정)** '21년 Lv.3 자율주행 대비 1차 도교법 개정이 완료되었으나, **Lv.4 상용화에 대비한 추가 법령 개정 필요**

○ **(법·제도 개선 로드맵 수립)** 旣 수립되었던 자율주행 로드맵*에 기술 전망 등을 반영, 정책 방향성을 정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종합대책」('19년, 경찰청),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21년, 관계부처 합동)

② Lv.4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R&D 사업 추진

○ **(개요)** 통합관제시스템, 교통안전 인프라 기술개발 등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R&D 사업('23년 223억원) 추진

* 경찰청(13개 과제),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 **(신규과제)** '23년 신규과제로 △자율차 교통사고 분석기술 개발, △레벨4 자율차 운전능력평가기술 개발 연구 착수 예정(4월)

○ **(통합실증)** 경찰청 자율주행 연구과제 간 연계·현장검증을 위해 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통합하여 실증

* 실증 :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을 시범 적용하여 시연 및 검증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무인단속장비 설치·관리기준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월	
	‣ 차량신호등 用 잔여시간 표시장치 국민대상 설문조사	3월	
	‣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계획 수립	3월	
	‣ 이륜차 후면 단속장비 시범운영 추가 설치장소 선정(총25개소)	3월	
2/4분기	‣ 자율주행 경찰 중장기 로드맵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	4월	
	‣ 자율주행 R&D 신규과제 선정 및 착수	4월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센터연계 중앙제어방식) 규격(안) 배포	5월	
	‣ 도시부 탄력적 속도규제 연구용역 발주	5월	
	‣ 차량신호등 用 잔여시간 표시장치 의견수렴 및 교통안전심의위 상정	6월	
	‣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규제 운영방안 결과 보고	6월	
3/4분기	‣ 자율주행 경찰 중장기 로드맵 관련 유관기관 토론회 등 추진	8월	
	‣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규제를 위한 업무편람 등 개정	9월	
	‣ 자율주행 경찰 중장기 로드맵 제작 완료 및 배포	9월	
	‣ 무인단속장비 업무편람 개정안 마련 및 시도청 의견수렴	9월	
4/4분기	‣ 이륜차 후면 단속장비 시범운영 설치	10월	
	‣ 순찰차 탑재형 장비 기능 개선 및 시범운영	10월	
	‣ 도시부 탄력적 속도규제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매뉴얼 개정	11월	
	‣ ICT 기반 첨단교차로 조성 표준모델 제작·배포	11월	
	‣ 차량신호등 用 잔여시간 표시장치 시범운영 추진	12월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센터연계 중앙제어방식) 효과분석	12월	
	‣ 무인단속장비 업무편람 개정·배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全 국민

□ 기대효과

○ ▵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도입으로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심각도*'를 현격히 감소

* 사상자별로 상해 피해와 손실 정도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된 인명피해 심각도를 차량등록 대수로 나눈 수치

○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보행자 존중문화 형성

○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첨단인프라 구축·제도 개선으로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60%)	0.137	0.121	0.111	0.098	‣지난 3년간 매년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평균 11.1% 보다 상향된 11.7%를 감소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지난 3년간 심각도 감소율은 '19년 대비 20년 13.3%, 20년 대비 21년 11.7%, '21년 대비 '22년 8.3% 감소로 평균 11.1%의 감소율을 보이며, 평균 감소율을 상회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목표치임	(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12) * 교통사고 심각도지수 =[(273×사망자수)+(32×중상자수)+(2×경상)+(1×부상)] / 차량등록대수 * 사망·중상·경상·부상자 수는 前3년의 경우 매년 1.1~12. 31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하고, 당해년도는 1.1~10.31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 * '22년 심각도는 교통사고 사상자수 잠정통계 기반임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40%)	2.1	1.9	1.8	1.6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는 19년 대비 20년 16.0%, 20년 대비 21년 9.5%, 21년 대비 22년 5.3% 감소하여 평균 10.3%의 감소율을 보임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 평균 추세치 10.3% 감소보다 상향된 11.1%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여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중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인구÷100,000) * '22 보행자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잠정통계임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60%>	(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12) * 교통사고 심각도지수 =[(273×사망자수)+(32×중상자수)+(2×경상)+(1×부상)] / 차량등록대수	0.098	정량	산출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율 <40%>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중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인구÷100,000)	1.6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 공감받는 교통안전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정과제 69-1)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정과제 28)

25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 추진배경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20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5.9명으로 OECD 36개국 중 29위

○ 특히, **보행자와 고령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보행자 사고 감소대책

○ **우회전 시 일시정지 문화 정착**

– **적신호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시행***(1.22.)에 맞춰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홍보·안전활동 강화**

*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 2], 적색 등화에는 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2. 22. ~ 5. 21.)간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가시적 안전활동 등 보행자 안전 집중관리 추진, 법규준수 유도

▸ 범정부부처 합동 전방위적 홍보 전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행자 안전 문화 확산

–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관련 **신규 시행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계도, 홍보영상 송출 및 캠페인 시행 등 **적극적인 홍보 전개**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 관계 없이 일시정지 등

○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

– **(신규시설 도입)** △보호구역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준수율* 제고를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과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22. 7. 12. 시행)

– **(우회전 신호등 정착) 우회전 신호등**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통행방법을 적극 홍보**

※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차량 신호등 도입('23. 1. 22. 시행)

–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보행사고 빈발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장소**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적극 지정·운영**

※ △차량속도 20km/h 이내 원칙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계도

○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분석, 맞춤형 대책 추진**

– **(데이터 활용)** 보행자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하여 사고다발지역 정보를 시·도경찰청 제공, 단속·시설개선 등에 활용

*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 분류하여 분석 자료 제공

– **(민간 공유)** 내비게이션 업체 등 민간에도 보행자 정보 제공, 사고다발지역 운행 시 화면에 표출하여 안전운전 유도

2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대책

○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 **(조건부 운전면허) 첨단기술(VR 등)을 활용해 운전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면허에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추진

– **(고령운전자 표지) 고령운전자 표지의 법적 근거 마련**('22. 12월 본회의 통과), **표지제작 예산 확보 및 홍보활동 전개**

– **(면허 자진반납)** 사업 시행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교부('20년~계속, 年18억원), 반납 혜택 증진 및 대체 교통수단 확대 협의

○ **유관부처 협업, 홍보·교육으로 고령자 안전 교통문화 정착**

– **(부처협업) 복지부·도로교통공단 협업**,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등 **노인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교통안전수칙 전파**

※ 노인 돌봄 전담 사회복지사 2,090명, 생활지원사 29,198명 활동 중

– **(방문교육)**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 및 이륜차 이용 많은 농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 **교통약자 보행안전 환경 구축**

– **(노인보호구역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에 '장소' 추가**, 지자체 협조하여 지정 확대

* '22. 12월 본회의 통과, 기존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시설' 외에 전통시장, 병원 등 '장소'까지 지정대상 범위 확대

– **(마을주민보호구간 도입)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마을주민보호구간* 도입**을 위해 **도로교통법 상 법적 근거 마련**

* 마을 주변 일정 도로 구간 설정 → 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15년부터 국토부 시범사업)

3 이륜차·PM 안전관리 강화

○ **주요 법규 위반 중점단속**

– 시·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협조, **이륜차(PM)의 주요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전국 집중단속 시행**

– 관서별 배달업체 간담회 개최, 배달업체별 책임 경찰관 지정 등 **배달대행 업체 협력 및 안전관리 강화**

○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응한 신규 무인단속장비 개발 및 확충**

– **후면번호판 무인단속장비 개발**, 시범운영 및 전국확대 추진

※ 3개소 시범운영 중, 올해 총 25대 추가 설치 추진

– **순찰차 탑재형 무인단속장비의 이륜차 단속기능 고도화**, 이륜차 단속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일반순찰차'에도 확대 보급 추진

※ 고순대(57대) 및 시·도청(14대) 암행순찰차 시범운영 중, '23년 40대 추가보급 추진

○ **유관기관 협업,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 **(사고다발지역 정보, 배달앱 연계·활용)** '22년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분석·보완**,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제공

* 사고정보·기상정보·교육영상 등을 제공하는 정보공유 플랫폼(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배달 플랫폼사에서 위험지역 경보를 자사 앱에 구현

– **(교육·홍보)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활용**(산업안전보건공단 협업)하여 **배달 앱에 홍보·교육 영상 제작·송출**

– **(준법운행 유도)**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업무협약, **배달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참여**

4 음주운전 근절대책

○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 **휴가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위험 시기에 맞춰 **전국 단위 일제 음주운전 단속 실시**

– **집중단속 시**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 배포 및 합동취재 협조를 통해 **언론매체 최대한 노출, 운전자 경각심 제고**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추진**

– **(도교법 개정)** 국회에 발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관련 도교법 개정안*을 중요 추진법안으로 관리, 연내 개정 추진

*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도교법 개정안(20.12.29) 등 5건 계류 중

– **(시범운영 계획)**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공급업체 간 역할·업무분장 등 시범운영 세부계획 수립·시행

5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 **고속도로 특성을 반영한 단속활동 실시**

– **(화물차 테마단속)** 사고원인과 직결되는 화물차 위반행위 합동단속 및 **사망사고 다발구간 암행순찰차 등 집중배치 단속**

– **(난폭운전 등 사전예방) 탑재형 단속장비에 야간단속 기능을 추가**하고 고속순찰차 확대 운영, **운전자 경각심 제고**

※ 탑재형 단속장비 : 총 57대(암행순찰차 40대, 순찰차 17대)

– **(시·종점 연장 구간단속 확대)** 기존 장비 이설 및 연결을 통해 **단속 구간거리를 확대**(15km이상), **과속 사각지대 해소**

※ 청주영덕·중부내륙선 2개소 시범운영 중 / 경부(3), 서해안(2), 순천완주(1), 중앙(1), 남해(1), 평택제천(1), 서천공주(1) 등 확대 검토

○ **사고예방 중심 시설개선 추진**

– **(안전터널 구축)** 터널 조명개선, 정체알림·발광형표지 설치로 시인성 향상 및 시선유도표지 조정을 통행 감속 유도

※ 시범운영 : 서울양양선 인제양양터널(11km), 함양울산선 재약산터널(8km)

– **(공사구간 안전관리) 공사 시점부 시인성 강화*** 및 **주변 속도관리 등 점검**, 관리미흡 사항 등 발견시 단속·개선조치

* 이동식 경광등 개발 및 개량형 인지매트 시점부 전진배치

⑥ 자치경찰 지역 맞춤 안전활동 지원

○ **사고 분석자료 제공**

– 매월 △분야별·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사망자 증가항목에 대한 심층 분석 △향후전망 등을 시·도경찰청에 제공, 맞춤형 계획수립에 활용

○ **우수시책 공유**

– 시·도경찰청(자치위원회) 주요정책을 전국 공유하고 우수시책 인센티브 제공

○ **현장 컨설팅**

– 사망사고 증가 시·도경찰청 대상 △사망사고 분석 △전문가 조언 △원인별 대책 제시 등 다양한 지원 활동 강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 명절 특별교통안전 관리 대책 수립·시행	1월	
	과태료 징수강화 대책 수립·시행	2월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3월	
	'22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3월	
	'23년 교통사고 감소대책 수립·시행	3월	
2/4분기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4월	
	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시행	5월	
	교통안전 지표 활용,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 진단	6월	
	2분기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6월	
3/4분기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수립·시행	7월	
	추석 명절 특별교통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9월	
	3분기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9월	
4/4분기	가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10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시행	11월	
	교통안전 성과분석 및 특진 등 포상 실시	12월	
	4분기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전체

○ 이해관계집단 : 국토부·행안부 등 유관부처 및 관계기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기대효과

○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Ⅰ-3-일반재정①)			
① 교통사고 예방(1331)	일반회계	2,930.7	2,934.5
■ 교통안전활동(312)	일반회계	453.7	420.4
■ 교통과학장비관리(313)	일반회계	1,070.5	1,16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최근 3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50%)	-8.0	-5.3	-6.2	-6.6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증감율은 -6.5%로, '23년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3년 평균 평균치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금년사망자수) - (전년사망자수)] ÷ (전년사망자수) × 100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TCS) 통계 확인
최근 3년 대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50%)	-10.4	-4.7	-4.1	-6.5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교통사고 부상자 평균 증감율은 -6.4%로, '23년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3년 평균 평균치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금년부상자수) - (전년부상자수)] ÷ (전년부상자수) × 100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TCS) 통계 확인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①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TCS) 통계 확인, 전년 통계와 비교	-6.6%	정량	결과	
		②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TCS) 통계 확인, 전년 통계와 비교	-6.5%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제적 · 능동적 제도관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정 69-1)

성과목표Ⅱ-4 대테러·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1) 주요 내용

○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책임에 걸맞은 전문성을 함양하고 탈북민 보호체계 고도화·유기적 안보상황 관리로 안보 취약요소 개선

○ **<안보수사 활동 강화>** 경제·사회 등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응, 경제안보(산업기술 유출)·공공안보(테러)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 **<첩보수집·분석역량 제고>** 대북·대테러·기술유출 방지 등 다양한 분야 첩보 수집, 전문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안정 기여

○ **<테러 대응·재난관리>** 대테러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 안전활동 전개,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함양

○ **<경호역량 강화>** △대규모 국제행사 △방한 외빈 증가 등 경호 경비 안전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 인적·물적 역량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대테러·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사회안정성 인식
관리과제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등 안보역량 강화	안보수사전문성 고도화 / 탈북민 보호체계 강화 / 현장 중심의 유기적 안보상황 관리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중요 안보사범 검거지수 / 사이버안보 대응활동 지수 /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 지수
	국내외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분석역량 제고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 /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 안보정세 분석 고도화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강화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 / 위기대응 역량지수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완벽한 경호행사로 국가안전 확보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 /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사회안정성 인식	5.2	6.2	6.0	6.4	'18년부터 3년도 실적이 5.2점을 지속 유지하다 '21년 6.2점으로 급격히 상승 후 '22년은 0.2점 하락, '22년(6.0)보다 0.4p 증가한 6.4로 도전적 설정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10점 만점)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정원법 개정으로 '24년 이후 기관 간 역할·체계 변화 예정, 대공 수사 영역에서 경찰 책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수사·첩보수집은 물론, △탈북민 보호 △안보상황 관리 전반에 걸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탈북민 신변보호)** △통일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촘촘한 연계망 구축 △통일부 및 他 기능 합동교육 등 대내외 협업을 통해 특화된 교육 전개

▸ **(안보 상황 관리)** 국정원·軍 등 유관기관 간 △주기적 FTX △공동 세미나 △합동 교육훈련 등을 실시, 다양한 안보상황 변수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국제적 안보환경 약화와 테러 위험성 고조, 북한의 군사도발 등 위험성·불확실성 증가, 경호환경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

– 본청–시도청(경찰서) 간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 위기상황 대응역량 제고

(4) 참고자료

○ 안보수사국, 「대공수사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종합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2~2024)」

○ 산업통상자원부,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www.nctc.go.kr)

○ 경찰청, 「제45호 대테러 연구집」

26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등 안보역량 강화

□ 추진 배경

○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경찰 중심의 책임안보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局 당면과제인 안보경찰 역량 강화에 동력을 결집**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3년 유예(부칙)을 두어 '24.1.1부터 시행

– 보안국 → 안보수사국 조직재편 이후 다양한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인력·예산·교육 등 **인프라 관련 중·단기 성과*** **창출**

* ▲ 연구·교육센터 신설 예산 확보 ▲ 경찰서 수사팀 131명 증원 등

○ '23년에는 **안보수사 전문성 및 수사·정보 협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경찰 중심 수사체계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신뢰도 제고에 주력**

– 또한 ▵빈틈없는 탈북민보호 활동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보다 안전한 탈북민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 국정과제 95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對北전단 살포 등 **주요 안보상황에 대해 '예방적 경찰 활동' 관점에서 면밀하게 대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 중심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

○ **안보수사 전문인력 양성**

– **(전문연구기관 설치·운영)** 수사 역량 증진의 메카가 될 연구·교육기관을 신설,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수 인재 양성

※ '23. 7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개소 예정 / 院 대공수사 전문가, 警 대공수사 우수요원, 외부강사 등 활용한 현장 중심의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운영

– **(교육시스템 고도화)** ▵국정원 특별교육(첩보수집 기법 등) 확대 ▵대공수사 전문과정 증설 등 기존 교육 과정 일체 정비

– **(수사관 역량 강화)** ▵현장수사 실무에 활용 가능한 자료집 발간 ▵책임안보수사관 선발 ▵안보수사 전문자격 통합 관리 데이터 구축 등 수사관 자체 역량 향상

▸**(안보수사 관련 실무 책자 발간)** 실제 수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 발간을 통해 안보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 '23년 10월 중 발간·배포 / 안보수사연구교육센터 교육과정 부교재로 활용

▸**(안보수사관 전문 자격 고도화)** 안보수사 근무경력 및 역량에 따른 자격 부여, '22년 '전임'안보수사관 대상으로 '책임' 안보수사관 선발

▸**(인력시스템 개선)** ▵보안경과 ▵전임·책임안보수사관 등 전문 자격을 통합 관리하는 인력데이터 구축, 안보수사 전문인력 집중관리

○ **안보유관기관 및 대내외 교류협력 체계 강화**

– **('대공 합동수사단')** 동일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요사건 집중 수사(경찰관 20명 파견), '24년 이후 정보 협력체계로 전환 준비

– **(교류협력 강화)** ▵국내·외 안보유관기관 ▵他 국·관 및 대내외 자문단 등 현장 의견수렴과 정책 환류 절차 강화

○ **경찰 책임안보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언론·홍보활동 강화**

– **(대내외 홍보 확대)** ▵출입기자 소규모 간담회 ▵안보홍보 전략회의 등 자체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 신뢰도 제고

– **(정책 이행 제고)**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콘텐츠 브랜딩 홍보' 등 시인성 높은 홍보를 통해 이행 제고 견인

【 탈북민 보호 체계 강화 】

○ **빈틈없는 탈북민 신변보호활동 전개**

– **(성실 이행도)** 신변보호관의 보호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확인 지연·누락률 최소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우수사례 발굴)** 탈북민보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 신변보호관 사기를 진작하고 탈북민보호 체계 고도화로 연결

–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 통일부, 국정원(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촘촘한 연계망 구축, 실효성 높은 보호 제도 발굴

○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내실화**

– △통일부 및 他 기능(수사·여성청소년) 합동교육 등 대내외 협업 △범죄예방 표준 강의자료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교육 내실화

▸**(정책 환류 강화)** 통일부(남북하나재단)과 협업, 범죄예방교육 만족도조사 실시 결과를 '23년 범죄예방 교육계획에 반영,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전개

▸**(他 기능 합동교육)** 수사·여성청소년 등 他 기능 합동교육 추진 실적을 '23년 성과지표 반영하여 범죄예방교육의 전문성 제고

▸**(표준강의안 개선)** △범죄 동향·수법 및 대응방안을 최신화하여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 △대상·주제별 맞춤형 교육안 제작, 현장 활용도 제고

【 현장 중심의 유기적 안보상황 관리 】

○ **선제적 안보 위해 예방**

– **(안보 취약지 점검)** △접경지역 △공·항만 △도서·해안 등 안보 취약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보 위해 상황 사전 탐지·차단

– **(즉응태세 확립)** 현장 점검결과 및 과거 대응 사례 등을 분석, 현장을 중심으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 **안정적 상황관리**

– **(공조 체계 고도화)** 안보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국정원·軍)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신속한 원인 분석·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 간첩·간첩선·의아선박·거동수상자 출현 및 탈북·밀입국자 등 발견, 적성물품 발견·습득, 폭발물·무기류, 전단 발견 등

– **(합동정보조사)** 원인 분석 및 결과, 문제점 등을 작전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적시 대응 가능토록 조치

* 경찰청 · 국정원 · 합참 · 방첩사 · 정보사 · 해경청 · 통일부 등 7개 기관 참여

○ 기타 △남북교류 행사 및 납북출입국사무소 업무지원 △각종 안보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안관찰 현장점검(1차)	1월	
	전국 안보수사과장 워크숍 개최	2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신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	3월	
	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정 개선	3월	
	경찰서 안보수사팀 특별교육	3월	
	안보수사 관련 실무책자 발간 관련 편집위원회 구성	3월	
	안보경찰 현장자문단 재정비 계획 수립	3월	
	상반기 주요탈북민 신변보호관서 현장점검	3월	
	신변보호 연장심의	3월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계획 수립·배포	3월	
	공·항만 현장점검(1,2차)	3월	
	상반기 합동정보조사요원 전문화 교육	3월	
2/4분기	보안경과 시험 대비 형사법 문제은행 발간	4월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계획 수립	4월	
	전국 신변보호관서 현장점검	4월	
	근접보안요원 교육·훈련	4월	
	상반기 공항만 안보취약요소 현장점검(1·2·3차)	4월	
	보안경과 시험 대비 '안보실무' 교재 발간	5월	
	안보수사 관련 실무책자 발간 관련 기본자료 수집	5월	
	탈북민 범죄예방 표준 강의안 개정·배포	5월	
	경찰특공대 위탁교육(1·2차)	5월	
	취약지 현장점검, 분석 및 평가(1차)	5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	6월	
	신변보호 연장심의	6월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신변위해도 평가	6월	
	근접보안요원 교육(상반기)	6월	
	무인함 현장점검	6월	
3/4분기	보안경과 역량평가 실시	7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개소식	8월	
	거주불명 탈북민 소재확인	8월	
	하반기 합동정보조사요원 전문화 교육	8월	
	안보수사 관련 실무책자 초안 감수	9월	
	신변보호 연장심의	9월	
	취약지 현장점검, 분석 및 평가(2차)	9월	
	공·항만 현장점검(3,4차)	9월	
4/4분기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책임안보수사관 선발	10월	
	보안관찰 현장점검(2차)	10월	
	근접보안요원 교육(하반기)	10월	
	안보수사 관련 실무책자 발간·배포	10~11월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 개최	10~11월	
	정착불안 탈북민 지원정책 연구 세미나 개최	10~11월	
	주요탈북민 신변보호관서 현장점검	10~11월	
	최우수 안보경찰 선발	11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교육과정평가	11월	
	북한이탈주민 신변위해도 평가(하반기)	12월	
	신변보호 연장심의	12월	
연중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교육 운영	연중 (수시)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통일부와 협업,「북한이탈주민법」 개정추진		
	(안보상황 발생시) 합동정보조사 등 분석 및 대응		
	(언론대응) 경찰청 출입기자 대상 소그룹 기자간담회		
	(정책홍보) 안보수사국 자체 안보홍보 전략회의 개최		
	안보경찰 현장자문단 소통간담회 등 정책 환류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대한민국 및 북한이탈주민, 안보경찰 등

○ **(이해관계집단)** 안보유관기관(국정원, 통일부 등)·지자체(하나센터) 및 안보자문협의회 등 협력단체

□ 기대효과

○ 경찰의 수사와 국정원 정보의 융합 시스템 구축 등 경찰 중심의 책임 안보수사 체계 확립 및 전문성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

○ 빈틈없는 탈북민보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안보 확립에 기여

○ 현장 중심의 유기적 안보상황 관리 및 취약요소 개선으로 국가안보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 colspan="2">목표치</th><th rowspan="2">'23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20</th><th>'21</th><th>'22</th><th colspan="2">'23</th></tr>
<tr><td rowspan="3">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50%)</td><td>안보수사전문성
고도화(20%)</td><td colspan="3" rowspan="3">신규</td><td>20</td><td rowspan="3">50</td><td rowspan="5">하단 참조</td><td rowspan="5">하단 참조</td><td rowspan="3">공문, 보고서 등 추진
관련 근거자료</td></tr>
<tr><td>유관기관·대내외
협력 강화(15%)</td><td>15</td></tr>
<tr><td>언론·홍보
노력도(15%)</td><td>15</td></tr>
<tr><td rowspan="4">탈북민
보호체계
강화
(40%)</td><td>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td><td rowspan="4">50</td><td rowspan="4">36</td><td rowspan="4">38</td><td>10</td><td rowspan="4">40</td><td rowspan="2">하단 참조</td></tr>
<tr><td>탈북민보호
우수사례(10%)</td><td>10</td></tr>
<tr><td>유관기관 교류
협력 강화(10%)</td><td>10</td></tr>
<tr><td>탈북민 범죄
예방교육(10%)</td><td>10</td></tr>
<tr><td colspan="2">현장 중심의 유기적
안보상황 관리 (10%)</td><td>신규</td><td>11</td><td>12</td><td colspan="2">13</td><td>분석 판단보고서,
결과보고 및 공문 등</td></tr>
</table>

○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1 책임 안보수사 체계 고도화(50%)

= 안보수사 전문성 고도화(20%)+안보유관기관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15%)+언론대응·장책홍보 노력도15%)

▶ **경찰 중심의 책임안보수사 체계 확립을 위한 안보수사 전문성 고도화**

- 안보수사 역량강화가 안보수사국의 당면과제인 만큼 안보수사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목표치의 경우 세부 관리과제별 점수 합산이 100% 이상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기조 유지

▶ **전년도 자체평가 내·외부 위원들의 의견수렴, ▵유관기관 교류협력 ▵맞춤형 홍보활동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성과에 적극 반영, ’22년 성과 보완 노력**

- ▵유관기관 및 대내외 협력 강화 ▵언론·홍보 노력도 항목을 세부 지표로 구성
- ▵’21년 인프라구축 ▵’22년 안보수사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 견인하고 그간 추진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및 정책홍보 활동 강화로 대내외 신뢰도 제고 요구

  ⇨ **성과 도출만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개선 노력 증명**

2 탈북민 보호 체계 강화(40%)

=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탈북민보호 우수사례(10%)+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10%)+탈북민 범죄예방교육(10%)

①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 : 신변보호활동 누락·지연율* 목표치를 전년 기준과 동일하게 1.0%이하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신변보호활동 지연·누락 건수 / 보호 탈북민 수) × 100

②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10%)** : 전년 목표치(13건)대비 20% 상향된 16건을 목표치로 설정

③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10%)** : 탈북민 보호업무 실효성 제고와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통일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관련 신규 개발한 지표로, ’23. 3월부터 과제별 점수표에 따라, 총 10점을 목표로 설정

④ **탈북민 범죄예방교육(10%) :** 범죄예방교육 실적은 전년 기준과 동일한 목표로 설정하되,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여성청소년 등 합동교육 실적을 추가

3 현장 중심의 유기적 안보상황 관리(10%)

▶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10%)

- 전년 대비 10% 상향된 수치인 13점으로 목표치 설치

○ 측정 산식

1 책임 안보수사 체계 고도화(50%)

= 안보수사 전문성 고도화(20%)+안보유관기관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15%)+ 언론대응·장책홍보 노력도15%)

▶ 언보수사 전문성 고도화 (20%)

<측정산식>

[성과지표 (각 관리과제별 횟수 × 각 과제별 점수)의 합산에 따른 득점

<과제별 가점표>

성과지표 항목	관리과제	과제별 점수							
안보수사 전문성 고도화 (20%)	안보경찰 인력 운영시스템 고도화	경과제도 및 안보수사 인사운영규칙 개선				수사관 자격제도 고도화		안보경찰 전문자격 통합시스템	
		계획 수립	시험 실시	법령 정비	교재 발간	계획 수립	자격 부여	인력 정비	시스템 정비
		0.5	1	1	1.5	0.5	0.5	0.5	0.5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신설·운영	보고서		센터 개소		교육과정 확대운영		교육과정 신설	
		0.5		2		인원 50명당 0.5		신설 과목당 0.5	
	안보수사 관련 자료집 발간	보고서 (계획 수립 등)				책자 발간		배포 (전국)	
		0.5				1.5		1	

▵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20%) ⇨ 20점을 100%로 기준, 과제 점수 합산 100% 이상(20점↑) 목표

구분	100% 이상 (20점↑)	90% 이상 (18점↑)	80% 이상 (16점↑)	70% 이상 (14점↑)	60% 이상 (12점↑)
점수	20	18	16	14	12

▶ 안보 유관기관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15%)

<측정산식>

[성과지표 항목별 점수* 합산에 따른 득점]

*** 각 관리과제별 횟수 × 각 과제별 점수**

<과제별 가점표>

<table>
<tr><th>성과지표 항목</th><th>관리과제</th><th colspan="6">과제별 점수</th></tr>
<tr><td rowspan="5">유관기관·대내외 협력 고도화 (15%)</td><td rowspan="3">국내외 안보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td><td colspan="2">실무자급 교류</td><td colspan="2">국장급 교류</td><td colspan="2">MOU 체결·합동간담회·세미나</td></tr>
<tr><td>국내</td><td>국외</td><td>국내</td><td>국외</td><td colspan="2" rowspan="2">3</td></tr>
<tr><td>0.5</td><td>1</td><td>1</td><td>2</td></tr>
<tr><td rowspan="2">대내외 교류협력 강화</td><td colspan="2">계획 수립</td><td colspan="2">설문조사·의견수렴</td><td colspan="2">정례회의·교육·워크숍</td></tr>
<tr><td colspan="2" rowspan="2">0.5</td><td>내부직원</td><td>외부인력</td><td>내부직원</td><td>외부기관</td></tr>
<tr><td>0.2</td><td>0.5</td><td>1</td><td>2</td></tr>
</table>

* (국내) ▵국정원·통일부 등 안보 업무 유관기관 ▵합참·정보사·방첩사·해경청 ▵안보자문협의회 등 협력단체 / (국외)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 안보수사기관 및 해외 경찰주제관 등

▵ **전 항목 합산 15점을 100%로 기준, 과제 점수 합산 만점 달성 목표**

구분	100% 이상 (15점↑)	90% 이상 (13.5점↑)	80% 이상 (12점↑)	70% 이상 (10.5점↑)	60% 이상 (9점↑)
점수	15	13	11	9	7

▶ 언론 대응·장책홍보 노력도15%)

<측정산식>

[성과지표 항목별 점수* 합산에 따른 득점]

*** 각 관리과제별 횟수 × 각 과제별 점수**

<과제별 가점표>

<table>
<tr><th>성과지표 항목</th><th>관리과제</th><th colspan="9">과제별 점수</th></tr>
<tr><td rowspan="3">언론·홍보 노력도 (15%)</td><td rowspan="3">언론대응 및 정책홍보활동 강화</td><td colspan="3">내부</td><td colspan="3">외부</td><td colspan="3">언론</td></tr>
<tr><td>전략회의</td><td>인트라넷</td><td>홍보물</td><td>외부회의</td><td>SNS·포털</td><td>공공기관</td><td>기자간담회</td><td>보도자료</td><td>매스컴</td></tr>
<tr><td>0.2</td><td colspan="2">0.5</td><td>0.3</td><td>0.5</td><td>1</td><td>0.3</td><td>1</td><td>1.5</td></tr>
</table>

▵ **전 항목 합산 15점을 100%로 기준, 과제 점수 합산 만점 달성 목표**

구분	100% 이상 (15점↑)	90% 이상 (13.5점↑)	80% 이상 (12점↑)	70% 이상 (10.5점↑)	60% 이상 (9점↑)
점수	15	13	11	9	7

2 탈북민 보호 체계 강화(40%)

=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탈북민보호 우수사례(10%)+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10%)+탈북민 범죄예방교육(10%)

▶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

<측정산식>

[안보업무관리시스템상 '기간 내 근무사항 입력비율'로 산출]

<점수분포표>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입력누락률	1.0% 이하	1.0% 초과 1.5% 이하	1.5% 초과 2.0% 이하	2.0% 초과
점수	10	9	8	7

▶ 탈북민보호 우수사례(10%)

<측정산식>

[우수사례 선정] 탈북민 보호정도*에 따른 개별등급 × 등급별 점수의 합산

* △재북 시 직위·경력, △입국 후 행정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신변위해도 평가, '가'·'나'·'다'로 보호 정도 결정(국정원)

탈북민 보호정도에 따른 개별등급		점수 (선정횟수)
가급	A	3
나급	B	2
다급	C	1

<점수분포표>

구분	20점 이하 16점 이상	16점 미만 12점 이상	12점 미만 8점 이상	8점 미만 4점 이상	4점 미만
점수	10	9	8	7	6

▶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10%)

<측정산식>

[성과지표 항목별 점수* 합산에 따른 득점]

* 각 관리과제별 횟수 × 각 과제별 점수

성과지표 항목	관리과제	과제별 점수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10%)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	교류			정례회의	지원사례 발굴
		실무자급	과장급	국장급		
		0.5	1	2	0.5	0.5

<점수분포표>

구분	100% 이상 (10점↑)	90% 이상 (9점↑)	80% 이상 (8점↑)	70% 이상 (7점↑)	60% 이상 (6점↑)
점수	10	9	8	7	6

▶ 탈북민 범죄예방교육(10%)

<측정산식>

[안보업무관리시스템상 '범죄예방교육 통계'로 산출]

<점수분포표>

△ 범죄예방교육

구분						
	12월 기준	~1,981건 (~120%)	~1,816건 (~110%)	~1651건 (~100%)	~1,486건 (~90%)	~1,321건 (~80%)
	10월 기준	1,650건	1,513건	1,376건	1,238건	1,101건
점수		5	4	3	2	1

△ 수사·여청 등 합동교육

구분	39건	36건	33건	30건	27건
점수	5	4	3	2	1

3 현장 중심의 유기적 안보상황 관리(10%)

▶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10%)

<측정산식>

[(각 과제별 건수 × 각 과제별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100% 달성]

<과제중요도·난이도별 가점표>

등 급	A	B	C
유 형 (건당)	안보상황 사전 탐지 및 차단(제지·설득)	문제점 발굴 및 관계기관 통보	안보상황 대응 계획 수립
점 수	2	1.5	1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탈북민보호 체계 강화·현장 중심의 유기적 안보상황 관리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50%	안보수사 전문성 고도화(20%)	20	50	정량	산출	
			유관기관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15%)	15		정량	산출	
			언론대응 및 홍보활동 노력도(15%)	15		정량	산출	
		탈북민보호 체계 강화 (40%)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	10	40	정량	산출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10%)	10		정량	산출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도(10%)	10		정량	산출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실시 건수(10%)	10		정량	산출	
		현장중심의 유기적 안보상황 관리 (10%)	안보 상황 관련 분석·판단 보고서 및 공문 등을 통해 측정	13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23년 주요업무계획 업무목표 Ⅱ-라 1-② - 안보경찰 교육시스템 고도화

27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 추진배경

○ 보안국이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개편('21. 1.)됨에 따라, '對北' 중심의 업무영역이 '포괄적 안보수사' 중심으로 재편

– 간첩 등 국보법 위반사범 위주 개념에서 경제·사회 등 '포괄적 안보'로 확장, 산업기술 유출 같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 필요

○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은 폐지 예정으로, 경찰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

–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23.12.31.) 동안 경찰 안보수사 인력 증원 및 수사관 역량 강화을 통해 국가 안보수사 총량 유지

※ '22. 12. 1. 전국 12개 시도청 56개 경찰서 안보과에 56개팀 131명의 '안보수사팀' 설치·운영(수사인력 131명 증원 효과)

○ 경제안보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국가핵심기술 등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범 검거를 통한 국정과제* 달성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6-33)

○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을 지속 감행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사이버 정보사범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 안보위해세력 활동이 더욱 은밀화·지능화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도 엄격화되는 상황에서 안보수사 분야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분석 활동의 공정성·신뢰도 확보가 중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수사역량 강화 및 안보사범 검거성과 제고로 빈틈없는 국가안보 수호]

○ 안보수사 조직 정비와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찰 안보수사 역량강화 3개년 계획’ 등을 시행, 전문 수사조직으로 자리매김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사범을 비롯하여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테러 등 공공안보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후 사법처리

○ 안보수사대 운영체계 개선 및 인적쇄신 등을 통한 우수인력 지속 확보하여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거성과를 제고

○ 경제안보 수사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23년 종합계획 수립 ▵전국 단위 수사팀 워크샵 ▵수사관 대상 전문성 향상 교육 ▵산업기술보호 분야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등 추진

< 안보수사 분야별 해당 죄명 >

분야별 구분	해당 죄명
전통안보(정보사범)	▵국가보안법 ▵형법(내란·외환죄)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등
공공안보	▵대외무역법(전략물자 불법수출)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마약류관리법(북한산 마약) ▵남북교류협력법(미승인 북한 방문) 등 ▵테러방지법(테러단체 구성·지원)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등
경제안보	▵방위사업법(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비밀유지) 등

○ ▵변호인 참여 실질화 ▵압수물 관리 강화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 등 수사 과정의 모든 인권 보호 제도 또한 엄격히 준수

[북한 등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비 안보경찰의 사이버안보조직을 전문 수사조직으로 확대·개편,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 ▵본청 北 전담 추적수사팀 신설(1개) ▵시도청 사이버 안보수사 인력 증원 등

○ ▵주요 인사 정보 탈취 ▵방산·첨단 기술해킹 등 주요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국정원·KISA 등) 간 합동대응 강화

○ 다양한 전문화 교육·훈련을 통해 수사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첨단시스템* 등 사이버안보 수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악성코드 자동분석 ▵해킹조직 관리 등 인공지능 기반 '침해사고 분석 시스템' 연구개발사업 추진('22년 下~'25년)

○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독자적인 민·관 협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대외 협업을 통한 해킹 피해 예방 활동 전개

[디지털 포렌식 현장 대응 및 전문성 확보로 안보수사 활동 지원]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사건별 포렌식 지원 사항 조정

– 포렌식 요원이 압수수색 현장에 진출하여 증거수집·분석 등 全 과정을 직접 수행, 중요 증거 누락 및 절차법 위반 사전 방지

– 전국 안보수사 포렌식 필요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사건 규모·중대성을 고려한 인력·장비 조정으로 증거 수집·분석 성과 견인

○ 최첨단 장비·프로그램 도입 및 전문화 교육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

– 디지털 증거 은닉·사이버테러·가상자산 이용 범죄 등 다양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프로그램 지속 도입

– 대외 전문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포렌식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최신 IT기술 동향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화 교육 등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경제안보 위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운영	2월	
	2023년 전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워크숍	2월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장비 종합 지원계획 수립	2월	
	△北 IT 인력 △ 北 가상자산 탈취 관련 불법사이버활동 주의 홍보물 배포	3월	
	'22년 해킹메일 분석보고서 제작·배포	3월	
2/4분기	안보수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	4월	
	상반기 중요 안보사건 현장점검	4월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4월	
	전국 첨단안보수사팀 워크숍 개최	4월	
	상반기 전략물자 실무과정 위탁교육	5월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연구발표회 개최	5월	
	모바일 포렌식 프로그램 유지관리 계획 수립	5월	
	산업기술유출 수사요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6월	
3/4분기	사이버안보수사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	7월	
	민간위탁 전문교육 '침해사고 수사과정'	7월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수사 장비 예산 집행률 점검	8월	
	산업기술유출 예방 홍보용품 제작	8월	
	하반기 중요 안보사건 현장점검	9월	
	하반기 전략물자 실무과정 위탁교육	9월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요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9월	
4/4분기	하반기 침해사고 대응훈련	10월	
	경제안보 위해사범 특별단속 성과 평가	11월	
	안보수사 역량평가 실시	11월	
	시도청 안보수사부서 성과평가 워크숍 개최	11월	
	산업기술 수사요원 해외전문화 교육	12월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성과 점검	12월	
	전국 안보수사대장 워크숍 개최	12월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결과 점검	12월	
연중	안보사건 평가회의 개최	상시	
	안보수사 관련 국정원, 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 상시 협조체계 구축	상시	
	산업기술유출 관련, 국정원·산업부·중기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상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 기대효과

○ 안보위해사범 검거로 빈틈없는 국가안보 수호

○ 사이버 정보사범에 대한 수사 활성화 및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 디지털 포렌식 활동의 객관성·신뢰도 확보와 디지털 증거물의 동일성·무결성 입증을 통해 안보수사 활동의 정당성 부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50%)	616	760	1,128	1,135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검거보고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등 검거실적 DB
사이버안보 대응활동 지수(25%)	381.3	524.3	734.5	808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시도청 결과보고 등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지수(25%)	97.07	109.1	119.8	131.8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안보포털 시스템 및 시도청 결과보고 등

【'23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세부 설명자료】

①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업무계획 4-1 인권 보장에 기반한 안보수사 전개)

○ **(산식)** 기존의 정보사범 검거점수에 경제·공공안보사범 검거점수를 합산

– **(① 정보사범 검거 X 2점) + (② 그 외 사범 검거 X 1점)**

① **정보사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군형법 제2편 제1·2장(내란·반란 등)

② **정보사범 외**

– **경제안보사범 :**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상 업무상배임,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공공안보사범 :**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법, 화학물질관리법, 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마약류관리법, 북한이탈주민법, 군사기지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정통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23년 목표치 산출 근거)** '20~'22년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20년 616점 △'21년 760점 산출 △'22년 1,128점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이 급격히 상승

– 최근 실적이 급격히 증가(83.1%)하여 임계치에 도달한 실정이나 '24년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가안보수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3년간 평균 실적(834.7점)에 '23년 추세치(35.9%) 이상을 적용하여 **'23년 목표치를 1,135점**으로 설정

② 사이버안보 대응활동 지수(국정 101-1)

○ **(산식)** (사이버안보 입건 전 조사 개척 건수 X 2점) + (피해계정 등 보호조치 건수 X 0.1점)

○ **('23년 목표치 산출 근거)** '20~'22년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20년 381.3점 △'21년 524.3점 △'22년 734.5점

- 최근 3년간 실적이 급격히 상승(年 평균 39%↑)하여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나, 「경찰청 자체평가 관리과제 설정 기준」에 의거, 목표치의 적극성 '상' 인정기준인 '22년도 734.5점 대비 10% 이상인 808점으로 목표치를 높게 설정

③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 지수

○ **(산식)** ① (현장 지원 횟수 / 디지털 포렌식 지원 횟수 × 100) × 0.5 + ② (선별압수 매체 건수 / 압수수색 매체 건수 ×100) × 0.3 + ③ (포렌식 전문 교육 이수 인원) × 0.2

○ **(목표치 산출 근거)**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법원의 판단기준도 엄격해지는 상황을 고려, △현장 지원 횟수 △선별 압수 건수 △전문 교육 이수도 등을 종합 측정

- 디지털 포렌식 현장 지원 활동 및 선별압수의 중요성 증가 추세 등을 감안, 전년 대비 10% 이상(성과관리 기준 상 목표치의 적극성 '최상' 해당) 상향한 목표치 설정(131.8점)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50%)	(정보사범 검거 X 2점) + (그 외 사범 검거 X 1점)	1,135	정량	산출	
		사이버안보 대응활동 지수(25%)	(사이버안보 입건 전 조사 개척 건수 x 2점 + (피해계정 등 보호조치 건수 x 0.1점	808	정량	산출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 지수(25%)	(현장 지원 횟수 / 포렌식 지원 횟수 × 100) × 0.5 + (선별압수 건수 / 압수수색 건수 ×100) × 0.3 + (포렌식 전문 교육 이수 인원) × 0.2	131.8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국정 101-1

28 국내외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분석역량 제고

□ 추진배경

○ 국가안보 위협은 북한뿐만 아니라 산업·방산기술 유출 및 국제테러단체의 국내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 중

– 이에따라 경찰의 첩보수집 분야를 기술유출·테러 등까지 확장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 대두

○ 특히 경찰이 국내 유일한 안보수사기관으로 변화*함에 따라,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위상 재정립 필수

– 따라서 일선에서 수집되는 안보첩보의 질적향상과 본청 분석기능의 역량 고도화를 도모하여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극대화 추진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시행('24.1.1.)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고가치 안보첩보 수집을 통한 국가권익 보호]

○ 대북 군사정보 위주의 안보경찰 활동대상이 테러·기술유출 등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권익을 침해하는 전 분야로 확장

– 다만, 오랜기간 대북정보에 특화된 안보경찰의 특성상 확장된 안보영역에 대한 첩보수집 역량과 의지는 지속적인 계발과 함양 필요

영역	첩보수집 분야
기존 분야	▵ 범죄첩보: 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 정통망법 등 ▵ 안보정세: 안보상황, 북한정세 등
확장 분야	▵ 범죄첩보: 테러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 안보정세: 대외정세(한반도 안보 관련 국가 대상)

○ 이에따라, ▵첩보수집 우선목표 설정 ▵첩보수집 노하우 공유 ▵첩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확장된 업무영역에 대한 일선의 수용도 제고 중

– 특히 일선의 수집노력과 더불어, 본청 및 시도청의 분석기능 고도화를 통해 유가치 정보의 활용도 고양를 위한 노력 병행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 지하화·은밀화하는 안보범죄의 특성상, 이에 대응한 수사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수사의 단초인 첩보의 입수가 필수적

– 따라서 일선의 중요 안보범죄정보 수집을 견인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인사·포상)과 함께 정책지원 방안 확대(예산지원)

○ 또한, 첩보와 수사사안 간 융합분석으로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첩보의 死藏을 방지하고 수사진행의 촉매 역할 수행

– 특히 산기유출 등 초국경적 안보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 안보정보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고가치 첩보입수 노력 경주

구분	안보수사			안보정세		업무 제안	안보 상황	이탈 주민
	정보 사범	공공 안보	첨단 안보	북한 정세	대외 정세			
상보율*(%)	14.4	21.8	15.6	4.1	21.1	37.2	14.1	9.4

* 상보 : 시도청 분석기능에서 '중보'로 가치판단, 본청으로 평가요청된 첩보

[경찰 독자적 안보정세 분석역량 제고로 안보위협 대응력 강화]

○ 그간 제한적으로 입수하던 국정원·통일부 등 일부 유관부처의 안보정세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안보경찰 활동방향 설계에 한계

– 따라서 일선의 첩보와 국내외 유관기관으로부터 입수되는 안보정보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경찰의 독자적 안보정세 분석·판단 시행 필요

▸ **(북한정세)** 북 공개정보*와 국내외 유관기관 發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 분석·주요 공작기관(원) 동향파악 및 안보경찰 활동방향 제시

* 북 언론보도는 엄격한 검열을 거친 공식입장으로, 행간분석을 통한 내부 정세 및 대남공작 동향파악을 위해 조선중앙티비 등 4개채널 모니터링 중

▸ **(대외정세)**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안보위협이 초국가적 양상을 띔에 따라, 주한 외국기관과의 정보협력을 통해 테러·산업기술유출 등 국제적 안보범죄에 대응한 경찰의 해외안보 정보역량 제고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3년도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 세부지침 수립 및 하달	1월	
	안보수사외국어 경력경쟁 채용계획 수립	2월	
	2023년도 안보경찰 첩보 기본요소 수립 및 하달	2월	
	안보첩보 분석 전문화 교육(시도청 첩보평가·분석 담당자 대상)	3월	
2/4분기	공항 근무 안보경찰 대상 첩보수집 전문화 교육 실시	4월	
	일선 시도청 '안보첩보 심의위원회' 운영 점검	4월	
	'안보첩보 정책소통단' 집체교육 등 워크샵 실시	5월	
	상반기 첩보수집 우수 유공 자체포상 및 현장 간담회 실시	6월	
3/4분기	안보수사외국어 경채자('21·'22. 선발) 대상 첩보수집 전문화 교육	7월	
	대테러 수사요원 대상 첩보수집분석 전문화 교육	9월	
	외국기관 위탁교육(첩보분석 전문화 과정) 실시	9월	
	안보첩보 수집활동 성과평가 관련 시도청 의견수렴	9월	
4/4분기	일선 안보요원(청 수사기능, 서 안보기능) 첩보수집 역량강화 교육	10월	
	안보수사외국어 경채자 기초교육(23년도 선발인원 대상)	11월	
	하반기 첩보수집 우수 유공 자체포상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대한민국 및 국민 전체

○ 이해관계 집단: 간첩·테러단체·기술유출사범 등 안보위해세력

□ 기대효과

○ 北 대남공작 및 외국인 간첩, 테러, 경제안보사범 등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에 반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첩보수집 역량 강화

○ 경찰청 諸 정보기능 및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안보수사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

○ 선진국 주요 안보수사기관과의 정보교류 확대로 안보정보 수집 루트 다각화 및 선진 정보기관의 노하우 획득

○ 일선의 고가치 첩보수집율 증가 및 본청 분석기능의 전문화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안보수사 능력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50%)	신규	신규	12.11	13.34	하단참조	하단 참조	첩보시스템 D/B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40%)	신규	신규	91.12	95.14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첩보시스템 D/B, 입건전조사·수사 착수현황 월보
안보정세 분석 고도화(10%)	신규	40	80	126	하단참조	하단 참조	첩보시스템 D/B, 정세분석 보고서 및 공유현황

【'23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세부 설명자료】

①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업무계획 Ⅱ-라-1-③ 안보첩보 수집·분석역량 강화)

○ 안보첩보는 각 시도청 평가기능에서 중요성에 대하여 자체검증 후 본청으로 상보되는 2중 검증을 받고있으며, '22년도는 목표치 12%를 초과한 12.11% 달성

– 일선에서 제출한 첩보가 본청에서 '일보' 이상 평가받는 비율로 고가치 첩보 획득률 측정

○ **'23년 목표치 측정산식 및 산출근거**

– **(측정산식)** 첩보 총 건수 대비 본청 '일보' 이상 평가 비율

– **(산출근거)** 전년도 일보 이상 평가율 12.11% 대비 10% 이상인 **13.34%**를 목표치로 설정

②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업무계획 Ⅱ-라-1-③ 안보첩보 수집·분석역량 강화)

○ 그간 일선 안보요원들이 제출해 온 안보범죄 첩보에 대하여 신뢰성 검증 및 평가를 하였으나, 실제 수사현장에서의 첩보 활용도 여부 파악은 미흡한 실정

– **경찰의 책임안보수사 원년**에 대비하여, 전 안보영역에서 일선 안보수사요원들이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고가치 첩보를 입수하도록 견인하고자 지표를 선정함

○ **'23년 목표치 측정산식 및 산출근거**

– **(측정산식)** 범죄혐의점 유무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제출하도록 설정한 '안보수사 사건첩보(시스템 상 카테고리 名)' 건수 대비 실제 입건전조사 및 수사 착수 건수 비율

– **(산출근거)** 실적치는 '21년도 82.3%(미개척 17.7%)에서 '22년도 91.12%(미개척 8.88%)로 미개척율이 49.8% 감소하였으므로 '23년도는 미개척율 감소목표를 10%상향한 54.82%로 설정(미개척율 4.86%), 최종 목표치를 **95.14**로 설정

③ 안보정세 분석 고도화(업무계획 Ⅱ-라-1-③ 안보첩보 수집·분석역량 강화)

○ 안보경찰에 필요한 북한·해외 안보이슈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표 재설계

– 테러·산업기술유출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최신 해외안보 이슈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또한 북 선전매체는 엄격한 검열을 거친 북한의 대외적 공식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필요

○ **'23년 목표치 측정산식 및 산출근거**

– **(측정산식)** 북한·해외 안보정세 분석서 생산(63건) + 분석서당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실시(보고서 건 당 1회)

– **(산출근거)** 21년 대비 22년 상승치 40에서 10%이상 상향한 46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최종 실적(보고서 63건, 자문 63회)을 산출함으로써 '안보정세 고도화'를 위한 노력 경주 설정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국내외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 · 분석역량 제고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	(본청 일보이상 건수/첩보 제출 총건수) X 100	13.34	정량	산출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입건전조사·수사 착수건수/사건첩보 제출건수) X 100	95.14	정량	산출	
		안보정세 첩보 고도화	북한·해외 안보정세 분석서 생산(63건) + 분석서당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실시(보고서 건 당 1회)	126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국내외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 · 분석역량 제고	안보첩보 수집·분석역량 강화 (경찰청 업무보고Ⅱ-라-1-③)

29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강화

□ 추진 배경

○ 지난해 **김여정 '서울 과녁' 선동**에 이어,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 행태 등이 반복되고 있는 등 **對南 도발이 강화**될 우려

– UN안보리 **對北제재 장기화**에 인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가상자산 해킹 및 국내 핵심기술·외교안보 분야 정보수집 해킹 가능성** 농후

–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해외 입·출국 인원 및 물동량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이슬람 극단주의 인물·세력 잠입 증가 소지

○ 신종 질병, 기상이변 등 **사회·자연재난의 일상화·장기화·대형화 등 추세** 속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이 부각

–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파사고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재난으로 정립**되면서, 경찰의 재난관리 지원 범위가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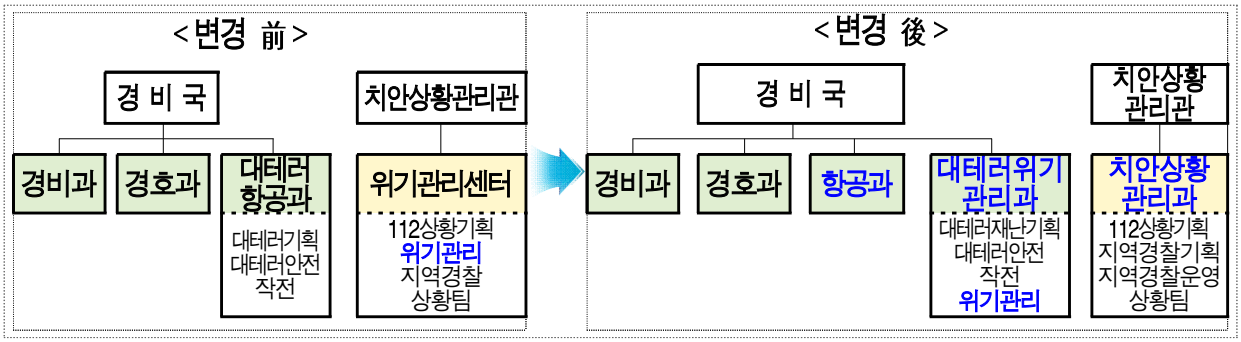
【 대테러 및 재난관리 인프라 구축 】

○ **(특공대 창설 및 청사 신축)** ▵7~8월 **울산, 강원, 충북특공대 신설** (全시·도청 경찰특공대 완편), ▵**경북·경기북부·세종·충남특공대** 청사 신축 ▵**전남·인천·경기남부·경남·대전특공대** 훈련시설 증축

시설	개소	특공대
정식청사	10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부, 전남, 경남, 제주
유휴건물	2	• 충남(舊 기동1중대), 전북(舊 308의경대)
가설건축물	3	• 경기북부(컨테이너), 경북(경량철골), 세종(컨테이너)

○ **(재난 대응체제 정비)** 재난대응 부서(위기관리계)가 '치안상황관리관'에서 '경비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본청 및 시도청 조직개편** 시행

–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舊 대테러항공과)'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과 내에 **'테러위기상황반(3명)'**을 구성·운영



– **<시·도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재난사무 담당자**를 대테러(경비기능) 소속으로 **전보 조치**하고, 시·도청 및 일부 경찰서에 **'인파관리 인력' 증원** 추진

※ 18개 시도청 53명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대테러계(경비기능)'로 전보 / 행안부에서 본청 및 시·도청 대상 '인파관리' 정원증원(수시직제) 검토 中

○ **(대테러·재난관리 장비 구입)** △전술·EOD·광학·화생방·기동장비 및 총기·탄약류 등 **197억원 구입** 추진 △화생방·감염병 보호장비, 산불용 장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등 **16억원 구입** 추진

< '23년 대테러장비 예산 현황 >

구 분	합계	전술장비	EOD장비	광학장비	화생방장비	기동장비	총기류	탄약류
품 목	40종	7종	8종	5종	3종	5종	7종	5종
예 산	197.4억원	22.7억 원	36.6억 원	31.8억 원	16.7억 원	41.7억 원	34억 원	14억 원
대 표 장 비	-	전파차단기 드론탐지기	EOD로봇 방폭보호의	야간투시경 저격조준경	레벨B보호복 화학분석기	차륜형장갑차 다목적작전차	기관단총 저격총	권총탄 저격탄

< 재난장비 예산 현황 >

구 분	합계	화생방장비	감염병장비	산불용장비	기타 소모품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품 목	16종	4종	2종	4종	3종	3종
예 산	16.3억원	9.9억원	2.5억원	0.9억원	2억원	1억원
대 표 장 비	-	K5방독면 정화통보호복	레벨D보호복 의료용 가운	방열장화 방열장갑	구명환구명조끼 구명로프	전극패드 리튬망간 배터리

○ **(전문인력 충원)** △세종청 화생방 **연구사 신규 채용**(전 시·도청에 화생방 전문가 배치 완료) △**경찰청 '테러위기상황반'을 '정보상황분석반'**으로 재편, 관련 정보 접수·분석 등 역할 확대

【 대테러 ·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

○ **(대테러 관련 국제회의 개최)** 4월 「대테러 고위급 국제 심포지엄」, 10월 「대테러부대 국제 세미나」 개최 추진

【제2회 대테러 고위급 국제 심포지엄】

- **주제** : "신기술 테러 위협과 국제협력 강화"
- **일시 및 장소** : '23.4.20.(목) 10:00~17: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참석대상** : 국내외 학계·관계기관 대테러 전문가 100여명(美 UNOCT, LASD 등 초청)
- **주요내용** : △대테러 국제협력 방안 △무인기(드론)테러 △WMD(대량살상무기)테러 등 주제와 밀접한 3개 세션으로 구성, 종합 토론

【제2회 대테러부대 국제 세미나】

- **주제** :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대테러부대 단 하나의 임무 - 국민 안전 확보"(案)
- **일시·장소** : '23. 10월 中 / 국제치안산업박람회장 內(인천 송도)
- **참석대상** : 대테러센터, 국방부, 국정원, 주한공관, 국내·외 대테러부대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기조 강연(주요국 특공대장) △세계 주요 대테러 작전 사례 및 대테러 전술 공유 △치안산업박람회에 국내 대테러 장비 생산업체 전시관 구성 등

○ **(테러 대응 역량 제고)** 전담 조직별 체계적 교육·훈련 추진

– **<대테러 역량> 지휘역량**(△시·도청 주관 현장지휘관 교육 △경찰서장 주관 합동훈련), **현장 대응력**(△화생방테러 현장대응팀 집체교육 △위기협상팀 심화교육)으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 진행

【지휘역량 제고】

▸ **(현장지휘관 교육)** 시도청별 경찰서장 소집 △대테러 전문지식 교육(오전), △시도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참관(오후) 등 관계기관 조직·자원 활용 능력 습득

▸ **(경찰서장 주관 합동훈련)** 현장지휘관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찰서장 주관, 관계기관 합동 실전훈련을 통한 초동조치팀장으로서 관계기관 통합 지휘능력 제고

【현장 대응력 제고】

▸ **(화생방테러 현장대응팀 집체교육)** 민·관·경 화생방 전문가를 초빙하여 화생방 최신 연구동향, 관계기관 활동사항 등 현장 초동조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교육 실시

▸ **(위기협상팀 심화교육)** 테러·인질 등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상 기법 및 국내외 협상 사례 발표, 경찰특공대 합동 시나리오 훈련 등 협상능력 향상 도모

– **<작전 수행 역량>** 대침투작전, 화생방, 해안경계 레이더·TOD 운용교육 등 **관련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전문기관 위탁교육】

▸ **(경찰인재개발원)** 작전실무과정 100명(5회×20명)

▸ **(시·도청 교육센터)** 작전실무과정 20~100명(1~2회)

▸ **(경찰특공대 위탁교육)** 시도청 경찰특공대 연계, 사격술 및 전술교육 등 기본전투기술 위주

▸ **(육군화생방학교<장성>)** 화생방작전수행과정 90명(3회×30명)

▸ **(육군정보통신학교<대전>)** 레이더 과정 30명(2회×15명)

【전문기관 초빙교육】

▸ **(통합방위작전)** 육군대학, 보병학교 등 軍 교육기관 교관 초빙

▸ **(해안경계작전)** 육군정보통신학교 R/D교관, 해안경계 R/D시스템 개발자 등 초빙

▸ **(화생방)** 육군화생방학교,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 초빙 교육

○ **(재난 대응 역량 제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재난 유형별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콘텐츠 수정·보완 등 개정' 추진

< 외부 위탁교육 프로그램 >

구 분	집행내역
응급처치교육	18개 시도청 × 1회 / 258개 경찰서 × 2회
재난 유형별 전문기관 위탁교육	18개 시도청 재난업무 담당자
사이버 교육 콘텐츠 수정·보완 등 개정	경찰재난관리체계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위기대응 훈련 강화**> 위험 종류·피해 정도 등에 등급화한 '유형별 시나리오(인파사고·재난 등)를 활용한 위기대응 훈련'을 개발, **각급 경찰 지휘관이 직접 주재하는 교육훈련**(FTX·CPX 등) 정례화

등급	주재	참여	방법·시기	주요 훈련 내용
A급	시도청장	경찰서·지자체·관계기관	FTX 年 2회	**112시스템**(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보이는 112, 순찰차 캠) 및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보고·전파 체계** 숙달, **비상발령**, **재난안전문자** 발송, **응급처치 훈련**
B급	경찰서장	지역경찰·교통·여청·형사 등 관련 全기능	CPMX 月 1회	지휘조만 실제 기동하고, 여타 인력은 통신·도상으로만 훈련하는 **'지휘조 기동 훈련', 사전 훈련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여 **불시 훈련** 실시 및 **부서별 임무 카드** 부여
C급	지구대·파출소장	지역경찰	CPX 週 1회	현장기동 없이 팀원들과 **시나리오 상황에 따른 조치방안 공유·토론**, 경찰장구 사용기준·사용법 숙지, 수사서류 작성 등

–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美·日 등 사례와 제도를 참고해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인파밀집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력 강화

▸ 美·日의 사례와 매뉴얼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주최자 유무를 불문하고 인파밀집 상황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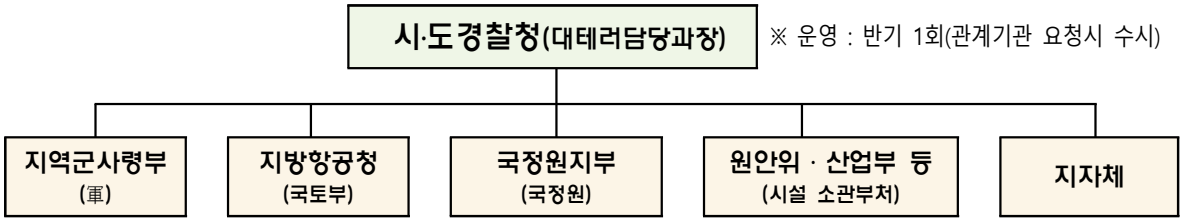
▸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조하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

【 현장 중심 안전활동 활성화 】

○ (**테러취약시설 안전관리**) 테러방지법령 등에 따라 **테러취약시설**(총 2,375개소) **지도·점검** 등 대테러 안전활동 추진

– 특히, 전국 시·도청 「드론테러 공동대응 협의체('21.7월)」를 통해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독려(31개 시설<'22.1월> → 47개 시설<'23.1월>)

< 협의체 개요 >



▸ **(기능)** △주요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소 합동점검 △드론테러 대비 합동 대테러훈련 △드론테러 관련 최신정보 공유 △드론 불법비행·위협 관련 종합대책 심의·조정

○ **(準전시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 을지연습·화랑훈련 실시

구 분	을지연습(2급 비밀)	화랑훈련(3급 비밀)
목 적	• 전시대비 **정부** 훈련	• 전시 **군사작전 훈련**
기 간	• 全 정부기관에서 **매년 3박4일**	• 시·도별 **2년** 주기로 **4박5일**
주 관	• **행정안전부**	• **통합방위본부** (합참)
훈련 내용	• 도상연습 원칙 - 메시지 처리, 현안과제 토의 등 • 실제훈련(일부) - 소산훈련 - 접적지역 주민 대피 훈련 - 테러 대비 실제 훈련 등	• 상황조성/도상연습 • 침투 및 국지도발 훈련 - 대항군 운용 - 대침투작전 초동조치 - 교통통제 - 군·경 합동검문소 운영 • 전시전환 훈련 및 전면전 등
경찰 참가 범위	• 경찰청, 全 시·도경찰청·경찰서	• 해당 시·도경찰청·경찰서

○ **(재난 대비 활동)** 코로나19를 비롯 여름·겨울 자연재난 및 대형 산불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재난 발생 시 경찰력(인력·장비 등) 지원

※ 경찰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上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대형 재난사고 발생 時 △질서유지 △교통통제 △긴급대피 지원 △허위사실 유포 대응 △재난 원인에 대한 수사 등을 진행

– **<다중운집행사 관련 협업체계 강화>**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내실화,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안전 확보

▸ 다중운집 행사 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자체에 적극 요구

※ 경찰은 지자체 등에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강제할 수 없으나 적극 협조요청하고 미이행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

▸ 지자체 등 주최 측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한 이후에 위험성 평가를 거쳐 △경찰력 배치 수준 판단 △결과를 공유하여 주최 측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요청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경찰 대테러장비 구매 기본계획 수립	1월	
	국가 대테러부대 연합훈련 기본계획 수립	3월	
	2023년 대테러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3월	
	2023년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 기본계획 수립	3월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3월	
2/4분기	대테러 고위급 국제 심포지엄 개최	4월	
	작전업무 종합추진계획 수립	4월	
	작전부대 피복·장비 구매계획 수립	5월	
	풍수해 관련 대응훈련	5월	
	청원경찰법시행령 개정	6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6월	
3/4분기	울산·강원·충북 3대 특공대 창설	7-8월	
	전국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개최	8월	
	전문화 교육 활용방안 점검	8월	
	대테러부대 연합훈련	9월	
	을지연습	9월	
4/4분기	대테러부대 국제 세미나 개최	10월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및 배포	10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11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1월	
	작전부대 운영실태 현장 진단	12월	
연중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내실화, 다중운집행사 안전 확보	연중	
	재난대응 업무 종사자 교육 추진	연중	
	외국공관 등 테러취약시설 대상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연중	
	경찰특공대 분야별 역량강화교육 실시	연중	
	경찰 대테러장비 계약체결 및 납품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주·관리자

□ 기대효과

○ 적극적 테러 예방활동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정치·경제적 국가 위기 상황 사전 방지 및 기업·외국인 등 경제주체들이 안정적 활동 지원

○ 코로나19·인파사고 등에 대한 경찰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응체계 확립,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수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대테러상황관리 및 경비경찰역량강화(Ⅰ-1-일반재정②)			
① 대테러상황관리(3134)	일반회계	245.6	339.8
■ 대테러상황관리(311)			
②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일반회계	56.7	84.1
■ 의경대체지원(2131-314)			
치안상황관리(Ⅰ-1-일반재정②)			
① 범죄대응 및 재난안전관리(1431-311)	일반회계		
■ 재난안전활동 및 장비관리		20.9	20.9
- 재난안전관리(재난장비 등)		16.4	16.4
- 재난안전활동(교육 및 훈련, 매뉴얼 발간 등)		3.9	3.9
- 재난안전관리 운영지원금		0.1	0.1
- 선진외국경찰 자료수집 등		0.1	0.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40%)	신규	70.7%	78.6%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민간 여론조사 또는 리서치 전문업체를 통해 조사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20%)	신규	100%	100%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각종 공문 등
위기대응 역량지수 (40%)	1,245.6점	1,752점	1,509점	하단 참조	하단참조	하단 참조	시도청 성과보고서 등

①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40%)

- **(개요)**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및 국민의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관련 설문 결과를 지표로 활용, 정책 미비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측정산식)** 대국민 설문조사

▸ 조사 방식 : 전국 지자체에서 생활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업체에서 설문조사(세부방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 조사 내용 : △대테러 인프라 구축 노력 및 홍보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도

- **(목표치 및 산출근거)** '22년도 실적(78.6%) 보다 10% 이상 높은 도전적 목표치(86.4%) 설정

②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20%)

- **(개요)**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대테러훈련 실적을 지표로 활용하여 정책달성도 점검
- **(측정산식)**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20%) + 대테러훈련(20%)
- **(목표치 및 산출근거)**
  - ○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 - (목표치) 110% 이상(개선 건수/과거 3년 평균×100)
    ※ 경찰서별 국가중요시설(연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A급 분기 1회이상, B·C급 반기 1회 이상)
  - ○ 대테러훈련 - (목표치) 110% 이상(훈련 횟수/과거 3년 평균×100)

③ 위기관리 역량지수(40%)

- **(개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재난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 경찰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성과지표로서 관리
- **(측정산식)**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훈련 횟수 + 경찰서 교육 횟수
- **(측정방법)** 시도경찰청 성과보고서
- **(목표치 및 산출근거)** 시.도청 및 경찰서 훈련 횟수(현장훈련 횟수×1 + 토론훈련 횟수× 0.5 + 현장.토론 병행훈련 횟수×1.5) + 경찰서 교육 횟수(시도청 교육 횟수×1 + 경찰서 교육 횟수×1.5) = 1,943점(전년 대비 10% 상향)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강화	①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대테러훈련 실시에 따른 평가 점수	86.4%	정량	산출 결과	
		②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① 대테러 인프라 구축 노력 및 홍보 ②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도	110%	정량	산출 결과	
		③ 위기관리역량지수	시도청·경찰서별 훈련 + 경찰서별 교육 횟수	1,943점	정량	산출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강화	업무 Ⅱ -라

30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완벽한 경호행사로 국가안전 확보

□ 추진배경

○ 대통령 등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는 성패여부에 따라 국가위상 실추는 물론 국가적 위기사태와 직결되는 중요한 경찰의 임무

○ 올해는 現 정부 출범 2년 차로 국정현안 관련 현장방문이 이어지고 코로나19 완화로 방한 외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국내·외 경제 위기와 사회적 갈등 심화, 안보위협 고조, 온라인상 경호 위해요인 증가하는 등 경호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

▸**(집회·시위)** 사회 구조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단체의 집회·시위 발생 전망
▸**(테러)**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극단주의 확산 등 테러 위협요소는 증가 추세
▸**(안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남 위협 발언 등 도발 등 안보환경도 악화
▸**(기타)**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 무기 제작·유통 등 위해요소도 다양화 추세

○ 경호 경찰의 인·물적 역량을 극대화하여 경호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책임·소통 경호'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023년 중점사항 "경호대상자 절대 안전" + "경찰 경호역량 강화"

【 국내·외 주요인사의 완벽한 신변안전 확보 】

○ **(빈틈없는 경호업무 추진)** 대통령 등 주요인사에 대한 치밀한 사전대책 마련과 적절한 현장조치를 통해 신변안전을 완벽히 확보

▸**(주요인사 신변안전 대책 마련)** VIP, 4부 요인, 전직대통령, 국·외빈 등 주요인사 철저한 경호경비대책 수립, 국가적 위기사태 예방 및 국가안전 확보
▸**(중요시설 안전확보)** 경호처 등 경호 관계기관 간 협의,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활동 및 주변 질서유지와 함께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도 병행 추진

○ **(국제행사 지원)** 행안부·외교부·경호처 등 부처별로 국제행사 개최 또는 외빈초청 시 수시로 경찰청에 '경호 협조' 요청 중

– 각 부처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 또는 초청하는 국·외빈에 대한 경호 의전 지원·맞춤형 경호 제공으로 국격 향상에 기여

※ <주요 국제행사>△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5월) △ 한-중남미 포럼(5월)

○ **(요인보호 활동)** 「요인보호규칙」上 요인에 대하여 내실있는 보호활동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현장 지도점검·교육 실시

※ 평상시, 관할 경찰서 및 시·도청 분기 1회 점검 및 경찰청 보고 준수

【 성공적인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경호인력풀 정예화)** 경호수요에 탄력적·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청별로 「경호인력풀」과 「MD·X-Ray검색 요원」을 재편성

※ 경호인력풀 : 유동적인 경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인력(경호경력·무도·신체조건·외국어능력 등 고려 선발)

○ **(전문화 교육)** 전문 경호요원 양성 위해 △ 본청 및 전문 교수요원, 시·도청별 年 1회 △ 경찰인재개발원, 年 2~4회 교육 실시

▸**(본청·교수요원)** 전국 경호인력풀 대상 전문화 교육 年 1회(5~6월 中)
▸**(인재개발원)** △ 일반과정 年 2회(1주/총 48명) △ 심화과정 年 4회(2주/총 60명)

○ **(전담 경찰경호대 운용)** 전직 대통령·4부요인·외빈경호대 근접경호팀에 대한 철저한 경호경비대책 수립, 국가위기 사태 예방

※ **(인원 구성)** △전직대통령 17명 △ 4부요인 33명, 외빈경호대 26명 운용

○ **(경호 특화부대 활성화)** 기동대 中 36개 중대 특화부대 지정, △교육훈련 정례화 △예산·장비 지원, 경호현장 위기대응 제고

【 경호업무 기준 마련 및 최신장비 도입 등 경호 인프라 구축 】

○ **(현장 경호네트워크 구축)** 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최초 협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현장부서 대상' 본청 현장 컨설팅 실시

<본청, 경호현장 지원활동 흐름도>

경찰청·시도청(경찰서)·경호처	경찰청·시도청(경찰서)·경호처	경찰청
<사전 현장지원, D-7~14>	<관계기관 회의, D-1>	<현장 지도점검, D-day>
▸ 관계기관 합동 현장답사 ▸ 경호 필요 장비·인력 등 협의	▸ 공공위험 분석 및 정보공유 ▸ 경호구역 내 역할·책임 명확화 등	▸ 과도한 통제예방, 국민불편 최소화 ▸ 현장 교육 및 애로사항 지원 등

– 관계기관 요청사항은 현장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하고,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력·예산 등 필요한 지원대책 강구

○ **(경호업무 지침 발간)** 전년도 경호활동을 평가하고 국내·외 경호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23년 경호지침」을 각급 담당부서와 공유

▸**(주요내용)** △'22년 종합평가 △ '23년 치안정세 및 경호전망 △ 중점 착안사항

○ **(경호 교육자료 제작)** 경호업무 기본방침, 법적 근거 등 현장 경호업무 표준화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임무수첩·사례집」 제작

▸**(주요내용)** △ 경호업무 이해 △ 위해사례 공유 △경호장비 사용요령 등

○ **(최신 경호장비 확충)** AI 기술을 적용한 X-ray 판독시스템 및 슬라이드 자동권총 등 최신 경호장비 도입으로 경호업무 효율성 도모

▸**(AI X-ray 판독기)** 위해물품 영상자료 축적과 알고리즘 학습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물품을 검색하여 위해 의심 물품을 모니터에 현출하는 시스템

※ '21~'22년 서울·부산청 4대 배치 완료, '23~'24년(2년간) 3대 대전청 보급 예정

▸**(슬라이드 권총 도입)** 슬라이드 자동권총은 가볍고 휴대가 용이하며, 장탄 방식이 편리하고 장탄 수가 많아(15발) 상황대처 능력 우수, 경호임무 수행에 적합

※ '23~'25년(3년간) 총 720정 도입(1,323백만원)

○ **(경호장비 점검)** 전문 장비 업체와 연계, 장비 관리 실태 집중 점검, 고장장비 수리 및 불용처리 등 최적의 가용상태 유지(16종 3,885점)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호인력풀 및 MD·X-ray 검색요원 재편성	3월	
	요인보호 대상자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	3월	
	‘22년 경호종합평가 및 ‘23년 경호업무 지침 배포	3월	
2/4분기	상반기 경호부대 (101단·202단·22경호) 현장컨설팅	4월	
	대규모 국제행사(외빈 ADB 연차총회) 기본계획 수립 등	4월	
	전담경호부대(4부요인, 전직대통령, 외빈경호대) 현장컨설팅	5월	
	전국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6월	
	‘23년 경호장비 보급 계획 수립	6월	
3/4분기	경호비표 신규 제작	7월	
	신형 경호장비 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MD·x-ray검색기)	8월	
	「경호관련 법령집」 제작	9월	
4/4분기	전국 경호장비 운영실태 집중 점검(18개 시도청)	10월	
	경호부대 자동권총 도입	11월	
	하반기 경호행사 종합 평가 및 개선안 마련	12월	
연중	경호행사 종료 후 평가·분석 및 개선지침 하달	연중	
	주요인사 경호 및 신변보호 활동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통령 등 국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경호처·軍·국제행사 주관부처 등 관계기관

□ 기대효과

○ 경찰경호 전문성 강화로 경호대상자의 안전확보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경호 활동을 실시, 빈틈없는 국정운영 뒷받침

○ 경호 준비단계에서부터 평가·환류 단계까지 부처간 협업으로 현장 중심의 ‘경호업무시스템’ 구축하고 국가 위기사태 예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빈틈없는 경호업무 수행성(Ⅰ-1-일반재정②)			
① 경비경찰활동(2131-311)	일반회계	27.6	1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40%)	신규			515명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전문화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②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40%)	24점	30점	40점	44점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지침·조직·장비 확보 관련 계획 및 관련 공문
③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20%)	31.3점	37.5점	38.5점	42.1점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관계기관회의·현장점검 계획·출장기록·결과보고 등 관련 공문

①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40%)

- **(개요)** 경호업무는 경찰에서 특수성 있는 업무로 4부요인·전직대통령 등 상설경호대 이외에는 전종요원이 없고, 평소 경찰서·지구대·기동대 등에서 기본업무를 수행하다가 필요시 동원되어 경호임무 수행 중으로 동원 경찰에 대한 전문교육은 필수적임
- **(측정산식) 본청 주관, 경호전문화 교육 수강 인원 (전년도 대비 10% 상향 목표)**
- **(목표치 및 산출근거)**
  - ▸**작년 대비 10% 상승한 515명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목표 달성**
  - ▸작년 경호인력풀 대상 468명 교육 실시, 기존 본청 주관 교육은 전국 경호인력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경호특화부대 등 교육 필요 인원을 전국단위에서 선정하여 추가 교육
  - ▸이는 교육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교육계획 및 실시결과는 공문 또는 교관 출장기록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②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지침 마련·조직 확보·최신장비 도입 등) (40%)

- **(개요)** 빈틈없는 경호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지침·장비 등 기반 구축에 노력을 경주, 현장 경찰관들이 경호행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측정산식)** ▸**(A) 경호업무 담당조직·부대 신설(양성) : 건당 10점**
  - ▸**(B) 규칙·지침·매뉴얼 마련 : 건당 7점**
  - ▸**(C) 신형 경호장비 도입 : 장비 1종당 3점**
- **(목표치 및 산출근거) 작년 대비 10% 상승한 44점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 목표치 산출근거>

구 분	'20년	'21년	'22년	평균	'23년 목표
경호 인프라 구축	A(1건), B(2건) 24점	B(3건), C(3건) 30점	B(4건), C(4건) 40점	31.3점	44점

③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20%)

- **(개요)** 경찰의 경호업무의 핵심은 대통령 경호, 국가중요행사 지원 등으로 경호처·외교부·

주한대사관 등 외부 관계기관과 협업 구축 필요. 긴밀한 협업을 위해 사전회의 등 노력 집중

- (측정산식) 경호업무 관련 경찰청 관계기관 협업 횟수(A~C등급)

구 분	'20년	'21년	'22년	평균	'23년 목표
관계기관 협업	A(96건), B(12건), C(3건) 31.2점	A(105건), B(26건), C(3건) 37점	A(112건), B(22건), C(5건) 38.5점	35.6점	41.2점

<경호등급별 가중치>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대 상	갑호(국빈)	을·병호(외빈)	기타 중요인사*
가중치	0.3	0.2	0.1

* 기타 중요인사는 요인보호대상 (59명), 주한 외교사절 3명

- (목표치 및 산출근거) 작년 대비 10% 상승한 41.2점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완벽한 경호행사로 국가 안전 확보	①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40%)	경호경찰 전문화 교육 (작년 대비 10% 교육인원 추가)	**515명**	정량	산출	
		②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40%)	경호업무 담당 조직·부대 신설 건당 10점 전국단위 규칙·지침·매뉴얼 마련 건당 7점 신형 경호장비 도입 장비 1종당 3점	**44점**	정량	결과	
		③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20%)	경호업무 관련 경찰청 관계기관 협업 횟수(A~C등급)	**41.2점**	정량	산출	

*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경호역량 강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경호 실현	(업무Ⅱ-라)

전략목표Ⅲ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기 본 방 향

◇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부응하여 치안활동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관련 법령·제도 정비하여 '선도적 미래치안'을 전개

○ 지난해 마련한 '경찰 미래비전 2050'의 마스터플랜 수립, ▵신규 과제 발굴 ▵치안 R&D 확산 등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기반 조성

○ 첨단 수사기법 개발·증거분석 고도화 등 과학수사 역량 강화

○ 초연결 시대에 증가하는 초국가적 범죄·사이버범죄에 대해 국제 공조·협력 네트워크 내실화를 기반으로 범죄예방 및 검거역량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11	3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미래비전 2050 단기과제 달성률
성과목표 1.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을 구현한다.		**치안 R&D 예산 확보**
	42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조성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견 건수 /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회의체에 상정
	43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과학치안 핵심 인프라 확충 토대 마련	R&D 연구성과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 중소기업지원 과제 신규 확보 건수 / R&D 연구성과 현장활용 제고를 위한 실증관서 확대 / 치안산업대전을 통한 치안장비·기술의 수출상담액
	44 미래치안을 위한 경찰 정보화 기반 고도화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정보화업무 지원도 / 사이버 위험 대응 협업도
	45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기반 조성	치안데이터 발굴·분석 및 활용 지수 / 치안데이터 표준화 연계지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2.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수사기법 기반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과학수사관 현장감식 만족도**
	46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과학수사 활동 지수 / 현장지원 지수 / 대국민 교류 지수
	47 책임수사 지원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범죄분석 지원지수 /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 /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48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수사관 지원 활성화 / 분석결과 탐색·선별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성과목표 3.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49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 홍보지수
	50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 /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 / 재외국민보호 역량 및 글로벌 치안역량 강화 실적
	51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예방 교육 실적 / 사이버 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52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1인당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지수 / 피해 보호조치 건수

전략목표Ⅲ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1) 주요 내용

○ **<과학치안 구현>** 경찰활동에 첨단기술을 접목, **치안환경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안서비스 품질·완성도 제고**

○ **<과학수사 역량 제고>** 고도화된 과학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된 사법환경에 대응**하고 **경찰 책임수사 체제 안착**

○ **<글로벌 치안협력·사이버안보 강화>** UN·인터폴 등 치안 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치안활동 확대**

–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타격을 미치는 사이버 범죄에 총력 대응하여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

⇨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 치안을 구현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미래비전 2050 단기과제 달성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미래비전 2050 단기과제 달성률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0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과학적 대비를 통한 경찰역량 제고 및 국민안전 확보가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경찰 미래비전 20500' 내용 중 단기과제(~27년) 달성율 100%를 '27년 목표치로 설정	달성 과제건수 ÷ 총 과제 건수 × 100	공적 서류* *공문서, 월보, 일보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검증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첨단기술 발전이 촉발한 초연결·초국경 사회는 경험치 못한 위험 야기, **범죄 악용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 조직구조·의사결정·정책추진 과정 등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전면적으로 개편,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비**

○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환경의 변화**와 함께 범죄수법 지능화로 **과학수사 영역 확장·분석기법 다변화에 대한 요구 증대**

– 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의 **첨단 과학수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규 기법 개발·국제인증 획득 등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되었던 **해외여행·국제교류 활동이 본격화, 각국 경찰기관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 강화 필요**

(4) 참고자료

○ 경찰청, ‘2023 주요업무 계획’

○ 경찰 미래비전 2050

○ 경찰청 경찰백서(「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및 경찰통계자료

○ 인터폴 홈페이지(interpol.int)

○ 외교부 재외동포현황(www.mofa.go.kr)

○ 법무부 출입국 통계(www.moj.go.kr)

성과목표Ⅲ-1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미래치안 기반 조성>** 「미래비전 2050」을 바탕으로 **선도적 미래치안 실현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신규 R&D 과제 지속 발굴**

※ 치안 R&D 사업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제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 공신력·권위 있는 회의체에 안건 상정 목표

○ **<치안산업 진흥>** **치안 R&D 성과 현장 적용**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등 관련 생태계 구축 선도

○ **<정보화 기반 고도화>**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조직운영 패러다임을 인력→시스템 중심으로 전환

– 모바일오피스·원격근무시스템 등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업무 경감을 위한 **RPA* 과제 발굴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Robotic Process Automation :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

○ **<데이터기반 행정>** **산재되어 있는 치안데이터를 수집·관리·표준화**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을 구현한다**	**치안 R&D 예산 확보**
관리과제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조성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견 건수 /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회의체에 상정
	치안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R&D 연구성과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 중소기업지원 과제 신규 확보 건수 / R&D 연구성과 현장활용 제고를 위한 실증관서 확대 / 치안산업대전을 통한 치안장비·기술의 수출상담액
	미래치안을 위한 경찰 정보화 기반 고도화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정보화업무 지원도 / 사이버 위험 대응 협업도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기반 조성	치안데이터 발굴·분석 및 활용 지수 / 치안데이터 표준화 연계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치안 R&D 예산 확보	492억	592억	674억	762억	전년 대비 치안 R&D 예산 증가율은 '21년 20.3%, '22년 13.8%로 연평균 증가율은 17.05%임 동 예산은 국가 R&D 전체 예산 중 일부로 편성되는 만큼, 같은 기간 국가재정운영계획(기재부) 상 연평균 증가율에 직접적 영향을 받음 전년대비 국가 R&D 연평균 증가율은 '21년 8.7%, '22년 4.3% 증가로 연평균 증가율은 6.5%임 ※'20년(27.4조)→'21년(29.8조)→'22년(31.1조) 경찰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17.05%)은 국가 R&D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6.5%)보다 매우 높은 2.6배 수준으로, 국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우주·항공·반도체 분야의 R&D 집중 투자 방침 등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서도 국가 전체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6.5%)의 2배인 13%을 상향 달성한 762억 원을 목표치로 설정함	2024년 예산안 중 경찰청 R&D 금액 - 정부안(9월) - 국회안(12월)	2024년 예산안 - 정부안(9월) - 국회안(12월)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가 R&D 사업**은 ①**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타부처와 경쟁하고 ②**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신규사업 반영이 어려움**

– 현장 체감도 높은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핵심 사회간접자본**(SOC)로서의 **역할을 강조**, 대내외 공감대 확보

* (예시) 딥페이크, AI·로봇·블록체인 이용 범죄, 자율주행 해킹, 사이버테러 등

○ **데이터**는 AI·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원천**이나, **치안 관련 데이터**는 각 기능에 **산재·방치**되어 있어 **활용도 저하**

– **치안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분석결과가 실제 현장에 반영되는 내부 경험을 통해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정착**

(4) 참고자료

○ 국정과제(69-3)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 경찰청,「경찰 미래비전 2050」

○ 제1차 치안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19~'23)

○ 2024년도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

○ 과학기술정책연구원(www.stepi.re.kr)

○ 국정과제(11번)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31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조성

□ 추진 배경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다문화 등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빈부·세대·지역 갈등까지 장기·구조적 도전에 직면**

– 또한, AI·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신종범죄 증가** △**법익 침해 양상 분화*** **등 초국경·초연결化**되면서 **치안영역이 급격히 확대**

* 딥페이크, AI·로봇·블록체인·자율주행기술 이용 범죄, 사물인터넷 해킹, 네트워크 감염, AI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 가상현실 속 법익침해, 디지털 이용 범죄 등

– 저출산 심화로 **'인력 중심의 경찰 조직 운영체계' 전환도 시급**한 과제

○ 미래치안 대비가 **지체될수록 국민안전·국가안보 위협은 증대**되는 만큼, '선도적 미래치안'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긴요

□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 경찰 미래비전 2050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체계적 이행 】

○ '선도적 미래치안' 원년에 걸맞게 **'경찰 미래비전 2050'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3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행**

– '과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연구 산업 진흥계획'** 및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유관부처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 미래치안정책국의 **업무처리 절차**를 **'치안 R&D–실증–현장적용–치안산업 진흥'의 유기적 선순환 구조**로 정립 추진

○ ▵기술 발전 ▵신규 치안수요 등장에 따라 **기존 업무체계나 조직구조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 발생 시

– **미래치안정책국장**(미래치안정책과장) 주관 **실무 TF를 운영**하는 등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비

【연구개발 과제 확대】

○ ’15년부터 매년 R&D 예산을 증액하고 주요 **수행부처·기관과 협업을 외연을 확대하면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지속 발굴 중**

▸ **(예산)** ’20년 225억 → ’21년 492억 → ’22년 592억 → ’23년 674억
▸ **(신규 과제)** ’20년 6개 → ’21년 8개 → ’22년 8개 → ’23년 9개

–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경찰 미래비전 2050’ 등과 연계, **단기~중장기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 확대 추진**

○ **축적한 치안R&D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局 내 **과학기술개발과**(연구진행)–**치안산업팀**(실용화)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실효성 강화**

– **연구성과평가법* 시행**(’22.6. 시행)에 맞추어 △**R&D 성과평가** △**R&D 추적 평가**의 **내실을 기하는 등 사업관리 체계화**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 **(제 7조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함
▸ **(제19조②)**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의 사업에 대하여 효과성 분석을 하여야 함

【 선도적 미래치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

○ △치안리빙랩 △스마트 CPTED 등 **미래치안 거버넌스 확대** 및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도록 지속 관리**

▸ **(예시①)** 지역 내 대학들과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MOU 체결 △치안 관련 R&D 발굴 및 사업 추진 협력 △과학치안 분야 학술교류 및 공동 연구 등
▸ **(예시②)** 치안리빙랩 도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모델 발굴 등

– **지역단위 사업에 치안 요소가 반영**되도록 **경찰청에서 상시 컨설팅**

○ ’30년까지 국가 R&D 예산의 1% 수준인 3,000억까지 증액을 목표로 **과기부·기재부 및 전문기관·학계와의 협업 외연 확대**

※ △과기부 국장급 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경찰 미래포럼 초청 특강 등

– △치안정책연구소·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업, ‘선도적 미래치안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연2회)를 개최**하고, △미래치안과 관련된 **기술 동향 및 수요 분석 등 자료**도 **주기적으로 배포**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27년도 R&D 중기사업 계획 작성, 기재부·과기부 제출	1월	
	신규 치안 R&D 사업 중 우선순위 선정	2월	
	경찰 미래비전 2050 이행 방안(마스터플랜) 설계	3월	
	'24년도 신규 요구 사업 과제 기획	3~4월	
2/4분기	미래치안 관련 기술동향 배포	5월	
	'24년도 치안 R&D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4~5월	
	선도적 미래치안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6월	
3/4분기	'24년도 예산안(정부안) 심의 대응, 협의 및 조정	6~9월	
	선도적 미래치안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9월	
4/4분기	'24년도 치안 R&D 예산 국회 심의 대응	9~11월	
	'24년도 치안 분야 R&D 투자 우선순위 제출(과기정통부)	10월	
	미래치안 관련 기술동향 배포	11월	
	치안 R&D 사업 연차평가 실시	12월	
연중	치안 R&D 신규 과제 수요 조사	1~12월	
	미래치안 관련 내·외부 공감대 확산 주력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경찰**이 **'선도적 미래치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더 넓게 보면 **국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경찰>** 과학수사 등 **수사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경찰행정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 증진**과 **인력 중심의 업무체계 전환**도 기대

– **<국민>** 범죄 예방·예측·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확고하게 보호'**하고, 치안시스템 고도화로 **국가 이미지 제고·국가경쟁력 강화**

– **<치안산업>** 치안R&D 확대로 치안산업의 기틀을 닦게 될 경우 **수출과 치안 ODA가** 확대 되는 등 **경제적인 성과도 창출 가능**

※ 2021년까지 치안 ODA 등 115개국 9,753명에 선진치안시스템 전수

○ **(이해관계자)** 관련 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및 연구·전문기관(KIST, KISTEP, KIAT) 등과 치안 R&D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 기대효과

○ **과학치안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보다 효율적·선제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안전 확보 기대**

– 「미래전략 수립–치안R&D–제품화–산업 진흥」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함으로써 **수출증대, 투자유치** 등 **경제적 효과 거양**

– 아울러, 발전된 역량을 타 부처 및 국외 등으로 확산하여 경찰청 및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치안 안정과 경제 발전의 상관 관계>

▸ **(법질서 준수지수와 경제성장, '91~'03)** OECD 30개국 중 27위(4.3점) : OECD 평균(5.4점) 시 경제성장률 0.99~1.08% 상향(KDI, '07)

▸ **(테러와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 국내 테러 1건당 경제성장률이 0.2%, 국제테러는 0.4% 각각 하락(Gaibulloev·Sandler, 2008)

▸ **(치안과 야간 경제)** '12년부터 파리·취리히·런던·뉴욕 등 야간시장을 임명하여 야간경제 활성화 노력 / 우리나라는 방역으로 야간 영업이 제한되자 소상공인 보상에 나선 바 있음 * '21년 29조원(6회), 24.6조원('22년 추가경정예산)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부는 농림산업부로, 건교부는 건설교통산업부란 생각으로 **산업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함께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 <대통령, '22. 10. 28. 비상경제민생회의>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정책연구개발(R&D)	일반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기술 개발(400)	일반	11.4	5.1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 2.0, 402)	일반	53.5	79.2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613)	일반	1.70	10.9
■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620)	일반	135.3	58.2
■ 경찰건강 스마트관리(715)	일반	0	63.8
■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621)	일반	32.4	12.2
■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631)	일반	66.6	80.8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634)	일반	182.8	222.6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634)	일반	16.4	22.0
■ 경찰장비 개선(706)	일반	12.4	24.4
■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707)	일반	17.9	37.6
■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기술 개발(709)	일반	0	23.4
■ 사이버수사 지원 기술 개발(710)	일반	0	18.7
■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713)	일반	0	1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건)(60%)	8	8	9	10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래치안정책국 출범 첫 해를 맞아 치안 R&D 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최근 3년 평균(8.3건)의 20%(1.7건)을 상향한 10건의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설정**	치안현장 문제해결 신규과제 발굴 건수(치안분야 R&D 신규과제 발굴 건수)	정부예산안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안)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회의체*에 상정(40%) (「과기관계장관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	-	1	**'18년에 이어 수립하는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안)을 종전처럼 경찰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과학기술 분야의 공신력 있는 주요 회의체에 상정하여 추동력·범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안건상정 목표 설정**	「과기관계장관회의」 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상정	「과기관계장관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자료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조성	①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60%)	치안현장 문제 해결 신규과제 발굴 건수(치안분야 건수)	10	정량	산출	예산안
		②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안)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회의체에 상정(40%)	'18년에 이어 수립하는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안)을 종전처럼 경찰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과학기술 분야의 공신력있는 주요 회의체에 상정하여 추동력·범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안건상정 목표 설정	1	정량	산출	회의자료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조성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69-3)

32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과학치안 핵심 인프라 확충 토대 마련

□ 추진배경

○ 첨단 기술발전에 수반한 국민안전·국가안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R&D)과 더불어 **민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치안산업 진흥 연계가 중요**

○ 연구성과물의 현장 적용·확산 등 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현장 실증으로 완성도를 높여 활용도 제고**

※ 수출 활성화 및 첨단 기술·산업 육성 등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대통령, '23.1.9.)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① 현장지원 및 국민안전 R&D 추진

○ **(현장경찰)** 현장지원 기술 및 경찰 역량 향상·건강관리 R&D

–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 기술)** 긴급출동 시 현장경찰관에게 실시간 상황분석 및 대응정보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

– **(IoT, AI 기반 경찰 인적관리 항상성 플랫폼 개발)** IoT, AI기반 직무–건강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경찰 건강 통합관리 플랫폼



112 출동업무 지원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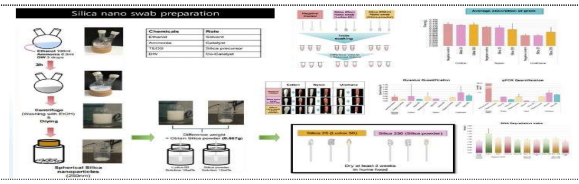


건강데이터 관리·분석 체계 플랫폼

○ **(과학수사)** 범죄수사 고도화 및 현장안전 확보 R&D

–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기술)** DNA로부터 대상자의 외모, 습벽 등을 추론하는 감식기술 및 섭식 곤충을 분석하여 시신의 사망 정보를 획득하는 데이터 구축

– **(국민위해인자 대응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테러·재난·범죄현장에서 유해기체에 의한 2차 피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위해 기체 포집·식별 장비 및 대응시스템 개발



범죄현장 적용 첨단 DNA 감식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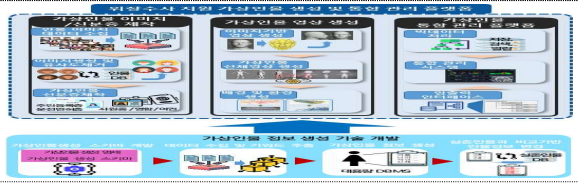


기체분자 식별·분석시스템

○ **(사이버수사)** 사이버 수사 지원 및 불법 드론 대응 R&D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 및 관리기술)**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가상 인물 생성 및 신분증·사진 제작기술을 확보하여 위장 수사를 지원해 주는 기술개발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국가주요시설**(원전, 공항 등) **대상 불법 드론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캅 및** 포렌식 기반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위장수사 지원 가상인물 생성·관리 지원 체계



드론 저장장치 식별 및 포렌식 분석

○ **(대국민 치안서비스)** 국민안전 위협요인 감지 및 범죄예방 R&D

–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기술)** '심박스'(국제전화를 국내번호 010으로 변작) 탐지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콜센터 추적, 범죄 발생 전 단속 전개 기술

– **(치안현장용 정밀측위 지원 플랫폼)** 정밀측위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민·현장경찰 아이디어 수집 및 개발·검증 플랫폼 구축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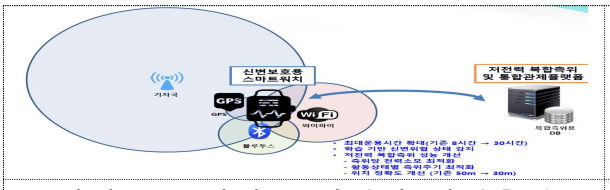
치안현장용 정밀측위 지원 플랫폼 구축

○ **(사회적 약자보호)** 피해자 지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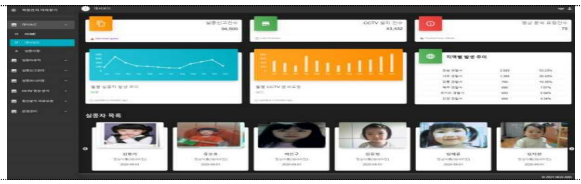
– **(안전조치 대상자 단말용 위치추적)** △저전력 복합측위 △현장출동 지원 근접탐색 기술 △통합관제 기술 등 범죄피해 안전조치 대상자 지급용 단말기(스마트워치) 기술 개발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복합인지 원천기술 및 ICT를 활용한 실종자 추적기술 개발 등 미래형 사회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고령 등 안전운전 저해 우려가 있는 자의 개인별 운전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평가도구 개발



신변보호 단말용 저전력 위치추적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②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

○ 기술패권 시대 저성장 시대 도래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필요**

○ 중소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선 계속사업 예산지원·협약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확대 노력 필요**

*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 대상으로 KOSBIR(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경찰청은 '22년 최초 시행**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조건 >

► **(대상 사업)** 시행기관(24개소*)의 연구개발예산 사업 중 당해연도 중소기업 R&D 지원계획에 반영한 모든 사업

* △정부 기관(17) : 과기부, 행안부, **경찰청** 등 △공공기관(7) : 한국전력공사 등

► **(지원 자격)** 시행기관의 연구개발예산사업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

※ △중소기업 지원액이 30% 이상인 사업 △중소기업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R&D를 지원하는 사업

③ 치안 R&D 연구성과 현장 적용

○ 치안 R&D 연구성과 결과물에 대한 현장 적용 내실화를 위해 **현장 실증을 통하여 대내·외 의견 반영 필요**

– R&D 과제별 현장 실증관서 지정을 통한 실증 및 시연 추진

GPS발사체 도주차량 추격용 시스템	경량, 내충격성 경찰부대용 안전방패	경찰부대용 신형 보호복 개발
		
투척·발사형 GPS 발사체 및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	복합소재 패널로 강도 및 경량성을 확보한 방패 개발	경량성·내구성·편의성을 가지는 보호복 개발
GPS발사체 도주차량 추격용 시스템	**무인순찰 4족 로봇 시스템 개발**	**AI기반 위변조 영상판독 기술 개발**
		
겹친 지문들을 신속하게 분리하는 시스템 개발	순찰업무 지원·보조할 수 있는 4족 보행 순찰 로봇 시스템 개발	합성·조작 영상의 진위 여부를 자동 검출 시스템 개발

○ 실증관서 지정 확대를 통해 **R&D 연구성과 공유 및 개선사항을 발굴·반영하여 연구성과 완성도 및 현장 활용성 제고**

④ 치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출실적 확대

○ 4차 산업 혁명 시대, 범죄의 첨단화·지능화·복잡화 추세에 대해 과학적 대응과 **치안산업 진흥* 등 치안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치안 관련 신규 창업지원, 핵심기업 육성, 국외판로 지원

○ 치안 분야 기술·장비의 상용화·사업화 등 치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 **국내 우수한 치안과학 기술 역량에 대해 대·내외 홍보, 수출실적 확대**

○ **진성 해외바이어 확보를 위한 홍보 추진**

– **(방문 체험)** 해외바이어들이 경찰특공대 등 현장에 방문, 경찰장비를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 가능성 제고

– **(해외 전시 참여)** 국외 전시에 참여, 국내 기술 홍보

– **(타 기능 협업)** 외사국과 협업, 국내 치안에 관심이 많은 해외경찰·바이어들 적극적으로 초청

<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 추진성과 >

► **(참관객)** 15,213명(일반국민 8,711명 · 경찰 6,273명 · 해외경찰청장 및 바이어 229명)

※ 전년도 대비 총 참관객 99.% 증가↑(7,616명→15,213명)

► **(전시규모)** 총 441개 부스(기업 312, 경찰청 79, 수출상담회 등 50)

※ 기업 46.% 증가↑(312부스→456부스) 및 수출상담회 등 270% 증가↑(50부스→185부스)

► **(수출실적)** 해외 바이어 총 18개국 / 1억 2,577만불 규모 상담,
△한국형 전자충격기 △AI CCTV △드론 △대테러 장비 등 3,817만불(534억원) 상담실적

► **(언론보도)** 「(뉴데일리) "휴대용 마약키트부터 도주차량 추적장치까지...과학치안 시대 열렸다」 등 **280여 건** ※ 경찰장비·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도 실용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1월	
	폴리스랩 2.0 신규과제 공고	1월	
	폴리스랩 2.0 선기획 과제 선정 평가	2월	
	과학치안 R&D사업 현장자문단 모집(운영)	3월	
	23년도 실용화사업 신규 과제 공모 및 선정	3월	
	유관박람회 참석 국제치안산업대전 홍보관 운영	4월	
2/4분기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사업 신규과제(단기치안) 선정 및 연구협약	4월	
	현장자문단 워크숍 개최 및 선기획 과제(폴리스랩 2.0) 착수보고회	5월	
	폴리스랩 2.0 계속과제 실증관서 지정	5월	
	폴리스랩2.0 선기획연구(9개) 평가 및 본연구 과제(3개)선정평가	6월	
	치안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6월	
3/4분기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사업 신규과제(기초원천) 선정 및 연구협약	7월	
	폴리스랩 2.0 본연구 과제 선정 및 연구협약	7월	
	폴리스랩 2.0 본연구 과제 협력국관 대상 협업 매칭 데이 개최	8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관련 주최 주관 회의	9월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사업 계속과제(단기치안) 실증 추진	9월	
4/4분기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10월	
	폴리스랩 2.0 현장자문단·과제관리자(PM) 실증관서 방문	10월	
	과학치안 R&D 현장자문단 세미나(국제치안산업대전 내) 개최	12월	
	24년도 실용화사업 시행계획 수립·검토	12월	
	R&D 사업별 운영 과제 연차점검	12월	
연중	실용화사업 사업관리	연중	
	과제별 진행 상황 점검·모니터링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치안R&D’, ‘국제치안산업대전’ 등을 통해 경찰의 치안 활동이 과거 인력 중심에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환

– 범죄수사·검거능력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내부 만족도가 큰 폭으로 향상**

–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한 과학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에 대한 안전확보에 기여**

– 또한,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경제발전 및 국내 우수 치안장비·기술의 해외 전수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 **(이해관계집단)** 중앙부처(과기부, 기재부 등) 및 연구·전문기관(KIST, KISTEP 등) 등과 치안R&D 확산을 위해 정책적 협업 관계 유지

□ 기대효과

○ ’15년 치안R&D 시작 이후 연구성과가 도출되는 시기가 도래, 성과에 대한 **산업화를 통해 현장 도입 및 활용** 적극 추진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치안산업 분야 신규 과제 발굴과 내실 있는 관리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 ‘치안산업 R&D’ 및 ‘국제치안산업대전’ 추진을 통하여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지원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정책연구개발(R&D) ■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707)	일반	17	37

	회계구분	'22	'23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400)	일반	1,147	517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402)	일반	5,350	7,920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613)	일반	1,706	1,096
■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 (620)	일반	13,536	5,882
■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621)	일반	3,244	1,244
■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631)	일반	6,661	8,081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634)	일반	18,288	22,260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635)	일반	1,640	2,200
■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기술 개발(709)	일반	-	2,340
■ 사이버수사 지원기술 개발(710)	일반	-	1,872
■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713)	일반	-	1,500
■ 경찰건강 스마트 관리(715)	일반	-	6,38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3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20</th><th>'21</th><th>'22</th><th>'23</th></tr>
<tr><td>① R&D 연구성과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점)
(30%)</td><td>-</td><td>-</td><td>80.5</td><td>81.3</td><td>'15년에 시작된 치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가 창출되면서 현장 실증 등을 통해 현장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통한 성과 측정

'22년은 목표치 79.3점 보다 1.2점 높은 80.5점을 달성
다만 '22년 최초 측정한 성과지표로 최근 3년치 평균값 설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유사 만족도 지표인,
1.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 만족도,
2. 과학수사 대국민 만족도,
3. 경찰장비 현장 만족도의
각 전년도 대비 평균 0.76점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증가점수 10%↑ 상회하는 81.3점을 목표로 설정
‣ 유사만족도 추이
<table><tr><td></td><td>'20년</td><td>'21년</td><td>'22년</td></tr><tr><td>수사</td><td>67.4</td><td>64.7</td><td>64.6</td></tr><tr><td>과학</td><td>77.1</td><td>79.4</td><td>80.2</td></tr><tr><td>장비</td><td>83.6</td><td>85</td><td>86.6</td></tr></table></td><td>만족도 조사 점수
(각 조사 부분 만족도의 평균)</td><td>전자우편 및 설문조사</td></tr>
</table>

② 중소기업지원 과제 신규 확보 건수(억원) **(30%)**	신규	6	6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승세가 없던 2년간 실적치 대비 17% 높은 7건으로 목표설정	'24년 중소기업 지원 신규과제 수	'24년 정부 예산안
③ R&D 연구성과 현장활용 제고을 위한 실증관서 확대 (건) **(20%)**	7	11	7	10	최근 3년치 평균값의 10% 이상으로 설정	R&D 과제 실증 관서 확대 건수	실증관서 확대 (치안정책 시범운영 가점)
④ 치안산업대전을 통한 치안 장비·기술의 수출상담액(억원) **(20%)**	452	407	534	525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위축된 치안산업계의 진흥·육성을 위하여 지난 3년간 추세치의 10% 높은 525억원으로 도전적 목표설정	계약서 명시 수출상담액 ('23년 수출상담액)	국제치안산업대전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공식집계 (KOTRA)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과학치안 핵심 인프라 확충 토대 마련	① R&D 연구성과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점수 (각 조사 부분 만족도의 평균)	81.3점	정량	산출	
		② 중소기업지원 과제 신규 확보 건수(건)	'24년 중소기업 지원 신규과제 수	7건	정량	산출	
		③ R&D 연구성과 현장활용 제고를 위한 실증관서 확대(건)	R&D 과제 실증 관서 확대 건수	10건	정량	산출	
		④ 치안산업대전을 통한 치안 장비·기술의 수출상담액(억원)	계약서 명시 수출상담액 ('23년 수출상담액)	525억원	정량	산출	

33 미래치안을 위한 경찰 정보화 기반 고도화

□ 추진배경

○ 미래치안정책국 출범을 통해 경찰은 장비·시스템을 혁신하고 인력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경찰 운용 패러다임을 개선 중

○ 이에, ICT 장비·시스템을 미래치안에 맞게 더욱 고도화하고 선도적 첨단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치안 행정의 디지털화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미래치안을 위한 첨단 치안 인프라 구축]

○ **신기술 기반 디지털 미래치안 인프라 도입**

– **(플랫폼)** 경찰청의 모든 정보자원을 분석, 중복자원 제거 및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경찰청 디지털플랫폼 구축** 추진

※ 국정과제「디지털플랫폼정부」및 경찰청「미래비전 2050」과 연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구성,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 확보 추진

– **(보안관제)** 초연결사회 도래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지속 증가, 차세대 보안시스템인 **지능형보안관제시스템 도입** 추진

※ 경찰청「미래비전 2050과 연계, 시장조사 및 구축 예산 확보 추진

○ **초연결 시대에 걸맞은 경찰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

– **(유선망)** 정보시스템 및 처리하는 데이터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대용량 처리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무선망)**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안전 관련 기관별(소방·경찰·해경·산림청) 분산된 현장 영상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는 **재난현장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협약 체결** 추진

[정보화 서비스 고도화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공간을 초월한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 **(모바일오피스) 간단한 업무처리는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필수업무 시스템을 시작으로 全 경찰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추진

※ '23년(2단계) 사업으로 화상회의, 폴-조회 등의 PC 기능을 모바일化 하고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 '24년(3단계)까지 기능 확대 추진

– **(원격근무시스템) 사무실 외에서도 동일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접속인원 확대 ▵클라우드 용량 증가 등 고도화 추진

○ 맞춤형 정보화 서비스 제공, 현장 업무 효율성 제고

– **(RPA)** 일선에서 필요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업무를 발굴,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자동화**' 추진

– **(모바일장비) 지역경찰 등의 현장 휴대서류 모바일화 등** 모바일 장비(폴리폰) 서비스 개선, 현장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

[경찰청 全 기능을 지원, 경찰 정보시스템 품질 강화]

○ 정보화사업 전문조직 운영 활성화로 디지털 전환 촉진

– **(사업관리)** 모든 국·관의 정보화 사업 중 대국민 중요성과 사업의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체계적 사업관리 지원**

– **(기술지원)** 정보화사업의 위험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등 **全 단계에 걸쳐 전문성 있는 검토와 피드백을 제공**

※ 주요 역할 : 제안요청서 작성, 기술협상, 사업 산출물 점검 등 지원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자원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자원 공동사용'을 위해 H/W·S/W 등 정보자원을 '공용 클라우드' 형태로 도입

– **(통합유지관리)** 국·관에서 개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통합,** 자원 중복성 등 제거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유지관리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 '23년 65개 정보시스템을 통합유지관리

[주요 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사이버 위협에 대비 기술적·인적 보안 강화**

– **(보안시스템)** 다양한 사이버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보안시스템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무선도청탐지시스템 확대 구축 △내PC지킴이시스템 고도화 등

– **(교육·훈련) 이메일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근무자별 대응능력 차이를 보완하고 全 직원의 **보안 의식 제고**

※ △해킹메일 훈련 △보안 교육 확대 △보안감사 실시 등

○ **선제적 대응으로 주요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안정성 확보**

– **(발굴개선)** 대국민, 경찰업무용 등 다양한 시스템 운영 과정에 기능개선 등 **요구사항을 발굴, 신속한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증대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게시판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용

– **(노후장비교체)** 업무용 전산장비·서버단말기·방화벽 등 **각종 정보통신장비를 적시에 교체 보급**해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유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3년「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계획 수립	1월	
	경찰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제4차) 추진계획 수립	2월	
	경찰청 정보화사업관리 추진계획 수립	2월	
	재난안전통신망 담당자 워크숍 계획 수립	2월	
	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2단계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3월	
	전국 경찰관서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계획 수립	3월	
	경찰청 원격근무시스템 확대 구축 계획 수립	3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무선장비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계획 수립	3월	
	비밀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계획 수립	3월	
2/4분기	전국 경찰관서 노후 PC 등 교체 사업계획 수립	4월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SW 보급계획 수립	4월	
	모바일 프린터 구매 및 교체 계획 수립	4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원통합사업 수요조사 제출	4월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SW 보급 완료	6월	
	경찰청 원격근무시스템 확대 구축 완료	6월	
	RPA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분석	6월	
	’23년 정보보호 직무전문화 교육계획 수립	6월	
	’23년 경찰 해킹메일 대응 훈련	6월	
3/4분기	경찰 모바일 단말기 구매 계획 수립	7월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7월	
	’23년 경찰 홈페이지 대상 공격(DDOS) 대응 훈련	8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9월	
	시도청 대상 폴조회 확인 감독 실태점검(합동점검)	9월	
	‘24년 제6차 통합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9월	
4/4분기	다부처 공동 출연사업(영상공유시스템) ISP 결과 보고	10월	
	내PC지키미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10월	
	비밀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완료	11월	
	전국 경찰관서 보안감사 계획 수립	11월	
	전국 경찰관서 노후 PC 등 교체 완료	11월	
	전국 경찰관서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완료	11월	
	모바일 오피스 2단계 시범 서비스 및 안정화	12월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12월	
	정보화사업관리 운영 성과 보고	12월	
	제5차 통합유지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모든 국민 및 경찰청 全 직원

○ **이해관계집단** : 경찰통신망,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장비 등의 구축·운영·고도화와 관련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기관과 관련 업체 등

□ 기대효과

○ 경찰청 디지털플랫폼 등 첨단 치안 인프라 구축과 함께 경찰청 全 기능이 제공하는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한 차원 도약 기대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통합 ▵전문조직의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관리 지원 등 경찰청 전체의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품질 제고

○ ▵정보화 서비스 고도화 ▵업무 자동화 등 선제적이고 내실 있는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경찰이 보유한 범죄경력,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경찰 내부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을 사전 예방하여 경찰 전산망의 안전한 운영을 통한 대국민 치안서비스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Ⅲ-2-일반재정(3))			
① 경찰유무선망개선(4233) ▪ 경찰유무선망개선(311)	일반회계	637	685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Ⅲ-2-정보화(1))			
①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4234) ▪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511)	일반회계	659	6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30%)	118	121	140	151.9	아래참조	아래 참조	- 시스템 통계 활용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20%)	83.1	86.7	87.4	87.5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고객만족센터 의뢰 및 시스템 통계 활용
정보화업무 지원도(30%)		57	94	155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시스템 통계 활용
사이버 위협 대응 협업도(20%) <신규지표>	91	70	103	88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시스템 통계 활용

목표치 산출근거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151.9점**

- 경찰청 정보화기반과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를 측정
- ① 통합포털 폴넷(20%) ② 스마트국민제보(30%) ③모바일전자고지(30%) ④ 폴메신저(20%) 4개 시스템 활용도를 반영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지표는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선의 결과로서 3년간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 목표치는 '22년 실적에 **상승 추세치 8.5%를 적용**하여 매우 도전적(적극성上)으로 설정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87.5점**

- 국민 및 전국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전국 경찰관서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국민 대상 '스마트국민제보 만족도'를 포함, 입체적으로 조사·반영
- 최근 3년간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가 지속 상승(**5년 내 최고 만족도 달성**), 만족도 실적이 임계치에 달하여 금년 목표치는 '22년 실적 87.4점보다 0.1% 증가한 87.5점을 적용

○ **정보화업무 지원도 : 155점**

- 경찰청 전체의 정보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종료까지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각 기능의 요청에 따라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발
- 금년 목표치는 '22년 실적에 **상승세 64.9%를 적용**하여 155점으로 설정, 매우 도전적(적극성上)으로 목표 수립

○ **사이버 위협 대응 협업도 : 88건**

-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탐지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타 기관 등에 공유 필요
- 최근 3년간 실적이 상하로 등락(하강 후 상승 국면), 금년 목표치는 **3년간 평균치인 88건을 적용**하여 매우 적극적(적극성上)으로 설정

측정산식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① 통합포털 폴넷(20%) + ② 스마트국민제보(30%) + ③모바일전자고지(30%) + ④ 폴메신저(20%)

※ 세부 기준은 다음페이지 <붙임> 참고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내부 직원 만족도(80%) + 대국민 만족도(20%)

▸ **내부직원(80%)**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장비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센터 의뢰 설문조사 실시>

▸ **대 국 민(20%)** : 스마트국민제보 만족도 <시스템 內 신고자 만족도>

- 만족도 평정부여는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의 7개 척도(매우불만족 : 0, 불만족 : 16.7, 다소불만족 : 33.3, 보통 : 50, 다소만족 : 66.7, 만족 : 83.3, 매우만족 : 100)의 점수를 활용

○ **정보화업무 지원도**

- 정보화사업 수행 지원,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 각 국관(시도청 포함)의 정보화업무 지원 요청에 대한 협력 사항을 항목별 배점표에 의해 산출

<항목별 배점표>

점수	중기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발주 지원	제안요청서 작성·검토 지원	정보화사업 사업 관리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	**건당 1점**	**건당 2점**	**건당 2점**	**건당 1점**

○ **사이버 위협 대응 협업도**

- 국정원에 운영 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NCTI)에 등록한 건수

< 붙임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평가 세부기준

① 통합포털 폴넷 일평균 이용건수 (20%)

▪ 이용건수 : 게시물 등록건수 + 조회건수

건수	~ 332,760건 (90%↓)	332,761건 ~ (90%)	369,734건 ~ (100%)	406,707건 ~ (110%)	443,680건 ~ (120%)	480,654건 ~ (130%)	이후 10% 상승시마다
점수	16점	18점	20점	22점	24점	26점	2점씩 가산

② 스마트국민제보 일평균 처리건수 (30%)

▪ 처리건수 : 국민신고·제보 건에 대한 업무담당자 처리건수

건수	~ 4,828건 (90%↓)	4,329건 ~ (90%)	4,809건 ~ (100%)	5,289건 ~ (110%)	5,770건 ~ (120%)	6,251건 ~ (130%)	이후 10% 상승시마다
점수	24점	27점	30점	33점	36점	39점	3점씩 가산

③ 모바일전자고지 연간 이용건수 (30%)

▪ 이용건수 : 각종 고지서(全 기능)의 모바일 발송건수

건수	~ 534,449건 (90%↓)	534,450건 ~ (90%)	593,833건 ~ (100%)	653,216건 ~ (110%)	712,599건 ~ (120%)	771,982건 ~ (130%)	이후 10% 상승시마다
점수	24점	27점	30점	33점	36점	39점	3점씩 가산

④ 폴메신저 일평균 이용건수 (20%)

▪ 이용건수 : 폴메신저 쪽지 발신건수

건수	~ 509,494건 (90%↓)	509,495건 ~ (90%)	566,105건 ~ (100%)	622,715건 ~ (110%)	679,326건 ~ (120%)	735,936건 ~ (130%)	이후 10% 상승시마다
점수	16점	18점	20점	22점	24점	26점	2점씩 가산

※ 항목별 기준값은 3년 평균치 또는 전년 기준 대비 10% 상승값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3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4">① 미래치안을 위한 경찰 정보화 기반 고도화</td><td>①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30%)</td><td>① 통합포털 폴넷(20%) + ②스마트국민제보(30%) + ③ 모바일전자고지(30%) +④ 폴메신저(20%)</td><td>151.9</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②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20%)</td><td>만족도 조사 결과</td><td>87.5</td><td>정성</td><td>결과</td><td></td></tr>
<tr><td>③ 정보화업무 지원도(30%)</td><td>지원 항목에 대한 건당 점수 합산
<table><tr><th>지원 항목</th><th>건당</th></tr><tr><td>중기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발주 지원</td><td>1점</td></tr><tr><td>제안요청서 작성·검토 지원</td><td>2점</td></tr><tr><td>정보화사업 사업 관리</td><td>2점</td></tr><tr><td>정보시스템 기능 개선</td><td>1점</td></tr></table></td><td>155</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④ 사이버 위협 대응 협업도 (20%)</td><td>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NCTI) 등록 건수</td><td>88</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able>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미래치안을 위한 경찰 정보화 기반 고도화	디지털 네트워크 고도화 (업무 Ⅳ-다) 사이버위협 대비 보안의식 및 정보보호 역량 제고 (업무 추진-나) 공간을 초월한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업무 추진-나) 경찰청 정보화사업 고도화 (업무 추진-나)

34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기반 조성

□ 추진배경

○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치안 빅데이터를 수집·관리·분석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활성화 필요**

※ 관련근거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3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구현**을 위해 산재되어 있는 **치안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데이터 수집·표준화)** 경찰청 다양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현황 파악** 및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분석 기반 마련**

- **기능별**로 운영중인 **시스템**을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별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표준화 추진**

※ 치안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하고자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22년)하고 데이터 관리 전담조직(데이터정책팀) 신설('23년)

- 시스템 신규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적용되는 **'예방적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마련** 데이터 품질 제고

○ **(데이터 분석·활용)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데이터분석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정책효율성 제고**

- 경찰청 각 **국·관 대상 수요조사**와 현장 근무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추진**

○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분석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신규 채용**하고, **내부인력** 대상 **단계별 데이터 분석 교육**과정 운영

- 최초로 **'데이터 분석관' 경력경쟁채용** 실시, 외부 우수인재 영입

※ 데이터 분석 등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를 순경으로 채용 추진

- 내부 데이터분석 교육을 **초급·중급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교육 참여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해 **효과 극대화**

※ 과정별 교육과정 운영(案)

구 분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인원	교육기간
초 급	빅데이터 활용능력 교육	인재개발원	20~40명	2~4주
중 급	데이터 분석역량 개발과정	대학	10명	20주

○ **(공공데이터 활성화)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외부에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

- 대국민 치안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데이터 개방에 반영**해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2월	
	'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3월	
2/4분기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5월	
	빅데이터 활용능력 교육 실시	6월	
	치안 관련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실시	6월	
3/4분기	데이터 분석관 경력경쟁채용 실시	7월	
	데이터 분석역량 개발과정 실시	8월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표준안 제정	9월	
4/4분기	경찰청 과·계장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 진행	10월	
	'23년 데이터 분석과제 자체평가회의 개최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정부 각 부처, 대학·연구소 등연구기관

○ 이해관계자 : 없음

□ 기대효과

○ 치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정책에 반영, **과학치안을 구현**함으로써 **치안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경찰 장비와 정보화 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Ⅳ-2-일반재정②)			
①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4234) ■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511) -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분석 활용		3,624백만원	757백만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치안데이터 발굴.분석 및 활용 지수		9.2	8.6	9.3	○ 매년 데이터분석 수요를 발굴, 분석 후 소관 기능에 제공하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 중 ○ 전년도에 데이터분석 및 활용 지수가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2021년 실적치(9.2)보다 높은 9.3점으로 도전적 목표치 설정	데이터분석수요 발굴(건)×0.4+ 데이터분석(건) ×0.4+정책반영(건)×0.2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적 평가에서 인정된 발굴.분석.정책반영 실적 활용
치안데이터 표준화 연계 지수			0.74	0.815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후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해 경찰청 내부 시스템들과 연계작업 추진 * 국관 보유 메타데이터(데이터 속성, 형식 등) 종합관리 ○ 금년에는 전년도 실적치인 0.74 대비 10% 이상 상승한 0.815로 도전적 목표치 설정	메타데이터시스템 연계 시스템(개) ÷ 전체 경찰청 시스템 중 연계 가능 시스템(개)	연계 가능 시스템은 범정부EA포털에 등재된 경찰청 시스템 기준 ※ 망분리 등 사유로 물리적으로 연계할 수 없는 시스템은 제외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①치안데이터 발굴.분석 및 활용 지수(신규)	데이터분석수요 발굴(건)×0.4 +데이터분석(건) ×0.4 +정책반영(건)×0.2	9.3	정량	결과	
		②치안데이터 표준화 연계지수(신규)	메타데이터시스템 연계 시스템(개) ÷ 전체 경찰청 시스템 중 연계 가능 시스템(개)	0.815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②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업무 1-11)

성과목표Ⅲ-2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수사기법 기반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과학수사 역량 제고>** 첨단기법·장비 확충과 국내외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 강화, 과학수사 신뢰도 제고**

○ **<현장대응력 제고>** 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의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구축**, 현장 과학수사 활동 지원

* 다량의 과학수사 데이터를 통합·분석, 유사사건·수사단서 자동 추출 지원

– AI 활용 지문분석 시스템 개발 및 3D 얼굴인식 시스템 고도화 병행

○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및 첨단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책임수사 실현 지원**

– 인력 전문화와 함께 △압수수색 현장지원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 등 **디지털 증거 획득 단계에서의 지원도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수사기법 기반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과학수사관 현장감식 만족도**
관리과제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과학수사 활동 지수 / 현장지원 지수 / 대국민 교류 지수
	책임수사 지원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범죄분석 지원지수 /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 /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수사관 지원 활성화 / 분석결과 탐색·선별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과학수사관 현장감식 만족도	75.8	75.8	77.9	80.0	과학수사관 현장감식 만족도 부문은 '21년 이후 상승,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6.5)을 고려, '23년 목표치는 실적 독려를 목표로 2.1p 높은 80.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고객만족 모니터링 센터 국민 만족도 조사 분야 중 '과학수사' 분야	고객만족 모니터링 센터 조사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검사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 중심 수사**를 위한 **과학수사 역할·중요성 증대**

– 신종 범죄·수법 지능화에 발맞춰 **분석기법을 다변화**하고, **국내외 협력·공인인증** 등을 통해 **과학수사 신뢰도 제고**

– AI·데이터 분석기법 등 접목, **현장 과학수사 활동 효율화**

○ 범죄양상이 크게 변화, **디지털 증거확보가 수사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요·중요성 확대**

– **분석기술·기법 연구 활성화**를 통해 전문역량을 배양하고, 관련 규칙·매뉴얼·장비 등 인프라 정비, **현장 대응역량 강화**

(4) 참고자료

○ 경찰청, ‘2023 주요업무 계획’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홈페이지(www.kcsi.go.kr)

○ 과학수사 기본서 및 과학수사 표준업무처리지침

○ 경찰청 「디지털증거통합관리시스템」

35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 추진배경

○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사법환경 변화로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 중심 수사를 위한 과학수사 역할 및 중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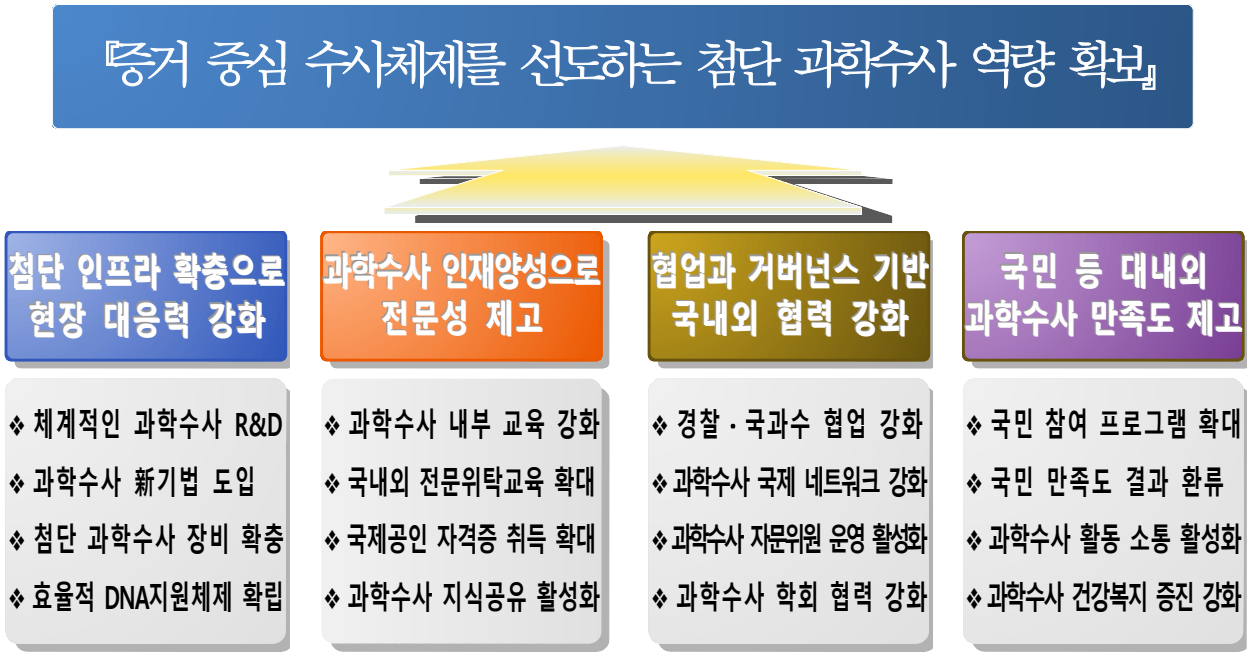
○ 신종범죄 등장, 범죄의 지능화 및 과학치안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수요 변화에 따라 **과학수사 영역 확장과 분석기법의 다변화 요구**

▸ **(수요의 변화)** 증거 중심 수사 정착에 따라 非강력범죄 영역도 과학수사에 대한 수요 지속 증가(비강력범죄 현장임장 : '21년 31,307건 → '22년 36,675건)

▸ **(현장·증거의 다양화)** 초연결사회 등 첨단기술 영향으로 과학수사 현장은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범죄 지능화로 지문 등 고전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짐에 따라 성문·걸음걸이·채취증거 등 새로운 유·무형의 증거 확보를 위한 분석기법 필요

○ **첨단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및 **국내·외 협업**을 기반으로 과학수사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통해 **증거 중심의 수사 체제 견인 추진**

특히 '23년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3년(2대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을 맞이하는 해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완결성 등 책임수사 체제 안착 뒷받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체계적인 과학수사 R&D를 통한 기법·장비 다양화]

○ 과학수사 분야 R&D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

– **<신규과제 발굴>** 산·학·연 전문가 대상 기술 수요조사, 과학수사 전문가 자문,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R&D 과제 신규 발굴

– **<관리·지원>** R&D 과제별* **현장·연구진 間 소통 강화**를 위해 시범운용, 간담회, 컨설팅 등 관리·지원으로 **현장 수요에 부응한 성과도출**

※ △기체분자 분석 △지능형 DNA 감식 △겹친지문 분리 △3D 비접촉 지문 영상 취득 △위변조 영상검출 △법곤충기법 고도화 △지능형 법보행분석 △뇌파 활용 허위진술 판별 △성문분석 고도화 등 9개 과제 R&D 진행 중

– **<완료과제 후속조치>** R&D 종료 후 현장적용 가능한 성과물은 즉시 적용❶,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성과물은 시범운영❷, 보완 또는 실용화 필요시 추가 R&D❸ 등 **연구성과의 수사활용도 제고**

❶ **(즉시활용)** 법곤충기법('20년 종료) 은 '법곤충감정실' 구축하여 현장 도입

❷ **(성과검증)** 생체시료 시각화 기법('22. 12월 종료)은 성과물 실효성 검증 추진

❸ **(추가R&D)** '법곤충기법'('20년 종료)은 고도화를 위해 추가 R&D, '겹친지문 분리'('20년 종료), '법보행분석'('20년 종료), '성문분석'('21년 종료)은 실용화 R&D 진행 중

○ 과학수사 新기법으로 도입한 법곤충 감정 분야 현장 안착 추진

– 법곤충 R&D* 성과물로 '법곤충감정실' 구축·운영개시('22. 5월), '23년 법곤충감정실 운영 활성화로 **본격적인 상용기법으로 활용**

* 변사사건에서 법곤충을 활용한 변사자 사망 시간 추정을 위해 한국형 법곤충 DB 구축 및 사후경과시간 추정 프로그램 개발('16~'20년, 28억원)

법곤충 감정실 개요

- ▸ **구축 장소** : 경찰수사연수원 '사후변성교육센터' 內
- ▸ **주요 업무** : 법곤충 종확인<형태 및 DNA분석>, 사후 경과시간 추정, 관련 연구 등
- ▸ **운영 인력** : 3명(연구사1, 임기제2) ※ 임기제 1명은 '23년 하반기 채용 예정
- ▸ **주요 장비** : DNA 분석장비, 곤충배양 인큐베이터, 실체현미경 등

[첨단 장비 등 인프라 확충으로 현장 과학수사 지원 역량 강화]

○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한 현장 지원 강화**

– △첨단장비 확충 △분야별 인력증원 △신규 증액·사업발굴 △감식·감정실 환경정비 등 **과학수사 현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신뢰도 높고 전문적인 현장 과학수사 활동 뒷받침**

▸ **(장비)** 다파장 광원장비, 진공금속증착장비 등 첨당장비 41종 확충(74억5천만원 상당)

▸ **(인력)** 경찰청 법과학감정센터(과) 신설(21명), 시도청 과학수사과 신설(4명), 과학수사관 인력보강(205명) 등 과학수사관 총 286명 증원 추진

▸ **(예산)** 모의범죄현장 구축, GeoPros 모바일앱 운영, 비파괴검사장비 도입 등 신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과학수사 신규사업 예산 확보 추진

▸ **(시설)** 서울 도봉권·충남 홍성권 등 노후 증거물 감식감정실에 대해 표준모델에 기반한 환경개선, 증거 무결성 및 과학수사관 직무 안전성 강화

○ **첨단 DNA장비 확충 및 시약 보급 등 종합적 DNA 수사지원 강화**

– **<DNA장비·시약 보급확대>** '신속 DNA 분석기'❶ 및 '혈흔반응시약'❷ 등 장비·시약 확대 보급으로 효율적인 DNA 수사감정 지원 강화

❶ **(신속 DNA 분석기)** 국과수 의뢰 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DNA 분석을 현장에서 90분 內 가능, '23년 2대 추가 보급(예산 9억7,400만원)

❷ **(혈흔반응시약)** 과학수사관 자체 개발·특허 제품으로 외산 시약보다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경제적(20% 저렴), 현장 잠재 혈흔 탐지에 탁월

– **<DNA 증거물 신뢰성 제고>** 수사관계자 DNA DB* 확대 및 증거물 오염 사례 분석·공유로 DNA 오염을 줄여 DNA 증거물 신뢰성 강화

* 본인 동의를 통해 사전에 구축된 경찰관 DNA DB로, 범죄현장에 참여한 과학수사관 및 경찰관의 DNA 현장오염을 신속히 파악, 불필요한 수사 방지

– **<DNA DB 확대>** 현장에서 채취된 DNA증거물 일치율 제고를 위해 DNA법 개정으로 재범이 많은 **범죄자 DNA DB 확대 추진**

[체계적인 과학수사 인재 양성으로 과학수사 전문성 제고]

○ **과학수사 맞춤형 교육 및 공인자격 취득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

– 과학수사관 개인별 경력 분석 등 **체계적 이력관리를 통해 맞춤형 교육 지원, 1인 1분야 전문수사관 취득으로 전문성 상향 평준화**

※ ('22년까지) 911명 전문수사관 취득 → ('23년) 950명(+39명) 취득 목표

– 과학수사 新지식·기술 습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과학수사 위탁 전문교육 확대를 통해 전문지식 함양**

▸ **(국내단기)** 국내 대학 및 연구원 등에 위탁 △법심리 분석 △바이오포렌식 △화재폭발감식 △멀티미디어 분석 △범죄분석 등 전문교육 실시

▸ **(국외단기)** 과학수사 분야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미국 △국제감식협회(IAI) △법인류학센터 △살인범죄수사협회와 연계 국외 교육 확대

▸ **(국내장기)** 국내 대학과 연계하여 과학수사 석사 학위과정 운영

– 화재수사 분야 국제적 공신력이 인정되는 **CFEI*, CFI** 자격취득** 지원, 증거 소실로 원인분석이 난해한 **화재·폭발 분야 전문가 양성**

* **화재·폭발조사관**(CFEI, Certified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or): 미국 화재조사관협회(NAFI) 주관 / 화재폭발 조사 관련 지식과 기술 인증

** **방화조사관**(CFI, Certified Fire Investigator) : 국제방화조사관협회(IAAI) 주관 / 방화조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인정되는 자격

– 과학수사 분야 전공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실시(현장감식·화재감식 25명), **인적 전문성 제고**를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과학수사 지식 교류를 통한 분야별 전문역량 함양**

– 최신 국내·외 포렌식 뉴스와 중요사건 해결 사례·지식정보를 담은 **과학수사 소식지(KCSI MAGAZINE) 정기 발간으로 지식 공유**

– 民·官·學 합동 **「2023 검시조사관 세미나」 개최**를 통해 검시 우수사례와 연구 결과 공유로 **사인(死因) 규명 역량 제고**

[국내외 과학수사 협력 및 자문단 운영을 통한 과학수사 공신력 제고]

○ **정확한 감정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경찰·국과수 협업 활동**

– 국과수 미설치 지역에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 중요사건에 대한 신속 감정 등 감정지원 역량 고도화

* 경기남부·전북·충남·경북지역 등 4개소 운영, 2개소 확대 구축 추진 및 현장 간담회,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운영 내실화

– 국과수·해경 등 과학수사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과학수사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 기관간 감정 인프라 공유

○ **해외에 과학수사 첨단 기법 전수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 한국 첨단 과학수사 기법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전수하는 ODA 사업(대상국 : 과테말라)을 통해 치안한류 활성화

※ 「과테말라 경찰 과학수사 역량 강화 사업」('22년~24년, 6억원 규모) 진행 중

– 과학수사 분야 국제 교류 플랫폼인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최신 과학수사 트렌드, 기법 공유 등 전문성 제고

○ **대형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체계적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 인터폴 DVI* 워킹그룹* 가입 및 국제회의 참석 등 한국 경찰 과학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DVI 네트워크 강화**

* 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 경찰· 국과수 등 전문가 협의체로 구성

** 인터폴은 1984년부터 DVI Process 마련, 워킹그룹은 인터폴 회원국 中 총 16개국으로 구성되어 각국 재난 사례·대응 기법 공유, DVI 체계 관련 협의 및 결정 진행

– 실제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신원확인 절차가 발동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절차에 기반한 **한국형 신원확인 표준절차** 확립

–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K-DVI) 정예화**를 위한 DVI 교육 및 합동훈련(국과수·해경 등 참여) 정례화 추진

○ **법공학·법의학 등 분야별 자문단 운영, 민관 합동 조사체제 확립**

– 경찰 수사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형 안전사고 등 주요사건 수사 시 **과학수사 분야별 자문위원 참여 활성화**

– 특히, 사건사고 분야별 자문위원 확충으로 **신속한 현장 자문 및 사고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한 자문·지원 활성화

– 과학수사 자문위원 초청, 정기적으로 온라인 「KCSI 포럼」 **개최를 통해** 기법·지식 공유 및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수사 협업** 강화

[대국민 교류로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 제고]

○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

– 치안 현장에 필요한 과학수사 아이디어·기법·장비 개발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공모전 등) 개최

* 우수작에 대한 포상 및 신규 R&D 과제 연계 검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필요 장비 현장 보급 등 국민과 함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전개

– 청소년 직업체험·과학수사 기관 견학 등 과학수사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 컨설팅 및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추진(연중)

○ **과학수사 현장에 대한 피드백과 정책환류로 국민 만족도 제고**

– 범죄피해로 경찰 과학수사를 경험한 국민 대상 과학수사 활동 만족도 조사(연1회)로 **국민 시각에서 과학수사 개선사항 발굴**

– SMART 과학수사 모바일 앱*, 공식 SNS 계정 등 활용, 국민들에게 과학수사 활동 정보 제공**으로 실시간 **과학수사 소통 활성화**

* 과학수사관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으로 감식관련 자료, 기법, 매뉴얼 등이 탑재, 앱 기능 상 SMS를 통해 피해자 등에게 과학수사 활동 정보 제고 가능

** 사건 현장감식 시 채취된 증거물 처리상황 및 향후 절차 등 감식사항 안내

[과학수사관 건강증진 및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

○ **과학수사관 사기·활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체계 강화**

– **<심리건강>**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부정적 자극에 지속 노출되는 업무특성상*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심리건강 케어**실시**

* 과학수사 부서에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PTSD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 및 신규 전입자는 첫 외상성 사건 임장 시 심리충격 완화가 필요 의견

** 심리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문가 의견 반영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심리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회복탄력성과 동료 지지 강화

< 심리건강 프로그램 주요내용>

과정명	주요 내용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	심리치유 전문기관을 통해 각종 심리치유 요법과 집단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장기근무·신규전입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워크숍 개최(6·9월)
공감힐링과정	경찰인재개발원 공감힐링과정을 과학수사관 대상으로 개최(6월)
마음돌봄과정	시도경찰청 과수계장 및 광역과수팀장 대상으로 팀원들의 심리상담, 코칭을 위한 동료지킴이 등 마음돌봄교육과정(1일) 실시(연중)

– **<신체건강>** **생물학적(세균·바이러스)·물리화학적(시약·분말·분진)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과학수사관 안전 확보를 위해 **특수건강검진(27종) 및 예방접종(파상풍·대상포진 등 연1종) 실시**

– **<결과환류>** 심리·신체건강 시책 결과를 분석, 향후 **직무환경 위험도 연구** 및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수사관 근무 장소(사무실, 실험실 등)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 조성, 직무만족도 제고 견인**

* 반기별 시도청별 사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역 신청받아 노후화 시설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샤워장 등) 설치 등 사무환경 개선 추진(공사비 3억원, 자산취득비 2억6천만원 편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3년 CSI체험캠프 계획 및 개최	1월	
	2023년 첨단과학수사장비 물품수급관리 계획 수립	1월	
	과학수사 소식지 KCSI Magazine 발간	2월	
	나노 생체시료 시각화 R&D 최종 평가	3월	
	과학수사 자문위원 위촉	3월	
	'23년 특수 건강검진·접종 계획 수립	3월	
	과학수사관 심리역량 강화 계획 수립	3월	
2/4분기	2023년 과학수사 교육 계획 수립	4월	
	경찰 - 국과수 업무협의 개최	4월	
	R&D 과제별 연구자-실무자간 간담회 개최	4월	
	한국형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DVI) 표준 절차 확립	4월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계획 수립	6월	
	과학수사관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1차)	6월	
	DNA DB 실무·관리위원회 개최(상반기)	6월	
3/4분기	'23년 특수 건강검진·예방 접종 실시	8월	
	과학수사 분야 현장기술수요 조사 계획 수립	8월	
	과학수사 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계획 수립	8월	
	과테말라 경찰 과학수사 역량 강화 2차년도 연수사업 진행	8월	
	신속 DNA 분석기 시도청 확대 보급	9월	
	화재분야 국제 공인자격(CFEI, CFI) 취득 추진	9월	
	과학수사 분야 전문수사관 취득 추진	9월	
	과학수사관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2차)	9월	
4/4분기	법곤충 감정 표준업무처리지침 정비	10월	
	국제 CSI 컨퍼런스(CSI KOREA 2023) 개최	10월	
	경찰 과학수사 활동 만족도 조사	11월	
	2023년 과학수사의날 '과학수사 대상' 행사 실시	11월	
	KCSI Forum 개최	11월	
	DNA DB 실무·관리위원회 개최(하반기)	12월	
	R&D 과제별 연차 컨설팅 실시	12월	
	K-DVI 과학수사 기본규칙 반영 및 표준업무처리지침 마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과학수사 분야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全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수사상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DB 사무를 공동 관할하는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 기대효과

○ 과학수사 분야 R&D 활성화 및 과학수사 교육·자격 강화를 통한 **경찰 책임수사체제 안착**

○ 국내외 과학수사 유관기관 치안 협업 및 신속·정확한 감정지원을 통한 **경찰 과학수사 전문성·객관성 강화**

○ 과학수사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체계 확립 및 현장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현장 과학수사관의 직무만족도 증진**

○ 대국민 의견수렴 및 소통·참여 확대를 통해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및 체감안전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23년> 국가수사본부 단위사업 내 포함된 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범죄수사활동(Ⅱ-1-일반재정②)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일반회계	375
			(3,548)
	■ 과학수사역량강화(314)		375
	② 수사업무정보화(정보화)(1232)	일반회계	19
			(174)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과학수사 활동 지수 (40%, 정량)	1.43	1.60	1.77	**1.79**	최근 3년 평균값(1.6) 및 과거 추세를 반영, '23년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 실적보다 12%상승한 1.79으로 도전적 · 적극적 목표 설정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시스템(NFIS), 지문검색시스템(AFIS), 범죄통계시스템(CSS) 등
현장지원 지수 (30%, 정량)	28.2	32.0	38.3	**36**	최근 3년 평균값(32.8.) 및 과거 추세를 반영, '23년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실적보다 10% 상승한 36으로 도전적· 적극적 목표 설정	현장 과학수사관의 직무몰입도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전문역량함양·심신건강 등)을 정량 지수화하여 반영	보고서, 계획서 등 결재 공문서 증빙자료
대국민 교류 지수 (30%, 정량)	85.1	86.7	87.9	**88.6**	최근 3년 평균값(86.5) 및 과거 추세를 반영, 만족도 조사 성격상 임계치를 고려하여 '23년 목표치는 3년 평균 36.5보다 2.1점 상승한 88.6로 도전적· 적극적 목표 설정	국민 만족도 설문 결과 × 0.5 + 진술청취이행률 × 0.5	고객모니터센터 설문조사 결과,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SCAS) 통계

○ 목표치 산출 및 측정산식 관련 참고자료

구분	평가 항목
① **과학수사 활동지수 (정량)**	▸ **평가산식** :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 현장임장률 = 현장감식건수 / 중요범죄 발생건수* * 현장 감식이 필요한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침입절도 등 - 증거채취율 = (DNA+지문+족적 감정 의뢰건수) / 현장감식건수 ▸ **산정배경** : 중요범죄 발생건수 대비 과학수사 현장임장률과 임장 1건당 범인검거 및 수사단서 제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물 감정의뢰 건수를 합산하여 과학수사 활동의 적극성 평가 ▸ **목표치 산출 근거(상승 추세)**

구분	현장임장률	증거채취율	과학수사 활동지수
'20년	1.05	1.80	1.43
'21년	1.09	2.09	1.60
'22년	1.19	2.35	1.77
목표	추세치 대비 10% 이상 반영		⇒ **1.79**

- 최근 3년 평균값(1.6) 및 과거 추세를 반영하고, 경찰 책임수사체제 하에서 더욱 적극적인 과학수사 활동 전개를 위해 '23년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 실적보다 12% 상승한 1.79으로 도전적 · 적극적 목표 설정

② **현장 지원 지수 (정량)**	▸ **평가산식** : 현장 과학수사관의 직무 몰입도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전문역량함양·심신건강 등)을 정량 지수화하여 반영

구분	점수
① 일선현장 지원 관련 연간 계획 수립	2
② 외근 과학수사관 대상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공감힐링과정 실시	2
③ 현장 과학수사관 대상 특수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자 수(10명당)	0.1
④ 과학수사 관리자(계장, 광역팀장 등) 대상 마음돌봄과정 이수자 수	0.1
⑤ 광역 과학수사팀 사무실 및 증거물 감식감정실 개선 수 ※ 사무·실험공간 분리, 배기시설 확충 등 과학수사관 안전 및 직무 환경 개선효과가 뚜렷한 실적에 한해 인정	0.5

▸ **산정배경** : 수준 높은 과학수사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에 반드시 필요, 전문성을 갖춘 과학수사관의 이탈 방지를 위한 직무 안전성 강화 등 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 필요

▸ **목표치 산출 근거(상승 추세)**

구분	연간계획 (2점)	워크숍 등 (2점)	건강검진 등 (0.1점)	교육이수 (0.1점)	감정실개선 (0.5점)	총점
'20년	4	4	17.1	3.1	-	28.2
'21년	16	2	9.35	4.6	-	32.0
'22년	10	6	12.0	9.8	0.5	38.3
목표	추세치 및 전년치 대비 10% 이상 반영					**⇒ 42.1점**

- 최근 3년 평균값(32.8) 및 과거 추세를 반영하고, 과학수사 현장 인프라 개선 및 현장으로부터 공감받는 정책 추진을 위해 '23년 목표치는 '22년 실적보다 10%상승한 42.1(평균값 대비 28%)로 도전적·적극적 목표 설정

③
대국민 교류 지수
(정량)

▸ **평가산식** : (국민 만족도* 설문결과 × 0.5) + (진술청취 이행률** × 0.5)

* 경찰 과학수사 활동을 접한 국민 대상으로 출동 신속성·친절성 등 세부분야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합산하여 산출

** 현장 과학수사관이 범죄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의 진술과 요청사항 경청 및 채취증거에 대한 감정절차 안내 등의 심리안정을 돕는 활동률 산출

▸ **산정배경** : 경찰 과학수사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현장 과학수사관의 진술 청취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학수사 노력을 평가

▸ **목표치 산출 근거(상승 추세)**

구분	고객만족도 점수	진술청취 이행률	대국민 교류 지수
'20년	79.43	90.8	85.1
'21년	79.42	93.9	86.7
'22년	80.2	98.7	87.9
목표	추세치 및 만족도 조사 임계값 등 고려		**⇒ 88.5점**

- 최근 3년 평균값(86.5) 및 과거 추세를 반영하고, 만족도 조사 성격상 임계치와 피해자 진술 청취가 불가한 무연고자 사건 등 유가족이 없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23년 목표치는 '3년 평균 실적보다 2.4% 상승한 88.5로 도전적·적극적 목표 설정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V-4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① 과학수사 활동 지수 <40%>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1.79	정량	결과	
		② 현장지원 지수 <30%>	현장 과학수사관의 직무몰입도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전문역량함양·심신건강 등)을 정량 지수화하여 반영	42.1	정량	산출	
		③ 대국민 교류 지수 <30%>	국민 만족도 설문결과 × 0.5 + 진술청취이행률× 0.5	88.5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V-2	증거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과학수사 역량 확보	**(69-3)**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 Ⅱ-마 과학수사관 전문성강화 - Ⅲ-다. K-DVI 대응체계 구축 - Ⅳ-가. 첨단과학수사 기법 장비 개발 - Ⅳ-나. 증거 신뢰성 제고를 통한 수사 지원

36 책임수사 지원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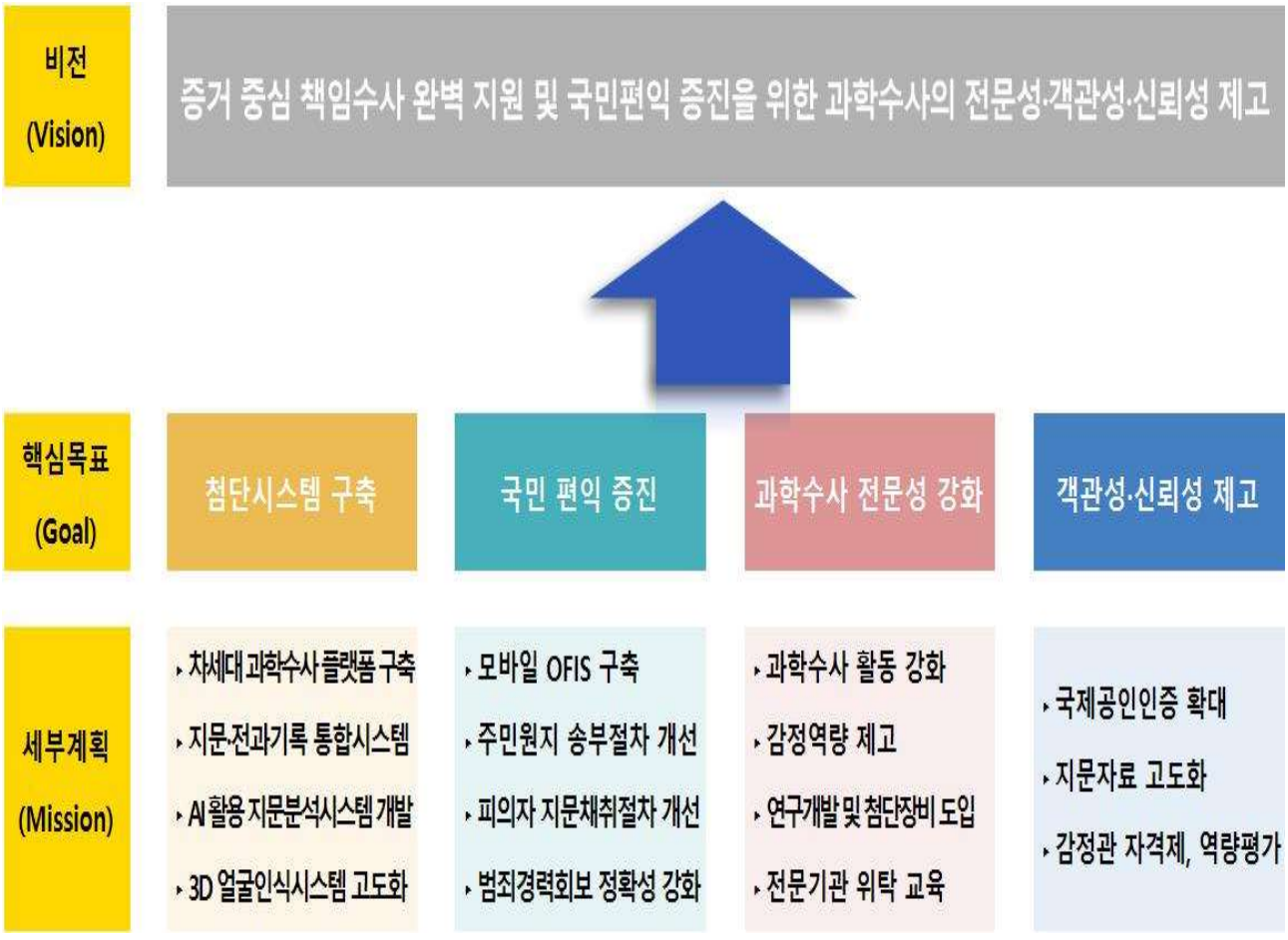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수사권 개혁,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른 과학적 증거 확보·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

○ 과학기술의 발전과 범죄의 진화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의 완결성·전문성·신뢰성 제고 필요

○ 기존의 범인 검거를 넘어 사건 조기해결, 범죄 예방, 대국민 불편 개선 등을 통해 확장된 국민의 치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강화 긴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D.N.A.(Data, Network, AI) 기반 첨단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 **(과학수사 플랫폼)** 최신 기술을 과학수사 시스템에 적용하여 다량의 과학수사 데이터를 통합·분석, 유사사건·수사단서를 자동 추출 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수사지원 시스템인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구축 추진 중

※ '21년 ISP 수립, '23년(2년차) 예산 12.5억원('22~'24년 총 3년, 65억원)

ISP('21) 완료	1단계('22)	2단계('23)	3단계('24)
시스템 구축 ISP (비전, 추진전략·과제 및 소요예산 산출)	현장 사진, 보고서 등 데이터 기반 사건분석 및 현장활동 지원	지능분석 기반 △족윤적 감정 △사건현장 재구성 기능 개발 등 과학수사 업무 개선	△증거물 연계성 강화 △통합 지능 분석 기능 개발 등

– **('23년 주요내용)** 1년차 사업 성과(과학수사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사사건을 추출하는 지능분석 기반 구축)를 바탕으로 딥러닝 기반 족윤적 감정, 사건현장 재구성 기능 개발 등 과학수사 업무개선 추진

○ (GeoPros) △유동인구 등 시스템 內 취급 데이터 확대 △참여형 플랫폼 형식의 기능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GeoPros –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間 지도 기반 유기적 연동 등 신규기능 개발·구현

* **(예시)** 전국 여성안심비상벨 위치(생안), 주요 행사지역(경비), 음주운전 단속지(교통) 등

– **(활용 활성화)** 기능별 맞춤형 교육·홍보, 우수 치안활동 및 분석 사례 발굴·포상을 위한 공모전 운영 등을 통해 시스템 활용 동력 부여

○ **(지문 및 전과기록시스템 통합 구축 ISP/BPR)** 경찰청에서 관리중인 지문 및 전과기록 관련 3종 시스템*의 **정보자원 공통기반 통합·구축**을 위한 사전 ISP/BPR** 추진('23년 3.36억원)

*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범죄경력관리시스템(CRIMS)

**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재설계)

▸ **('23년, 1년차)** 지문 및 전과기록 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한 ISP/BPR 추진

▸ **('24년~'26년, 2~4년차)** ISP/BPR 결과를 토대로 공통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약 100억원)

○ (AI 활용 SMART 지문분석시스템)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감정 절차를 AI 기술로 자동화*하여 신속·정확한 감정 시스템 구축

* 지문 이미지 개선, 대상자 조건 입력·검색, 특징점·융선형태 종합분석·검색 등

▸ ('22년, 1년차) △이미지 자동 증강 △검색조건 자동부여 △알고리즘 개선 등 시스템 개발

▸ ('23년, 2년차) 1년차 개발 완료한 시스템을 AFIS에 연계 및 기능 고도화

○ (3D 얼굴인식시스템) 마스크 착용 보편화에 대응한 귀 영역 특징점 및 몽타주 사진 변환 프로그램 개발로 분석율 향상 및 수사 활용도 제고

귀 영역 특징점 추출 프로그램 개발	몽타주 사진 변환 프로그램 개발
귀 정면 & 좌·우 15도	정면 각도 이내
	

[2. 과학수사 활동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모바일 OFIS 구축) 주취자·치매노인·부상자 등 **요구호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신원확인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반 지문식별 신원확인시스템 구축, 국민 안전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실현**

– 신원확인앱과 지문스캐너 단말기 보급을 통해 현장에서 지문채취·대조, 요구조자 신원을 신속·정확하게 확인('23년 약 4,200대 보급, 10.9억원)

As-Is		To-Be
▸ 지역관서에 설치된 지문스캐너를 이용 ⇒ 지역관서 동행 또는 지류 지문채취카드 사용으로 **일정 시간 소요**	▷	▸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과 모바일로 연계된 지문식별시스템을 통한 신원확인(스캔 or 사진) ⇒ **실시간 지문검색 가능**

○ (주민원지 송부절차 개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송부 개선(등기송부⇒전자송부) 및 접수前 품질검사 도입으로 지문자료 관리 신속·정확성 제고

▸ **(전자원지)**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식 지문채취기기*를 통해 전자화하여 실시간 송부

* '22년 말 기준 3,557개소 중 2,987개소에서 전자식 지문채취기기 도입(84%)

▸ **(종이원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스캔하여 십지지문을 전자화하여 실시간 송부하고, 종이원지 자체는 월1회 송부받아 검증목적으로 보관

- 고품질 지문 확보, 실시간 지문 품질검사 및 재채취 여부 판단을 통해 타기관 연계 민원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반복된 방문 불편해소

- △개선 송부절차 모니터링 △경찰-행안부 間 시스템 연계 개선 △지문자료정비 △지자체 교육 등을 위해 **행안부 주민과**와 **지속 협업**

○ **(피의자 지문채취절차 개선)**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 지문채취 時 근거법령 및 목적, 안내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동의서(전자문서) 작성 등 전자수사자료표 內 피의자 지문채취 절차 개선

※ 근거 규정인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발령 시행('23. 4. 1.)

○ **(여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 폴리그래프 검사에서의 2차 피해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 외국인 여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과정 필수 작성서류 번역본 제작(2월)
▸ 여성폭력 사건 폴리그래프 검사 전문역량 강화교육 추진(3월~)
▸ 여성폭력 사건 전문 검사관 운영 안내제도 시행(4월~)

○ **(범죄경력 회보 정확성 강화)** '23년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및 '24년 총선 대비, 범죄경력자료 오류회보 방지를 위한 △매뉴얼 발간 △교육 △T/F팀 운영 등을 통해 회보자료의 정확성 제고

[3. 과학수사 전문성 제고]

○ **(활동 강화)** 우수자 선발·포상을 통한 유효증거 증거채취율 향상, 범죄분석 광역 책임제 운영, 화재·수중·체취증거 집체교육·세미나 등 추진

▸ **(현장감식)** 성과 우수자 선발·포상 등 사기진작·동기부여을 통해 유효증거체취율 향상하고 무전취식 등 민생불편 사건에 대한 적극적 감식활동으로 범죄 피해확산 방지 및 국민불안 해소
▸ **(범죄분석)** 균질한 범죄분석 지원 및 전문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광역책임제* 운영
* 범죄분석 활성화를 위해 1인 이하 근무, 경력 1년 미만 등 시도청에 他 시도청 범죄분석관 지원 책임 의무화
▸ **(화재·수중·체취증거)** 화재조사세미나, 경·군 수중수색 합동훈련, 체취증거 집체훈련 등

○ **(감정역량 제고)** 뇌파분석·지문감정 전문인력 채용, 문서감정 시료 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분야별 교육 등을 통해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

▸ **(전문인력 채용)** 뇌파 분석관(경장 6명) 및 지문 감정 분야 전문경력관 나군(18명) 경력경쟁채용을 통한 인적 전문성 확보

▸ **(문서감정 시료 데이터 설계)** 필기구·잉크 동일성 등 문서감정 결과의 객관성 제고, 체계적 시료 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설계 연구용역 추진

○ **(연구개발·첨단장비)** 영상분석·뇌파분석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문감정·문서감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과학수사 장비 보급

▸ **(R&D)** ①인공지능 기반 위·변조 영상 검출 시스템 개발('21.7월~'24년, 성균관대) ②뇌파분석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진술 진위판별 검사기법 및 장비개발('22~'25년, KAIST)

▸ **(첨단장비)** △저품질 지문 개선을 위한 영상증폭 지문개선 장비 △다공·비다공등 다양한 검체에 적용 가능한 진공금속증착 지문현출장비 △최신 문서감정장비 등 도입

○ **(전문 교육)** 과학수사 핵심역량 강화와 미래치안 환경 변화에 대비한 新 지식·기술 습득을 위해 금년부터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 운영

※ **(국내단기)** 5개 분야 77명 **(국외단기)** 3개 분야 3명 등 총 8개분야 80명/ 2.4억원

[4. 과학수사 객관성·신뢰성 제고]

○ **(국제공인인증 확대)** 과학수사 자료관리의 국제공인인증(ISO)[1] 확대 및 지문감정분야 KOLAS[2] 공인 숙련도시험운영기관[3] 인정 획득

1)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65개국 가입)
2) 한국인정기구(Kolas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을 평가·공인)
3) 지문감정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기관

– (ISO) 시스템 內 지문·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 등 개인정보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호하고 있음을 공인하는 국제표준(ISO 27701) 신규 획득 추진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65개국 가입)

< ISO 인증 경과> ①지문관리 체계에 대한 기록경영시스템 인증('20년, 중앙행정기관 최초) ②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관리 체계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 인증('22년) ③과학수사자료관리 업무시스템(AFIS, E-cris 등)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O 27001) 인증('22년)

– (KOLAS) 한국 경찰의 지문감정 역량에 대한 신뢰성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지문감정분야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 획득 추진

○ **(지문자료 고도화)** 범죄수사·신원확인에 활용되는 지문자료의 신뢰성·정확성 제고 및 경찰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원본의 **고해상·디지털化** 추진 중

<그간 추진 내용> ①기존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품질검사('20년~25년) ②지문자료 입력·분류 품질검사에 AI 도입·검증('21~'22년) ③지문검색 알고리즘 추가 도입('21년)

– 금년 신규 채용 임기제 공무원 활용하여 종이 주민원지 5,200만장 중 미완료 2,364만장(45%)의 지문자료에 대한 고해상·디지털화 수행('23~'25년)

○ **(감정관 자격부여·역량평가)** 감정 결과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과 시험을 통해 감정관 자격을 부여하고, 감정결과의 대외 신뢰도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정 분야별 전문역량 평가

▸ **(감정관 자격제)** 지문감정 및 족·윤적감정 분야 감정관 자격시험 실시(10월)

▸ **(전문역량 평가)** 7개 감정 분야(지문, 족윤적, 폴리그래프, 법최면, 영상분석, 문서감정, 3D얼굴인식) 대상 분야별 직무수행과 연계된 다양한 인정기준 활용 맞춤형 평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ISP/BPR 사업자 선정(입찰공고 및 계약)	2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평가) 매뉴얼 개정	2월	
	스마트폰 지문 신원확인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3월	
	과학수사자료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 인증 추진 계획	3월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2년차 사업계획 수립	3월	
2/4분기	GeoPros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4월	
	하반기 재보궐선거 대비 전국 회보 담당자 대상 교육	5월	
	ISP/BPR 사업 종료에 따른 산출물 보고	5월	
	182민원콜센터 직원 대상 교육	6월	
	'23년 BEST과학수사관 선발 계획 수립	6월	
3/4분기	지문자료 고도화(1차) 계획 수립	8월	
	범죄경력회보 업무편람 제작	8월	
	'공직후보자 범죄 경력 회보 업무 매뉴얼' 재발간 및 배포	9월	
	수중과학수사 집체교육	9월	
	범죄분석관 전문화 교육	9월	
4/4분기	첨단 문서감정 장비 보급 완료	10월	
	체취증거견 집체교육	10월	
	제22대 총선 대비 전국 회보 담당자 대상 교육	11월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701) 인증 획득 및 인증식	12월	
	제22대 총선 대비 T/F팀 구성	12월	
	'23년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완료 보고	12월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 획득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과학수사 기반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全 국민

○ **(이해관계 집단)** 관련 자료를 보유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과수 등

□ 기대효과

○ 고도화된 과학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된 사법환경과 범죄현장에 대응하여 현장감식 및 증거채취, 수사분석지원, 범인검거 등 책임수사 완벽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21년 조직개편(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련)으로, '22년 단위사업명 변경

- <'22년> 국가수사본부 단위사업 내 포함된 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범죄수사활동(Ⅱ-1-일반재정②)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일반회계	349
	■ 과학수사역량강화(314)		(3,432) 349
	② 수사업무정보화(정보화)(1232)	일반회계	24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226) 24

- <'23년> 국가수사본부 단위사업 내 포함된 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범죄수사활동(Ⅱ-1-일반재정②)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일반회계	375
	■ 과학수사역량강화(314)		(3,548) 375
	② 수사업무정보화(정보화)(1232)	일반회계	19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74)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범죄분석 지원지수(25%)	127점	171점	208점	220점	최근 3년간 급격한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22년 실적치(208점) 보다 10% 이상 상향한 228점을 '23년 목표치로 도전적 설정	∑(출동건수)×(건별활동점수)+(가점)	범죄분석 공식 공문, 의사결정 판단 자료
②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25%)	23.0%	20.0%	16.1%	15.5% 이하	최근 3년간 분석 불가율 감소 평균 추세치(3.45%)보다 도전적으로 10%를 상향한 3.8%를 반영한 15.5%를 '23년 목표치로 설정	(영상·3D얼굴인식 분석 불가 건수) / (영상3D 얼굴인식 접수 건수) × 100	SCAS 시스템(영상분석), 3D얼굴인식시스템
③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25%)	2,105,646건	2,774,761건	2,991,291건	3,140,000건	최근 3년간 평균값(2,623,902건) 보다 20% 이상 상향한 3,140,000건을 '23년 목표치로 도전적 설정	SCAS, GeoPros, 접속건수 합산	SCAS 시스템, GeoPros 시스템
④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25%)	165.2%	183.0%	205.6%	212.3%	최근 3년간 채취율 증가 추세치를 반영한 수치(224%)보다 도전적인 226% 이상을 '23년 목표치로 설정	현장감식 채증물 등록건수 / 감식 건수 × 100	SCAS 통계관리 시스템

< 지표 1 범죄분석 지원지수 >

○ 설정배경 : 심리행동 증거, 지문·DNA 등 법과학 증거물과 지리정보 등 통합적 범죄 분석에 대한 수사지원 효과 및 전문성 강화노력 평가

○ 측정산식 : 기본활동 점수 + 노력점수

1) 기본활동 점수

시도청 3개청 이상 지원·출동	시도청 2개청 이상 지원·출동	시도청 단독 지원·출동
1점	0.7점	0.5점

※ 범죄분석관이 단독 혹은 타 시도청 범죄분석요원과 합동으로 분석활동·지원한 경우, 범죄분석보고, 피의자면담 등 활동 관련 보고서, 분석 보고서, 관련 공문 등으로 산출

2) 활동 노력점수

① 범죄분석,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사건해결 기여' 등(1점)

② 기소, 영장청구, 판결 등에 증거로써 활용(1점)

③ 학회·연구회 구두 발표 및 교육(0.5점), 논문 작성 등(1점)

○ '23년 목표산출 : 최근 3년간 급격한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22년 실적치(208점) 보다 10% 이상 상향한 228점을 '23년 목표치로 도전적 설정

< 지표 2 멀티미디어 분석불가율 >

○ 설정배경 : CCTV, 블랙박스 및 각종 SNS 등 영상매체의 보급 확대로 범인 검거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분석(영상분석, 얼굴인식분석)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기법·장비 개발을 통하여 분석불가율 감소 추진(하향)

○ 측정산식 : 영상·3D얼굴인식 분석불가 건수 ÷ 영상·3D 얼굴인식 접수건수 × 100

○ '23년 목표산출 : 최근 3년간 분석 불가율 감소 평균 추세치(3.45%)보다 도전적으로 10%를 상향한 3.8%를 반영한 15.5%를 '23년 목표치로 설정

< 지표 3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 설정배경 :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구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고도화된 과학수사 시스템(SCAS, GeoPros)의 유용성·실제 활용성 평가를 위해 현장 경찰관들의 이용건수를 지표로 산정

○ 측정산식 : SCAS 접속건수 + GeoPros 접속건수

○ '23년 목표산출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2,623,902건)보다 20% 이상 초과 상향한 3,140,000건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 지표 4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

○ 설정배경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 등 증거 위주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범죄현장 유효증거물 채취율을 향상시켜 변화된 사법환경에 선제적 대응

○ 측정산식 : 현장에서 채취한 채증물 SCAS등록 건수 / 현장감식건수 × 100

○ '23년 목표 산출 : 최근 3년간 채취율 증가 추세치를 반영한 수치(224%)보다 도전적인 226% 이상을 '23년 목표치로 설정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Ⅱ-3	① 책임수사 지원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① 범죄분석 지원지수(25%)	∑(출동건수)× (건별활동점수) +(가점)	228점	정량	산출	
		②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25%)	(영상·3D얼굴인식 분석 불가 건수) / (영상·3D 얼굴인식 접수 건수) × 100	15.5%이하	정량	산출	
		③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25%)	SCAS, GeoPros, 접속건수 합산	3,140,000건	정량	산출	
		④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25%)	현장감식 채증물 등록건수 / 현장임장건수 × 100	226%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Ⅳ-2	▸ 책임수사 지원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 목표Ⅱ - 마 ▸ 목표Ⅲ -다 ▸ 목표Ⅳ - 가, 나, 다

37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관련 국정과제)** ‘디지털 혁신 가속화’,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 등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비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 **(분석수요 변화)** 국민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기의 다변화·대용량화·복잡화로 분석매체수 및 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연 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PC저장매체 용량	32~64GB	64~128GB	64~128GB	256~512GB	256~512GB
모바일기기 용량	500GB	500GB	500~756GB	500~756GB	1TB
CCTV의 용량	4TB	4TB	4~16TB	4~16TB	8~32TB
분석관수	105명	148명	187명	187명	187명
분석완료건수	43,531	55,194	63,034	74,334	70,929
압수지원건수	372	614	737	796	1,030

– 사이버수사 뿐만 아니라, 형사·수사·여청·교통 등 모든 사건수사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전자정보의 압수 및 분석이 필수

합계 (건수)	’22년 기능별 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건수(전체대비 비율)					
	수사	형사	여청	사이버	생안	기타(외부기관 등)
70,929	24,502 (34.54%)	14,582 (20.56%)	19,721 (27.80%)	8,150 (11.49%)	1,840 (2.59%)	2,134 (3.01%)

○ **(전문성 관리)** 현재 공공·민간 공히 컴퓨터공학·포렌식 경력자 등 우수인력 유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경쟁 치열

– 이에 우수한 민간·국외 교육과정을 분석관에 제공하고 지속적 자격 유지를 통한 경찰청 소속 분석관들의 전문성 관리 필요

○ **(현장역량 제고)** 수사관들의 디지털증거 직접 처리 증가로 업무에 즉시 적용가능한 장비·도구의 보급과 포렌식분석관 인력확충을 통한 전문가의 현장진출 및 원스톱 분석지원의 필요성 증대

○ **(분석의 신뢰성 확보)** 디지털기기 사용의 일상화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급격히 증가, 법정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이 치열해지며 인정요건이 엄격해지는 추세

– 경찰 디지털포렌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디지털포렌식 분석역량 강화]

○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맞춰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자체교육 및 민간위탁 전문화 교육 확대 추진
- 기초⇨필수⇨전문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교육커리큘럼 운영, 맞춤형·단계별 교육을 통한 분석관 개개인의 직무역량 증진
- 분야별 워크숍* 운영 및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취득 지원

  * IoT 기기(웰패드)·영상·메신저 분석 관련 워크숍 개최

○ 디지털포렌식센터 국제공인인정(KOLAS)으로 전문성 확보

- 국내 최초로 획득한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인정 유지를 위한 KOLAS 교육, 정기 사후관리, 분석 숙련도 시험 등 실시

  ※ '20. 7월 인정 최초 획득, 해외 104개국의 법집행기관과 법원에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분석 업무의 공신력 인정

○ 디지털증거 획득 및 분석기법 연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디지털포렌식 학술대회(연2회,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와 공동개최), ▵포렌식 연구발표회(월1회), ▵현장학습모임 운영 등을 통한 본청 및 시도청 분석관의 전문역량 개발 지원

○ 온라인 분석지식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 전국 분석관의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공유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위키」 웹사이트 구축, 분석역량 상향 평준화 도모

[경찰 디지털증거 처리의 신뢰성 확보]

○ **디지털포렌식 관련 규칙(경찰청훈령)·매뉴얼 정비 및 보급 확대**

– 급변하는 법제 및 판례를 반영한 관련 훈령* 및 매뉴얼**을 제·개정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책자·앱(App) 배포 및 교육

* 디지털증거의처리등에관한규칙 ** 현장 경찰관을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 **현장용 수사관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신규개발 및 확대**

– 현장 수사 지원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도구 신규개발 및 배포

※ △삭제문서 복구 스크립트, 원격제어SW 사용내역 분석 스크립트, 메모앱 탐지·수집 프로그램 등 개발, △현장용 디지털증거 수집프로그램 「DFT Autoi」 배포

– 현장 수사관의 활용도가 높은 △폴해시 PC △셀파인드 앱 등 주요 포렌식 도구 5종 및 배포·관리 서버의 기능 고도화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전문도구 시도청 보급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증가하는 잠금해제 수요에 적극 대응

○ **압수수색 현장 디지털포렌식 지원 활성화**

– IT 전문가인 분석관이 중요 압수수색현장에 임장,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필수적인 동일성·무결성·신뢰성 확보 조치, 참여권 보장 등 지원, 신속하고 정확한 압수수색을 촉진

– 압수현장 및 피압수자 참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요원이 착용할 복제의 통일 추진, 경찰 브랜드 가치 상승 도모

※ 디지털포렌식은 대민접촉이 급증한 분야인 동시에 경찰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첨단치안 기능으로, 조직의 전문성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디지털증거 판례 해설자료집」 발간	1월	
	KOLAS 인정 유지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숙련도 시험 실시	2월	
	「모바일 데이터 아티팩트」 연구용역 배포	2월	
	「디지털포렌식 연구발표회」 운영 계획 수립	2월	
	KOLAS 인정 유지를 위한 컨설팅 사업 계획 수립	3월	
	「치안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계획 수립	3월	
2/4분기	「온라인분석지식 공유시스템(WiKi)」 시스템 고도화	4월	
	모바일기기 획득도구 구매 사업계획 수립	4월	
	「영상포렌식 프로그램」 배포	4월	
	「삭제 문서 복구 스크립트」개발·배포	5월	
	「현장용 메모앱 탐지 및 추출 프로그램」개발·배포	5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 학술대회	6월	
	「모바일기기 암호해독 장비」 전국 배포	6월	
3/4분기	모바일기기 분석 프로그램 배포	7월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사용내역 분석 스크립트」개발 및 홍보	8월	
	「모바일기기 물리복구실」 구축	8월	
	KOLAS 인정 유지를 위한 정기 사후관리 실시	9월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홍보	9월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9월	
4/4분기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및 해외교육 실시	10월	
	차세대 운송수단 분석도구 도입	10월	
	「영상포렌식 기법 고도화」 제작 및 배포	10월	
	「PC메신저 분석 프로그램」 고도화 및 홍보	11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동계 학술대회	11월	
	디지털포렌식 도구 배포·관리 서버 고도화	12월	
	현장용 장비 및 복제 보급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를 제공받는 경찰관 및 국민

○ 이해관계집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디지털수사과) 등 공공기관 내 디지털포렌식 업무 수행기관

□ 기대효과

○ 분석관 전문성 제고를 통한 경찰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제고

○ 경찰 수사에 핵심적인 디지털증거 발견 촉진 및 증거능력 유지를 통한 전문성·신뢰성·신속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I -3-정보화① 사이버수사			
① 수사지원및수사역량강화(1231)	일반회계		
▪ 사이버수사역량강화(315)		82.6	90.9
① 수사업무정보화(1232)	일반회계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3)		125	120.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377	433	579	637	하단 참고	하단 참고	공문, 보고서 등 과제 추진 관련 근거자료
수사관 지원 활성화	신규	신규	1,609	1,770	하단 참고	하단 참고	시스템 통계 활용
분석결과 탐색·선별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신규	신규	신규	212,718	하단 참고	하단 참고	프로그램 실행기록 활용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관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므로, 인력 전문화를 위한 교육 노력을 지표로 선정

※ 법원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자료의 동일성,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을 요구 (대법원 2007도7257 판결)

○ < **목표치 산출근거** >

- **(과거 실적)** ’21년 433점, ’22년 579점 달성

구분	점수	실적
’21년	**433점**	▵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 240점(240명)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 193점(386명)
’22년	**579점**	▵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 262점(262명)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 317점(634명)

- **(목표치)** 637점 / 전년 실적 대비 10% 증가한 적극적인 목표 설정

○ < **측정산식** >

▸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등 실적 (수료 인원 × 1)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등 실적(수료 인원 × 0.5)

항 목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등 실적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등 실적
점 수	1	0.5

[수사관 지원 활성화] ※ 신규 지표

○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 압수수색검증 현장에 분석관이 임장하여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긴급분석을 수행하는 ‘압수수색 현장지원’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수사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기의 잠금(암호화)을 해제하는 ‘모바일 기기 잠금해제’는 가장 대표적인 수사관 지원 업무에 속함

- **<압수수색 현장지원>**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정확한 디지털증거 획득·분석·관리를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선별압수원칙 등 적법절차 ▵동일성 · 무결성 · 신뢰성 확보 등 디지털증거 수집에 대한 엄격한 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증거능력이 상실되므로, 전문가인 분석관이 중요 압수수색 현장에 임장하여 정보탐색·라이브포렌식·동일성 증명조치·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등을 지원중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인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는 범죄사실 확인을 위한 핵심증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잠금(암호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압수자의 비협조 또는 부재시 증거를 열람할 수 없어 수사에 큰 지장이 발생함.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새로운 기기에 맞춘 해제기술을 연구·도입하여 현장의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요청에 대응하고 있음 <'22년부터 전국단위 지원 신규 시행>

○ **<목표치 산출근거> :** 압수수색현장지원(건) + 모바일기기잠금해제성공(건)

- **(과거 실적)** 동일 산식으로 계산시 '22년 1,609건 달성

구분	점수	실적
'21년	-	▵ 압수수색 현장 지원건수(796건) +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성공건수(당시 장비 및 도구가 부재해 지원불가하여 계측하지 아니함)
'22년	1,609건	▵ 압수수색 현장 지원건수(1,030건) +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성공건수(579건)

- **(목표치)** 1,770건 / 예상 업무량('22년 실적) 대비 10% 이상 증가한 적극적 목표 설정

※ 전국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원·보급장비는 전년과 동일

○ **<측정산식>** : 시스템 추출 통계 사용

▸'22년 본청 및 17개 시도청 디지털포렌식 기능의
압수수색 현장 지원건수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성공건수

[분석결과 탐색·선별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대] ※ 신규 지표

○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며 개인의 스마트폰 등 기기에 저장된 SNS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의 신속한 확보는 수사의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음

- 그러나, 최신 모바일기기의 저장용량 증가 및 신규 출시 앱 폭증으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를 회신받은 수사관이 증거자료의 최종 확보를 위한 정보탐색·선별·추출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 탐색·추출 편의도구의 필요성이 증대

- 방대한 양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로부터 수사관이 필요한 중요 정보만을 탐색·선별·추출하는 것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할 경우, 신속한 사건해결 등 국민편익증대에 기여 가능하여 신규 지표로 선정

○ **<목표치 산출근거>**

- **(과거 실적)** 동일 산식으로 계산 시'21년 156,846건, '22년 193,380건 달성

※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실행기록 통계 활용

- **(목표치)** 212,718건 / 전년 대비 10% 증가한 적극적인 목표 설정

○ **<측정산식>** : 시스템 추출 통계 사용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선별 프로그램' 실행(사용) 건수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40%>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수료 인원 × 1)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수료 인원 × 0.5)	637	정량	결과	
		수사관 지원 활성화 <40%>	압수수색 현장지원건수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성공건수	1,770	정량	결과	
		분석결과 탐색·선별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20%>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탐색·선별 건수	212,718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과학기술 기반 수사역량 강화 -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업무 Ⅳ-나)

성과목표Ⅲ-3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1) 주요 내용

○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 외국 경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 고위급 회담 등 치안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한국형 치안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국제협력사업(ODA)을 추진하여 선진 치안이미지 확립 및 치안장비 수출 효과 제고

○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 각국 경찰기관과 공조, 국외도피사범 송환 및 재외국민 보호 기능 강화

○ **<사이버공간 안전 확보>** 다크웹·가상통화·ICT기술 발달 등 진화하는 사이버환경에 대응, 民·官·學 협업 및 국제공조 강화

○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 테러 대응역량 제고와 함께 악성프로그램 유포·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관리과제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 홍보지수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 /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 / 재외국민보호 역량 및 글로벌 치안역량 강화 실적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	사이버 예방 교육 실적 / 사이버 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1인당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지수 / 피해 보호조치 건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사이버범죄 검거율	67.5	63.7	64.4	65.4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년 이후 감소하다 '22년 소폭 반등, 전 3년도 실적 평균값(65.2)을 고려, '23년 목표치는 검거율 반등을 독려하기 위해 평균값보다 1.0%p 높은 65.4로 설정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외 각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초국가적 범죄에 내실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와의 치안협력이 필수적**

※ '21년 기준 재외국민은 2,511,521명(외교부)으로 국경봉쇄 해제 후 증가 예상

– 국제경찰청장회의 등 양·다자간 협의체에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교류활동을 다각화하여 치안협력 내실화 도모**

– 재외국민 사건·사고 증가세 및 해외파견 인력 정원감축 기조에 대응, **해외에서도 국내 수준 치안서비스 제공 필요성 적극 피력**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이 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은 증대**

※ △ICT 기술·가상자산·다크웹 악용 사이버테러 △AI 이용 금융범죄 △드론·스마트카 해킹 등 신종 범죄 등장

– **관계기관**(과기부·KISA, 국정원, 금융위 등) 및 **전문가 등과 협력**, 위협정보 수집·분석·공유·관리를 통해 **공동 대응역량 강화**

(4) 참고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및 경찰통계자료

○ 경찰청 홈페이지(police.go.kr)

○ 인터폴 홈페이지(interpol.int)

○ 법무부 출입국통계(www.moj.go.kr)

○ 외교부 재외동포현황(www.mofa.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웹사이트(cyberbureau.police.go.kr)

○ 경찰범죄통계(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20.jsp)

○ 경찰청, 「2022 사이버 범죄트랜드」 「2022 더 사이버」

○ 경찰청, 「사이버안전 미래전략(스마트 치안, 절차적 정의 구현을 위한 미래 설계)」

○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 초동조치 매뉴얼」

38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 추진배경

○ 해외 각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초국가적 범죄에 내실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협력국과의 치안협력이 필수적

< * 재외국민 현황('21년 기준 / 외교부 발간통계, 2년 주기) >

구분	총계	미국·캐나다	일본·중국	남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계(명)	2,511,521	1,200,662	691,749	417,832	123,246	50,430	18,276	9,326

– 이에 치안총수회담·MOU 체결·초청행사 등 외국경찰기관과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UN·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 및 국제회의 개최 또한 추진

○ 또한, 우리청은 '15년부터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전수하는 치안협력사업(ODA사업, 전문가파견 및 초청연수 등)을 추진

– 한국경찰의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우수한 치안장비 해외 수출 등 긍정적 환류 효과에 기여

※ '22년 기준, △외국경찰 초청행사 시 장비전시회 개최(7월) △국제치안산업박람회(KPEX)와 연계, 20개국(10월, 75명) 초청하여 한국경찰 장비·시스템 홍보로 수출성과 거양 ⇨ 대표단과 기업 미팅 주선, 100개 기업과 208건의 상담 후 약 3,800만불 계약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외국 경찰과의 치안교류·협력 확대]

○ **(고위급 치안외교)** 경찰청·차장 등 우리청 지휘부가 재외국민 보호,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치안 현안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주요국 지휘부를 직접 만나는 자리 마련(방문·방한, 총수회담 등 활용)

< 치안총수회담 개최 현황(최근 3년간) >

구분(회)	'20년	'21년	'22년
방문	1	2	8
방한	1	13	1

– ’23년에는 우리청 주관으로 40여개국 경찰총수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하여 국제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경찰청장회의*(IPS)를 개최하여, 실질적 치안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 조성

< * ’23년 국제경찰청장(IPS) 회의 개요 >

- **(개요)** 경찰청은 ’15년부터 격년 주기로 한국경찰 주도 하에 전세계 경찰총수를 초청하여 국제치안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 개최
- **(시기·장소)** ’23. 10. 17.(화)~20.(금) <4일간> / 송도 컨벤시아
- **(초청 대상)** ’23년 40개국 120명 참가 목표, 한국경찰과 교류협력을 지속해 온 주요국 경찰총수 및 UN, 인터폴 등 국제기구 대표(’21년 기준, 37개국 136명 참가)
- **(행사내용)** 한국경찰의 치안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치안 현안에 대한 토론·회담 및 다른 행사와도 연계하여 구성(주제 例「미래 경찰변화의 동인과 과학치안 실현 전략」)
- **(소요 예산)** 총 5억 6천만 원(’21년 대비 1.6억원 ↑)

–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경찰과 양·다자간 치안협의체 구축, 협력방안 논의

회의명	주요 내용	비고
한-필리핀 경찰협력회의	▸ **’23.10월 한-필 경찰협력회의 개최 추진(한국 개최)** ※’17. 2월 재외국민보호 및 수사공조 강화 위해 고위급 한-필 회의 개최 합의	청장급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 **’23.10월 한-베 경찰협력회의 개최 추진(한국 개최)** ※’16년 재외국민보호 및 치안협력 강화 위해 회의 참석대상 격상(과장→국장 ↑)	차장급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 **’23.7월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개최 추진(한국 개최)** ※’15. 11월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3국 치안협의체 구성안이 공동선언문에 채택되어 매년 각 국이 순차 개최(’22. 11월 제5차 회의 일본 개최)	국장급

○ **(MOU 체결)** 이미 MOU가 체결된 국가 外 남미·동유럽 등 그간 한국경찰과 교류가 적었던 주요국(29개국)과도 MOU 확대 추진

– 코로나19 상황으로 체결과정이 지연된 국가들과도 국제회의(IPS) 등을 계기로 문안확정, 개정 체결 조속히 진행 도모

< MOU 추진현황(29개국) >

아시아(7)	미주(3)	유럽(5)	아프리카(7)	중동(5)	오세아니아(2)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우간다 앙골라 **르완다** 세네갈 남아공 에티오피아 튀니지	이란 바레인 오만 이라크 카타르	**피지** **호주**

※ (음영없음) 신규 체결 **개정 체결(2)** **문안 확정(6)**

○ **(초청 행사)** 해외 한인경찰, 외국경찰 등을 초청하여 치안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하는 장 마련, 각국 현지에서 한국인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주재관 협력 채널로 활동하며 재외국민 보호에 기여

– '23년 상반기 중 「제16회 해외 한인경찰 초청행사*」 개최, 북미·유럽·남아시아 등 한인경찰 다수 근무국 대상 전략초청사업 진행

* '06년 최초 개최되어 '22년까지 총 21개국 190명의 실무자급 경찰관 참석

– 미주지역 한인경찰협회 등 각국 한인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한인 밀집 거주지역 치안책임자 초청 등 대상·방식 다변화 추진

※ △크로아티아 합동순찰 △FBI 등 국제치안교육 파견 등 정례 교류협력도 병행

○ **(홍보 강화)** △영문 보도자료(Press Release) 배포 △한국경찰 소개 영상·PPT △장비·시스템 브로슈어 등 정책자료 번역·제작 및 활용

※ 美·英·佛·獨·加·日·中 등 주요국 경찰 조직 및 현황자료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 **(국외출장 관리 강화)** 코로나 방역지침 완화 이후 국외출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및 결과보고 활용 내실화 필요

– △공무국외출장 수요 및 타당성 심사 △합동출장단 구성·운영 및 국제행사 연계·지원 △결과보고 공유 및 주요시책 반영 추진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 내실화]

○ **(UNDP)** 우리청-유엔개발계획(UNDP) 공동 다자성 협력사업*(ODA)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경찰청-UNDP 협력관계 구축 위한 의향서(SOI) 체결 △UNDP 서울정책센터 내 한국경찰 전문가 파견 등 추진

* DR콩고 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디지털성범죄 대응 경찰역량강화사업

○ **(UN PKO 참여 확대)** '22년 제3회 UN경찰청장회의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국(UNDPO)은 한국경찰의 PKO 파견 확대를 적극 요청

– 이에 우리청은 참여 확대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UN PKO 남수단 임무단 ODA사업**과 연계된 경찰전문가팀 파견 추진

<* UN PKO 관련 정책연구 개요>

▸ **과 제 명 :** 최근 UN PKO 정책변화 분석과 한국경찰의 역할 확대 방안
▸ **기간 / 연구기관 :** '22. 5 ~ 11월 / 한국국방외교협회
▸ **전문가팀 파견방안 :** 분쟁 취약국 대상 경찰역량발전 지원, ODA 사업 연계 등

< 남수단 ODA사업 개요>**

▸ **사 업 명 :** 남수단 경찰 신고출동시스템 구축사업
▸ **기간·규모 :** '24 ~ '26년(3년간) / 총 38.7억원(USD 300만불)
▸ **사업 내용** : ①인구 밀집 지역·치안 서비스 부재 지역에 범죄신고센터 설치 ②무전기·오토바이 등 장비 지원 ③현지 경찰관 교육
▸ **파견 내용** : ▵사업관리자 ▵신고출동 ▵장비운용 등 분야별 교육·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팀(SPT, Specialized Police Team)

– 기존 개인파견(IPO)을 확대, 과학수사·성폭력 등 분야별 3~7명 전문가 파견 및 중장기 관점에서 부대단위 파견 등 추진

○ **(한-아세안 협력 강화)** 아세안 지역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경찰협력 리더십 포럼」(국장급) 및 「수사역량 강화 초청연수*」(수사관) 개최, 치안기법 전수 및 전략적 협력 발전

* **(개요)** 아세안 10개국 中 9개국 초청(미얀마는 외교 정책상 제외)하여 과학수사·사이버 강의 및 수사연수원 실습, 국과수 견학 및 문화체험 실시('21년~)

– '23년에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아세아나폴 컨퍼런스」에 대화국 자격으로 차·국장급이 참석하여 국제치안 논의 주도

○ **(IACP)**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태지역사무소 역할 수행 ▵컨퍼런스 참석, 발표·수상자 선정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활동 전개

<* '23년 국제경찰장협회(IACP) 회의 개요>

▸ **(ICAP 개요)** 美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경찰 지휘관(경정급 이상)을 포함한 170개국 32,000여명의 회원을 보유,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해 각종 치안 현안 논의·연구
▸ **(시기·장소)** '23. 10. 14(토) ~ 17(화) / 미국 샌디에고
▸ **(관련 조치)** '23년 IACP 컨퍼런스 참석 대표단 구성 추진
※ '22년 기준, 경찰청 차장 주관 대표단 구성하여 IACP 의장단 회담 참석

○ **(기타 국제기구)** ▵인터폴(글로벌 아카데미) ▵유로폴·AMERIPOL(미주)·AFRIPOL(아프리카)·GCCPOL(중동걸프국) 등 경찰기구 및 협의체 분석, 협력방안 마련 추진

[치안한류 고도화]

○ **(치안ODA 사업 확장)** 기존 연수·교육 위주의 기술전수 사업에서 나아가 치안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발굴에 주력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 등 선진 치안시스템 전수가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치안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무상 원조

– **(지역 확대)**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위주에서 벗어나 대륙·지역별로 협력 대상국 및 사업을 확장하여 세계적인 협력망 구축

< '23년 경찰청 자체 ODA 사업(8건) 개요 >

구분	사 업 명	'23년 예산
계속 사업	1) **캄보디아 경찰 무도교관 역량강화**('21~'23년, 3억 9,000만원)	170백만원
	2) **태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수사역량강화**('22~'23년, 2억 7,000만원)	220백만원
	3) **에티오피아 디지털포렌식 및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22~'24년, 3억 5,400만원)	165백만원
신규 사업	4)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 역량 강화**('23년, 1억원)	100백만원
	5) **디지털포렌식랩·마약수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몽골 경찰 마약수사 역량 강화**('23~'27년, 총 53억 2,700만원)	151백만원
	6) **캄보디아 CCTV 법영상 분석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23년, 1,700만원)	17백만원
	7) **디지털성범죄 관련 경찰역량 강화**('23년, 12억 9,000만원)	1,290백만원
	8) **콩고민주공화국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23년, 3억 4,300만원)	343백만원

– **(KOICA 협력)** 중장기 KOICA 합동 ▵필리핀('23~'28년, 89억) ▵우즈베키스탄('23~'27년, 76억) 대상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병행 추진

< '23년 KOICA 협력 ODA 사업(5건) 개요 >

구분	사 업 명	'23년 예산
계속 사업	1) **엘살바도르 범죄예방 역량강화**('19~'24년, 66억원)	520백만원
	2) **인도네시아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18~'23년, 61억원)	1,400백만원
	3)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1~'25년, 75억원)	300백만원
신규 사업	4) **필리핀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23~'28년, 89억원)	530백만원
	5) **우즈베키스탄 시뮬레이션 기반 경찰교육 훈련시설 구축**('23~'28년, 76억원)	1,250백만원

– **(유상원조* 사업 발굴)** 수출입은행과 MOU 체결('22.4월) 이후 주요 협력국 대상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등 사업 발굴 추진

* 수출입은행에서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전체 ODA의 41% 규모(약 1.3조)

< 경찰청 제안 유상원조 후보사업(6건) 개요 >

국가	내 용	'예산
베트남	범죄수사·교통관리 인프라	1,830억원
필리핀	범죄수사 인프라	1,030억원
우즈베키스탄	ICT 치안시스템	830억원
키르기스	범죄수사 인프라	970억원
콜롬비아	치안시스템·CPTED	670억원
엘살바도르	긴급신고시스템	670억원

○ **(사업-수출 연계)** 치안한류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외국의 한국 경찰 운용 장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안협력사업 기획 단계부터 국산 SW/HW가 포함된 대형 프로젝트 설계 추진

※ '23년 필리핀 범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韓 KICS 기반 치안시스템을 해외에 첫 수출 기대

– '23년 치안산업박람회(KPEX)와도 연계하여 전자충격기, 현장 감식키트, 스마트 순찰차 등 우수 치안장비 수출 효과 증대 도모

<치안장비 수출 현황>

연번	대상국	유형	수출품목	수출규모
1	UAE(아부다비)	수출	지문분말, 감식용 붓	900만원
2	필리핀	원조	순찰차(130대), 현장감식 키트(120세트), 경찰오토바이(142대)	45.4억
3	베트남	원조	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장비, 시뮬레이션 사격장	71.7억
4	과테말라	원조	경찰교육원(건축), 과학수사장비	28억
5	온두라스	원조	범죄예방 CCTV 250대, 관제시설	42억
6	엘살바도르	원조	번호인식CCTV 66대, 관제시설 범죄예방 CCTV 102대, 관제시설	71.9억
7	앙골라	유상원조	한국형 112신고출동 시스템	500억
8	인도네시아	원조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장비	9.3억
9	요르단	원조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9.5억

○ **(ODA사업 관리 강화)** 치안ODA 의제화 및 발전전략 수립,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분야별 치안전문가 선발·확충 및 외국경찰 연수 전담수행 방안 마련

※ 現 디지털포렌식·과학수사 등 16개 분야 59명 운용,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및 표준교안 개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 국제협력활동 체계적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1월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및 관리지침 수립·하달	2월	
	경찰 국제교류·협력 매뉴얼 개정 및 배포	3월	
	'23년 국제협력사업 종합 추진계획 수립	3월	
	캄보디아 대테러 전문가 공무국외출장 결과 모니터링	3월	
2/4분기	美 FBI 본부·NA, 캐나다 경찰청 방문 및 MOU 체결	4월	
	제16회 해외 한인경찰 초청행사 개최	4월	
	경찰청-UNDP 협력 확대 위한 의향서(SOI) 체결	5월	
	UN PKO 파견 확대 전략 수립 위한 정책연구 발간	6월	
	엘살바도르 여성대상범죄수사 시스템 전수사업 교육 모니터링	6월	
3/4분기	제6회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개최	7월	
	UNDP 합동, 디지털성범죄 대응 경찰역량강화사업 추진	8월	
	엘살바도르·몽골 등 해외 경찰 대상 치안전문가 파견 및 교육	9월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등 대상 치안역량 강화 초청연수 시행	9월	
4/4분기	2023 국제경찰청장회의(IPS) 개최	10월	
	제41차 아세아나폴 컨퍼런스 참석	10월	
	한-필리핀,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개최	11월	
	DR콩고 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재외국민, 해외 방문 한국 관광객 등

○ **(이해관계자)** 재외공간, 외국 경찰기관, 외교부, 법무부 등

□ 기대효과

○ 각국의 치안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경찰과의 적극적 치안 외교 활동을 통해 **재외국민 및 한국 관광객 범죄 예방 및 보호 역량 강화, 국제성 범죄 공동대응 기반 마련** 및 치안안전망 확보

○ 유엔·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치안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다변화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외국 경찰과 국제치안 관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인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요 협력국 및 개발도상국 대상 한국형 선진 치안시스템을 전수, **한국경찰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글로벌 치안활동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국제교류협력활동 활성화(Ⅰ-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일반	72.78	92.41
		(72.78)	(92.41)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일반	50.46	67.85
■ 국제치안활동강화(312)	일반	22.32	24.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국제교류지수(40%)	5.8	20.9	21.45	22.2	하단 참조		
② 치안인프라 전수지수(40%)	14	31	32	33.1			
③ 홍보지수(20%)	7.8	9.7	12.9	16.7			

【①국제교류 지수】

<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

· **국제교류협력**은 외국경찰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교류·MOU 체결 등 다양한 치안협력을 통해 외국 방문 한국 관광객 또는 재외국민 등 **한국인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의 초석 역할 수행**

·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교류가 무산·연기되는 등 협력활동 추진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21년 이후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교류방식을 활성화**하면서 국제협력 활동은 점차 증가세 회복

구분	'20년	'21년	'22년
치안협력 MOU 협조·체결	8	12	13
청·차장급 교류	1	33	15
국·과장급 이하 교류	28	19	59

· 정부은 글로벌 중추역할 강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외교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청 또한 '23년 국제경찰청장회의(IPS)를 개최하는 등 경찰 국제교류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23년 목표치는 국제협력 활동이 크게 제약됐던 '20년 수치를 제외, 최근 2년간의 실적 상승세('21년 20.9→'22년 21.45, 2.6%↑)인 2.6% 이상의 증가율을 반영한 22.1로 설정

※ '22년 실적 21.45 → '23년 목표 22.2 (3.5%↑)

< 측정산식 >

①국제교류{(MOU협조·체결)×0.3+청·차장급 교류×0.2+국·과장급 이하 교류×0.1}+**②정부치안외교지원**{정부부처·국제기구협력×0.25+국내외 의제발굴·사업지원×0.15}

<국제교류지수 세부 점수표>

구분	①국제교류			②정부치안 외교지원	
	MOU	교류			
내용	MOU 협조·체결	청·차장급 교류	국과장급 이하 교류	정부부처·국제기구 협력	국내외 의제발굴·사업지원
가중치	0.3	0.2	0.1	0.25	0.15

·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치안협력 MOU 협조·체결(신규·개정), △청·차장급 교류, △국·과장급 이하 교류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원 등에 차이가 있어 **각 하위 지표별 가중치 부여 필요**

구분	투입 인력·시간
① 치안협력 MOU 협조·체결(0.3)	**투입시간** : 6개월~1년 소요 / **투입인원** : 계 전체
② 청·차장급 교류(0.2)	**투입시간** : 3~4개월 소요 / **투입인원** : 계 전체
③ 국·과장급 이하 교류(0.1)	**투입시간** : 1~2개월 소요 / **투입인원** : 1~3명

< 자료수집 방법 > : 국제교류협력 관련 온나라 및 수결 공문, 정책보고서 등 증빙자료

【②치안인프라 전수지수】

<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

· **치안한류**는 외국경찰에게 **한국경찰**의 **치안기법 및 시스템**을 전수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제고**하고, 재외국민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 등 외국경찰과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코로나19 상황으로 치안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20년에는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최초 도입·활용하고, '21년 이후 대면 초청 연수를 재개함으로써 치안한류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 등 부속기관의 사업 참여와 교통·마약수사 등 사업분야 다각화 추진 중에 있음

구분	'20년	'21년	'22년
치안전문가 파견 국가	-	2	8
국내 초청연수 인원	-	40	239
비대면 연수 인원	257	1,456	278

⇨ '23년 목표치는 치안인프라 전수사업이 크게 제약됐던 '20년 수치를 제외, 최근 2년간의 실적 상승세('21년 31 → '22년 32, 3.2% ↑)인 3.2% 이상의 증가율을 반영한 33.1로 설정

※ '22년 실적 32 → '23년 목표 33.1 (3.4% ↑)

< 측정산식 >

∑ (① 치안인프라 전수 사업별 파견·교육기간* × ② 교육인원)**

· **치안전문가 파견**은 치안한류사업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분야로서 △파견 교육기간 △파견 교육인원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과 인원 등에 차이가 있어 **각각 가중치 부여 필요**

구분		투입 인력·시간
파견기간	15일 미만	**투입시간** : 15일 미만 / **투입인원** : 담당1 / 파견단 일부
	3개월 미만	**투입시간** : 15~1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3개월 이상	**투입시간** : 1개월~2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교육인원	25명 미만	**투입시간** : 1개월 미만 / **투입인원** : 담당1 / 파견단 일부
	50명 미만	**투입시간** : 1개월~2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50명 이상	**투입시간** : 2개월 이상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파견 기간별 가중치 배점>

파견기간	15일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점수	1	2	5

<교육 인원별 가중치 배점>**

교육인원	25명 미만	50명 미만	50명 이상
점수	1	2	5

※ 교육인원 모집은 경찰주재관·공관을 통한 파견 대상국 치안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고 상대국의 여건에 따라 변수가 많아 다수 인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육인원 규모에 따라 가중치 차등 배정

< 자료수집 방법 > : 치안인프라 전수 파견 관련 온나라 및 수결 공문, 정책보고서 등 증빙자료

【③홍보 지수】

<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

·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MOU 체결, 치안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치안외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사업성과 창출 못지 않게 성과에 대한 내실있는 홍보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20년		'20년	'21년	'22년
중요	국외	4	2	20
	국내	8	5	7
일반	국내	2	13	3
	내부	8	10	4

⇨ '23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의 실적 추세치('20년 7.8 → '22년 12.9, 年평균 29.0% ↑)인 29.0% 이상의 증가율을 반영한 16.2로 설정

※ '22년 실적 12.2 → '23년 목표 16.7 (29.5% ↑)

< 측정산식 > ① 중요 홍보(국외 홍보 + 국내 홍보 : 관련 보도 5건 이상) × 0.4 + ② 국내 홍보 : 관련 보도 5건 미만 × 0.3 + 내부 홍보 × 0.3

< 자료수집 방법 > : 언론(미디어)보도 및 책자 발간 등 자료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① 국제교류지수 (40%)	① 국제교류{MOU 협조·체결)×0.3 + 청·차장급 교류×0.2 + 국·과장급 이하 교류×0.1} + ② 정부치안외교지원{정부부처·국제기구 협력×0.25 + 국내외 의제발굴·사업지원×0.15}	22.1	정량	산출	
		② 치안인프라 전수지수(40%)	∑(치안인프라 전수 사업별 파견.교육기간 × 교육인원)	33.1	정량	산출	
		③ 홍보지수(20%)	① 국외 홍보건수×0.4 + ② 국내 홍보 건수 ×0.3 + ③ 내부 홍보 건수×0.3	16.2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1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업무 IV-라) 경찰 국제협력활동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업무 IV-라) UN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적극 확대 ▸(업무 IV-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업무 IV-라) 품격있는 국제행사로 글로벌 치안행정 선도 ▸(업무 IV-라) 치안한류(K-Police Wave) 고도화

39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 추진배경

○ 국외도피사범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터폴 및 195개 회원국과의 공조 강화 및 한국 경찰관 파견** 등 **적극적인 송환 추진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22년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403명으로 전년('21년 373명) 대비 8% 증가

< 연도별 도피사범 송환 현황 >

구 분	'22년	'21년	'21년	'20년	'19년	'18년
송환(명)	403	373	373	271	401	304
송환요청(명)	549	953	953	943	927	579

– 도피사범 중 중국과 동남아 4개국(필리핀·베트남·태국·캄보디아) 도피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 **주요국에 집중적인 검거·송환 공조 지속 필요**

– 주요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강화는 물론, **한국경찰관 현지 파견**(이하 '코리안데스크') 등 **적극적인 공조전략 전개**

○ **국가 단위의 범죄대응으로는 초국경범죄 수사에 한계, 全 세계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는** 범죄수사의 **필수절차로 자리매김**

– 凡수사부서의 국제공조를 조정·지원하는 부서로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채널 다각화**를 통해 **인터폴 인프라 활용 극대화**

– 다변화된 국제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청 주요 현안 범죄에 대한 펀딩*사업을 통해 인터폴 활동 주도**

* 회원국별 주요 관심 분야에 따라 인터폴이 특정 범죄에 대한 대응강화 등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폴에 지출하는 '특별 기여금'

○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와 함께 **재외국민 사건·사고도 빠르게 증가, 해외에서도** 국내 수준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

※ 영사조력법 시행('21.4.20.)으로 경찰주재관 활동 법적근거 마련

– 글로벌 치안활동 중심국가 확립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해외 **파견경찰 인력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전화금융사기 등 해외거점 도피사범 송환 총력 대응]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실적 달성**

– 코리안데스크·경찰협력관 등을 활용, 중국·필리핀·베트남·태국 등 주요 도피사범이 집중된 **아시아 국가에 공조 역량 집중, 도피사범 송환 총량 제고**

▸ 필리핀 內 코리안데스크(6), 중국(2)·태국(1)·캄보디아(1) 內 경찰협력관 파견 중이며, 우리청 외사국(인터폴국제공조과) 內 태국 경찰관 1명(경감급) 파견 근무 중('23.2월)

○ **국수본 및 현지 경찰과 협업, 현지추적·검거 등 공조협력 강화**

–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악성사기' 도피사범 첩보 공유 및 검거를 위해, **외사국 주관으로 국수본과 합동 실무 TF 구성**

– **「외사국(인터폴국제공조과) – 국수본 – 시도청(인터폴국제공조팀)–해외파견자(코리안데스크 등)」 간 '원팀(One Team)'**으로 공조역량 결집, 도피사범 현지 검거 실적 제고

○ **중국과 공조 강화, 전화금융사기 조직 와해 집중**

– 중국은 전화금융사기 도피사범의 약 80%('22년)가 체류 중인 중요 공조국으로 양국 간 **'전화금융사기 단속 MOU(가칭)'체결**, 조직 총책 검거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 척결에 획기적 전환점 마련

○ **국제공조 성과 홍보를 위해 협업적·전략적 홍보전략 마련**

– 정책과제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홍보와 수사관서 성과 홍보기회 창출 위한 협업적 홍보의 균형적 추진

– 피의자 현지 검거시부터 수사부서와 협업, **『현지검거(수사)–송환(외사)–수사결과(수사)』 등 단계별 분산 홍보**로 대국민 홍보기회 배가 및 효과 극대화

[인터폴 인프라를 활용, 국제공조의 허브(Hub) 역할 수행]

○ 국제공조 확대·강화를 위한 인터폴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유관부처 협업

– 인터폴이 보유하고 있는 D/B*, 각종 수배서, 시스템 등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외도피사범 검거 및 초국경범죄 대응역량 강화

* 인터폴은 형사정보시스템(ICIS), 도난분실여권(SLTD) 등 총 19종의 데이터베이스 보유

– 인터폴의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국내 유관부처를 적극 발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터폴-유관기관 간의 가교역할 수행

○ 인터폴 펀딩사업을 기반으로 우리청 이익에 부합하는 인터폴 활동 주도

– '20년부터 추진한 인터폴 펀딩사업을 통해 주요 경제사범 검거 및 범죄피해금 동결, 아동성범죄 피해자 식별 등 괄목할 만한 성과 달성

※ 경제사범 2,563명(우리청 148명) 검거·2,971억 동결 / 피해자 식별 2,678명 등

– 우리청 주요 현안인 악성사기·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관련부서에 펀딩 실시, 해당 범죄분야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 성과 향상 추진

< '23년 경찰청 신규 펀딩사업(案) >

구분	글로벌 금융범죄		마약범죄
	경제범죄	도피사범 검거	
사업기간	**3년** ('23. 6월 ~ '26. 5월)	**3년** ('23. 4월 ~ '26. 3월)	
펀딩액	**14.4억원** (年 4.8억원)	**14.4억원** (年 4.8억원)	**17.2억원** (年 5.72억원)
담당부서	**금융범죄·반부패센터 작전과** (IFCACC Operations)	**도피사범 추적지원과** (FIS)	**범죄네트워크과 마약계** (CNET / Drugs)
활동목표	▸ 경제사범 검거 ▸ 사업 참여국 확대 ▸ 범죄수익 동결·환수 체계 내실화	▸ 중요 수배자 선정 및 검거 역량 집중 ▸ 국외도피사범 추적 역량 강화 교육	▸ 세관 협업, 마약 밀수 합동단속 추진 ▸ 마약사범 검거 ▸ 동향 보고서 배포

○ 국제범죄 최신 동향분석을 통해 초국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 인터폴이 발간한 △ 분야별(사이버·마약 등) 보고서 △ 신종 범죄수법 등 분석, 대응방안 수립 및 유관부처(부서) 배포하여 국제범죄 대응역량 제고

[해외파견자 증원 등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및 글로벌 치안 역량 강화]

○ 공관별 재외국민보호 수요·파견 효과성(치안협력)·긴급성(국제성 범죄 대응, 도피사범 송환) 등을 종합 고려한 경찰주재관 등의 증원을 추진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21.4.20.)에 따라서 형사법 및 치안분야에 전문성 있는 경찰 영사의 필요성이 대폭 증가

< 재외국민 관련 통계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해외 출국자	1,931만명	2,238만명	2,650만명	2,870만명	2,871만명	427만명*	123만명*
재외동포(격년조사)	718만명	-	743만명	-	749만명	-	732만명
재외국민 사건사고	14,076명	14,493명	18,410명	20,100명	22,732명	16,133명	11,472명

※ '22년 통계는 주무부처(해외출국자 법무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등 외교부) 확정 전

* '20년 이후 해외출국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각국 검역 강화 등 영향으로 한시적 감소

○ 또한, 인터폴·코리안데스크·경찰협력관 등 해외파견직 운영을 통해 주재관 외 다양한 경로로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공조 활성화에 기여

< 해외 파견 경찰관 현황 >

구분	계	경찰주재관	인터폴협력관	코리안데스크	UN	경찰협력관	치안전문가
'21.12월	102명	70	9	6	4	4	9
'22.12월	107명	76	10	6	2	4	9
대비	+5	+6	+1	-	-2	-	-

○ 해외파견 경찰관의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이행하여 경찰청의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 (경찰주재관 양성과정) 연간 교육인원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경찰인재개발원 주관, 내·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연 2회 교육(각 30명) 실시

– (역량 강화) 경찰주재관 등 파견자 대상 직무교육(파견 前) 및 회의(파견 中)*를 실시하여 국제공조 등 업무역량 강화 도모

* 경찰청 주관으로 권역별·소집·화상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별 우수 사례 및 노하우 공유, 최근 국제성 범죄 동향 분석 등 맞춤형 회의 진행

– (신속대응팀 운영)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통합 신속대응팀 운영 및 상황훈련 실시

○ 해외 입국 및 체류를 위한 외사신원조사 업무 처리 등 내국인이 외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반기 경찰주재관 직무교육 실시	2월	
	경찰주재관 증원 등 추진 계획 수립 및 관계 부처 업무 협의	2월	
	제24차 인터폴 아시아 지역회의 참석	2월	
	국제공조 업무 관련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챗 GPT)' 활용 계획 수립	2월	
	국제공조 성과의 전략적·협력적 홍보 강화방안 마련	2월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한 필리핀 경찰청과 업무협의(상반기)	3월	
	상반기 全 시도경찰청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	3월	
	국수본 합동, 도피사범 TF 구성	3월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역량강화 회의	3월	
	경찰주재관 평가 관리 강화 세부계획 수립	3월	
2/4분기	'23년 인터폴 펀딩 사업 개시	4월	
	국수본 합동, 도피사범 TF 1차회의	4월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공안부와 업무협의	4월	
	경찰주재관 양성과정(1차) 교육	4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인력풀 정비	4월	
	주재관 성과 등 평가 실시	5월	
	인터폴 리포트 발간	6월	
	제18차 NCB 국장회의 참석	6월	
	국수본 합동, 도피사범 TF 2차회의	6월	
	경찰주재관 활동사항 등 점검	6월	
3/4분기	문체부의 인터폴 펀딩(I-SOP) 관련 사건 공조 회의 실시	7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인력풀 훈련	7월	
	하반기 全 시도경찰청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	8월	
	하반기 경찰주재관 직무교육 실시	8월	
	국수본 합동, 도피사범 TF 3차회의	8월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한 필리핀 경찰청과 업무협의(하반기)	9월	
	국외도피사범 합동 검거작전 개시	9월	
	국수본 합동, 도피사범 TF 4차회의	10월	
4/4분기	주재관 성과 등 평가 실시	10월	
	경찰주재관 양성과정(2차) 교육	10월	
	제91차 총회 참석	11월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재관 등 회의	11월	
	국수본 합동, 도피사범 TF 5차회의 및 결과보고	12월	
	HAECHI 작전 결과회의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내 거주 내·외국인 및 재외국민

○ **이해관계집단** :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국토부,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

□ 기대효과

○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한 집중적인 도피사범 송환 추진, ‘범죄자는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경각심 제고

○ 인터폴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각국의 치안D/B를 국내 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 급변하는 국제 치안환경에 대한 대응력 제고

○ 경찰주재관·국제기구 파견 경찰관 등 글로벌 치안활동을 담당하는 해외파견자 증원 및 전문교육 강화로 국제공조 및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외사경찰활동(Ⅲ-1-일반재정①)			
① 외사경찰활동(3132)	일반	145.15	145.89
■ 외사경찰활동(311)	- 일반	145.15	145.89
국제교류협력활동 활성화(Ⅰ-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일반	50.46	66.29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 일반	50.46	66.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1)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40%)	271	373	459.8	600	3년간 추세치(30.45% 증가)를 상회하는 적극적 목표치(30.46%) 적용	하단 참조	국외도피사범 송환DB
(2)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30%)	신규과제	117	129	143	상승세(10.2%) 이상 증가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하단 참조	인터폴 전용망 문서, 온나라 공문 등
(3)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실적(30%)	신규과제		102	113	전년 대비 10%(112.2) 이상 증가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하단 참조	온나라 공문 등

【측정산식】

(1)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

▶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자로 간주되므로, 송환 대상자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경우 가중치 20%를 부여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

-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 다액(5억원 이상) 경제사범
- 사회적 파장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한 기타 중요사범

	국외도피사범(인터폴 적색수배자)	국외도피사범(기타 사범)
지표 설정	▲ 송환된 피의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피의자	▲ 송환된 피의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되지않은 피의자
점수	각 1.2점	각 1점

(2) 인터폴 조직 및 사무총국 및 DB 등 활용 실적

	A등급	B등급	C등급
지표 설정	▲ 해외 관계자 초청 국제회의 개최 ▲ 인터폴 프로젝트 펀딩 주관 ▲ 국내외 유관기관 간 MOU 체결 ▲ 인터폴 사무총국 DB 확대 ▲ 인터폴 총회 참석 등	▲ 인터폴 교육프로그램 참여 ▲ 인터폴 회의 참석 ▲ 인터폴 DB 타부처 연계·활용 ▲ 인터폴리포트·동향보고서 발간 등	▲ 인터폴 국제공조수사(수배·사실확인) 요청·회신 ▲ 인터폴 회의 타부처·유관기능 통보 ▲ 인터폴 DB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 내 연계·활용 ▲ 인터폴 보라색수배서 타부처·유관기능 배포 등
점수	각 3점	각 2점	각 1점

(3) 재외국민보호 역량 및 글로벌 치안역량 강화 실적

▶ 국제기구 파견 확대 등 해외파견 경찰관 등 인력 증원, 해외파견 경찰관 전문성 향상 교육, 재외국민보호 관련 계획 수립, 국제성 범죄 정보공유 활동 등 경찰청의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모두 포괄하는 지표로서 중요도 · 난이도 ·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점수 부여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표 설정	▲ 해외파견 경찰관 증원 인원당 ▲ 해외파견 인력 관리계획 수립 ▲ 외사신원조사 6만건 이상	▲ 재외국민보호 관련 계획 수립 ▲ 신속대응팀 파견 관련 업무 ▲ 해외파견 경찰관 교육·회의 등 ▲ 소관 법령·행정규칙 정비 등 ▲ 외사신원조사 5만건 이상	▲ 파견자 선발 관련 업무 ▲ 재외국민보호 관련 대외홍보 ▲ 신속대응팀 상황훈련 ▲ 외사신원조사 4만건 이상	▲ 해외파견자 안전장비 등 지급 ▲ 해외파견자 연락망 구축 등 ▲ 경찰업무 소식지(SITREP) 등 해외파견자와 정보공유 활동 10회당 ▲ 외사신원조사 3만건 이상
점수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40%)	국외도피사범 송환 D/B	600	정량	산출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30%)	인터폴 전용통신망 DB 관련 활동 내역	143	정량	산출	
		재외국민보호 역량 및 글로벌 치안역량 강화 실적(30%)	재외국민보호 관련 활동 내역	113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전화금융사기 등 해외거점 도피사범 송환 총력대응 (업무 Ⅰ-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업무 Ⅳ-라)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국정 100-1 / 업무 Ⅰ-나) 국제기구 등 파견 확대 (업무 Ⅳ-라)

40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 추진배경

○ **(사이버범죄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해제('22. 4월)에 따라,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이 대면방식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는 증가

※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 '21년 217,807건 → '22년 230.355건 지난해 대비 7.79% 증가

– 사이버범죄는 그 피해 발생 시 **▲피해규모가 광범위 ▲빠른 피해 확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보다도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

○ **(사이버환경 변화)** ICT기술의 발달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과 융합*, 신종 사이버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융합산업 분야(7): △홈네트워크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드론 △지능형 CCTV

– 신종 사이버범죄는 단순 사후적 대응(발생 후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선제적인 예방 정책 수립·집행이 필수임

○ **(국민적 관심의 증대)** 사이버공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종합적 대응 활동(민·관·학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민지향적 사이버 치안서비스 강화 필요**

○ **(사이버 국제공조의 필요성)** 해외 소재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여러 나라를 우회하여 추적을 회피하는 등 초국경화 양상

– 해외 디지털증거의 신속한 확보는 범죄혐의 입증의 핵심으로, 수사관이 국제공조에 대한 부담감이 없도록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필수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 사례

▸ **(해킹툴 유통)** 백도어·랜섬웨어·개인정보 탈취툴 등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정 전산망에 대한 해킹·디도스 의뢰가 국제적으로 활성화

▸ **(사이버성범죄·마약 유통)** 다크넷 내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아동음란물 및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세탁, 추적을 회피함

▸ **(개인정보탈취 및 판매)** 해킹, 랜섬웨어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해외 다크넷 및 온라인 게시판에서 매매하는 경우가 만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사이버 협업치안 확대]

○ **(민관 협업 추진)** 해킹·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예방대책 마련 및 기술개발 추진

- **<범죄이슈 공동대응 >** KISA 등 유관기관, 주요 포털,·오픈마켓 등과 협업, 사이버범죄 예방대책 마련 및 공동 홍보 추진
- **<연구협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한 기술 연구개발 추진

○ **(국민참여 예방활동)** 사이버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국민들의 자발적 예방활동 참여 확대 및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사이버범죄예방의 날>**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4.2. 전후로 기념행사, 공모전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전개 예정
- **<누리캅스>** 인터넷상 도박·마약·불법게임물 등 불법·유해정보 신고활동 및 경찰의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 (833명, '23. 1月.)
- **<예방교육>** 사이버범죄 예방강사*의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표준강의안 제작 및 활용, 기관·단체 등 맞춤형 예방교육 지속 확대

  * 사이버수사 경력과 강의역량을 갖춘 강사(경찰관)를 전국적으로 110명 선발·운영중
-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수여>** 사이버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관·학이 서로 협력하여 협력치안 추진 동력 확보

○ **(정보공유)** 사이버위협·범죄 등 동향에 관한 적극적 정보공유

- **<2023 사이버 범죄트렌드 발간(대외용)>** '23년 예상되는 사이버범죄 동향 및 예방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
- **<더 사이버 발간(대내용) >** 첨단화·조직화된 신종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에 관한 연구내용 및 정보를 일선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

[현장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전문인력 확충)** 수사·디지털포렌식 등 민간의 우수인재를 경력채용

- **<민간 IT 고급인력 채용 확대>** 가상자산·다크웹 이용 등 첨단범죄 대응을 위해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 전담수사관으로 채용 확대
  * 00년부터 사이버 전담수사관 지속 채용(총 772명), '22년 12월 75명 채용
- **<사이버 인력증원>** 현장 사이버수사관 인력을 증원하여 사이버수사 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 **('22년 소요정원)** 시도청·경찰서 사이버수사관 163명 증원이 정부안에 반영

○ **(사이버전문 교육)** 사이버수사관 자질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

- **<1단계 : 기초>** 사이버경력 1년 미만의 신임 수사관 대상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기초지식을 배양, 업무 조기 적응 및 사이버수사 자질 향상
  ※ 교육 콘텐츠 배포, 수사연수원 기초과정, 시도청 교육센터 사이버수사 기초과정 등
- **<2단계 : 전문>** 다크웹·가상자산 추적 등 최신 사이버 트렌드에 대한 고도의 전문 기술 습득으로 사이버수사 전문 역량 강화
  ※ 수사연수원 전문과정, 사이버수사 전문화 교육(민간위탁), 자격증 과정
- **<3단계 : 심화>** 사이버침해 사고 현장 대응부터 테러형 범죄 추적 수사까지 사이버범죄 전방위적 대응 가능한 사이버치안 핵심 인재 양성
  ※ 수사연수원 심화과정, 사이버수사 전문화 교육(민간위탁), 유관기관(KISA) 교육

○ **(사이버치안 전문가 양성)** 책임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인된 사이버치안 핵심 인재 양성

- **<맞춤형 석사과정 운영>** 사이버경력·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석사과정 운영, 공인된 사이버치안 전문가 양성
  ※ 국내 우수 정보(보호)대학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경찰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으로 업무 연계성 극대화
- **<폴-사이버챌린지 개최>** 사이버수사 기법을 접목한 경찰청만의 독창적인 대회인 '사이버범죄 추적수사 역량 경진대회' 개최('21~)*,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도모
  * '21년 57개팀 91명 / '22년(예선) 58개팀 83명, (본선) 20개팀 30명

○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 확충)**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첨단시스템 고도화 및 고성능 장비 보급 추진

- **<시스템 고도화>** 사이버범죄 단서와 불법정보 분석을 위한 사이버범죄 연관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기법 지속 개발
- **<고성능 수사장비 보급>** 고난도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디지털증거 복제·분석장비 보급 및 최신 디스크 분석용 프로그램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원할한 수사 활동 지원

  *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실시간 거래정보를 분석, 범죄에 사용된 거래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추적 기능 제공

[사이버 국제공조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

○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기존 사이버 국제 공조망 강화 및 신규 공조채널 발굴을 통한 공조 다변화 모색

- ▸**(미국)** 정례회의(月1회), 위협정보 및 사건분석 공유 등으로 FBI 및 HSI 한국지부 공조범위 확대
- ▸**(동남아 등)** 사건분석 수요 파악을 통해 현지 경찰 및 파견 협력관과 교류 확대, 해외 공조작전을 통한 합동 피의자 검거, 압수수색 등 실질적 성과 도출
- ▸**(일본)** 일본내 사이버 국제공조 강화 기류('22.4月 사이버수사부서 신설)를 활용해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일본 경찰과 정기 교류 추진
- ▸**(네덜란드)** 한국-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23.3月) 및 정기적인 양자회담 등을 통해 글로벌 공조역량 강화 추진

○ **(ISCR 내실화)** 한국경찰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회의 개최로 범세계적 '협력의 場'을 마련,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랜섬웨어·가상자산·다크웹 등 사이버범죄 동향과 관련된 주요 콘텐츠 마련, 수사관(분석관)의 역량강화에 기여
- ▸**(신속공조)** ISCR에 참석한 공조대상국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함께 개최하여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 도모

○ **(유로폴 직접공조 실현)** 실무약정 후 직접공조 채널구축을 위한 보안통신선 연결 및 협력관 파견 절차 이행

▸**(직접공조 채널구축)** △유로폴 가입국들과 직접공조를 위한 보안통신선* 연결 및 서버 운영 △유로폴 내 협력관 파견*을 위한 MOU체결 절차 진행

* EU(27개국) 및 가입국, 국제기구와 신속 수사정보 공유

** 총 54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유로폴에 협력관 총 285명 파견 중, 휴민트 구축 및 공조 활성화

▸**(향후 일정)** △통신선 연결, 접속권한 부여 및 자료공유 절차 교육(상반기) △협력관 파견내용 확정, 절차 논의 후 MOU 체결(상반기)

○ **(공조포털 고도화)** 수사관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공조요청을 효과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 고도화

▸**(편의성 개선)**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여 포털에 반영하고 UI 개선 등 병행

▸**(처리·관리)** 공조요청 관련 서류에 대한 위조방지 기능 추가 등 보안 강화

○ **(글로벌 IT 기업과 협업)** 구글, 메타 등 각국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신속·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본청 집중처리 및 全 수사부서 지원

▸**(해외기업 공조망 강화)** 중요 공조대상 사건 발굴, 화상회의 및 직접 협력 관계 개척·강화하여 최신 범죄 동향에 따른 국제공조 수요에 능동적 대응

▸**(범죄동향 분석)** 사이버국제공조 포털 시스템에 접수된 사건들의 수사 단서 및 범죄 동향 분석*, 현장수사관들과 공유

* 중복 범행 계정 등에 대한 선제적 삭제·차단 요청 등 추가 피해 방지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맞춤형 석사과정(디지털포렌식학과) 12기 계획 수립	2~3월	
	사이버수사 전문화교육 계획 수립	2~3월	
	가상자산 전문과정 계획 수립	3월	
	폴 사이버 챌린지 운영 계획 수립	3월	
	글로벌 IT기업 공조범위 확대 실무협의회 개최	3월	
	유로폴 보안통신선 활용 계획 수립	3월	
2/4분기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 온라인 행사 개최	4월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4월	
	'2023 사이버 범죄 트렌드' 발간	5~6월	
	현장수사 지원을 위한 고성능 수사장비 보급	5~7월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절차 간소화 및 공조 사건 논의	4월	
3/4분기	'더 사이버' 발간(8호)	7월	
	KISA 위탁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월	
	맞춤형 석사과정(디지털포렌식학과) 12기 선발 및 운영	8~9월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3 개최	9월	
4/4분기	폴 사이버 챌린지 대회 개최	9~10월	
	대한민국 사이버 치안대상 개최	10월	
	사이버국제공조 포털 시스템 고도화	10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탁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0~11월	
	'더 사이버' 발간(9호)	12월	
연중	누리캅스 테마별 집중 신고 기간 추진	1~12월	
	찾아가는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실시	1~12월	
	'23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제작	1~12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1~12월	
	사이버범죄연관분석 시스템 고도화 추진	1~12월	
	부다페스트 가입절차 세부 단계별 추진	3~12월	
	수사협력관 파견 세부 단계별 추진	3~12월	
	가상자산 전문 교육 운영	6~8월	
	사이버수사 전문화교육 운영	7~11월	
	맞춤형 석사과정(디지털포렌식학과) 12기 운영	9~12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출처
	'20	'21	'22	'23			
사이버 예방교육(강의)실적 (50%)	1,165건	1,936건	2,300건	2,530건	- 전년도 실적치 2,300건 대비 10% 이상 상승한 2,530건을 목표치로 설정	사이버예방교육 접수 및 처리현황 강사별 통계 '교육완료'항목	사이버예방교육시스템 통계 자료
사이버 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50%)	135.98점	156.02점	119.77점	131.7점	해외 법집행기관 회신율은 급변하는 국가간 공조수요의 특성상 연도별 등락폭이 크므로,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효율성 지수에 대해 전년 대비 10% 증가한 131.7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아래 산식 참조	사이버국제공조포털 시스템

【사이버 예방교육 실적】

<지표설정 사유>

- **(지표 정의)** 사이버 예방교육(강의)실적
- **(설정 배경)** 언택트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음에 따라 사이버 사기·메신저 피싱·해킹 등의 주요 사이버범죄의 증가 추세, 사이버 범죄의 지능화·광역화에 따라 대국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의 강화 필요, 사이버예방교육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사이버예방교육 접수 및 처리현황 강사별 통계 '교육완료' 건수를 산정

  ※ 경찰관 신분으로 사이버수사 경력과 강의역량을 갖춘 예방강사 110명 선발·운영중('22년 기준)

<'23년 목표치 산출 근거>

- **(그간 추세치)** 사이버예방교육시스템에 '교육완료'된 예방교육건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20년 1,165건 ⇒ '21년 1,936건⇒ '22년 2,300건)
- **(수치 산정)** 사이버범죄의 증가로 예방 교육 신청 건수가 지속 상승, 향후 예방교육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도 사이버 예방교육 실적인 2,300건을 기준점수로 하여 **기준점수 대비 10% 이상 상회하는 2,530건을 목표치**로 설정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지표설정 사유>

- **(지표 정의)** 사이버범죄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업무의 효율성 측정

- **(설정 배경)** 양적인 국제공조 건수가 아닌 실제 수사에 기여하고 있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회신율과 회신기간을 중심으로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설정

  ※ 기존의 국제공조 요청 건수 산출 지표는 업무의 양적인 부분만을 측정하는 한계 존재

  ⇨ **'22년부터는 공조결과가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지표 설정)** 사이버국제공조에는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외에도 글로벌 IT기업 상대 공조도 병행되고 있으나, 글로벌 IT 기업 회신율은 '22년 기준 91.7%를 나타내는 등 사실상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임계치에 도달하여 해외 법집행기관 상대 공조 지수로만 효율성 지수 평가

- **(측정 산식)**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의 회신기간과 회신율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효율성지수 산출(요청 30일내 100% 회신기준, **최대 400점**)

$$\frac{(A\times 4)+(B\times 3)+(C\times 2)+(D\times 1)}{(A+B+C+D)}\times X$$

회신 기간	회신 건수(1월-10월)	가중치	회신율
30일 이내	A	4	X
30일 초과 - 60일 이하	B	3	
60일 초과 - 90일 이하	C	2	
90일 초과	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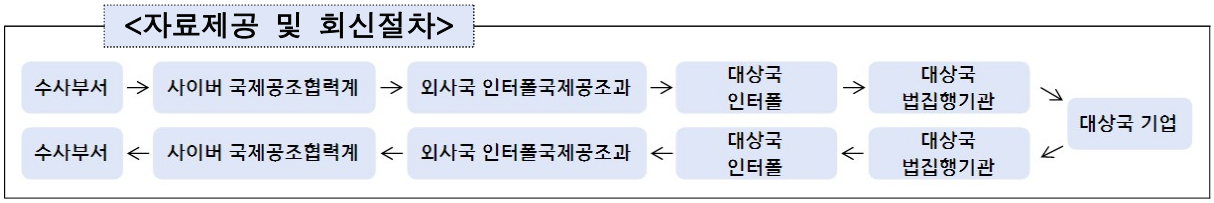
- **(지표 목표)** 신속·정확한 국제공조 지원을 통해 일선 수사관들에게 효과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

<'23년 목표치 산출 근거>

- **(현황)** 해외 법집행기관 회신율*은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 표출

  * 추세: '20년 43% → '21년 51% → '22년 40.6% 등 10% 내외의 등락폭

- **(원인)** 해외 법집행기관간 공조요청 시 국가 간 법체계 차이로 인해 회신 범위 조율이 필요하고, 자료 요청 및 회신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하는 등 회신 기간 및 회신율 저하 요소 상존



- **(목표치 산출)** 해외 법집행기관 회신율은 급변하는 국가간 공조수요의 특성상 연도별 등락폭이 크므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131.7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관련통계>

	2021				2022			
회신기간	회신건수	비율	가중치 반영	회신율	회신건수	비율	가중치 반영	회신율
30일이내	172	0.51	2.04	51	107	0.47	1.88	40.6
30~60	74	0.22	0.66		46	0.20	0.60	
60~90	32	0.09	0.19		32	0.14	0.28	
90 초과	60	0.18	0.18		44	0.19	0.19	
합	308	1	3.06		229	1	2.95	
지수 (가중치반영 *회신율)	156.02점				119.77점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예방교육실적 (50%)	사이버예방교육 접수 및 처리현황 강사별 통계 '교육완료'항목	1,980건	정량	결과	
		사이버 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50%)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효율성 지수	490점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업무 Ⅰ-가, 나, 다

41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추진배경

○ 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가상자산· AI 등 다양한 사이버 기술이 국민들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사이버범죄 발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해킹·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지난 5년간 증가율이 21%(2,888→3,494)에 달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

– 하지만, 수법 고도화·대상 다변화·추적 회피 수단 개발* 등으로 수사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검거율 또한 하락하고 있음

* DRDoS / 가상자산 거래소 공격 / 다크웹 사용 / APT(지능형 지속 공격) 확대 등

분류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발생건수	2,888	3,638	4,344	3,845	3,494
검거검수	902	1,007	911	1,254	729
검거율	31.2%	27.7%	21%	32.6%	20.9%

○ 이러한 수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과를 신설('22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등 각종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및 사이버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

– 수사지휘, 위협정보 수집·분석 및 관계기관, 민간 협력확대로 사전대비·사후조치(수사) 등 종합적·체계적 대응태세 구축

○ 아울러, 사이버테러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적극적인 기획수사(집중·특별 단속) 및 피해자 보호, 추가피해 방지활동 강화 필요

– 수사를 통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피의자 검거 뿐만 아니라 회복적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과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적극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집중단속)** 국가 사이버 안보를 침해하는 사이버테러범죄(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로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 '23년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계획 >

단속명	기간	중점 단속대상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22. 4. 1. ~ 9. 30. (6개월)	해 킹 (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 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 기타)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 '22년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현황 >

(3. 1. ~ 10. 31, 8개월간)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명)			
		소계	검찰송치		불송치
			구속	불구속	
합 계	**553**	**685**	**26**	**455**	**204**
해 킹	307	356	18	240	98
서비스거부공격	6	6	1	2	3
악성프로그램	34	66	2	56	8
기 타	206	257	5	157	95

– **(테러수사팀 중심 수사)** 해킹 등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고도의 수사 역량과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이므로 전문수사 인력을 갖춘 시도청 테러수사팀 중심으로 수사 진행

※ 단, 정보통신망침해형 사건 중 계정도용, 단순침입*은 경찰서(사이버팀)에서 수사

* '22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중 계정도용·단순 침입(2,077건)이 59.4% 차지

– **(신속·정밀 대응)** 대규모 해킹사건 수사 時 사이버수사국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악성코드 등 추적단서 분석

※ 사이버범죄연관분석 시스템을 통해 유사사건間 공통점 분석하고 피의자 추적단서 확보하는 등 사이버수사국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적극 활용

▸ **<사이버범죄연관분석 시스템>** 통합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 단서 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사 방안 제시하는 시스템

▸ **<DINT 시스템>** 여러 IP를 경유하고 접속기록을 암호화하는 등 추적과 검색을 곤란하게 하는 다크웹에 대한 불법 정보 추적시스템

– **(국제공조)** 최근 피의자들의 VPN,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등으로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수사 시 국제공조는 필수인만큼 '국제공조 포털' 등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인터폴 공조 적극 활용

– **(피해예방·회복)** 단순 피의자검거에서 나아가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 차단, 범죄수익금(가상자산 등) 추적·환수 실시 등을 통해 범행의지 차단하고 2차 피해예방·회복 활동도 병행

▸ **<불법사이트 차단>**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 유포 사이트 등에 대해 KISA에 차단 요청('21. 1월~)

▸ **<범죄수익금 환수>** 사이버범죄 피해 가상자산 환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前 몰수·추징 보전 및 국세청 통보 활성화

※ '21. 6월 해외거래소에서 해킹피해 이더리움 1,360개를 국내로 환수한 바 있음

○ **(기법연구·모의훈련)** 사이버테러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추적 수사기법 연구·교육 실시하고, 시도청 사이버 테러수사팀 대상으로 모의훈련 실시

▸ **<연구·교육>** '사이버테러수사연구회*(테러수사기법학습모임)' 실시(시도청 테러수사팀 참여), 연구회 연구결과는 책자로 제작·배포

* '19. 5월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범죄동향·추적기법 등 공유를 위해 결성 후 매월 발표회 개최(총 42회), 4년 연속('19~'22) '우수 현장학습모임'으로 선정

▸ **<모의훈련>** 시도청 사이버테러수사팀 대상으로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해 초동대응 방법을 반복 훈련(반기 1회)

※ 각 시도경찰청 관내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국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정비하고 협업체계 유지하는 등 유사시 대비태세 확립

○ **(전문수사관 인력풀)** 테러수사 전문성 강화 및 전국적 규모의 사이버테러사건 발생 대비 **사이버테러수사관 인력풀* 선발·배치**

* 수사경력, 학위·자격증, 입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위원회서 선발

○ **(관계기관 협업강화)** 사이버테러 관계기관(과기부·KISA, 국정원 등) 및 전문가·보안업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위협정보 수집·분석·공유·관리를 통해 **사이버테러 공동 대응역량 강화**

▸ **<관계부처 협업>**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파견(경정급), 국가안보실 주관 랜섬웨어대응TF, 과기정통부(국장급) 및 국정원(실무자급) 정책협의체 활성화 등 통해 부처 간 정보공유, 현안업무 조율 등 협업

▸ **<민간협력 확대>** '사이버테러 전문가 그룹'(학계, 보안업체 등 분야별전문가들로 구성) 활성화로 분석·추적기법 개발 및 정책제안 반영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인력 파견	3월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계획 수립	3월	
	북 사이버위협 대응 실무협의체 회의(3차)	3월	
	사이버테러범죄 전문가그룹 간담회(1차)	3월	
2/4분기	사이버테러 수사지원 시스템 신규기능 구축 ISP 완료	4월	
	상반기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훈련 실시	4월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시행	4월	
	사이버테러 수사지원 시스템 신규기능 구축 예산 신청	5월	
	사이버테러 초동조치 메뉴얼 개정	6월	
	과기정통부(KISA) 정책협의체 정기회의	6월	
3/4분기	하반기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훈련 실시	9월	
	사이버테러 전문가 그룹 간담회(2차)	9월	
	사이버테러수사연구회 합동 워크샵	9월	
	사이버테러 사건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	9월	
4/4분기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평가 및 포상	10월	,
	사이버테러 수사지원 시스템 고도화	10월	
	과기정통부(KISA) 정책협의체 정기회의(2차)	12월	
연중	북 사이버위협 대응 실무협의체 회의	3월～12월	외교부
	안보실 주관 랜섬웨어 대응 TF 참여	3월～12월	국가안보실
	확산금융방지 실무협의체 회의 참여	3월～12월	외교부
	국정원 실무협의체 회의	3월～12월	국정원
	사이버 테러수사 연구회	3월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공공·민간기관

○ 이해관계집단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국정원, 금융위 등) 및 학계, 민간기업(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보안업체 등)

□ 기대효과

○ 국가 사이버 안보와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테러범죄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사이버 치안 만족도 제고

○ 악성프로그램 유포 차단, 범죄수익 추적·환수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2차 피해 예방·회복에 기여

○ 사이버테러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테러범죄 수사 국민 만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1-3-정보화① 사이버수사(1232)			
①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1232)		4.5	4.5
■ 사이버테러 수사지원시스템 운영(513)		4.5	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1인당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지수 (70%)	43.7	28.9	31.5	34.5	하단 참조 ※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에 해당	정보통신망 침해형범죄(계정도용제외) 검거건수 / 사이버수사관 현원 ※ 검거지수 측정식은 하단 참조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현황통계 (KICS 시스템 자료)
피해 보호조치 건수 (30%)	신규	135	384	424	하단 참조 ※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에 해당	악성프로그램 유포·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이트 차단건수	피해 보호조치 통계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자료)

【1인당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지수】

가. 검거지수 측정산식

- (정보통신망침해범죄 검거건수 / 사이버 수사관 현원) * 100

※ 검거건수 산출방법

검거 건수	KICS 사이버범죄 현황(정보통신망침해범죄) - 검거 건수(원표) - 원표승인일 기준 통계

※ 통합수사팀이 시행되는 시도청('22년 기준 9개 시도청)은 시도청에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사건을 수사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 수사관 현원에서 통합수사팀 인원은 제외

나. 지표설정 사유

- 국가 발전과 안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이버 수사관의 핵심업무인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검거지수 목표치 달성 여부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발생건수는 증가하나, 내부적으로 경찰서 통합수사팀이 확대 운영되어 본청 중심의 일률적인 검거율 상승 견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경찰서 통합수사팀에서 수사하지 않고 시도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서 수사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범죄 검거건수는 사이버 수사관들의 노력과 무관하게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검거건수와 사이버 수사관 인원을 모두 고려한 산식(검거지수)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계정도용 제외 전체 발생 / 검거 건수 / 사이버 수사관(현원) / 검거지수

구분	'18	'19	'20	'21	'22
발생건수	2,167	2,887	3,277	2,454	2,598
검거건수	742	889	794	596	631
사이버수사관(현원)	1,547	1,782	2,020	2,251	2,001
검거지수	48	54.7	43.7	28.9	31.5

※ 통합수사팀 편성인력 제외

- 단, 계정도용은 포털 검색순위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는 온라인마켓팅에 주로 사용되며, 피의자 검거 시 계정도용 피해자 수에 따라 검거건수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므로(98~658) 위 지표 산정시 검거 건수에서 제외하였음

※ 계정도용 발생 / 검거 건수

구분	'18	'19	'20	'21	'22
발생건수	721	751	1,067	1,391	896
검거건수	160	118	117	658	98

다.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 '21년에서 '22년으로 상승세를 반영하면 '23년 검거지수는 34.3*임

  * ('22년 검거지수 / '21년 검거지수) * '22년 검거지수 = 34.3

- '23년 검거지수는 성과관리 운영지침의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를 기준으로 목표치 구분 '상'에 해당(2년간 실적치 상승세 이상)하도록 34.5%로 설정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구분	3년간 실적치		2년간 실적치		전년도 실적치
	상승세	그 외	상승세	하향세	
상	추세치 이상	평균치 이상	상승세 이상	가장 높은 실적 이상	전년 대비 10% 이상
중	추세치 수준	평균치 수준	상승세 수준	가장 높은 실적 수준	전년대비 10% 수준
하	추세치 이하	평균치 이하	상승세 이하	가장 높은 실적 이하	전년 대비 10% 이하

- 추세치 : 통계기간 대비 평균 증가율('16~'17 : 5%↑, '17~'18 : 7%↑ ⇒ '19 추세치 : 6%)
- 임계치 도달, 갑작스런 증감 등 예외적인 경우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 점수부여

【피해 보호조치 건수】

가. 지표설정 사유

- 사이버테러 사건은 특성상 일부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하면 추가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수 있음
- 따라서, 피의자 검거와 병행하여 범행에 이용된 악성 사이트들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이 필수적이며,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의 '피해 보호조치(차단) 요청 건수' 중 '악성코드' 항목으로 성과평가 하고자 함
- '20. 2월부터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으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악성프로그램 유포·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공조해 왔으며, '22년부터 신규지표로 설정하였고 '23년에도 목표로 설정

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 '22년은 피해 보호조치 건수는 384건(10% 증가 시 423건)이므로 '23년 목표 건수는 성과관리 운영지침의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를 기준으로 목표치 구분 '상'에 해당(전년대비 10% 이상)하도록 424건을 목표치 설정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①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	① 1인당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지수 (70%)	정보통신망 침해형범죄(계정도용제외) 검거건수 / 사이버수사관 현원 ※ 검거지수 측정식은 하단 참조	34.5	정량	산출	
		② 피해 보호조치 건수 (30%)	악성프로그램 유포·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이트 차단건수	424	정량	산출	

*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와 공통지표인 경우에는 성과지표명 옆에 (공통)이라고 표시
* 세부현황 표 작성 시, '제목줄 자동반복' 기능 활용 권장 (HWP기준)
* 비고란에 성과지표의 특징으로서 국제평가지수 여부, 전략목표 지표 여부 등을 기재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4	①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	**국정목표 101. 국가 사이버 대응역량 강화** -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 안보 패러다임 구축 -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사이버테러 수사지원시스템 고도화 (업무 Ⅱ-라) 사이버테러범죄 집중단속을 통한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업무 Ⅱ-라) 디지털 재난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대응력 강화 (업무 Ⅲ-가) 사이버수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충 (업무 Ⅳ-라)

전략목표Ⅳ 진취적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

기 본 방 향

◇ 현장중심 정책 지원과 제도·시스템 정비를 통해 일선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취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신뢰 확보

○ 정책관리·재정지원·교육훈련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지원

○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으로 경찰활동의 신뢰성 확보

○ 업무혁신·복지기반 확충 등 다각적 처우개선으로 조직 활력 제고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없음*	3	3	11	30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 개선안('19.6.) 반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 진취적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		없음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정책추진 프로세스 관리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국정과제(주요 정책과제) 숏 성과지표 달성도 / 현장 인력 재배치 / 직급구조 개선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예산확보수준 / 국유재산 신규사업 반영개소 / 예산집행률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 직무만족도 / 인재육성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2.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높인다.		**조직운영 부문 직무만족도**
	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 활동으로 건강한 경찰 의식·문화 확립	제도개선 실적 / 적극행정 면책 실적 / 내부비리 신고 실적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예방·진단 중심 감찰활동 전개	감찰첩보 수집건수 / 유가치 첩보 활용도 /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성평등 교육 정착도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 구현	조직 내 인권문화 확산 / 인권영향평가 경찰청 인권위 안건상정 건수
성과목표 3. 처우개선·사기 진작으로 현장의 활력을 높인다.		**급여 및 복리후생 부문 직무만족도**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 상담사 역량 강화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지원으로 현장활력 제고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 연가사용 실적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 인적구성의 성별 균형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 온라인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

전략목표Ⅳ 진취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1) 주요 내용

○ **<현장중심 정책지원>** 국민안전 확보를 비롯한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결집,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견인

○ **<조직문화 혁신>** 합리적 감사·감찰활동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경찰정책 전반에 양성평등·인권존중의 가치 식재

○ **<현장활력 제고>** 조직원들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여 자긍심·사기 제고

⇨ **현장 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 선제적 요건이 되는 구성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의지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진취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없음*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 개선안('19.6.) 반영**

- 전략목표 Ⅳ 특성상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은 어려우나, 현장직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제고하여 전략목표 Ⅰ·Ⅱ·Ⅲ달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과제 수행이 본격화**되며 **정책과제 성과에 대해 세밀하고 냉엄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

–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과제 수립, **국정운영 기조에 부응**하는 **다각적 치안전략 발굴**로 **치안정책 방향성 확립**

○ 정부 각 기관의 지속적인 자정·쇄신 노력에도 불구, **공직사회 업무행태에 대한 국민 불신·불만은 여전**

※ 한국 「공적기관 신뢰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00위로 하위권
< 한국경제연구원, '2023 세계 번영지수(英 Legatum)' 분석 결과(3.9) >

– **'기본과 원칙'에 초점**을 두고 주요 정책 추진실태 점검, 적극행정 사례 발굴 등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풍토 정착**

○ 90년대생의 공직사회 진출이 본격화되고, **개인의 삶이 보다 중시**되는 등 구**성원의 인적·질적 변화에 맞춘 사기진작 필요**

(3) 참고자료

○ 경찰청, '2023 주요업무 계획'

○ 경찰청 인터넷 웹사이트(www.police.go.kr)

○ 경찰청, 감사운영계획

○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

○ 경찰청 반부패 종합대책

○ 한국경제연구원, 「2023 레가툼 번영지수」 분석 결과

○ 경찰청, 「경찰 성평등정책 중장기(2020-2024) 비전 수립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성과목표Ⅳ-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정책관리 강화>** 정책과정 전반(설계-실행-평가-환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가시적 성과 창출 견인**

– 직급구조 개선·현장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사례 발굴 등 **내실있는 정책추진 지원**

○ **<현장 재정지원 강화>** 전략적 예산확보·재정지원 활동을 통해 **치안인프라 확충** 및 **현장에서의 원활한 정책수행 뒷받침**

– 치안여건 변화·내외부 여론 등을 감안, 주요사업의 타당성·우선순위를 검토·재설정하고 재정사업 관리·집행 효율화 도모

○ **<치안인재 양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문성을 배양하고, △경찰정신 △청렴·인권의식 등 **올바른 공직관과 인성을 내재화**

– '**교육훈련 대개혁**'을 통해 미래치안에 대비한 **선진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휘관·팀장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가시적 성과창출을 견인	국정과제(주요 정책과제) 全 성과지표 달성도 / 현장 인력 재배치 / 직급구조 개선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예산확보수준 / 국유재산 신규사업 반영개소 / 예산집행률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 직무만족도 / 인재육성 목표달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82.0	80.7	80.7	82.0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는 '20년 이후 하락하였고,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1.1)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79.8)을 고려, '23년 목표치는 반등을 목표로 예측값보다 2.2%p 높은 82.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인사·성과·교육 분야 문항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정부 2년차로 국정과제를 비롯한 **주요 정책과제 수행 본격화**, 치안 분야 전반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긴요**

– 경찰청 **주요 추진정책**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와 함께 주요 현안 관련 **기능간 협업·조정**을 통해 **추진역량 극대화**

○ 세계경제의 저성장 및 국내 경기둔화 등 대내외 위기상황으로 정부는 건전재정 강조,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 예상

– 경찰예산은 국민안전과 직결, 사건·사고 및 위험·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축 효과를 강조하여 관계기관 설득**

○ 경찰관의 자질과 현장대응 역량은 국민의 안전 및 인권보장과 직결, **국민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 기대**

– 세대·경력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 발생 주요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훈련 실시

(4) 참고자료

○ 경찰청, '2023 주요업무 계획'

○ 인사혁신처, (2021), 2022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 경찰청, (2023), 2023년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

42 정책추진 프로세스 관리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 추진배경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문하는 **국민 요구 증가**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정책추진 프로세스**(설계-실행-평가-환류) **전반을 점검**, 정책 완성도를 제고하고 **체감성과 창출 견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정책방향 설정 및 주요과제 관리 강화]

○ **(방향성 확립)**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치안종합성과평가계획** 간 정책목표를 통일하고 실행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 **(주요업무계획)** 「4대 정책목표」 설정, '23년 치안정책 주요방향과 목표 제시
- **(성과관리계획)**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성과지표, 추진계획 수립
- **(치안성과평가)** 비전·목표 달성을 위해 全 관서·부서·역량과 성과 평가
- **(정부혁신·적극행정)** 정부 추진전략과 방향을 분석, 자체 기본계획 수립

○ **(정책조정)** 총괄 조정부서로서 **정책 방향·우선순위 점검** 기능 수행, **행정 비효율을 유발**하는 **기능별 정책 파편화 방지**

– 기획조정 역할 강화를 위해 **차장 주재 정기 전략회의***(주 1회) **활성화**, △**적극적 주관쟁의** △**사무분장규칙 개정 등 추진**

* △기능 간 조정 필요 과제 △주요 이슈 등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논의

– 치안 관련 **주요 이슈를 빠르게중심의 소규모 논의체** 운영,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 도모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측면에서 관련기능 즉시 소집, 초동 대응 후 소관기능 이관

– 다기능이 참여하는 **주요 협업과제를 목록화**하고 **중요도·성과·기여도 등을 평가, 개인·조직평가에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치안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에 '적극행정 노력도·협업도' 평가지표 신설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업무전가 방지

○ **(모니터링 강화)** 주요정책 시행 전후 내·외부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결과를 제공, **환류 지원을 통한 정책품질 개선 도모**

- **(정기조사)** △치안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직무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경찰활동 뒷받침
- **(정책모니터링)** 국·관 주요정책 시행 전후 내·외부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결과를 제공, 환류 지원을 통한 정책품질 개선 도모

– 특히, 관서(장) 평가에 반영되는 3대 정기 만족도 조사의 설문문항·측정방식 개선, 평가결과의 수용성·신뢰도 제고

직무만족도	설문문항·구조를 종합적으로 재설계(43→34문항), 조직문화·직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 제고
치안고객만족도	'향상도 측정' ⇨ '성취도 측정' 방식으로 변경 ·**(향상도 측정)** 과거대비 향상 실적→"올해 잘하면 내년에 더 피곤하다"는 인식 만연 ·**(성취도 측정)** 평균점수(시도청: 전국 평균 / 경찰서: 급지별 평균) 이상 득점시 만점
체감안전도	관서별 200명(총 51,600명) 수준인 조사표본을 단계적으로 확대('23년 250명)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해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 **(인력증원)** 지난 10년간 '경찰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 **경찰인력 약 3만여 명 증가**('13년 10.9만명→'22년 13.7만명)

※ 現정부 공무원 동결기조로 인해 '23년은 10명만 반영

– 올해에는 책임수사·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장인력 보강**과 함께 **경찰서 신설 필요 인력 확보**에 주력

○ **(인력 재배치)** 경제·사이버팀 등 **업무부담이 과중한 민생치안 분야** 위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 현장 대응력 제고**

※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 쇠퇴 및 업무혁신에 따른 인력감축 분야 발굴

○ **(직급구조 개선)** 他 부처에 비해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구조 개선** 추진, 계급별 직무특성에 부합한 **적정 책임범위 확보**

▸**(총경이상)** △복수직급제 확대 △경무관서장제 추가 도입 등
▸**(경정·경감)** △지역경찰관리자(지구대장·순찰팀장) △수사팀장 등
▸**(경위 이하)** △사법경찰관 확대 △순찰·행정요원 등

○ **(조직개편)** 경찰청·범정부 TF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책이 도출**된 △**재난·인파 관리** △**치안상황·지역경찰 관련 조직·사무 수행체계 정비**

– 경찰청 內 **비직제 기구의 정비 및 사무와 기능을 재·개편**하여 지휘체계의 **정합성과 효율성을 강화**

[제도·인프라 지원을 통한 현장대응력 뒷받침]

○ **(매뉴얼 정비)** **법령·판례·지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매뉴얼은 폐지**

※ 현재 경찰 매뉴얼은 총 3개 분야 81종으로 구성

▸**현장매뉴얼(1):**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조치 설명
▸**업무매뉴얼(69):** 단위 업무별 직무 수행시 조치 요령 및 법령·판례 등 관련 근거
▸**직책매뉴얼(11):** △경찰서 과장 △지구대장 등 직책별 근무요령 기술

– △**중점관리 매뉴얼 지정** △**사이버 교육자료** 제작 △**기능별 매뉴얼 정비계획** 수립 등 **실효적 매뉴얼 관리체계 구축**

○ **(적극행정)**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

– '**적극행정**'이 **현장 대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를 활성화**하여 **경찰활동의 체질개선** 지원

▸**(보호·지원 제도)** △현장법률 365 △진정·민원 시 송무관 지원 △손실보장 제도 △경찰법률보험 △공무원 책임보험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 **(통계관리)** 매월 주요 **경찰활동 현황·성과 관련 통계를 취합·분석**, 정책자료로 제공하여 **내실있는 정책추진 뒷받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하달)	2월	성과
	’23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수립	2월	기획
	’23년 상반기 경찰청 직제 등 개정	2월	조직
	’24년 경찰청 소요정원안 확정(행안부 제출)	3월	조직
2/4분기	경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4월	기획
	경찰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5월	기획
	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중간평가 실시	6월	성과
3/4분기	성과 우수관서·부서 선발	8월	성과
	국정과제 성과지표·세부이행계획 수립	8월	성과
	시·도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개정	9월	조직
	’23년 하반기 경찰청 직제 등 개정	9월	조직
4/4분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10월	국회
	경찰청 자체평가·치안종합성과평가 최종평가 실시	11월	성과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작성·발표(국무조정실)	12월	성과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배포	12월	성과
연중	치안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찰인력 재배치	연중	조직
	임시회 등 국회 일정 시 업무보고·현안질의 대응 등	연중	국회
	VIP·총리·지시사항 관리·조치결과 보고	연중	기획
	경찰청 정부혁신 경진대회 개최	연중	기획
	경찰청 성과보고회 개최	반기별	기획
	국정과제·경찰청 정책과제 추진사항 점검	분기별	성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경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생치안 확립과 직결되는 **국민**과, 직급조정·인력 재배치 평가 등의 대상인 현장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본청 각 기능, 시·도경찰청 및 **他** 부처·국회 등 유관기관

□ 기대효과

○ 경찰활동 **全** 과정(예방·법집행·수사·회복)에서 정책의 작동성과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법집행 수준을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국정과제 (주요 정책과제) 全 성과지표 달성도 (50%)	92%	100%	100%	100%	금년은 現 정부 출범 2년차로 국정과제 수행이 본격화 되며,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제고 및 각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설정(국무조정실)이 예상되어 달성 난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2년 연속 100% 목표 달성으로 성과 임계치에 도달하였지만,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정책과제)는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조성과 밀접한 부분임을 인지, 100% 목표 달성을 제시함으로써 역대 최고치 목표 설정 및 3년 연속 국정과제(주요 정책과제) 성과지표 100% 달성을 추진	목표 달성한 지표 개수 ÷ 국정과제 全성과지표 × 100(%)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 보고서 (작성 시 근거자료와 함께 국조실에 제출)
현장 인력 재배치(25%)	1,320	1,897	1,407	1,587	경찰청은 '21년부터 대대적인 재배치를 통해 지역간·기능간 치안 격차를 상당 부분 해소한 가운데, 통합활용정원 제도 등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추진하는 現 정부의 기조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재배치 인원(1,541명)의 103% 수준인 1,587명을 목표치로 설정 이는 全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행안부 권고기준(정원의 1%, 경찰청 기준 1,275명)의 124% 수준으로 대민 접점 부서 위주의 인력 재배치 추진	현장 재배치 건수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원 포함)	현장 인력 재배치 관련 공문 등
직급구조 개선(25%)	492	488	612	1,000	경찰은 정부부처 중 직급구조가 열악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직급구조의 개선을 통해 순경·경장 등 하위직 위주의 인력구조를 벗어나고, 난이도·책임성에 상당하는 직급 부여 추진 그간 직급조정 건수는 3년간 500명 수준이었으나, 2배 상당인 1,000명을 목표치로 산정하여 직급구조 개선의 높은 의지 표명	직급조정 인원	경찰청 요구내역 심사결과,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43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 추진배경

○ 현장의 치안환경 개선 및 인프라구축 예산을 확보, **선진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만족도 향상 도모**

○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집행**으로 상반기에 특히 저조한 경기 흐름을 개선하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장에서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뒷받침하고 치안인프라를 확충**, 선진국 수준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치안역량 강화 기반 조성**

– 치안 여건변화를 반영한 계속·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전략적 예산확보 추진

○ **국유기금 확보를 통해 일선 경찰관서**(지구대 등) **신축 및 노후시설을 개선**, 일선 현장 경찰관 및 내방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취득·운용·유지) · 처분(교환 등)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최상의 치안서비스 환경 조성

○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인 신속 집행 추진**

– 예산집행점검 체계 구성·운영, 중점관리대상사업 관리 및 집행효율화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낭비요인 최소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27년도 중기사업계획 작성·제출(기재부)	1월	
	'22년도 재정사업 신속집행 계획 수립	1월	
	'23~'27년도 국유기금 중기사업계획 심의(기재부)	2~4월	
2/4분기	'23~'27년도 중기사업계획 심의(기금 포함, 기재부)	2~4월	
	예산(기금 포함) 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2~5월	
	국유기금 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2~5월	
	'24년도 국유기금 공용재산 취득계획 수립·제출	3월	
	'24년도 우리청 예산안 편성(설명회·심의회) 및 기재부 제출	3~5월	
	'23년도 1분기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 계획 수립	4월	
	'23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수립 및 하달	4~5월	
	'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편성 협의·조정	4~5월	
	'24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제출(기재부)	5~6월	
3/4분기	'24년도 예산안(정부안) 협의·조정(기재부) 및 정부안 국회 제출	6~8월	
	'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안(정부안) 협의·심의	6~8월	
	'23년도 2분기 집행결과 분석	7월	
4/4분기	예산국회 심사 대응(기금포함, 행안위·예결위·기재위)	9~12월	
	'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안 국회 심사 대응(행안위·예결위·기재위)	9~12월	
	'23년도 3분기 집행결과 분석	10월	
	'23년도 재정집행 평가	10월	
	예산 및 국유기금 이월·불용 실태 점검	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경찰청 소속 全 직원

○ 이해관계집단 :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 기관

□ 기대효과

○ 선진 치안인프라 구축 및 현장치안역량 강화로 치안강국으로 도약

○ 치안관련 예산 확보·신속집행 등을 통해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신속히 대응,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재정지원도(공통)					하단 참조	①산확보수준×40% + ②국유재산 신규사업 반영개소×30%+ ③예산집행률×30%	
① 예산확보수준 (40%)	53.6	55.0	54.3	**54.5**	최근 민생경제 추락, 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 분야 지출 확대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 상황이 지속되고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기조 방침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 기재부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여, 내년도 정부안의 최종 모습이 중기 심의 지출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지(2.2.) 전세사기,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 과학치안 기반 조성 등 국민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최근 3년 평균(54.3%)보다 개선된 54.5%로 목표 설정 (억 원) 총지출 / '20 / '21 / '22 / '23 (목표) 분야 / 223,050 / 223,183 / 229,311 / 54.5 경찰청 / 119,651 / 122,852 / 124,548 비중(%) / 53.6 / 55.0 / 54.3	(경찰청 총지출 /공공질서및 안전분야 총지출) ×100% ※ 본예산 기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관련 공문 등
② 국유재산 신규사업 반영개소 (30%)	140	162	142	**150**	일선 경찰관서 노후화로 경찰관 근무환경 악화 및 내방 민원인의 만족도 저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30년 이상 노후 관서는 신축을 진행하고 30년 미만은 리모델링으로 환경 개선 공사비용 증가(건축자재인건비 인상 등)로 예산 확보에 부담이 있으나, 내·외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목표치를 최근 3년 평균 148개소 보다 높은 150개소로 설정	(내년도 국유기금 신규사업수 + 내년도 일반회계 리모델링 사업수)	
③ 예산집행률 (30%)	76.0	74.9	74.9	**75.3**	집행률 지표는 정책(감액추경)과 외부적 요인(코로나19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표로, 동일 조건 내의 추세치 반영이 어렵고, 최근 3년 실적도 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20년 집행률(76.0%)은 2,562억원 감액추경으로 예산현액이 크게 줄어들어 집행률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감액추경을 미반영한 실질적 집행률은 74.4%로 하락 '23년도는 상저하고 경기 전망 속 집행여건이 좋지 않지만, 최근 3년 평균(75.2%)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역대 최고 집행률 달성 도전	(3분기까지 집행액 /연간관리예산*) ×100 * 연간집행관리예산은 기재부에서 설정하며, 경찰청 총지출의 97%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지원도(공통)	예산확보수준(40%) + 국유재산 신규사업 반영개소(30%) + 예산집행률(30%)	89.39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업무 추진-가 업무 추진-다

44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 추진배경

○ 근속 승진 확대 등 **경찰관 처우 개선과 적극적 직무수행 토대가 마련**된 만큼, 경찰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기대에 화답할 시점**

○ 국민의 봉사자로서 **올바른 공직관과 인권 가치를 내재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법집행 담보**를 위해 **전문성 강화** 추진

<관련 법령>

법률	대통령령	주요 행정규칙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 임용령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

○ **(교육의 틀 대전환)** 現 경찰 교육훈련의 틀인 ▵**기본교육** ▵**직장훈련** ▵**교육기관 교육**을 기능·경력을 고려한 **주기적·반복적 교육으로 전환**

► 기본교육 → **기능별 경력에 따른 집중교육** : 교육과 경력이 축적됨에 따라 치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자 「역할전환교육*」도 확대
  * 경찰서장 등 「관리자 자격심사제」 도입, 경정 기본교육 및 계·팀장 관리역량 교육 강화

► 직장훈련 → **팀장 중심 「상시교육훈련」** : 물리력 대응·매뉴얼 등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반복·숙달

○ **(교육기관 혁신)** 특성화·전문화로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기관으로 도약

○ **(미래치안 대비)** 교육훈련에 AI·X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미래치안 및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글로벌인재」 양성**

○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예산 1% 확보*로 **인적자원개발 총괄조직 신설** 등 교육과 인사의 유기적 연계 및 **교수요원 역량 강화**

* '22년 기준, 경찰청 교육 관련 예산 865.1억원(0.71%)

[지휘역량 확보를 위한 「관리자 자격심사제」 도입]

○ **(치안정책과정 개편) 다양한 치안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별 특강, 모의 상황 설계 및 해결방안 연구, 토론·질의응답 등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 **(총경 「지휘역량향상과정」 신설) 치안정책과정 수료 후 2년 주기로 지휘관 필수역량 재교육**, 언제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단련

※ 교육 기간은 2주(70h)로 하반기 개설 목표, 교육내용 및 수업·평가 방식은 개선된 치안정책과정 직무교육과 동일(「지휘역량평가」 포함)

○ **(「관리자 자격심사」 강화) 지휘역량평가대상 확대**, 재직 총경도 2년 주기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경찰서장 보임 자격' 심사 및 갱신**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교육훈련 도입]

○ **(체계 개편)** 직장교육, 물리력 대응훈련 등 복잡하고 분산된 **직장훈련을 팀장 중심의 「상시교육훈련」으로 개편**

– 근무 중 일정 시간을 교육훈련 시간으로 확보, 물리력 대응·매뉴얼 등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팀 단위로 상시 반복·숙달·체득**

○ **(교육시간 확보상시교육훈련 시간으로 확보, 매월 2~3회 교육훈련 실시**

※ 시범운영을 거쳐 대민접점 부서인 지역경찰부터 단계적 추진 → 현장대응부서(형사·여청수사·교통외근) → 全 기능으로 점진적 확대

– **업무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간근무 중 **출동수요가 적은 적정시간대를 「교육훈련」 시간으로 지정**하고 팀 단위 교육 진행

○ **(시나리오 훈련)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현장사례** 기반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 및 역할분담 등 **종합 시나리오* 훈련**

* 법률 및 매뉴얼, 가·피해자 분리, CPR 등 응급구조, 물리력 사용 등 현장 대응 全 과정에 대해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훈련이 되도록 시나리오 구성

○ **(팀장역량 강화)** 상시교육훈련 주관 및 학습촉진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가칭 "학습촉진자 양성과정") **운영**

[경찰 독자 위탁교육 시스템 구축]

○ **(예산확보) 부족한 내부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위탁교육 완전 독립까지 고려하여 **연간 140억원(인당 10만원)까지 예산확보 추진**

* **('23년)** 국내단기 410명·20.5억 / 국외단기 30명·10.5억 / 국내장기(2년) 150명·15억 확보

○ **(위탁기관 다양화)** 경찰 특수분야에 전문화된 비수도권 대학원을 발굴하고 조달 절차에서 가산점 부여 등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개선, 석사과정 위탁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 해소

※ 전국 1,167개 대학원 중 603개(52%)가 수도권 소재, △계약과정(2개)에 수도권 대학만 응찰 △자율선택과정 선발 70명 중 46명(64%)이 수도권 대학원 지원

[교육기관 교육 혁신]

○ **(신임 교육기간 확대)** 완성도 높은 **신임경찰 교육**을 위해 **교육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최대 2년)하기 **전 준비단계로 '기초교육-현장실습-보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검토·설계**

※ **(1년 과정 案)** ①기초교육(6개월) → ②현장실습(4개월) → ③보충교육(2개월)

○ **(경찰학 연구기관 고도화)** 경찰대학에 △**미래치안과학융합대학원 설립**을 위해 **박사과정 신설 추진**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 추진**

○ **(경찰미래 교육관 운영) 경찰인재개발원 내** '경찰 모빌리티센터'를 치안활동 AI, XR, 드론, 웨어러블 장비 관련 **최첨단 교육관으로 정비**

※ △헬기시뮬레이터 설치 △드론영상장비 활용 화상감별 AI 연구 △긴급자동차 체험연습장 예산확보 추진 등

[제2경찰교육타운 건립 추진]

○ 교육기관별 포화된 교육 수요를 분산·안정화하고, **미래치안 인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2경찰교육타운 건립 추진**

- 경찰교육타운 추진TF(차장 주재) 및 본청·시도청 합동 실무협상단 구성, 부지 및 예산확보('24년 공용재산취득 계획 반영 목표) 협의

※ △고양 벽제 '수도권 현장대응 훈련센터'('23년 예산확보), 광주 곤지암 '경찰청 종합교육훈련센터'('23년 기본설계), 제2중앙경찰학교 등 부지·예산 확보 순차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3년 경찰 교육훈련계획 수립	1월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수립	1월	
	2023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수립	2월	
	상반기 경찰공무원 공·경채 시험계획 수립	2월	
	상반기 현장강사 워크숍(교육과정 설계 및 교안제작)	2월	
	기능별 교육담당자 워크숍(기능·경력별 역량기반 교육체계)	3월	
	2023년 체력검정 운영계획 수립	3월	
	팀장 대상 '학습촉진자 양성과정' 도입	3월	
2/4분기	2023년 현장학습모임 운영계획 수립	4월	
	2023년 사격훈련 운영계획 수립	4월	
	경찰청 체력검정 실시	5월	
	경찰청 상반기 정례사격 실시	6월	
3/4분기	하반기 경찰공무원 공·경채 시험계획 수립	7월	
	'지휘역량향상과정' 운영 및 평가체계 도입	7월	
	하반기 현장강사 워크숍(교육과정 설계 및 교안제작)	8월	
	2024년 국외장기훈련(영어권) 자체 선발 및 추천	9월	
	경찰청 하반기 정례사격 실시	9월	
4/4분기	경찰청장기 무도대회(채용 연계) 및 경찰관 무도대회 개최	10월	
	채용 시 순환식 체력검사(경행 경채) 시행	11월	
	치안산업박람회 등 채용박람회 참석, 채용 홍보	11월	
	2023년 우수 현장학습모임 선정	12월	
	2024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계획 수립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① 경찰청 소속 全 공무원 :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② 국민 : 경찰관 역량향상을 통해 안전한 일상 확보

○ **(이해관계집단)** 인사혁신처 등 유관 부처, 민간 분야 교육전문가(기업체), 경찰공무원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

□ 기대효과

○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경찰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향상하고, 국민의 치안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전문경찰양성(일반재정)			
① 우수인재확보 및 능력개발(4135)	일반회계	139	173
▪ 경찰관채용교육(311)		139	17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교육 직무만족도 (60%)	81.2	81.2	78.2	80.2	교육 부문 직무만족도는 '19년 81.8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나, 올해 실적은 반등을 목표로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80.2점) 이상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교육 분야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3개 문항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인재육성 목표달성도 (40%)	4.05	8.03	13.0	14.3	교육센터 전문교육 이수율은 최근 3년간 급격한 상승 추세였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22년 실적치 기준 10% 이상 상승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시도경찰청 전문교육 이수 인원÷ 시도경찰청 전체 인원*100	폴넷 사이버 교육포털 시스템 산출 통계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①교육 직무만족도 (60%)	교육 분야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3개 문항 평균)	80.2	정량	결과	
		②인재육성 목표달성도 (40%)	시도경찰청 전문교육 이수 인원÷ 시도경찰청 전체 인원*100	14.3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훈련 대개혁 (업무 '추진기반'-가)

성과목표Ⅳ-2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높인다

(1) 주요 내용

○ **<기본·원칙 중심 감사활동>** ▵주제별 특정감사 강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종합적 반부패 대책으로 **잘못된 관행 철폐**

– 관행화된 규정 위반·업무소홀 행태 대응, **총력 감사활동 전개**

○ **<예방적 감찰활동>** **선제적 비위 예방·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감찰활동에 대한 공감대 제고**

– 각종 비위·관행, 비효율·불합리에 대한 상시 진단활동을 통해 **기본과 원칙이 존중받는 합리적 조직문화 조성**

○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지속적·단계적 추진을 통해 **조직 내 성평등 감수성 내재화**

– 주요 정책·홍보물 대상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교육 운영 고도화 등을 통해 **경찰 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 **<인권 경찰 구현>**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 제고, 국민신뢰 확보**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높인다.**	**조직운영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활동으로 건강한 경찰 의식·문화 확립	제도개선 실적 / 적극행정 면책 실적 / 내부비리 신고 실적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예방·진단 중심 감찰활동 전개	감찰첩보 수집건수 / 유가치 첩보 활용도 /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성평등 교육 정착도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 구현	조직 내 인권문화 확산 / 인권영향평가 경찰청 인권위 안건상정 건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조직운영 직무만족도	85.7	85.5	84.1	86.0	조직운영 직무만족도는 '20년부터 하락하였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5.1)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83.5)을 고려, '23년 목표치는 반등을 목표로 '22년 실적보다 1.9%p 높은 86.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조직운영 부문)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감사·감찰행정에 대해 **내부에서는 '과도하다'는 불만**이, **외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상반된 시각

– 「시민감찰위원회」·「감찰정보심의회」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투명성·신뢰도를 확보**하고,

– ▵경미한 부적절 행태에 대한 '시정권고' ▵내부갈등 중재를 위한 '갈등조정위' 등 **감찰 前 단계에서의 사전 치유적 조치방안 마련**

○ ▵공무원 성범죄 ▵정부 정책 내 성평등 관점 부족 논란 등 **공직사회의 성평등 의식 제고에 대한 내외부 요구 지속 확대**

※ **(성희롱 관련 언론보도)** 경찰 내부서도 못막나 … "여경 31% 성희롱 경험, 남경 피해도 증가세" 題下('23.3.8, 이데일리)

– 중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성평등 거버넌스를 통한 외부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참고자료

○ 경찰청, '2023 주요업무 계획', 「경찰청 감사운영계획」, 「경찰대혁신TF 정책제안서」, 「경찰청 반부패 종합대책」

○ 경찰청, 「경찰 성평등정책 중장기(2020-2024) 비전 수립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 감사관실,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2022~2026)」

45 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 활동으로 건강한 경찰 의식·문화 확립

□ 추진배경

○ **(자체감사)** 최근 조직 전반에서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체계가 흔들리며 **관행화된 규정 위반·업무 소홀 등이 임계치**에 이른 상황

– 복무·정책 관련 특정감사를 강화하는 등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총력 감사 활동 필요**

○ **(적극행정)** 정부는 **국민 안전확보와 편익 증진**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능동적인 자세로 근무할 것을 지속 독려**하는 가운데,

– 경찰청은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 업무로 인한 과오 면책·감경 등 **소신 있는 업무추진 지원**

※ 적극행정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추진한 '경찰 대혁신' 과제에도 반영

○ **(청렴정책)** '22년 징계인원은 소폭 감소(493→471명, 4.5%↓)했으나, **청렴도(권익위 주관)는 종합 4등급**으로 다소 아쉬운 결과를 기록

– 청렴정책 환류 평가, 반부패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청렴 문화 정착과 체감청렴도 향상에 주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기본과 원칙 중심 직무관리를 위한 감사 활동 전개]

○ **기본과 원칙에 관한 특정감사** 주제·대상을 선제적으로 선정, **전국 감사요원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상시 총력 감사 실시

※ 종합감사는 필요최소한으로 효율화하고, 특정감사는 대상·횟수를 대폭 증가

○ **관리자 직무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각종 **주요정책 시행 관련** 정상 추진 여부 및 현장 이행실태·문제점 등 **점검**

○ **기능별 소관 정책 자체점검을 강화**(감사기능 확인)하고, **관서별 자체감사를 확대** 실시(경찰청에서 평가)

※ 경찰서도 소속 지역관서 대상 사무감사 및 특정감사 의무 실시

○ 구조적 문제점 등 **감사정보를 적극 발굴**하고, **감사 결과** 이행 실태와 성과 점검(필요시 일정기간 후 재감사) 등 **환류**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지원 활성화]

○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감사 기능에서 **직권으로 공익성·적극성을 검토**하고, 규정·지침 해석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 시 **사전에 감사 기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직원들에게 **지속 홍보**,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 및 **소신 있는 직무수행 지원**

– 다양한 **책임감면 사례를 유형화***하여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유·교육**, 현장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

* 112신고 출동, 교통단속 중 사고 야기, 현장 법 집행 중 장구류 분실, 초동조치 중 물리력 행사 및 재물손괴, 경미한 행정절차 미흡 등

[반부패 대책 실효성·실행력 제고]

○ 반부패 대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전문가·동료 참여를 바탕으로 **'청렴'을 경찰문화로 정착** 추진

– 시민청문관을 중심으로 시도청에 '청렴협의체', 경찰서에 '청렴선도그룹'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 체감도를 제고**

○ **청렴우수 관서(사례) 경진대회** 및 全 경찰관 대상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 실시, 반부패 추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

○ 익명상담 등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주요 내부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 강화*** 등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 **경찰 청렴도 제고**

* '23년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증액(기존 1,500→2,700만원 / 1인당 최대 2,000만원)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폴넷 내「현장 고충·애로 창구」신설	1월	
	권익위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한 평가방식 개선요구	2월	
	경찰청 감사운영계획 수립	3월	
	전국 감사 기능 워크숍 개최	3월	
	적극행정 면책 사례 공유·교육	3월	
	기본과 원칙에 관한 테마 감사	3월	
2/4분기	경찰청 반부패 추진대책 수립	5월	
	적극행정 면책 사례 공유·교육	6월	
	기본과 원칙에 관한 테마 감사	6월	
3/4분기	청렴·반부패 및 갑질 예방 직장교육	8월	
	내부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8월	
	적극행정 면책 사례 공유·교육	9월	
	기본과 원칙에 관한 테마 감사	9월	
4/4분기	시도청 감사 활동 성과지표 평가 및 분석	11월	
	청렴 우수관서(사례) 경진대회 개최	12월	
	적극행정 면책 사례 공유·교육	12월	
	기본과 원칙에 관한 테마 감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및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경찰관 등 내부 직원

□ 기대효과

○ 총력 감사 추진으로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관리 체계 확립**

○ 경찰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국민 편익 증진**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국민 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22	’23
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 활동으로 건강한 경찰 의식·문화 확립(일반재정)			
■ 감사관감찰활동(7133-311)	일반회계	18.1억원	26.8억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3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20</th><th>'21</th><th>'22</th><th>'23</th></tr>
<tr><td>제도개선
실적
(50%)</td><td>166.5</td><td>192</td><td>217.5</td><td>240</td><td>최근 3년간 실적치가 지속 상승하는 경우로서,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240점을 목표치로 설정</td><td>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실적
- 산식 : ∑(유형별 배점 × 조치수위별 배점)
< 배 점 >
<table><tr><th colspan="3">개선 유형별</th><th colspan="2">조치 수위별</th></tr><tr><th>법령 재개정</th><th>자체규정·지침 재개정</th><th>기타 행정</th><th>개선 요구</th><th>권고·통보</th></tr><tr><td>5.0</td><td>3.0</td><td>1.0</td><td>3.0</td><td>1.5</td></tr></table></td><td>감사결과
보고서</td></tr>
<tr><td>적극행정
면책 실적
(30%)</td><td>109</td><td>162</td><td>192</td><td>212</td><td>최근 3년간 실적치가 지속 상승하는 경우로서,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212건을 목표치로 설정</td><td>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개최 건수</td><td>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통계자료</td></tr>
<tr><td>내부비리
신고 실적
(20%)</td><td>-</td><td>-</td><td>74</td><td>82</td><td>'22년 신규로 설정한 지표로서,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한 82건을 목표치로 설정</td><td>내부비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건수</td><td>내부비리
신고센터
통계자료</td></tr>
</table>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3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3">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 활동으로 건강한 경찰 의식·문화 확립</td><td>① 제도개선 실적(50%)</td><td>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실적
- 산식 : ∑(유형별 배점 × 조치수위별 배점)
< 배 점 >
<table><tr><th colspan="3">개선 유형별</th><th colspan="2">조치 수위별</th></tr><tr><th>법령 제·개정</th><th>자체규정·지침 제·개정</th><th>기타 행정</th><th>개선 요구</th><th>권고·통보</th></tr><tr><td>5.0</td><td>3.0</td><td>1.0</td><td>3.0</td><td>1.5</td></tr></table></td><td>240</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② 적극행정 면책 실적(30%)</td><td>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개최 건수</td><td>212</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③ 내부비리 신고 실적(20%)</td><td>내부비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건수</td><td>82</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able>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 활동으로 건강한 경찰 의식·문화 확립	1. 2023년 경찰청 주요 업무계획 - (추진기반-나-1-①) 기본과 원칙 중심의 문화 만들기 - (추진기반-나-1-④) 반부패 추진 고도화 - (추진기반-나-3-⑦) 직원과 현장에 다가가는 감사와 감찰활동 전개

46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예방·진단 중심 감찰활동 전개

□ 추진배경

○ 지난 해에는 감찰활동 전반에 **'업무중심', '문제해결' 패러다임을 접목,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촉진자 역할을 내실있게 수행**하면서도

※ 감찰첩보 활용도: 33.1%→34.2% / 감찰정보문건 제공실적: 목표치 20%↑ 초과달성

– **감찰활동에 대한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 또한 대폭 상승**(68.5%→79.3%)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양

※ 감찰활동 만족도 추이: '19년 51.1%→'20년 58.0%→'21년 68.5%→'22년 79.3%

○ 금년에는 **조직 건전성**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비위와 관행, 비효율과 불합리를 상시 진단**하는 감찰활동을 통해

–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건강하고 진취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뒷받침, 경찰에 대한 신뢰와 인정의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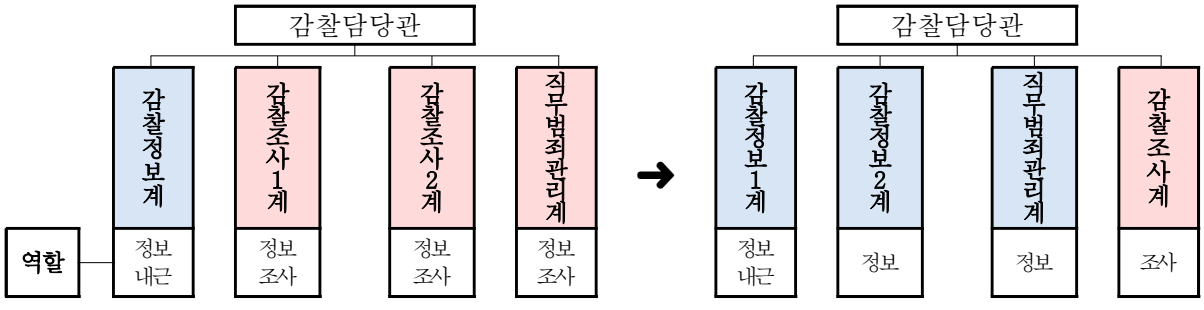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역할 전문화와 일선 감찰정보 활성화를 견인해 감찰역량 제고]

○ **(전문화)** 감찰관의 **경력·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동 또는 조사업무 중 하나에 전종, 각 분야별 업무역량 극대화 도모

– **감찰조사관은 조사에 전종**하며 전문분야별로 법리와 경험을 축적 / **감찰정보관은 담당지역에 대한 대인 정보활동, 취약요인 진단**

○ **(직제개편)** '감찰정보계'를 '감찰정보 1·2계'로 확대 재편하는 **감찰담당관실 내부 직제개편을 통해 감찰정보 역량 극대화**



○ **(종합·분석 고도화)** 수집·제출된 감찰정보의 평가와 배당(이첩)에 그치지 않고 **감찰정보심의회에서 감찰정보의 보완·발전 가능성을 평가**, 향후 유가치한 첩보로 재생산하는 정보분석 역할 강화

– 특히, 제도개선 첩보 중 보완·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담당 감찰관 지정 또는 감찰활동(특별점검) 테마 제공으로 발전적 재생산

○ **(일선 정보활동 견인)** 본청의 수집·평가 대상 감찰정보를 시도청·경찰서 단위까지 확대, 더욱 현장감 있는 다양한 감찰정보를 지속 확인하고 보완·발전시켜 향후 감찰활동의 단서로 활용

※ 그간은 본청 감찰관 제출첩보와 시도청 주요첩보에 한하여 수집·평가

– 이를 위해 시도청·경찰서 청문부서의 감찰정보활동 성과를 견인하는 성과지표와 성과 환류체계(▲피드백 ▲첩보점수 부여 ▲포상 등) 가동

※ 시도청 성과지표 : 경정이상 비위첩보 + 본청 요구정보 + 제도개선 첩보 + 기타 정보활동 성과

○ **(생산정보 활용)** 분석된 감찰정보는 활용목적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 보고 ▲경찰관서장 참고자료 전파 ▲소관기능 통보 ▲청문기능 하달 ▲대상자 통보(시정권고) 등 다각적 활용

[시정권고] 즉시감찰에 이르지 않는 감찰정보 중 부적절 행태의 선제적 차단이 필요한 경우 감찰정보심의회를 거쳐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 통보 조치, 교정효과 기대

※ 감찰정보를 토대로 동향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며 유사한 부적절 행태 반복 시 즉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상자 통보 후 관련 기록 유지관리

[적극적인 감찰개입을 통한 내부갈등 신속 치유]

○ **(배경)** 감찰 기능의 역할이 '비위사정·처벌'에서 '인·물적 취약요인의 진단·예방'까지 아우르는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보좌역할로 진화 중

– 현재의 감찰정보 처리방식으로는 즉시감찰에 착수할 정도가 아닌 사안인 경우, 첩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 다수

⇨ **비위 前 단계에서의 사전전 개입(감찰개입)을 통한 내부 취약요인 선제적 치유 필요**

○ **(시정권고)** 즉시감찰에 이르지 않는 부적절 행태에 대하여 감찰정보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환류, 행태의 시정을 권고

※ 3개월 단위로 시정여부 확인, 행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점을 반영하여 감찰 후 엄중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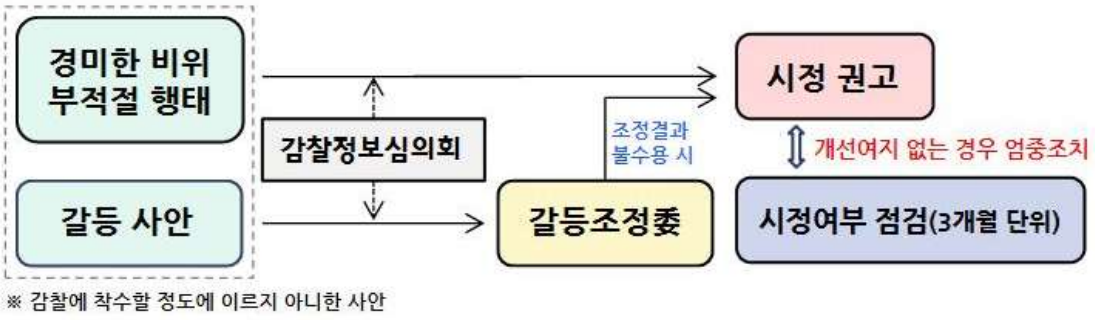
○ **(갈등조정委)** 즉시감찰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인적 갈등사안 등에 대하여 감찰정보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갈등조정위원회(가칭)」 회부

※ 팀웍·화합을 저해하는 인적 갈등사안 : ▲상급자와 수시 마찰하는 하급자 ▲하급자가 계속 힘들어하는 상급자 ▲동료간의 지속적인 불화·다툼 등

– 위원장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결과를 통보, 불수용 시 파악된 원인 관계에 따라 쌍방 또는 일방에 '시정권고'(이후 절차는 시정권고와 동일)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청문 추천), 각 측 대리인(동료직원·직협 등), 간사(청문)

< 감찰개입(▲시정권고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흐름도 >



[내부·현장의 목소리 경청을 토대로 공감받는 감찰활동 체질화]

○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21년부터 감찰활동 만족도 평가를 연 2회로 확대, 감찰 기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보완

※ 조사결과는 각급 관서 청문기능에 통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지도·점검

○ **(소통창구 지속 모니터링)** 기존의 신고창구(갑질·내부비리·성비위)를 통합하고 '감사관 1:1 대화 창구'를 신설한 「현장 고충·애로 창구」 개설('23.1월), 감사관실의 내부 목소리 경청 체계 확립

– 他 기능 고충창구 운영부서와의 협업을 강화, ‘감찰의뢰’에 이르지 않는 제보도 감찰활동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추진

[他 기능에서 운영 중인 내부비리·고충 제보창구 현황]

- (내부망)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신고센터(경무) △인사소통마당(인사) △사적접촉 신고센터(국수본)
- (외부망–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방(경무)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임 감찰관 적격심사	1월	
	전국 청문기능 화상회의(감사관 주재)	1월	
	전국 감찰 기능 워크숍 개최	3월	
2/4분기	’23년 상반기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6월	
3/4분기	신임 감찰관 적격심사(하반기 인사요인 발생 시)	7월	
	전국 청문기능 감사·감찰과제 경진대회 개최	9월	
4/4분기	’23년 하반기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10월	
	시도경찰청 감찰활동 성과지표 평가 및 분석	11월	
	감찰정보 제출 우수자 평가(특진·특별승급·포상 수여)	12월	
연중	시기별·테마별 업무중심 감찰활동(특별점검 등) 전개		
	전국 경찰관서장 지휘·감독 참고자료 제작·배포		
	감찰정보심의위원회(정기·임시회의) 운영		
	시민감찰위원회 운영		
	감찰첩보 관련 감찰정보시스템 개선작업		

※ 감찰업무 특성 상 현안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동가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경찰관

□ 기대효과

○ 기본과 원칙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인·물적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감찰정보 활동 고도화에 역량 집중

–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건강하고 진취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뒷받침,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인정의 토대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감찰첩보 수집건수	2,260	2,656	3,173	3,780	- 감찰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 첩보수집 합산 건수 - '23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추세치(3,761건)를 상회하는 3,780건을 목표치로 설정	경찰청 첩보수집건수 +시도청 첩보수집 건수 +경찰서 첩보수집 건수	첩보관리대장 및 통계
유가치 첩보 활용도	28.8%	33.1%	34.2%	37.0%	- 최근 3년간 실적의 추세치(36.9%)를 상회하는 37.0%를 목표치로 설정	전체 감찰첩보 대비 유가치 첩보(감찰조사/사실확인/관련 기능 통보) 현황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	-	145점	160점	- 첩보를 통해 정제된 감찰정보를 보고서 등의 형태로 제공한 실적을 합산한 건수 ※제공대상에 따라 배점 차등부여(배점 기준은 하단 참조) - 전년 실적 10% 상향치인 160점을 목표로 설정	(경찰청장 보고건수×10) +(경찰관서장 참고자료 건수×5) +(소관기능·청문기능 통보건수×3) +(대상자 통보 건수(사전경고 등)×2)	보고 또는 제공된 감찰정보 분석 문건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58.0%	68.5%	79.3%	90%	- 최근 3년간 실적의 추세치를 반영한 90%를 목표로 설정,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全 직원 대상 메일 설문조사)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링센터 작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예방·진단 중심 감찰활동 전개	① 감찰첩보 수집건수	경찰청 첩보수집건수 +시·도청 첩보수집 건수 +경찰서 첩보수집 건수	3,780	정량	산출	
		② 유가치 첩보 활용도	전체 감찰첩보 대비 유가치첩보 (감찰조사/사실확인/관련 기능 통보) 현황	37.0%	정량	산출	
		③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경찰청장 보고건수×10) +(경찰관서장 참고자료 건수×5) +(소관기능·청문기능 통보건수×3) +(대상자 통보 건수(사전경고 등)×2)	160점	정량	산출	
		④감찰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全 직원 대상 메일 설문조사)	90%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예방·진단 중심 감찰활동 전개	1. 2023년 경찰청 주요 업무계획 - (추진기반-나-1-①) 기본과 원칙 중심의 문화 만들기 - (추진기반-나-1-④) 반부패 추진 고도화 - (추진기반-나-3-⑦) 직원과 현장에 다가가는 감사와 감찰활동 전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세부 설명자료]

① 감찰첩보 수집건수

▸ **(산출방식)** 경찰청·시도청·경찰서에서 수집한 감찰첩보를 합산한 건수

*** (산식) (경찰청 첩보건수+시·도청 첩보건수+경찰서 첩보건수)×100**

▸ **(선정이유)** 감찰활동의 방향은 감찰첩보를 토대로 하는바, 첩보수집 건수를 성과지표화 하여 첩보수집을 독려하고 풍부한 감찰첩보를 통해 정당한 감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

<감찰첩보 분류 : '경찰 감찰 규칙' 근거>
1.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정보 2. **제도개선자료** : 불합리한 제도·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 3. **기타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운영 실태, 주요 치안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비위우려자의 복무실태 등 인사·조직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② 유가치 첩보 활용도

▸ **(산출방식)** 전체 제출 감찰첩보 중 ①'비위 정보'의 경우 '감찰조사 착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과 ②'제도개선 자료 및 기타자료' 중 관련 기능·소관에 이첩하여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 첩보의 비율

*** (산식) ('감찰조사 착수 및 사실관계 확인 비위첩보'+'관련 기능 및 소관에 이첩 첩보'/ 총 제출 정보건수)×100**

▸ **(선정이유)** 수집된 감찰첩보의 활용여부에 대한 성과평가위원들의 의문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21년에 신설된 지표이며, 양질의 감찰첩보 작성을 유도하고 그 활용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내실있는 감찰정보 활동을 위해 선정

③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 **(산출방식)** 첩보에서 보완·발전시킨 정제된 감찰정보를 보고서 등의 문건형태로 ▵경찰청장 보고 ▵경찰관서장 참고자료 전파 ▵소관기능 통보 ▵청문기능 하달 ▵대상자 통보(사전경고)에 제공한 건수

* **(산식)** **(경찰청장 보고건수×10)+(경찰관서장 참고자료 건수×5)+(소관기능·청문기능 통보 건수×3)+(대상자 통보 건수(사전경고 등)×2)**

<제공주체별 배점기준>

경찰청장 보고	경찰관서장 참고자료	소관기능·청문기능 통보	대상자 통보(사전경고 등)
10점	5점	3점	2점

▸ **(선정이유)** 분석된 감찰정보를 활용목적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표로 선정

④ 감찰활동 만족도

▸ **(산출방식)**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링센터에서 全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항목 중 '감찰활동 만족도' 관련 3개 항목'의 긍정적 답변(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의 평균으로 산정

* **(설문 문항 예시)** ㉮감찰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감찰활동이 부정부패 근절에 도움이 된다 ㉰감찰활동은 직원들이 보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 **(선정이유)** ▵감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한 「감찰개혁」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및 내재화 여부는 고객(경찰관)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47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추진 배경

○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경찰업무 특성상 성평등 감수성이 내재화된 경찰행정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 초래

○ 정부 정책·홍보물 등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조명되는 등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

○ 특히, 공무원 성범죄 예방과 성차별적 문화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의 성평등 의식 제고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도별 「경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 경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경찰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4)」을 바탕으로,

–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기본계획의 적시성·효과성 담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추동력 확보

– 특히, 과제별 추진 현황 및 대내외 정책환경을 면밀히 분석, 중장기 과제가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 '23년 시행계획 과제목록 >

► 경찰정책의 성평등한 추진체계 확립
►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제도 운영
► 여성폭력 대응체계 고도화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체계 강화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질화

○ 기능·기관별 성평등 정책의 자율적 추진 기반 조성

– 국·관 및 시도청에서는 年 단위 자체 성평등 목표를 설정·이행 중이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관 첫 이행점검 완료('23.1月)

※ 관련 근거 : 「경찰청 기능·기관별 성평등 목표 수립 종합계획(21-24)」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성주류화 분과회의 △성평등위원회 보고 등 정책 환류와 관서별 이행 전략 마련을 위한 지도·점검 추진

< '23년 주요 추진계획 >

①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보고('23. 3. 10.)
② 기능·기관별 담당자 워크숍 등 점검결과 공유('23. 3. 15.)
③ '23년 기능·기관별 성평등 목표수립 시행계획 수립
- 기능·기관별 목표 수정사항 검토, '23년 성평등 목표 재검토(4月)
- 성주류화분과회의 1차 점검(5月)
- '23년 기능·기관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성평등위원회 보고(6月)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경찰 정책의 성주류화 확립

– 경찰청에서 생산되는 정책·홍보물 등 콘텐츠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조직 내 성평등 관점 제고

※ 「'23년 경찰정책 콘텐츠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23.2月

– 특히, 사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콘텐츠 등 제작 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고,

– 실무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담당자 워크숍 등 체계적인 이행전략 수립·추진

< '23년 주요 추진계획 >

► 全 경찰관서 콘텐츠 전수조사 및 성별영향평가 이행률 점검(3月)
►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분기별)
► 시·도경찰청 담당자 대상 성별영향평가 워크숍 실시(분기별)
► 경찰 업무매뉴얼 개선의견 반영여부 점검(6月)
► '23년도 관서별 성별영향평가 실적 우수관서 포상 계획 수립(12月)

○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 운영 고도화**

– 경찰은 시민 안전 수호를 위한 최일선 법집행기관으로서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내재화 및 성범죄 예방·근절 체계 정착 필요

– '23년 교육 대개혁 원년을 맞아 경찰 성평등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양질의 교육 추진

< '23년 주요 추진계획 >

① 표준교육안 업데이트를 통한 교육 완성도 제고
- '22년 정책 추진 결과 도출된 시사점 반영으로 정책 연계 및 환류 강화
- 통계·사례, 제개정 법령 반영 등 현행화 작업을 통해 교육 적합성 향상

② 콘텐츠 신규 개발을 바탕으로 교육 운영 고도화
- '주제·직무별 교육', '관리자 특화교육' 등 콘텐츠 개발로 교육 수용도 제고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통해 교육 운영의 영역·장르 확장

③ 성평등 교육 주무부서로서의 역할 및 추진 기반 강화
- 전문강사 워크숍 내실화 및 강의 기회 확대를 통해 역량 강화 도모
- 모니터링단 확충 및 타 기능 교육 점검 지원·협의를 통한 교육 전반의 품질 제고

○ **조직 내 성평등 사각지대를 해소,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성평등 같이가치」를 전국으로 확대, △성차별적 조직문화 △성평등 정책 등을 논의하는 핵심 소통창구로 역할 재정립

< '23년 주요 추진계획 >

► 성별·연령별·직급별 단원 구성의 균형 제고 등 추진체계 재정비
► 간담회 테마선정 등 자유토론을 통한 인식 공유 및 홍보·환류 강화

– △성차별적 조직문화 사례 발굴·분석 및 개선안 도출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한 '일상 속 성차별적 문화' 개선 추진

– △성평등 정책 △주요 이슈 △조직 내 우수사례 공유 등 경찰 성평등 정책 소식지(성평등 뉴우스, 새로 쓰는 경찰이야기) 정기 발간

< '23년 주요 추진계획 >

► **(콘텐츠 다양화)**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개최 △성평등 정책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
► **(홍보 활성화)** 성평등 정책 소식지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댓글 이벤트 등 진행
► **(의견수렴 통로 마련)** 구글폼·네이버폼 QR코드 활용, 모바일 설문조사 진행

○ **경찰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청정조직 구현**

– 조직 내 성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성범죄 근절의 기반이 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능 합동 종합대책 수립·추진

<’23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

① 성평등 인권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

– △균형있는 소통 강화 △처벌의 공정성·신뢰성·경각심 제고 △성차별적 요소 발굴·개선 △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

② 올바른 성인지 의식을 갖춘 경찰관 선발·양성

– △채용과정 검증 강화 △교육기관 전담기구 활성화 △성평등·성범죄 예방 교육 고도화 △젠더폭력·여청수사관 교육 강화 등 역량강화 추진

③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 △성범죄 실태진단 △성범죄·성차별 사례·분석 활성화

– △지역경찰·교육생 등 대상별 역량 – 협업 네트워크 강화

④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해자 인사·보직 관리 △가해자 재발방지교육의 철저한 이행 △피해자 지원·상담 다양화 △성범죄 예방·근절 현장점검 지속 추진

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이행점검 실시

– 年 1회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조직문화의 성평등 수준과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맞춤형 실행전략 수립

<주요 추진 내용>

► 조사 대상 : 경찰청 소속 全 직원

► 조사 방법 : 외부 조사전문기관 용역 의뢰, 모바일 설문조사

► 조사 항목 : △조직문화 △성희롱 피해·목격 경험 △전담부서·제도 인지도

► 추진 일정 : ’23년 9월경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경찰청 및 부속기관 젠더통합 간담회 추진 계획 수립	1월	
	성평등정책 컨설턴트단 워크숍 개최	1월	
	성평등 같이가치 운영계획 수립	2월	
	소속기관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워크숍 실시	3월	
	경찰 성평등 교육 종합 운영계획 수립·시행	3월	
2/4분기	성평등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 개최	4월	
	성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 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	5월	
3/4분기	성평등 조직문화 실태조사 및 캠페인	9월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9월	
4/4분기	조직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10월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2월	
연중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분기별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상시협의체 회의 개최	분기별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경찰정책·콘텐츠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연중)		
	「성평등 뉴우스, 새로 쓰는 경찰이야기」 정기발간(반기별)	반기별	
	<성평등정책 이행점검(연중)> △「23년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경찰 성범죄 근절 및 예방 종합대책」 △기능별·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종합계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全 직원(경찰·일반직·주무관 포함)

□ **기대효과**

○ 소통·환류를 기반으로 경찰 성평등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정책의 추진 기반을 확립, 성평등한 경찰행정 구현

○ 경찰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투영한 서비스를 제공, 차별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일반행정업무지원(7131) ■ 경무인사지원(313) - 성평등 인권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4.08	4.0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60%)	89	94	94.3	94.5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수치이나, 제도 운영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2%p 상승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 (최근 3년간 평균치는 92.4%)	성평등 관점 개선 의견 수용도(수용 건수/개선의견 건수) 기준, 경찰청·시도청·부속기관 합산 평균치	청·기관별 실적보고 (분기별, 온나라 공문)
성평등 교육 정착도 (40%)	90.8	91.6	94.1	94.3	22년 당초 목표치(91.9%) 보다 2.2%p 상회하는 우수한 실적을 도출한 만큼, 전년도 대비 0.2%p 상승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최근 3년간 평균치는 92.2%)	[(경감 이상 이수 인원 / 경감 이상 전체인원) × 100] × 0.4 + [(교육 참여 인원 / 전체 인원) × 100] × 0.6 *경감 이상 참여도(40%)+전 직원 참여도(60%)	청·기관별 교육이수율

48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 경찰 구현

□ 추진배경

○ 수사권 조정 등 경찰권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인권침해 우려도 증가, **경찰의 적극적인 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

○ 자치경찰 시행, 국수본 출범 등 조직 변화 시기에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경찰 활동의 중요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

○ 이에,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해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 경찰을 만들고자 함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22년 수립) 본격 추진]

○ **(주요내용)** '22.6월 '국민중심 인권경찰'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 8개·성과목표 23개 세부시행 과제로 구성된 **제1차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각 기능에서 과제별로 시행 중**임

※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22~'26년) 단위로 수립, 시행 예정

○ **(추진계획)** △ **과제별 이행실태 상시 점검**해 보완점 발굴, 해당 기능에 통보 △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시 추진경과 보고**(매월), 권고 및 의견표명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에 피드백 △ **경찰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추진 이행동력 확보

*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각 기능별 인권정책을 중간 점검(연 1회)

– 또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년 수립 예정, 법무부)을 참고**하여 경찰청에 도입 가능한 시책 발굴, 적극 추진

[경찰청 인권위원회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역할 강화]

○ **(주요내용)** 경찰 활동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경찰상 정립을 위해 '05.5월 출범한 **경찰청장 자문기구**로서 '22.12월 다양한 분야의 인권 전문가 13명으로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발족**

– ▵ 인권 관련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UN 정례인권 권고 등에 대한 검토 ▵ 경찰 소관 법령·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등 역할(경찰인권보호규칙 제4조)

■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도 개최**

'20년			'21년			'22년		
계	정기	임시	**계**	정기	임시	**계**	정기	임시
12	10	2	**14**	12	2	**12**	7	5

■ **「범죄수사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선 등 권고 17건, 감염병 위기상황 속 집회시위 자유 보장 관련 의견표명 3건**

○ **(추진계획)** ▵ 중요 법령과 치안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인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자문 실시 ▵ 유치장, 집회 현장 등 **인권 사각지대 방문** ▵ 권고·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분기 1회 점검** ▵ 중요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 등 역할 강화

– 또한, 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 중요 권고·의견표명 등을 보도자료로 배포, 경찰 인권 수호 기구로 자리매김

[인권진단 매뉴얼 작성, 본청 및 全 시도청 인권진단 실시]

○ **(주요내용)**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22년)에 따라, **인권진단 매뉴얼 제작**·계획 수립 후 **'23년 자체 인권진단 실시**

※ '23.1월 인권진단 매뉴얼·체크리스트에 관한 연구용역 정책 결과보고 완료

– 인권정책의 이행실태 및 전국 경찰관서의 인권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

– ’23년 자체 인권진단을 통해 경찰의 인권보호 체계를 확고히 하고, **’24년에는 「민·관·경 합동 경찰 인권진단」 추진**

※ 자체 인권진단<연 1회>, 민·관·경 합동 인권진단<2년 주기>

○ **(추진계획)** 자체 인권진단을 위한 유형과 방법, 추진체계를 구체화한 **매뉴얼*** **제작**(3월), **인권진단 실시 계획 수립·하달**(4월)

※ 경찰 활동과 환경 전반의 인권관리 실태를 시·도 경찰청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진단 체크리스트 △평가체계 구체화

– **인권진단**을 통해 인권정책의 이행실태 및 전국 경찰관서의 인권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

■ **(진단대상)** 본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부속기관 등

■ **(진단분야)** △경찰활동 전반(수사절차·집회시위 등 인권침해 요소) △조직 내 인권문화(갑질·양성평등·인권교육 등) △시설 등 근무환경 전반

■ **(진단 절차)** 시·도경찰청 자체 인권진단 후, 본청 주관 인권진단 실시

[인권소식지, 인권기자단, 인권 아카데미 등 쉽고 다양한 참여형 채널로 조직 내 인권문화 감수성 끌어올리기]

○ **(인권 소식지)** ’19.3월부터 인권을 주제로 경찰관과 민간인들이 수필, 영화 감상평, 시 등을 기고(보통 4~5편)해 매월 내부망에 게재

조회수가 2만회를 넘고, 수십 개의 긍정 댓글이 이어지는 등 **조직 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연말에는 책자 발행)

※ ’22년에는 1~12월 소식지 전체 조회수가 72,554건에 불과했으나, ’23년 1월호 조회수 20,197, 댓글 57건 / 2월호 조회수 20,496, 댓글 94

– 올해부터는 인권소식지에 △**사전 주제선정** 후 **특집호** 발간 △현직, 시민, 퇴직경찰관 등 **참여 범위를 확대**해 투고 다양화 △**익명 기고**(조직 내 갑질, 세대간 갈등 등) △**인권 관련 경찰 주요 정책 소개 코너 개설** 등 조직 내 인권 광장으로 자리매김

○ **(인권 기자단)** ’20년부터 매년 인권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선발(’22년에는 2기 25명), 인권소식지 기고문 작성 등 역할

– 올해 **인권기자단 3기를 선발**한 후 ▵ 조직 내외 **인권 이슈 현장(ex. 유치장, 집회, 주취자 대응현장 등)을 방문**해 인터뷰, 기고문 작성

▵ 인권 관련 **책자 출판**, 인권 관련 **작가와의 대화** ▵ **1박 2일 워크숍** 등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조직 내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전도사로 활약

○ **(인권 아카데미)** ’12년부터 본청 인권과 주관으로 인권을 주제로 명사 강연, 북 콘서트 등 형식으로 분기 1회 실시 중

※ ’12.5 ~ ’22.12월까지 ▵ 시네마 토크 콘서트 ▵ 중간관리자 인권리더쉽 세미나 ▵ 인권전문변호사 초청 강연 ▵ 작가와의 만남 등 총 41회 개최

– ▵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강연·영상·체험 등) 구성 ▵ **시도청 자체 인권아카데미 확대 시행**(올해 신설)

[국민·직원들과 함께하는 제12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개최]

○ **(주요내용)** ’12년부터 영화를 통한 시민과의 문화적 교류로 ‘인권’이라는 아젠다 공유를 위해 매년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개최

– 올해 제12회 영화제를 맞아 경찰의 인권 가치실현 의지를 대내·외 홍보하고 인권 의식을 공유하는 ‘인권영화제’ 추진

■ ’12.8.29. 제1회를 시작으로, 경찰관과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공모, 심사를 거쳐 舊) 남영동청사에서 시상 중심의 영화제를 개최

※ 7회까지 출품작 2,201점, 관람객 3,700여명 등 인권경찰 이미지 제고에 기여

■ ’19년 제8회부터는 상영 중심의 영화제로 변화하여 경찰청이 소재공모 후 우수작 선정, 전문영화사에 위탁 제작하여 시사회 방식의 영화제로 진행

※ 매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일 개최하고, 장소는 전문영화관을 대관

○ **(추진계획)** ▵ 영화 소재 공모 ▵ 최우수작에 대해 전문영화사 선정, 단편영화 제작 ▵ 영화 시사회 ▵ 전시, 토크 프로그램 등

– 또한, **내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인권영화 UCC 공모전」**(가칭)을 개최, 우수작에 대해 경찰청장 표창 등 시상(올해 신설)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5주년 효과분석, 홍보]

○ **(주요내용)** '18.6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도입**되었던 인권영향평가제가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이, 그간의 성과 등을 정리,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인권 경찰을 위한 노력 홍보

> '18.6~'23.1. **총 578건 평가(법령 529건, 정책 49건)**
> ■ '18.6월 심야 조사는 명시적 요청 때만 가능토록 「범죄수사규칙」 개정
> ■ 변호인에게 사건처리결과 통지토록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개정
> ■ 정보활동 명확화 등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등

○ **(추진계획)** 경찰 소관 법령·정책 중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된 사례를 중심으로 대내·외 고객에게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찰상 확립

– 내부적으로는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엄선하여 **카드뉴스** 제작, 통합 포털 내부망에 게시

– 외부적으로는 인권영향평가로 인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뀐 법령·제도 **언론 홍보**, 경찰청 인권위원장 **언론 인터뷰** 등

[제2차 경찰 인권교육종합계획(3개년, '23~'25년) 수립, 시행]

○ **(주요내용)** 경찰청 인권위의 '경찰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1] ('22.3월)와 '경찰 인권보호 규칙'[2]을 반영해,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보장과 실현을 위한 제2차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추진

> 1)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인권보호책무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인권교육 권고
> 2) ▵3개년 경찰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의 세부내용 규정(제18조의2) ▵인권교육의 세부내용·대상·시간을 명확히 규정(제20조~제20조의3)
> 3) ▵ 제1차 교육은 「인권교육기본계획」('18~'20년)으로, '17.10월 경찰개혁위의 3개년 인권교육계획 수립 권고에 따라, 인권감수성 향상 등을 위해 수립 ▵'21~'22년은 1차 계획의 완수를 위해 同계획 고도화, 올해 2차 계획 추진

○ **(추진계획)** 올해부터 지속적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각종 경찰 교육·훈련 시 인권교육이 필수 편성*, 시행 예정으로,

* 경찰권 행사 시 적법절차에 대한 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 포함된 △ 신임교육(5시간 이상) △ 교육기관 교육(1시간 이상) △ 시·도청별 교육(2일)

– 국가인권위, 서울대 인권센터 등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 구성**, 경찰 인권교육 체계·프로그램 전반에 자문

– 각종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망에 **「인권교육 통합관리 시스템(가칭)」 구축** 추진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국 경찰관서 확대 시행]

○ **(주요내용)** '20.6월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의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도입 권고에 따라, 동료 경찰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개입·제지하도록 지원하는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 도입, 시행

※ △ '20.7월 프로그램 도입 관련 설문 △ '21.5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21.5월 권역별 강사 선발·양성 △ '22.5월 18개 시·도청 시범운영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PI Program : Peer Intervention Program)】

■ **(배경)** '20.5월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 자발적 개입을 통한 시민, 경찰 모두의 안전도모를 위해 도입(美 뉴올리언즈 경찰국)

■ **(목적)** 잘못된 판단을 예방하여 내부적으로는 동료 경찰관과 경찰 조직을 보호,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

○ **(추진계획)** 올해를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시행 원년으로 삼아 △ 홍보 영상 제작(2편), 사이버 인권교육자료 활용 △ 동료개입 강사 평가 등 관리 체계화 △ 全 관서별 교육 시행

[국가인권위 권고사례 분석 인권교육자료 제작]

○ **(주요내용)** ’22년 기준 국가인권위 진정(1,411건)과 권고(47건) 사례를 분석, 경찰 활동 중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의 원인과 유형을 정리해 현장 직원들에게 유의점 등을 제시할 필요

○ **(추진계획)** 경찰 업무수행 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사례를 정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주요 권고사례를 **유형·기능별로 분석**

– 동일 사안에 대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 국가인권위 권고 **사례집(기능별, 계급별, 직책별)** ▵ **카드뉴스** ▵ e-book 등 다양한 채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작

[현장시민인권보호관」제도 확대 운영]

○ **(주요내용)** 인권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히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22년 6월 7개 시도청 민원실에 현장시민인권보호관(7명, 8급 임기제)이 배치, 운영 중(’22년 인권 관련 257건 상담)

■ **(도입 배경)** ’18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으로 외부 전문인력(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인권상담센터’ 개소(종로·강남 署), 이후 ’20.12월까지 전국 10개서까지 확대 ⇒ ‘현장시민인권보호관’의 모태

– 올해 11명을 추가 선발해 全 시·도청 배치 완료 예정으로, 향후 ▵ 시행 1주년 기념행사 ▵ 활동 성과·시민 반응 등 언론 홍보 ▵ 본청 주관 역량 강화 교육 등 진행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권진단 매뉴얼, 체크리스트 마련	3월	
	인권기자단 3기 신청접수 및 선발	3월	
	현장시민인권보호관 제도 확대 운영 계획 수립	3월	
2/4분기	제2차 경찰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4월	
	인권진단 실시 계획 수립·하달	4월	
	인권기자단 워크샵 진행	5월	
	현장시민인권보호관 인권교육 진행	5월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5주년 성과홍보	5월	
	’23년 사이버 인권교육 구성, 시행	6월	
	인권아카데미(상반기)	6월	
3/4분기	시·도경찰청 주관 자체 인권진단 실시	7월	
	인권정책 기본계획 세부추진 과제 이행점검	9월	
	국가인권위 권고사례 분석 인권교육자료 제작	9월	
	인권교육(동료개입 포함) 실태점검,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 구성	9월	
4/4분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분석 및 피드백	10월	
	본청 주관 인권진단 실시	10월	
	인권 책자 출판 추진	11월	
	인권소식지 연호(23년) 책자 발행	12월	
	인권아카데미(하반기)	12월	
	제12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12월	
	「인권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2월	
연중	경찰청 인권위원회 안건상정 활성화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인권 관련 시민단체, 경찰

□ 기대효과

○ 수사권 확대·강화에 따른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인권보호 선도 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반 확립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이를 경찰 현장에서 실현하는 인권경찰 이미지 정립에 필요한 문화, 교육토대 마련

○ 인권보호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인권정책 추진은 경찰의 인권 의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 구현(일반재정)			
인권보호활동(7133-312)	일반회계	4.48	4.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조직 내 인권문화 확산 (60%)		신규 '21년 55,641건	'22년 87,835건	200,000건	▸(취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을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경찰 개개인의 인권감수성 향상 ▸(신규지표) '22년 세부지표별 건수 총합의 2배 이상 목표 설정 ▸(세부지표) ① **인권소식지** : '19년부터 조직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발간해 내부망 게시 중 ⇒ '22년 조회수 72,554 ② **인권 아카데미** : 본청 인권과 주관으로, 인권을 주제로 강의, 북 콘서트 등 형식으로 분기 1회 개최 ⇒ '22년 참여자 115명 ③ **인권영화제** : 국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을 주제로 소재 공모하여 최우수작을 영화 제작·상영, 내부망 게시 ⇒ '22년 소재공모(국민+경찰) 79편, 조회수 14,376	인권소식지 조회수 + 인권아카데미 참여자 수 + 인권영화제 소재공모(×10) 및 조회수	▸매월 내부망 인권소식지 조회 수 총합 ▸인권 아카데미 참여 직원 수 ※ 올해부터 시도청까지 확대 실시 ▸영화제 소재 공모 수 + 내부망 조회수 ※ 소재공모는 가중치(×10)

인권영향평가 경찰청 인권위 안건상정 건수 (40%)	(10)	(9)	신규 (1)	12건	▸(취지) '18년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한 同 제도는 그간 지표로 설정한 실시율과 반영률 목표 달성 올해부터는 법령과 중요 정책을 경찰청 인권위 안건으로 적극 상정, 정책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신규지표) 월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세부지표) **인권위 회의 시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는 건수**	경찰청 인권위원회 안건상정 건수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계획서 ▸인권영향평가 자문 건수 등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 경찰 구현	조직 내 인권문화 확산	인권소식지 조회수 + 인권아카데미 참여자 수 + 인권영화제 소재 공모 및 조회수	200,000건	정량	결과	
		인권영향평가 경찰청 인권위 안건상정 건수	경찰청 인권위원회 안건상정 건수	12건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 경찰 구현	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과 위상 정립 (업무 추진기반 - 나)

성과목표Ⅳ-3 처우 개선·사기 진작으로 현장의 활력을 높인다

(1) 주요 내용

○ **<복지기반 확충>**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구축하고, 조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 복지제도 마련**

※ △직장어린이집·연수원 등 가족친화 복지시설 확충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체계 구축 △순직·공상경찰관 예우 강화 △퇴직경찰관 전직지원 및 인프라 확충 등

○ **<소통 기반 행정지원>** 내부소통 활성화, 일·가정 양립, 우수 직원 격려 등으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 조성**

○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입직별 균형인사 실현 △업무 중심 평가·승진 △업무성과 및 역량 중심 보직인사 체계 마련

– 현장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규모 확대 및 즉시성 제고

○ **<대국민 소통 강화>** 각종 매체를 통한 입체적 정책홍보와 함께 팩트체크 등 현안대응 강화, 국민 신뢰·지지 기반 마련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처우 개선·사기 진작으로 현장의 활력을 높인다**	**급여 및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 상담사 역량 강화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지원으로 현장활력 제고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 연가사용 실적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 인적구성의 성별 균형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 온라인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급여 및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77.3	76.6	71.4	75.4	급여 및 복리후생 부문 직무만족도는 '20년부터 하락하였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5.1)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69.2)을 고려, '23년 목표치는 평균 및 '22년 실적보다 4.0%p 상승한 75.4로 도전적으로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급여 및 복리후생 부문)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안정된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국가별 경찰 신뢰도)** 한국은 21개국 중 19위 ('22년, OECD)
▸**(국내 정부기관 신뢰도)** 6개 정부기관 중 4위('21년, 통계청)
※ 지방자치단체 > 군대 > 중앙정부 > **경찰** > 법원 > 검찰 順

– ▵현장대응 부실 ▵불공정 수사 ▵구성원 불법 등 다양한 요인 작용,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사적 종합 대응 및 전략적 홍보활동 긴요**

○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세대(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역량·성과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사회적으로 더욱 강조**

– 유연하면서도 공정한 성과·직무 중심 인사 강화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정착**

(4) 참고자료

○ 통계청,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경찰청 인터넷 웹사이트(www.police.go.kr)

○ 경찰청, 「경찰 홍보 매뉴얼」

49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 추진배경

○ 경찰관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폭넓은 복지제도 기반 확충 추진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제2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2019~2023)'

○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수당 개선과 퇴직(예정) 경찰관 지원 확대,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현장 활력 제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관리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에 헌신한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신체적·정신적 맞춤형 건강증진체계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 현장경찰관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 현장 경찰관들에게 충분한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마음동행센터 상담인력 증원 추진

※ ('23년) 총 36명, 개소당 1~3명 → ('24년 이후) 총 54명, 개소당 3명

○ 신체·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고도화

– '특수' 검진에 걸맞도록 직무특성을 고려한 유해인자별 검진 항목 도입 등 특수건강검진 고도화 추진

※1인당 검진비: ('22년) 121,493원 → ('23년) 1인 최대 227,844원

–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분석*을 지속 진행하고, 주요 스트레스 요인·증상의 예방·치유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추진

*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용자의 기능별·지역별·성별·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 사망전 스트레스·위험신호 등 자살원인 관련 자료

–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과정(매년 225명) 운영, 생명지킴이 강사 역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발굴·조력자 역할 부여

[시설·여가 복지 확대하여 경찰 가족의 행복 증진]

○ 직장어린이집·연수시설 등 가족친화 복지시설 확충사업 진행

– 4차 어린이집은 준공 및 개원('23.10월)하고, 5차 어린이집은 사업자와 협상 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진행

< 어린이집 확충 계획 > ('22) 69개소(3차 20개소) ⇨ ('23) 85개소(4차 16개소) ⇨ ('24) 100개소(5차 17개소) ※ 5차 1개소 증축, 1개소 이전 신축

– 강릉·신안·남해수련원 증·신축 사업 진행 및 노후수련원 시설 개선

○ 비연고지 인사발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확충

– 도서·산간지역 등 특수지는 관사 신축을 추진하고, 도심지는 임차관사 확보, 노후관사 환경개선 지속추진

※ 신축 30년 이상 된 국유관사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신축 20년 내에 있는 국유관사는 리모델링 진행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국내 주요 온라인 교육업체와의 제휴 협약방안 검토, 순직자 및 장기공상 퇴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

– 경찰관 자녀에게 지원 자격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대학 현황 파악, ‘2024학년도 경찰자녀 대학 특별전형 안내’ 제작·배포

○ 정책 소통·환류체계 운영

– 개편된 ‘POL복지’ 게시판을 활용, 주요 복지제도·혜택을 상시 안내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제언도 지속 수렴

게시판명	내 용
복지알림	복지분야별(건강·보훈·퇴직 등), 생애주기별(임신·육아·교육·퇴직 등) 복지제도 등 안내
복지혜택	제휴할인, 경찰공제회 공지 등 안내
복지제언	복지정책 관련 현장 의견 게재(신규아이템 건의, 제도 개선사항 등)

[순직·공상경찰관 예우 및 지원체계 강화]

○ 순직·공상자 예우 및 지원체계 강화

– 순직·공상(퇴직)자 위로금 및 공상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및 집중 치유 프로그램(힐링캠프·템플스테이 등) 운영

– 순직·공상 불승인 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 지원 및 승인 준비과정에서 재해전문 노무법인 전문가의 자문 지원

– ▵순직·공상퇴직 자녀 입학·졸업 격려 ▵명절·연말 위문 ▵순직자 기일 위로 등 순직 유가족 대상 사후 지원 종합관리체계 운영

– ▵위험직무순직 특별위로금 ▵장기투병공상 위로금 ▵순직자 장례지원비 ▵전사·순직경찰관 위문금 등 예산 증액 추진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공상추정제 도입)에 따라 경찰관 다빈도 질환이 공상추정 질병에 포함되도록 인사처와 지속 협의

○ 국가보훈처와 협업을 통해 장기재직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퇴직경찰관 전직 지원 및 인프라 확충]

○ 퇴직(예정)경찰관 전직지원 교육과정 확대 운영

– 전직지원 총 교육정원 확대 및 전직심화과정 신규테마(자격증 실무교육, 기능별 과정 등) 시범운용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

※ '23년 전직지원 총 교육정원 150% 증가 ('22년 1,200명 → '23년 1,800명)

○ 대면 전직지원 컨설팅 및 신규일자리 발굴 적극 운영

– 전직지원센터 원격지 대상 '찾아가는 전직지원 컨설팅(가칭)' 운영으로 전직지원센터 홍보 및 신규 전직 희망자 지원

※ 전국 권역별 전직지원센터별 최소 2회 이상 실시(4～11월 예정)

– 경찰경력과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을 통해 다양한 퇴직경찰관의 전직지원 수요 및 만족도 제고

※ '23년, 전국 6개소 경찰전직지원센터 신규일자리 분기별 발굴 성과관리

○ 퇴직(예정)경찰관 전직지원 여건 개선

– △'전직지원시스템(가칭)' 도입 △전직지원센터 인력 확충(상담사 3명) △교육정원 확대 △센터 임차예산 확보 등을 위한 예산확보 지속 추진

※ 전직지원시스템 도입 및 발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선행

[경찰 업무특성을 반영한 수당 현실화]

○ 치안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근무여건 악화, 유사업무 대비 불합리, 장기간 수당 동결 등 인사혁신처 수당조정 기준을 고려하여 수당 신설·인상 등 필요사항 발굴·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계획 수립	1월	
	순직·공상퇴직 자녀 입학·졸업 격려	2월	
	경찰병원 '22년도 운영성과 평가 및 운영심의회 개최	2월	
	'23년 (재)경찰위로복지기금 사용계획 수립·시행	2월	
	경찰청-경찰병원-충남도-아산시 업무협약 개최	3월	
	'22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수립·하달	3월	
	'23년 임차관사 예산 배정계획 수립	3월	
	'23년 경찰청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	3월	
	제2차 경찰복지기본계획 '23년 시행계획 수립	3월	
	'23년 경찰전직지원교육 운영 용역업체 선정	3월	
	'23년 전직지원계획 수립·하달	3월	
	'23년 동호인 지원 계획 수립	3월	
	'23년 생일지원사업 계획 수립	3월	
	'23년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운영기준 계획 수립	3월	
2/4분기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시행계획 수립	4월	
	'23년 복지카드기금 사용계획 수립·시행	4월	
	경찰병원 '23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심의회 개최	4월	
	'23년 장기재직자 지원사업 계획 수립	5월	
	관사 보수예산 배정계획 수립	5월	
	'23년 경찰청 수당조정요구안 마련 제출	5월	
	'23년 순직·중한공상·국가유공자 불승인자 소송비 지원계획 수립	5월	
	'23년 공상공무원 특수요양비 지원계획 수립	5월	
	호국보훈의 달 전사 경찰관 추모행사 개최	6월	
	'23년 경찰수련원 성수기 대비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	6월	
3/4분기	순직·공상 의무경찰 순직위로금 및 장기투병 지급계획 수립	7월	
	'23년 순직경찰관 영결식 용역사업자 선정	7월	
	경찰 순직·공상 순직위로금 및 장기투병 4주이상 지급계획 수립	8월	
	순직경찰관 유가족 위로세대별 시도청별 지급계획 수립(보훈처협조)	8월	
4/4분기	경찰 추모주간 순직경찰관 유가족 위로 행사 개최	10월	
	4차 BTL 어린이집 16개소 개원	10월	
	5차 어린이집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	10월	
	'23년 퇴직예정경찰관 가이드북 제작	11월	
	'23년 경찰전직지원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12월	
	경찰관서 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 점검계획	11월	
	'24년 경찰관 전직지원 교육사업 용역계획 수립	12월	
	'23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업체 선정	12월	
	제3차 경찰복지기본계획 수립	12월	
연중	위험직무공상자 특별위로금, 공상자 특수요양비, 순직·공상 불승인 소송비 지원	연중	
	전직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소식지 제작·게재	연중	
	퇴직예정경찰관 전직지원 교육 실시	연중	
	강릉수련원 증축 및 신안·남해수련원 신축 사업관리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재직·퇴직경찰관을 포함한 경찰 조직원과 그 가족이 대상이며,

– 경찰복지로 인한 자긍심·사명감 제고가 경찰관의 적극적·헌신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어져 국민도 간접적인 수혜대상임

○ **(이해관계집단)**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정부 부처, 경찰병원·경찰공제회·유가족회 등 관계 기관·단체

□ 기대효과

○ 현장 치안 활동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을 통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찰관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함양

–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 및 자긍심 제고를 통해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이를 통해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위한 기반 마련

○ 경찰관의 직무특성에 맞게 심리·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국가에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순직·공상자를 예우하여 사명감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경찰복지증진(Ⅴ-4-일반재정④)			
① 경찰복지증진(7135)	일반회계	845.21	860.82
■ 경찰복지증진(311)		689.08	682.07
■ 퇴직경찰관 취업지원(312)		20.57	23.12
■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민자)(751)		135.56	155.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현장경찰관 마음건강관리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30%)	17,487	21,881	25,974	30,217	<추세치 반영> △'20~'21 : 4,394↑ △'21~'22 : 4,093↑ - '22년 추세치 : (4,394+4,093)/2 = 4,243↑ - '23년 추세치 반영 : 25,974+4,243=30,217	마음건강 증진프로그램 상담 제공 수	상담 위탁업체 비용정산 등 근거자료
상담사 역량 강화(30%) (전문화 교육 이수)	신규			90%	<상담사 전문화 교육 이수율> - 상당사 전체 인원(36명)이 최소 분기별 1회(연 4회) 이상 이수, 목표치는 이수율 90%	상담사 1인당 연 4회(분기별 1회) 교육 이수율 평균값	위탁업체를 통한 개인별 전문화 교육 이수율 확인

○ **(지표개요)** 마음건강관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나, 경찰의 불규칙적인 근무여건 및 경직된 조직문화로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은 만큼 정신적 공상 예방을 위해 조직적 차원의 적극적인 '긴급심리지원*.지정상담**' 필요

* 긴급심리지원 : 충격사건 담당 경찰관 대상 사건 직후 한달간 최대 4회 상담

** 지정상담(정신건강검진) : 형사 등 스트레스 고위험부서 대상 1:1 검사·면담

- '23년 성과지표로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 횟수를 반영하되 3년간 추세치를 고려하여 정량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와 더불어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상담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추가하여 성과지표에 신규 도입

○ **('23년 목표치)** 코로나19 상황이 소강국면이나 사회활동을 꺼리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최근 3년간의 추세치를 반영한 30,217건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이며,

- 상담소 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담사의 역량 강화는 필수 요소로 특히, '경찰조직에 대한 이해*'와 '경찰관에게 맞는 상담기법'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 전체 상담사(36명)가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및 집단교육(워크숍 포함)을 실시하고 연평균 교육 이수율이 90% 이상은 이수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목표치를 설정

<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40%)	70.3	71.3	72.7	73.9	추세치 이상 △'20~'21 : 1%↑ △'21~'22 : 1.4%↑ -'23년 추세치 : (1+1.4)/2 =1.2%↑ -'23년 추세치 반영 : 72.7+1.2 =73.9%	해당연도 취업인원 / 전직지원센터 컨설팅 인원	전직지원센터 제출 자료

○ **(지표개요)** 국정과제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와 관련한 지표로서, 전·현직 경찰관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23년 목표치)** '23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추세치를 반영하여 73.9%로 설정

- 취업제한기관이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2년간 30%(5,193개) 대폭 증가하는 등 퇴직경찰관의 재취업 여건이 열악하고,

대상 연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취업제한기관 수(개)	16,331	16,690	17,051	17,292	20,345	22,485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직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이 지연될 뿐 아니라, 기업 운영도 위축되는 등 취업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노인들의 단순 취업 인원 등 월평균 임금 80만원 미만*의 시·일급 등 단기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임

  * 월 8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 : ('18년) 1.9% → ('19년) 1.7% → ('20년) 2.1% (통계청,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월 80만원도 못 벌어요"... 초저임금 근로자 비중 코로나 이후 증가(국민일보, '22.2.16.) - 노인 일자리에 취합한 노인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월 32만9000원

- 그럼에도 질 높은 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해 모든 취업자를 1명으로 개수하지 않고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로 산정하면서도 '23년 목표치를 최근 3년 추세치를 반영하여 73.9%로 상향하여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

  * △시·일급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 : 0.5명 △감시·단속직 : 0.7명으로 개수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마음동행센터 상담제공 건수	30,217	정량	산출	
		상담사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이수) (신규지표)	상담사 1인당 연 4회(분기별 1회) 교육 이수율 평균값	90%	정량	산출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해당연도 취업인원 / 전직지원센터 컨설팅인원	73%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국정 14-3, 업무 Ⅲ- 4

50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 · 집행 지원으로 현장활력 제고

□ 추진배경

○ 치안정책 수립·집행 全 과정에서 상향 의견반영이 가능한 업무·회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호응받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

○ 또한, 기능 상호간 업무정보 소통·공유, 예산업무 교육 등 정책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 도모**

○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조직문화 개선, 올바른 경찰정신 확립, 우수 직원 격려 등 **현장 활력 제고를 통해 경찰의 대국민 치안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조직원 상호간 치안정책 소통채널 마련, 화합의 조직문화 선도]

○ 경찰청 주요 일정관리*, 업무회의 준비**(자료취합・전국전파) 등 적극적 지원으로, **효과적인 치안정책 수립・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 대・내외 일정 총괄, 각 기능 계획 반영(수시)일정 전국 배포(매일 08:00)

** 매주 치안정책 논의 일일회의 준비, 자료 전국 배포(회의 당일 08:00)

○ 일일회의를 **구성원 상호간 치안정책을 공유하는 소통공간**으로 조성, 조직원들의 의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

※ 현장활력소(내부 게시판) 등 직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환류 시스템 구축

※ 의무안건을 제출하는 회의가 아닌, 2~3가지 현안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의견표출이 가능한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업무회의 기획

○ 기능간 중재·갈등완화 등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총괄 지원**

[모두와 소통·화합하는 행사를 추진, 치안 현장의 활력을 제고]

○ 치안현장·노고부서 적시 방문, 칭찬플랫폼*을 통한 우수직원 격려** 등 **내부 사기를 진작시키는 행사를 추진**, 일선 현장의 활력 제고

* 현장직원들이 직접 칭찬사례를 내부망 공개 게시판에 등재하고, 우수사례에 대하여 즉시성 있게 표창 수여, 포상 확대 및 다양화(특진, 포상휴가 등) 추진

** 베스트 경무인, 베스트팀장 등 다양한 격려·포상제도 운영

○ '경찰문화대전' 등 **업무 외적으로 직원 상호간의 소통 창구**도 마련하여,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형성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등 각종 경찰 행사*를 주관 및 지원, 경찰 조직 내부는 물론, **국민과도 소통·화합하는 문화 정착**

* 시무식, 위촉식, 시상식, MOU 체결, 정부행사, 종교행사, 복지시설 방문 등

[휴식 있는 삶과 일·가정의 균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을 통한 **'휴식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年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하는 등 **연가사용 활성화 시책 추진**

※ △계절휴가 △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 적극

※ 명절·공휴일 전후로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본청부터 솔선수범하며 관리자는 일정 일수를 의무 사용토록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노조·직장협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 **(노조)** '08년 이후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및 매년 주무관 노조와 임금·단체교섭 진행 중으로, **대화를 통한 협력적 교섭 문화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일터 조성**

○ **(직협)** 연합협의회 및 본청 직협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조직 내 근무 환경 등 개선**하고 직협 교육,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 활성화 추진**

[첨단기술에 기반한 경찰관서 청사방호 역량 강화]

○ 의무경찰 폐지 등에 따른 방호인력 감소에 대비, **▵과학기술 기반 시설 강화 ▵인력 증원 Two-track 전략 추진**

○ 現 출입통제시스템과 차별화를 두고, **최소의 인력으로 빈틈없는 청사방호가 가능**하도록 첨단 방호시설 설치

▸ **(본청)** 경찰청은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 '나급'으로, 관련 법령상 경비요소 기준 충족을 위해 **▵로드블럭 ▵차량 차단기 ▵차량 하부검색기 등 설치**

▸ **(시도청·경찰서)** ▵청사 외곽에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하여 월담 등 무담침입을 방지**하고 ▵정문에 **슬라이딩 게이트를 설치하여 효율적 청사방호 업무수행** 도모

○ **(인력 증원) '23년 下 총 574명(1급서 2명/2·3급서 1명)까지 증원 예정, 총 1,201명(경찰서별 4명)까지 단계적 증원** 추진('24년~)

[경찰청 예산·사업을 뒷받침하는 신속하고 전문화된 회계업무 지원]

○ 경찰청 전 국·관별 주요 추진 사업에 맞춰 **신속·공정한 계약 절차를 진행**(작년 年 1,456건), 원활한 치안정책 추진을 지원

○ 본청 사업담당, 관서별 회계담당 등 대상 ▵회계교육 ▵회계실무 제작 ▵현장컨설팅 등 추진, **전문화된 회계업무 지원기반 조성**

※ 본청 예산·사업담당자 대상 계약절차 교육 / 국가계약 및 회계 전문화 교육과정 진행 / 사례 중심 회계실무 제작 / 상·하반기 현장컨설팅 실시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찰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관리]

○ **'경찰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관리' 연간 기본계획**에 따라 관서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관리 및 점검·환류**

※ ▵유해·위험요인 확인·조치 ▵종사자 소통 채널 ▵안전보건교육 ▵전문인력 등을 운영, 효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

○ **전년도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실태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조치 이행실태까지 추적·관리**하여 예방 체계 가동

> **※ 주요 점검 내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안전·보건 교육실시 현황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업무수행 △도급·용역·위탁시 가이드라인 준수△대응조치 매뉴얼 이행

[경찰역사 재조명을 통한 자긍심·책임감 제고]

○ 참된 경찰 정신을 실천한 경찰영웅 선정·선양* 및 임정·독립·구국·민생경찰 등 경찰위인을 발굴, **참경찰 인물열전** 발간**

* 매년 경찰영웅 2명 선정, 경찰영웅패·증서 수여 및 흉상 건립 등 선양

** '22년판 기준 263명 수록, 구국·민생 등 15명 추가발굴 및 참경찰 수록 예정

○ 경찰역사순례길* 운영 및 전 경찰직원 대상 정신교양서 배부,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 등 **경찰역사 관련 정책** 추진

* '23.1월 말 기준 △누적 참가자 18,683명 △완주자(41개소) 총 664명

** △ '22년 '참경찰 인물열전' 전 경찰관서 배부 및 '참경찰 수첩' 신임경찰관에게 배부 / '23년 경찰 다이어리 內 참경찰 수록하여 전직원 대상 배부

△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 : 신임 순경 매 기수별 개최(경대·간후·변호사 경채는 격년제로 홀수년에 실시 중)

○ 독립유공자 선양 사업을 전개하는 빙그레공익재단과 협업하여 **경찰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및 순직경찰 자녀 장학금 지급**

※ '19년·'20년에는 경찰 관련 독립유공자 상대로 年 3천만원을 지급하다, '21년부터 순직경찰관 자녀를 추가하고 지급액을 年 4천만원으로 상향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경찰청 시무식	1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시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	2월	
	국공노 경찰청지회 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	2월	
	경찰청-전국경찰직협 협의	3월	
	초과근무 부당수령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3월	
	'23년 전국 회계담당 워크숍 실시	3월	
	경찰관서 청사출입 보안계획 수립·하달	3월	
	「경찰관서 청사방호 체계 구축」사업 시범운영 실시	3~4월	
2/4분기	회계실무편람 발간·배포	4~5월	
	주무관 노조 업무 담당자 대상 권역별 워크숍	4~6월	
	초과근무 부당수령 현장 점검	4~6월	
	'23년 경찰청 근무혁신 추진 계획 수립	4~6월	
	당직 관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4~6월	
	경찰청-경찰청 직협 협의	5~6월	
	상반기 전국 회계부서 현장지도점검 실시	5~6월	
	경찰관서 청사방호 공무직 채용계획 수립·하달	6월	
3/4분기	'23년 상반기 '베스트 경무인' 선발	7월	
	「경찰관서 청사방호 체계 구축」사업 운영 현황 점검	7월~8월	
	경찰청-전국경찰직협 협의	7~9월	
	직협·노조관련 전문교육 실시	7~9월	
	공무원노조 노사 합동워크숍 실시	7~9월	
	초과근무 부당수령 현장 점검 및 중간 점검 보고	7~9월	
4/4분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10월	
	주무관노조 노사 합동워크숍 실시	10~11월	
	'23년 주무관노조 임금·단체교섭 체결	10~12월	
	경찰청-경찰청 직협 협의	10~12월	
	직협 소통 우수사례 및 근무혁신 우수관서 포상계획 수립	10~12월	
	초과근무 부당수령 현장 점검	10~12월	
	하반기 전국 회계부서 현장지도점검 실시	11~12월	
	'23년 하반기 '베스트 경무인' 선발	12월	
연중	주요 치안현장 방문	수시	
	사랑나눔 운동(봉사활동, 헌혈, 바자회 등) 추진	연중	
	칭찬플랫폼 우수사례, 베스트팀장 선정	연중	
	제12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 개최	연중	
	경리 회계과정, 시·도방청 회계과정, 회계담당 조달청 위탁 교육 실시	수시	
	2018 경찰청 단체교섭 (경찰청 - 국공노·전공노)	연중	
	'23년 주무관노조 임금·단체교섭 (경찰청 - 경주노·경공노)	연중	
	직협·노조관련 이슈 대응 및 현장활력소 게시판 모니터링	연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 실태 확인·점검(全 관서 대상)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행정지원, 근무혁신(유연근무, 연가 등), 내부소통(조직원 간 갈등 치유, 스트레스 해소) 등은 전 기능 대상 추진과제로 경찰청 全 직원이 수혜자

○ 또한,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경찰의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은 국민들에게 영향, 최종적 수혜자는 치안서비스 당사자인 전 국민

□ 기대효과

○ 행정지원이 뒷받침된 치안정책 추진은 치안성과 창출로 직결되고, 궁극적으로 경찰 전체의 치안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내부만족도, 업무효율성 증대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만족·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2]			
■ 경무인사지원(7131-313)	일반회계	96	1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50%>	83.0	85.2	85.6	86.0	하단 참조	10월 중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경찰청 고객만족센터 의뢰, 내부망 메일 이용 설문조사

○ **(지표 개요)** 경무담당관실 행정지원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임, 전국 경찰청 직원 중 10,000명 임의 선정, 10월 중 내부망 메일로 설문조사 실시

○ **('23년 목표치)**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 실적 평균치인 84.6점을 대폭 상회하는(적극성 '상'에 해당) 점수 86.0점을 도전적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연가사용 실적 <50%>	경정·5급 이상<25%>	44.9	55.2	54.5	52	하단 참조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 (1~10월)	경찰청 e-사람 시스템상 산출
	경감·6급 이하<25%>	52.9	58.6	59.3	62.5			

○ **(지표 개요)** 연가 사용 실적은 휴식있는 삶과 일·가정 균형 보장을 위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연가사용일수/연가부여일수)을 평가

○ **('23년 목표치)**

- **<경정·5급 이상>** 관리자인 경정·5급 이상은 연가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전적으로 지난 3년치 평균치(51.5%)보다 높은 52%를 목표로 설정**
- **<경감·6급 이하>**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권장연가제 등 근무혁신 추진으로 연가사용 매년 증가, **추세치 5.3%(3.2%p↑)**를 반영하여 **62.5%를 목표로 설정**

△ '20년은 코로나19 총력체계 등 실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통솔범위가 넓은 관리자(경정 이상)가 연가를 사용하기에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연가보상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아 잔여 연가가 전부 연가저축으로 적립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

△ '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그간 사용하지 못했던 연가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저축된 연가 일수도 사용되는 등 이례적으로 활용률이 급증한 결과

△ '22년에는 하계·동계 휴가 장려 및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1등급→2등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코로나 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연가사용이 증가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지원 및 현장활력 제고로 대국민 치안역량 강화	①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10월 중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86.0	정성	결과	
		② 연가사용 실적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 (1~10월)	경정·5급 이상 : 52% 경감·6급 이하 : 62.5%	정량	산출	

51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 추진배경

○ **현장으로부터 공감받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통해 **내부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 **치안 현장의 업무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는 현장 중심 포상 제도를 유지, **급변하는 치안환경을 책임진다는 자긍심 고취**

○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가치가 중시되고, **치안 현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여성 경찰관 비율 지속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역량·업무 중심 인적관리)** △**입직별 균형인사** 실현 △**업무 중심 평가·승진** △**업무성과 및 역량 중심 보직인사** 체계 마련

▸ **(균형인사)** 일반공채자 고위직 승진 기반 조성을 위해 △**경무관 이상 일반공채 비율**(現 5.2%) **확대** △**계급별 경력평정 만점기간 단축**(1년～3년)

▸ **(승진제도)** 업무역량 우수자 승진 비율 확대를 위해 △**시험승진 비율 축소** (現 승진 인원의 50%→40% 이하) △**특별승진 비율 확대**(10%→25% 이상)

▸ **(보직인사)** 중간관리 직위별(경정·경감) 필수교육 프로그램을 지정, 이수 시 해당 직위를 지원할 수 있는 **'보직 인증제' 연계**

○ **(현장 우수사례 포상)** 경찰청장 훈격 **표창 총량 규모를 현원 대비 10%→11%로 증량**(전년대비 1,733매↑)하고,

– **현장 우수사례 표창 비율 확대**(51.0%→52.9%, 1.9%↑) 및 '칭찬 플랫폼'을 활용한 **週 단위 포상으로 즉시성 강화**

○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경찰관 충원 규모의 20%～25%를 여성으로 선발하여 **올해 여성경찰관 비율을 15.4%까지 확대**

– 매년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하여 **'27년까지 17% 달성 추진**

* '23년 15.4%→'24년 15.8%→'25년 16.2%→'26년 16.6%→'27년 17.0%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충원계획 수립 시 여성경찰관 채용인원 목표치 반영	1월	
	'23년 특별승진·승급 및 경찰청장 표창 배정계획 수립	2월	
	1차 채용공고 시 시도청별 균형인사를 위한 여성경찰관 인원 배정	2월	
	전국 인사담당자 대상 인사제도 개선 의견수렴 및 논의	3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2/4분기	현장정책자문단 구성원 및 소통계정 정비	4월	
	기능별·지역별 여성경찰관 비율 점검	6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3/4분기	2차 채용공고 시 시도청별 균형인사를 위한 여성경찰관 인원 배정	7월	
	'23년 경찰의 날 정기표창 배정계획 수립	9월	
	인사정책 현장자문단 대상 인사제도 개선 의견수렴·논의	9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4/4분기	'23년 연말 정기표창 배정계획 수립	11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인사제도는 **全 직원의 직무만족도·업무성과에 직접적 영향**, 이는 치안 역량에 직결되므로 **국민은 간접적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인사혁신처·여성가족부 등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인사제도에 영향을 받는 全 직원 및 경찰관 지망생 등**

□ 기대효과

○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제대로 평가·격려**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 전반의 치안 역량 향상 견인**

○ 성별 균형인사를 통해 **조직 內 실질적 성평등 가치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맞춰 **여성경찰관의 역량 재정립**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인사직무만족도 (40%)	80.6점	80.6점	81.4점	81.1점	**최근 3년 실적 평균치(80.8)와 작년 목표치(81.0)보다 상향하여, 81.1점으로 목표설정** ※ 19년 81.5 / '18년 80.5 / '17년 80.7	인사관리 4개 항목 평균값	고객만족센터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30%)	43.8%	47.5%	51.0%	52.9%	**기존 실적(3년 실적 상승률 평균) 기조유지 및 표창 총량규모 확대 계획을 반영하여 52.9%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칭찬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현장 근무자 표창 수여 비율 확대 中	경찰청장 표창 발부 대비 현장 우수사례 포상 비율	경찰청장 표창장 발부 통계
인적구성의 성별 균형 (30%)	13.4%	14.2%	15.1%	15.4%	**'27년까지 여성 경찰관 비율 17% 달성을 목표로 금년 목표치(15.4%) 달성 後 매년 0.4%씩 비율 증가** ※ '26년부터 통합모집과 양성평등목표제 병행 실시	여성경찰관 비율	인사시스템 통계 및 '23년 충원계획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① 인사직무만족도	인사관리 4개 항목 평균값	81.1점	정성	결과	
		②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경찰청장 표창 발부 대비 현장 우수사례 포상 비율	52.9%	정량	산출	
		③ 인적구성의 성별 균형	여성경찰관 비율	15.4%	정량	산출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추진기반) 가 - 2 업무역량 제고 및 조직문화 혁신

52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신뢰·지지기반 마련

□ 추진배경

○ 대한민국의 안정된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치안수준과 경찰 역량에 비해 국민의 신뢰는 부족한 실정**

※ [국가별 경찰 신뢰도] 한국은 21개국 중 19위('22, OECD) / [국내 정부기관 신뢰도] 6개 기관(지방자치단체>군대>중앙정부>경찰>법원>검찰) 중 4위('21, 통계청)

○ 경찰 불신의 원인으로는 △**소극·부실 현장대응** △**불공정 수사·법집행** △**구성원 불법**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전사적 차원의 종합 대응을 통한 신뢰회복 노력**과 함께 **전략적 홍보로 긍정적 이미지 정립 필요**

⇨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든든하고 따뜻한**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을 핵심이미지로 설정**,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변화와 이미지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홍보 강화를 통한 긍정 이미지 확산**

– **(엄정·단호)** 전세사기와 같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끝까지 발본색원한다'는 엄정 대응 의지와 '준법이 이득'이라는 메시지 지속 홍보**

※ 시도청 홍보 테마로 지정, SNS 캠페인·현장경찰활동 영상 제작 등 홍보역량 결집 / 구체적 성과 부각을 위해 언론 브리핑, 기획보도 등 사례 중심 홍보도 병행

– **(따뜻·든든)**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예방책과 함께 피해자 지원 정책 관련 홍보를 병행**하고 **일상 속 선행미담 사례 발굴, SNS 선순환 홍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

※ 신문·방송사 등과 협업, △여청 기능 경찰관 인터뷰 △관련 범죄 통계·사례 제공 추진

– (실력·당당) ‘미래비전·교육 개혁’ 추진 단계별 보도자료 및 브리핑을 통한 언론 홍보를 기본으로 전문가 브이로그 등 SNS 홍보도 병행하고 ‘불합리한 행태·관행 개선’ 등 조직문화·업무방식 개선 사례도 홍보

- **<내·외부 소통강화>** 국민들이 경찰에 가장 바라는 모습·활동 등 긍정 이미지 형성 요인에 대한 시민·출입기자단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공모전·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소통도 확대
- **<미디어 속 이미지 개선>** △경찰관서 투어 △교류 강연(제작진↔경찰) △정기 소통간담회 실시 등 PD·작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빈번하게 접하는 영화·드라마·웹툰 등 미디어에서의 ‘경찰 이미지 왜곡·폄하’ 방지
- **<방송사 협업>** 인기 방영물 △경찰청 사람들 △사선에서 등 최신 트랜드에 맞춰 제작 검토

○ 부정이슈 관리 체계화

– (체계적 이슈 관리) 위기·이슈 발생 시 팩트체크팀 상시 운영, 업무 공유시스템 확립을 통해 기능간 유기적 협조 ➡ 비난확산 신속 차단

- **<중요이슈>** 차장 주재, 해당기능-대변인실-감찰 / **<일반이슈>** 대변인 주재, 해당기능-대변인실-감찰
- **<SNS 단체대화방 구성(필요시 대면회의)>** △관련 보도 △팩트체크 △대응 상황 등 실시간 공유
- **<위기관리 온라인 FTX>** 언론보도·온라인 이슈 포함 유형별 사례 중심 전략 훈련

– (유형별 전략대응) 위기·이슈 원인 및 유형 분석을 통한 전략 대응

- **<현장조치 미흡>** 신속하게 잘못 인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조사결과에 상응한 조치
- **<수사관련 이슈>** 홍보·수사 유기적 공조 및 경찰청·시도청 단위의 조정 역할 강화
- **<법·제도상 한계>** 인터뷰, 기획보도, 전문가 기고 등 통해 법·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 (사례 분석, D/B화) △보도 흐름 △대응 내용(결과) 등 全 과정 분석·시사점 도출, 교육 자료 및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교육 및 홍보 인프라 강화

– (교육 콘텐츠 확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등

▸ △ ‘디지털콘텐츠 제작’ **위탁 교육 신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교육영상 제작** △언중위 초빙 교육 △관서장·팀장급·실무자 등 **맞춤형 미디어 트레이닝** 등

– (협업 홍보) △문체부 협업 △디지털 소통 전문가 자문단 △MZ 세대 전략 코칭 그룹(정책기자단 등) △영상학과 대학생 인력풀 등 협업 확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경찰청 주요정책 전략홍보 로드맵 수립	2월	
	전국 홍보 기능 화상회의	2월	
	유튜브 내 국민체감 약속 콘텐츠 플랫폼 구축	2월	
	디지털 홍보 전문가 자문단 선발	3월	
	정책 기자단 선발(15기)	3월	
2/4분기	‘국민 신뢰 경찰 이미지 정립’ 관련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4월	
	경찰 인재풀 선발(화보·촬영 등)	4월	
	방송·영화 제작진 경찰교육기관 교류 강연 등 지원	5월	
3/4분기	상반기 이슈 대응 분석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수립	7월	
	미디어트레이닝	8월	
4/4분기	경찰의 날 영상 제작·배포	10월	
	경찰 홍보활동 인식도 조사	11월	
	’23년 방송·영화 제작진 교류지원 성과 및 ’24년 활성화 계획 수립	12월	
연중	경찰청 SNS 라이브 방송(Polive) 실시	월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언론사, 정부부처 홍보부서, 경찰청 정책부서

□ 기대효과

○ ‘경찰 이미지’ 개선을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존중·협력 및 개별 경찰활동에 대한 지지·참여 획득 ⇨ 경찰관 개개인의 사명감 고취 등 내부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대국민치안정책제공(Ⅳ-4-일반재정④)			
① 대국민치안정책제공(7134)	일반	15	15
■ 대국민소통강화(311)	일반	13	13
■ 경찰청홈페이지운영(511)	일반	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경찰청 SNS 활동지수 (30%)	1,708,794	1,764,736	1,804,056	1,831,116	5채널 친구 수	하단참조	각 계정 통계 활용
	1,841,582	848,410	1,467,384	1,399,649	5채널 좋아요 수		
	1,367	1,806	1,539	1,586	5채널 콘텐츠 수		
	819,134	886,361	815,369	848,690	블로그 기사 조회 수		
	-	16건	21건	24건	경찰 내부 직원 활용 유튜브 조회 10만 이상 콘텐츠 수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40%)	1,100건	1,260건	1,492건	1,644건	전년 대비 약 10%를 상향한 목표치 설정(월137건)	하단참조	언론보도 실적 취합
온라인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30%)	238건	235건	244건	250건	최근 3년 실적 평균치(239건)에서 5% 상향 수치(250건)를 목표치로 설정	하단참조	오보대응 및 이슈대응 실적 취합

【성과지표】

① 경찰청 SNS 활동지수(30%)

○ 측정산식 : 1) 경찰청 SNS 5채널 친구 수(8%)

2) 경찰청 SNS 5채널 좋아요 수(8%)

3) 경찰청 SNS 5채널 콘텐츠 수(8%)

4) 블로그 기사 조회 수(3%)

5) 경찰내부 직원 활용 콘텐츠 건수(3%)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3. 1. 1. ~ '23. 12. 31.
- 측정수행기관 : 5채널 통계(페이스북, 유튜브<공식+정책>, 카카오스토리, 밴드)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계정 친구수, 좋아요수, 콘텐츠수, 기사조회수 확인

○ 목표치 설정근거

1) 목표치(1,831,116명) = 1,804,056('22년 실적) x 1.015
2) 목표치(1,399,649개) = {1,841,582('20년)+848,410('21년)+1,467,384('22년)} / 3 x 1.01
3) 목표치(1,586건) = {1,367('20년)+1,806('21년)+1,539('22년)} / 3 x 1.01
4) 목표치(848,690건) = {819,134('20년)+886,361('21년)+815,369('22년)} / 3 x 1.01
5) 목표치(24건) = 21건('22년 실적) x 1.15

○ 지표설정 필요성

- 경찰청 SNS 홍보 활성화 정도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친구 수, 콘텐츠 수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좋아요 수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주력 채널인 **유튜브(공식+정책), 페이스북**, 다수의 친구를 보유한 **카카오스토리와 밴드**를 목표채널로 선정
- 매년 제로베이스 지표인 **'좋아요수', '콘텐츠수', '블로그기사 조회수'**는 **이전 3년간 실적의 평균치에 1% 증가한 목표치를** 설정

  ※ 3년간 실적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누적 지표인 **'친구수'**는 증가폭이 이미 양적 임계치에 도달, 매년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어 **전년 실적 대비 1.5% 상향하여 전년 수준 유지함**
- 다만 경찰 내부 직원(영상 크리에이터, PD, 아나운서 출신 등)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건수 및 조회수* 지표는 **전년대비 15% 증가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설정**

  * 유튜브 조회수 10만 이상 콘텐츠(실제상황 영상 포함)

②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실적(40%)

○ 점수 산출

- **연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보도건수 평가**(본청 출입 37개 언론사)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3. 1. 1. ~ '23. 12. 31.
- 매월 대변인실 홍보협력계 업무 담당자 취합.평가

○ 지표설정 필요성

- **언론은 국민들이 정책.뉴스를 접하는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경찰청 주요 정책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

○ 목표치 설정근거

- 전년 실적 대비 10% 상향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1,644건)

③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30%)

○ 점수 산출 : 연간 온라인 이슈 및 오보 대응 건수를 평가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3. 1. 1. ~ '23. 12. 31.
- 매월 대변인실 업무 담당자 취합.평가

○ 지표설정 필요성

- 온라인 이슈 및 오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 허위·왜곡된 정보의 확산 차단

○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238-235-244건) 평균치의 5% 상향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250건)

※ 단,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발생 후 24시간 이내 대응·조치된 건에 한해 인정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①「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이미지」 정립을 위한 전략 홍보 추진	① 경찰청 SNS 활동지수	각 계정 통계 활용	1) 1,831,116 2) 1,399,649 3) 1,586 4) 848,690 5) 24건	정량 + 정성	결과	
		② 주요정책 언론홍보 실적	언론보도 실적 취합	1,644건	정량	결과	
		③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	온라인 이슈 및 오보 대응 실적 취합	250건	정량	결과	

□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이미지」 정립을 위한 전략 홍보 추진	추진–다

Ⅳ. 환류 등 관련 계획

4.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 기본 방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주기적 과제 점검 및 정책 반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4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는 반기 1회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성과 미흡과제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 발굴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으로 이행상황 점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경찰청 성과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객관적 점검

(2)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조직

○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27명(▵교수 ▵연구원 ▵언론인 등)과 내부위원 3명(차장·기획조정관·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구성

※ 관련근거 :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1030호)

○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체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

– **전체위원회**는 성과관리 전략(5년 단위)·시행계획(1년 단위) 및 자체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치안정책 방향 공유 등 진행

– **분과위원회**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주요과제의 사전 컨설팅, 이행상황 점검, 본평가, 이의제기 심사,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활동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자체평가위원의 평가업무 지원 및 성과평가 제도 안내·교육, 평가지침 수립·제공 등 담당

(3) 이행상황 점검 세부 계획

○ 국조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및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을 바탕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주관 점검 실시

-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과제별 컨설팅 및 내부 구성원 대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
- **중간 점검** : 분과위원회별 1개의 부진과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최종 점검** : 자체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맞추어 대상과제 점검

【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일정 】

구 분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전문가 사전 컨설팅	**2~3월**	■ '23년 경찰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지표 수립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극성 등에 대한 전문 평가위원 컨설팅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4월**	■ '23년 정책방향 공유 ■ '23년 자체평가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해촉위원 해촉식 진행
상반기 추진실적 중간점검 실시	**7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
자체평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8~9월**	■ 평가위원의 치안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방문 ※ 코로나19 확산 관련, 유동적으로 실시
본 평가	**11월**	■ 각 과제에 대해 추진과정,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활용 여부 등을 종합 평가
추가 평가	**'24. 1월**	■ '23년 실적 최종치 및 추진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 ※ 행정관리역량평가 병행 실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23. 3월**	■ 성과평가 결과 반영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4) 부진과제 관리 방안

○ **(성과관리지원팀)** 혁신조정담당관·성과관리계장 및 외부전문가 등 구성, 컨설팅 및 중간점검 과정에서 선정된 부진과제에 대해 집중관리

구 분	역 할	담 당
총괄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총괄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등	성과관리계장
분과별 지원팀	자체평가 계획 및 실시, 분과위원회 평가업무 지원, 평가자료 취합·검토	자체평가 담당자 등 3명
	분과별 미흡과제 심층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등	외부전문가

○ **(부진과제 선정)** ▵추진계획 준수 정도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업무추진 과정 협업도 ▵정책소통 및 환류 등 4개 항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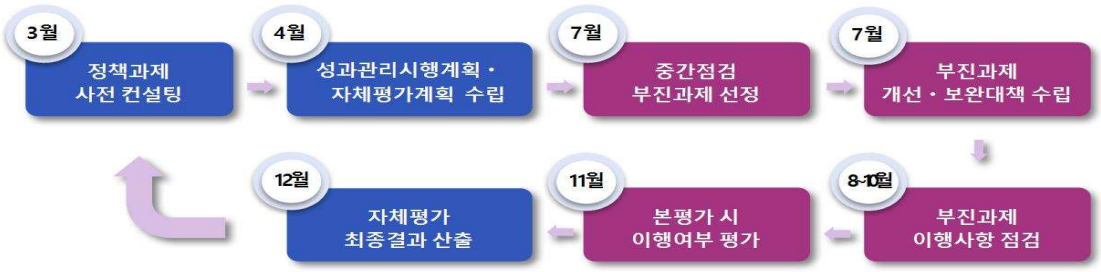
※ '22년 분과위원회별 과제(평균 8.6개) 중 부진과제(분과별 1개, 하위 11%) 선정

○ **(부진과제 관리)** 부진과제는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관리하고 본평가 時 이행여부를 평가에 반영('정책 환류 노력' 평가지표)

– 성과관리지원팀이 과제별 개선·보완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흡사항을 지원하는 등 부진과제 성과향상 도모

– 본평가(11월)에서 부진·개선 필요과제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최종결과는 내년도 과제·지표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 구축

【 부진과제 관리체계도 】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 성과관리 제도 간 연계

【 관리과제(자체평가 정책과제) 평가 ⇨ 치안종합성과평가 ⇨ 성과급 】

○ 시행계획 관리과제 평가결과를 경찰청 내부 평가제도인 치안종합성과평가와 연계, 본청의 조직(부서) 및 개인 평가에 반영

부서평가

평가요소	국·관	과	계
관리과제(정책과제) 평가	50%	50%	50%
부서 기본업무	50%	50%	50%

개인평가

구분	국·관	과장	계장	일반직원
부서평가(100~50%)	100%	90%	60%	50%
기여도평가(50~0%)	-	10%	40%	50%

○ 평가결과를 개인 성과급(성과상여금·성과연봉) 결정에 반영

구분	평가항목				합계
	관리과제	기본업무	개인기여도	역량평가	
국·관	40	40	-	20	100
과장급	36	36	8	20	100

구분	평가항목				합계
	관리과제	기본업무	개인기여도	역량평가	
계장급	24	24	32	20	100
일반직원	20	20	40	20	100

(2) 평가결과의 활용

○ 조직 부문

– 중간점검을 활용하여 치안정책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성공·실패사례 공유 및 향후 정책 수립·추진에 반영

– 직제개정, 소요정원 요구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업무 프로세스 향상 방안 마련 및 예산 수립에 주요 판단자료로 활용

○ 개인 부문

– 성과중심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환류 범위를 지속 확대하되, 성과관리제도 정착 및 수용도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

– 개인별 성과평가 이력관리제를 통해 개인·부서의 성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누적 관리, 승진·보직인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성과우수 관서·부서·개인에게 표창 및 포상금 수여, 특별승급, 성과급 지급, 교육 기회 부여 등 'Positive 환류 방식' 운용

【 평가결과 활용 범위 】

구 분	활 용 범 위	주 요 내 용
혁 신 기 획 조 정	**치안종합성과평가**	본청 부서평가에 반영(50%)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80%)
	우수관서 포상	우수관서 선발기준으로 활용
	우수부서 포상	우수부서 선발기준으로 활용
인 사	**심사승진**	개인평가 등급을 심사승진 참고자료로 활용
	특별승급	정책과제 상위 20% 부서
교 육	**국비 국내대학원 선발**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객관평가에 반영 최근 3년간 2회 이상 C등급 시 선발 배제
	국비 유학생 선발	
외 사	**주재관 선발**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객관평가에 반영

3 변화관리 계획

(1)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운영

【 조직 전반의 개혁·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의 기반 마련 】

○ **(인력 효율화)** 책임수사·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지역 간 업무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직급조정 추진**

– 치안환경 변화·신규업무 발생 등 치안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경찰인력이 시급한 곳에 재배치,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적극행정 활성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 △인센티브 강화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등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성과 창출 독려**

–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합리적 평가·보상체계 운영)** 관서·부서·개인의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협업을 유도하면서도 개인 성과달성에 동기부여

※ 자체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평가기간 동안의 개인별 보직이력을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과 그 보상을 합리적 연계

○ **(성과기반 인사정의 실현)** 개인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개인등급을 승진·보직인사·각종 선발 등 인사 전반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평가결과 상위부서(상위 20%)에 특별승급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여 업무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 및 만족도 제고**

※ 국조실에서는 매년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성 강화를 권고

⇨ '23년은 **평가등급 '우수' 이상 11개 부서에 특별승급 부여(예정)**

【 종합적·입체적 시책 창안 및 정책 환류·점검으로 미래성과 견인 】

○ **(코로나 종식 이후 사회현안 대비)** 급변하는 치안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업무체계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능형 치안행정 구현

– 미래 대비를 위한 탄탄한 제도기반을 마련, 한 세대 앞을 예측하는 기술·인력·장비 등 투자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미래 추동력 확보

○ **(경찰활동 모니터링)**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현장직원의 평가와 의견을 지속 수렴·분석

– 국민의 만족에 대한 대표적인 결과지표인 체감안전도·고객만족도를 비롯하여, 개별 정책 시행 전후 모니터링한 결과를 환류에 활용

※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비교분석 수행 (관서간 비교, 취약분야 확인, 시계열 추이관찰 등) 및 시각화자료 현출

○ **(통계 인프라 확충)** 매년 신규지표를 반영한 「경찰통계연보」를 발간, 주요지표의 성과측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 관리

– 사이버경찰청 웹사이트에 경찰통계연보·기능별 통계 등을 적극 공개하여 경찰의 주요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2) 성과지표 개발·관리 노력

○ **(전문가 성과지표 컨설팅)** 관리과제 지표 설계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매년 1/4분기)

※ 성과지표의 대표성·중요성·적정성 등을 체크리스트로 평가, 지표 보완·개선에 반영

○ **(성과지표 Pool 및 이력관리)** 자체 치안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 2006년부터 각 부서별 성과지표 Pool 운영 및 이력관리 실시

○ **(성과지표 일몰제 운영)** 매년 全 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 최근 3년간 목표치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지표 개선방안 마련

【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 현황】

분과	담당 분야	과제수	분과위원회 명단	
			분과위원장	위원
1	기획 / 홍보 / 미래치안	9개	최여경(분과위원장)	조준억, 안상현, 조순열, 홍준기
2	경무 / 감사	8개	송건섭(위원장)	이승은, 임현, 이연주
3	경비 / 정보 외사 / 치안상황	11개	이은영(분과위원장)	박성하, 박형준, 정의석, 김지현
4	수사/형사/사이버 / 안보	10개	김수진(분과위원장)	신승근, 조은경, 이동근, 김영중
5	수사기획 / 과학수사	7개	금현섭(분과위원장)	전현정, 장윤정, 원소연
6	생활안전 / 교통 / 자치경찰	7개	김경희(분과위원장)	백승엽, 권태경, 조준한

['23년 정책과제 컨설팅 결과]

- ▸ 일시・장소 : '23. 2. 22.(수) ~ 2. 28.(화), 경찰청 내부 일정으로 인해 서면진행
- ▸ 컨설팅대상 : 본청 부서 정책과제(52개)
- ▸ 결 과 : 정책과제에 대하여 대표성·적극성 있는 지표로 개선을 유도하고, 업무절차 개선 권고 등 총 52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 실시

4 현장의견 정책반영 계획

(1) 기본 방침

○ **(개요)** 주요과제 중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선정, 「기획→집행→환류」 全 단계에서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반영

○ **(대상과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안정책을 선정

– 국정과제・연초 업무보고 등에 포함된 주요과제 중 현장의견 수렴 및 환류의 필요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진행

※ 필요 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추가 가능하며, 안보사업 등 특수정책 분야와 법령상 비공개대상 사업 등 공개적 의견수렴이 어려운 과제는 제외

【 '23년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

연번	부서	정책과제
1	범죄예방정책	플랫폼 치안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 주변 불안·불법요인 해소
2	자치경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3	여성안전기획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고도화
4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업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5	경제범죄수사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 수사활동 강화
6	치안상황관리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
7	강력범죄수사	강절도·폭력 등 악성범죄 총력대응
8	마약조직범죄수사	마약·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9	경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10	정보상황	상황정보 역량 강화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11	반부패공공범죄수사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12	교통운영	국민 중심의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
13	교통안전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14	대테러위기관리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강화
15	교육정책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16	감사	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활동으로 건강한 경찰의식·문화 확립
17	미래치안정책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조성
18	과학치안산업	치안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19	과학수사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2) 과제별 의견수렴 방법

○ **(주체)**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담당부서 및 과제담당자로,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조사전문기관 등 활용 가능

○ **(시기)** 해당 정책의 '수립 → 집행 → 평가 → 환류' 全 과정

○ **(대상자)** 정책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유관기관·관련단체 등) 및 현장직원 등 적정 대상자 선정

○ **(방식)** 해당 정책의 △효과발생 예상시기 △정책수요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합한 의견수렴 방식 선정**

※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설문조사 △전문가회의 등

(3) 의견수렴 관리 체계

○ **(결과 관리)**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성과관리계)에서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결과 파악,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노력도를 자체평가에 반영**

※ 본평가 시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배점 15점)' 평가

붙임1-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4	0 (0%)	0 (0%)	1 (25%)	3 (75%)	3 (75%)
성과목표	14	14	0 (0%)	0 (0%)	0 (0%)	14 (100%)	2 (14%)
관리과제	52	149	0 (0%)	0 (0%)	93 (62%)	56 (38%)	136 (91%)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 개선안('19.6.) 반영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7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5대 범죄 검거율	5대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80.0	정량	결과	
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준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기관 신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기관별 신뢰 정도 - 경찰'	2.7	정성	결과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국가인권위 정책 권고에 대한 경찰 수용 건수 ÷ 전체 정책 권고 건수 × 100	100	정량	산출	
Ⅲ.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미래비전 2050 단기과제 달성률	미래비전 2050 단기과제 달성과제 개수 ÷ 단기과제 총 개수 × 100	100	정량	결과	
Ⅳ. 진취적 조직문화를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	-	-	-	-	-	

〈 (참고) 성과지표의 유형 〉

분 류		내 용	예 시
정량적 측정 여부	정량지표(계량지표)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가능 (평가자 주관 개입 불가)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율
	정성지표(비계량지표)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 (평가자 주관 개입 가능)	체감안전도
정보의 성격	투입지표(Input)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	투입 예산액
	과정지표(Process)	사업 진행 과정의 산출물	사업 진도율
	산출지표(Output)	사업완료 후 1차적 산출물	교육 수료자 수
	결과지표(Outcome)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단속·검거율 / 대상자 만족도

※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지표 활용이 바람직하나, 결과지표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산출지표 사용을 권장(국조실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1.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전반적 안전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분야 중 '전반적 안전도'	82.0	정성	결과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범죄안전도	경찰청 주관 대국민 전화조사 (외부 조사업체 이용, 일반 국민 총 64,625명 대상)	84.0	정성	결과	
3.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한다.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알림톡(카톡) 이용 수사·형사 분야 접촉고객 실시간 전수조사	65.1	정성	결과	
4. 당당한 법집행을 지원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치안고객만족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알림톡(카톡), 설문조사시스템 등 이용	84.0	정성	결과	
전략목표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준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1.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확산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법질서 준수도 (국민체감안전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분야 중 '기초 법질서 준수도'	78.0	정성	결과	
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고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TI) 주관 부패인식수준 조사	64	정량	결과	국제평가지수 (CPI)
3. 국민 중심 교통정책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교통문화 지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82.4	정성	결과	국가승인통계
4. 대테러·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사회안전성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6.4	정성	결과	국가승인통계
전략목표Ⅲ.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1.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을 구현한다.	치안 R&D 예산 확보	2024년 예산안 중 경찰청 R&D 금액 정부안(9월), 국회안(12월)	762억원	정성	결과	신규
2.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수사기법 기반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과학수사관 현장감식 만족도	고객만족 모니터링 센터 국민 만족도 조사 분야 중 '과학수사' 분야	80.0	정성	결과	
3.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22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65.4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Ⅳ. 진취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1. 현장 중심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경찰청 모니터센터 주관 全 경찰관 대상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82.0	정성	결과	
2.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높인다.	조직운영 직무만족도	경찰청 모니터센터 주관 全 경찰관 대상 조직운영 직무만족도	86.0	정성	결과	
3. 처우개선·사기 진작으로 현장의 활력을 높인다.	급여·복리후생 직무만족도	경찰청 모니터센터 주관 全 경찰관 대상 급여·복리후생 직무만족도	75.4	정성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성과목표 1.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플랫폼 치안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 주변 불안·불법요인 해소	플랫폼 치안 활동 지수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셉테드 사업 총 건수 중경찰 제안으로 추진된 셉테드 사업 건수	1,049건	정량	결과	
		생활질서 단속 지수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 + 근원적 차단활동) ÷ 생활질서기능 인원수	31.0점	정량	결과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지수	총포화약 위반사범 단속 + 행정처분	77.5점	정량	결과	
	범죄·재난 대비 예방적 정보활동으로 국민안전에 기여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 우수사례 질적 향상	재난·안전사고 예방정보 우수사례 평가표 수집 난이도 20점 / 중요도 충실성 40점 / 활용·확산 40점	41점	정량	결과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배당<열람> 건수 ÷ 제출 건수)	52.8%	정량	결과	
		재난 안전정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재난 안전정보 분석 내실화(50) + 전문성 제고 노력도(50)	88점	정량	결과	
		정보분석 활동 준법 제고 노력도	준법 제고 활동 노력도 — 수칙 위반도	100점	정성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112신고자 전원 대상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측정	90.9점	정량	결과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		88.8점	정량	결과	
	외사치안활동 고도화를 통해 사회안전 확보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월별실적* 합계 / 실적산출월수×100 *∑활동별(가중치×수혜자수)/ 체류외국인수	0.47점	정량	산출	
		외사정보 활용도	양적평가(건당 1점) + 질적평가(평가주체별 3~10점)	3,530점	정량	산출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건당 10~40점) + 교육점수(건당 1~3점)	1,330점	정량	산출	
	자치경찰제 내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활동, 추진계획 이행 등 노력도를 정성 평가,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 산출	80점	정량	결과	
		자치경찰제 관련 관계기관(중앙·지방) 협의 활성화	중앙·지방부처의 △기관장 △국·과장급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 누적점수 산출	80점	정량	산출	
		자치경찰 소통·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소통·홍보수단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 누적점수 산출	85점	정량	산출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고도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연계 건수(20%) + 피해자 보호지원 건수(80%) / 성폭력 발생건수]× 100	55.9	정량	산출	
		가정폭력 사건대응지수	[(가정폭력 현장대응 점수 + 사후조치 점수) / 가정폭력 실신고 건수] × 100	62.8	정량	결과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율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스토킹 신고 건수 × 100	34.8	정량	산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업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전체 소년범) × 100	40.4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재입건인원 ÷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100	16.2	정량	결과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보호조치 ÷ 아동학대 112신고건수) × 100	20.6	정량	결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원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 속기사 참여(건) / 강간·강제추행 (건) X 100	59.4%	정량	산출	
		아동학대범죄 임시조치 신청율	아동학대 임시조치 신청(건) / 아동학대 송치(건) X 100	60.9%	정량	산출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신청율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건) / 스토킹 검거(건) X 100	60.9%	정량	산출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확립	수사상 인권보호 제도 개선	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건수+ 홍보 및 교육	85	정량	결과 산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 회복지원제도 연계 건수	51,808건	정량	결과 산출	
성과목표 3.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한다.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 수사활동 강화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23년 주요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국 수사관 인원	12.5명	정량	산출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감소	'23년 전화금융사기 사건 피해액	6,054억 원	정량	산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건수	'23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건수	1,324건	정량	산출	
	강절도·폭력 등 악성뻠죄 총력 대응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71.0%	정량	산출	
		강·절도 피해품 회수율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37.8%	정량	산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인피뺑소니) 검거율	범죄통계시스템 및 TCS(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89.5%	정량	산출	
	마약·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범죄통계시스템	9,698명	정량	산출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3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td><td rowspan="2"></td><td>조폭 검거성과</td><td>검거인원 수기 통계
(월보) 취합</td><td>3,064명</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td><td>국제범죄사범
검거성과</td><td>검거인원 수기 통계
(월보) 취합</td><td>1,906명</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td><td rowspan="2">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td><td>1인당 사이버범죄
검거지수</td><td>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의
합계 ÷ 사이버수사인력
현원
※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제외</td><td>33.5</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td><td>사이버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td><td>(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
+ 사이버금융범죄
발생건수)</td><td>82%</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colspan="8">성과목표 4. 당당한 법집행을 지원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td></tr>
<tr><td></td><td rowspan="2">맞춤형 장비
개발・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td><td>장비 성능개선 및
신규도입</td><td>기존 장비의
성능개선(규격의 제·개정)
및 신규장비 도입 건수</td><td>17건</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td><td>경찰장비
현장만족도</td><td>(피복 만족도 × 0.3)
+(장구류 만족도 ×0.3)
+(차량 만족도 × 0.4)</td><td>88.2점</td><td>정성</td><td>결과</td><td></td></tr>
<tr><td></td><td rowspan="3">입법대응 및 현장
법률지원 강화,
국민안전 보호 기반
확충</td><td colspan="2">입법대응 노력도</td><td>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성폭력 검거지수의
합계 / 3</td><td>53</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td><td colspan="2">규제혁신과제
달성도</td><td>{('21년 피해보호조치
(삭제·차단) 요청건수
÷'21년 적정
요청건수)-1}×100</td><td>80</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td><td>통합법률
및
소송지원
달성도</td><td>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달성도</td><td>- 측정 대상: 법률 및 소송지원 제도 이용 유경험자(일반직 등 포함)
- 측정 산식: 아래 지원 활동별 만족도 평균
<table><tr><th>구분</th><th>매우불만족</th><th>불만족</th><th>보통</th><th>만족</th><th>매우만족</th></tr><tr><td>점수</td><td>0</td><td>25</td><td>50</td><td>75</td><td>100</td></tr></table></td><td>81.8</td><td>정성</td><td>결과</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colspan="2"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3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 rowspan="4"></td><td rowspan="2"></td><td></td><td>현장법률
365센터
대응
노력도</td><td>- 측정 산식: 아래 지원 교육·홍보 등 실적
<table><tr><th colspan="2">교육</th><th colspan="2">간담회 등</th><th colspan="2">자료 제작·공유</th><th colspan="2">기타 홍보</th></tr><tr><td>사이버</td><td>오프라인</td><td>주관</td><td>참여·지원</td><td>해설서</td><td>리플릿 등</td><td>카드뉴스</td><td>설명자료</td></tr><tr><td>컨텐츠당 20점</td><td>회당 15점</td><td>회당 15점</td><td>회당 5점</td><td>건당 20점</td><td>건당 10점</td><td>건당 5점</td><td>회당 5점</td></tr></table></td><td>75</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colspan="2">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td><td>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심의 결과(월1회)에 따른 항공대별 점수 합계</td><td>1,371점</td><td>정량
정성</td><td>결과</td><td></td></tr>
<tr><td>치안현장 항공 지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td><td colspan="2">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td><td>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및 관련 자격증 취득 건수, 교육생 만족도 조사</td><td>153명
153건
70점</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colspan="2">예방정비 활동</td><td>헬기 고장요인 자체 발견 건수</td><td>147건</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colspan="10">전략목표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준법질서를 바로 세운다.</td></tr>
<tr><td colspan="10">성과목표 1.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확산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td></tr>
<tr><td rowspan="4"></td><td rowspan="3">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td><td colspan="2">전국 경찰부대
교육훈련</td><td>경찰관기동대 교육훈련시간 평균</td><td>65시간</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colspan="2">집회현장 법 집행기준 확립</td><td>전국단위 워크숍 : 건당 10점
매뉴얼 제작·배포 : 건당 10점
훈령·지침 제·개정 : 건당 15점</td><td>30점</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colspan="2">경찰관기동대
근무만족도</td><td>외부 여론조사 업체 통해 전국 경찰부대원 대상
△교육훈련 △시설·장비 △부대 만족도 등 조사(10점만점)</td><td>7.0점</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인권·준법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td><td rowspan="2">준법
정보활동
노력도</td><td>준법관리 역량강화 <30%></td><td>(준법지원계 점검) + (시도청 자체 점검)</td><td>252회</td><td rowspan="2">정량</td><td rowspan="2">산출</td><td rowspan="2"></td></tr>
<tr><td>행정지도 건수 <20%></td><td>행정지도 건수</td><td>47회</td></tr>
</tabl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	(교육 이수율 × 50%) + (발전 노력도 × 30%) + (교육만족도 × 20%)	143.66	정량	결과	
	상황정보 역량 강화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법질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상황정보 활동 지수	①사전 정보활동 60% [법률지원 실적 40%+ 합동분석회의 실적 20%] ②대화경찰 운영 실적 40%[배치율 20%+활동실적 20%]	74.35	정량	산출	
		국민평가	여론조사 내용 중 집회시위 보장·안전 확보 노력·대화경찰 활동의 효과성 등 주요설문의 답변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 활용산출	68.00	정량	결과	
		상황 대응역량 강화율	①분석 역량 향상도 70%+②교육 이행률 30%,(年 교육인원 / 목표인원)	84.91	정량	산출 결과	
성과목표 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고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공공분야 공직자 부패사범 검거인원	'23년 1월 ~ 12월 공공분야 공직자 부패사범 검거인원	800명	정량	산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검거 인원	'23년 1월 ~ 1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검거인원	400명	정량	산출	
	경찰수사의 공정성·책임성·완결성 제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	법령·훈령 개정 횟수, 현장점검 횟수, 제도 개선 지침 시행 등 시행 건수, 평균 사건처리기간	77점	정량	결과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사건 및 수사 제도 점검·환류 내실화 노력도	사건심사 건수, 교육이수율, 첩보 건수 등	92점	정량	결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시·지침 수립 건수, 교육 건수 등	80점	정량	결과	
	경찰수사 수사 전문역량 제고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예산 확보 수준, 관련 예산 집행률, 관련 사업 진척도	90점	정량	산출	
		전문 수사 인력 확보(명)	- 전임수사관 인원, - 수사분야 경채자	100점	정량	산출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3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td><td></td><td>전문 수사인력 양성(명)</td><td>- 수사연수원 전문심화과정 수료 인원
- 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td><td>95점</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td><td></td><td>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만족도 조사</td><td>항목별 100점 만점 환산 후 평균값 도출</td><td>69.7점</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td><td></td><td>경검 협력관계 및 책임수사시스템 안착 위한 실무 상담·제도 연구</td><td>{(경검관계 실무 상담)+(현장 방문 및 간담회)+(정책 추진 및 수사제도 연구)+(수사실무 참고자료 발간)}×0.1</td><td>14.4</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td><td></td><td>수사권 개혁에 따른 국민 중심 경찰 수사의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td><td>{(전문가 면담 및 유관기관 예방)+(외부강연 및 세미나 등)}×0.1</td><td>11</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colspan="8">성과목표 3. 국민 중심 교통정책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한다.</td></tr>
<tr><td></td><td rowspan="3">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td><td>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등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도</td><td>①(법령개선)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 건당 배점
<table><tr><th>법률</th><th>대령</th><th>부령</th><th>지침 등</th></tr><tr><td>5</td><td>3</td><td>2</td><td>1</td></tr></table>※ 전부개정의 경우 가중치(300%) 부여
②(기관협업) 부처별 협업 사항에 대해 기관별 배점
<table><tr><th>외국 기관</th><th>민간 기관</th><th>정부 기관</th><th>타 국관</th></tr><tr><td>5</td><td>3</td><td>2</td><td>1</td></tr></table>→ ①, ②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실적 측정</td><td>242</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td><td>고령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td><td>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 ÷ 총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 × 1만</td><td>1.55</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td><td>장애인운전지원센터 교육실적</td><td>전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td><td>3,500명</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td><td>국민 중심의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td><td>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td><td>(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12) × 교통사고 심각도지수
=[(273×사망자수)+(32×중상자수)+(2×경상)+(1×부상)] / 차량등록대수</td><td>0.098</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abl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율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중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인구÷100,000)	1.6	정량	산출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금년사망자수) -(전년사망자수)] ÷ (전년사망자수) × 100	-6.6%	정량	결과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금년부상자수) - (전년부상자수)] ÷ (전년부상자수) × 100	-6.5%	정량	결과	
성과목표 4. 대테러・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등 안보역량 강화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안보수사 전문성 고도화(20%)	20	50	정량	산출	
			유관기관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15%)	15				
			언론대응 및 홍보활동 노력도(15%)	15				
		탈북민보호 체계 강화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	10	40	정량	산출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10%)	10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도(10%)	10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실시 건수(10%)	10				
		현장중심의 유기적 안보상황 관리	안보 상황 관련 분석·판단 보고서 및 공문 등을 통해 측정	13		정량	산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	(정보사범 검거 X 2점) + (그 외 사범 검거 X 1점)	1,135점		정량	산출	
		사이버안보 대응활동 지수	(사이버안보 입건 전 조사 개척 건수 x 2점 + (피해계정 등 보호조치 건수 x 0.1점	808점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 지수	(현장 지원 횟수 / 포렌식 지원 횟수 × 100) × 0.5 + (선별압수 건수 / 압수수색 건수 ×100) × 0.3 + (포렌식 전문 교육 이수 인원) × 0.2	131.8점	정량	산출	
	국내외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분석역량 제고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	(본청 일보이상 건수/첩보 제출 총건수) X 100	13.34%	정량	산출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입건전조사·수사 착수건수/사건첩보 제출건수) X 100	95.14%	정량	산출	
		안보정세 첩보 고도화	북한·해외 안보정세 분석서 생산(63건) + 분석서당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실시(보고서 건 당 1회)	126	정량	산출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강화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대테러훈련 실시에 따른 평가 점수	86.4%	정량	산출 결과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①대테러 인프라 구축 노력 및 홍보 ②테러리즘에 대한 관심도	110%	정량	산출 결과	
		위기관리역량지수	시도청·경찰서별 훈련 + 경찰서별 교육 횟수	1,943점	정량	산출 결과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완벽한 경호행사로 국가안전 확보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경호경찰 전문화 교육 (작년 대비 10% 교육인원 추가)	515명	정량	산출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	경호업무 담당 조직·부대 신설 건당 10점 전국단위 규칙·지침·매뉴얼 마련 건당 7점 신형 경호장비 도입 장비 1종당 3점	44점	정량	결과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경호업무 관련 경찰청 관계기관 협업 횟수(A~C등급)	41.2점	정량	산출	
전략목표Ⅲ.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성과목표 1.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을 구현한다.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조성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	치안현장 문제 해결 신규과제 발굴 건수(치안 분야 건수)	10	정량	산출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3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 rowspan="11"></td><td rowspan="2"></td><td>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안)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회의체에 상정</td><td>'18년에 이어 수립하는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안)을 종전처럼
경찰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과학기술
분야의 공신력있는 주요
회의체에 상정하여
추동력・범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로
안건상정 목표 설정</td><td>1</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rowspan="4">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과학치안 핵심 인프라
확충 토대 마련</td><td>R&D 연구성과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점)</td><td>만족도 조사 점수
(각 조사 부분 만족도의
평균)</td><td>81.3점</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중소기업지원 과제
신규 확보 건수(건)</td><td>'24년 중소기업 지원
신규과제 수</td><td>7건</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R&D 연구성과
현장활용 제고를
위한 실증관서
확대(건)</td><td>R&D 과제 실증
관서 확대 건수</td><td>10건</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치안산업대전을
통한 치안
장비·기술의
수출상담액(억원)</td><td>계약서 명시 수출상담액
('23년 수출상담액)</td><td>525억원</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rowspan="4">미래치안을 위한 경찰
정보화 기반 고도화</td><td>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td><td>① 통합포털 폴넷(20%) +
②스마트국민제보(30%) +
③모바일전자고지(30%) +④
폴메신저(20%)</td><td>151.9</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td><td>만족도 조사 결과</td><td>87.5</td><td>정성</td><td>결과</td><td></td></tr>
<tr><td>정보화업무
지원도</td><td>지원 항목에 대한
건당 점수 합산
<table><tr><th>지원 항목</th><th>건당</th></tr><tr><td>중기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발주 지원</td><td>1점</td></tr><tr><td>제안요청서
작성·검토
지원</td><td>2점</td></tr><tr><td>정보화사업
사업 관리</td><td>2점</td></tr><tr><td>정보시스템
기능 개선</td><td>1점</td></tr></table></td><td>155</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사이버 위협
대응 협업도</td><td>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NCTI)
등록 건수</td><td>88</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데이터기반 치안행정
기반 조성</td><td>치안데이터
발굴.분석 및
활용 지수(신규)</td><td>데이터분석수요
발굴(건)×0.4
+데이터분석(건) ×0.4
+정책반영(건)×0.2</td><td>9.3</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abl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치안데이터 표준화 연계지수(신규)	메타데이터시스템 연계 시스템(개) ÷ 전체 경찰청 시스템 중 연계 가능 시스템(개)	0.815	정량	결과	
성과목표 2.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수사기법 기반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과학수사 활동 지수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1.79	정량	결과	
		현장지원 지수	현장 과학수사관의 직무몰입도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전문역량함양·심신건강 등)을 정량 지수화하여 반영	42.1	정량	산출	
		대국민 교류 지수	국민 만족도 설문결과 × 0.5 + 진술청취이행률× 0.5	88.5	정량	결과	
	책임수사 지원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범죄분석 지원지수	∑(출동건수)× (건별활동점수) +(가점)	228점	정량	산출	
		멀티미디어 분석불가율	(영상·3D얼굴인식 분석 불가 건수) / (영상·3D 얼굴인식 접수 건수) × 100	15.5%이하	정량	산출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SCAS, GeoPros, 접속건수 합산	3,140,000건	정량	산출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현장감식 채증물 등록건수/ 현장임장건수 × 100	226%	정량	산출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수료 인원 × 1)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수료 인원 × 0.5)	637	정량	결과	
		수사관 지원 활성화	압수수색 현장지원건수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성공건수	1,770	정량	결과	
		분석결과 탐색·선별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탐색·선별 건수	212,718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성과목표 3.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① 국제교류{MOU 협조·체결)×0.3 + 청·차장급 교류×0.2 + 국·과장급 이하 교류×0.1} + ②정부치안외교지원{정부부처·국제기구 협력×0.25 + 국내외 의제발굴·사업지원×0.15}	22.1	정량	산출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치안인프라 전수 사업별 파견.교육기간 × 교육인원)	33.1	정량	산출	
		홍보지수	① 국외 홍보건수×0.4 + ②국내 홍보 건수×0.3 + ③ 내부 홍보 건수×0.3	16.2	정량	산출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40%)	국외도피사범 송환 D/B	600	정량	산출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30%)	인터폴 전용통신망 DB 관련 활동 내역	143	정량	산출	
		재외국민보호 역량 및 글로벌 치안역량 강화 실적(30%)	재외국민보호 관련 활동 내역	113	정량	산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예방교육실적	사이버예방교육 접수 및 처리현황 강사별 통계 '교육완료'항목	1,980건	정량	결과	
		사이버 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효율성 지수	490점	정량	결과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1인당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지수	정보통신망 침해형범죄(계정도용제외) 검거건수 / 사이버수사관 현원 ※ 검거지수 측정식은 하단 참조	34.5	정량	산출	
		피해 보호조치 건수	악성프로그램 유포·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이트 차단건수	424	정량	산출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3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 colspan="8">전략목표Ⅳ. 진취적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td></tr>
<tr><td colspan="8">성과목표 1. 현장중심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td></tr>
<tr><td rowspan="6"></td><td rowspan="3">정책추진 프로세스 관리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td><td colspan="2">국정과제(주요 정책과제) 全 성과지표 달성도</td><td>목표 달성한 지표 개수 ÷ 국정과제 全성과지표 × 100(%)</td><td>100%</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colspan="2">현장 인력 재배치</td><td>현장 재배치 건수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원 포함)</td><td>1,587명</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colspan="2">직급구조 개선</td><td>직급조정 인원</td><td>1,000명</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rowspan="3">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td><td rowspan="3">재정 지원도</td><td>예산확보 수준 (40%)</td><td>(경찰청 총지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총지출) ×100%
※ 본예산 기준</td><td>54.5</td><td rowspan="3">정량</td><td rowspan="3">산출</td><td></td></tr>
<tr><td>국유재산 신규사업 반영개소 (30%)</td><td>(내년도 국유기금 신규사업수 + 내년도 일반회계 리모델링 사업수)</td><td>150</td><td></td></tr>
<tr><td>예산집행률 (30%)</td><td>(3분기까지 집행액 /연간관리예산*) ×100
* 연간집행관리예산은 기재부에서 설정하며, 경찰청 총지출의 97%</td><td>75.3</td><td></td></tr>
<tr><td rowspan="2">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td><td colspan="2">교육 직무만족도</td><td>교육 분야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3개 문항 평균)</td><td>80.2</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colspan="2">인재육성 목표달성도</td><td>시도경찰청 전문교육 이수 인원÷ 시도경찰청 전체 인원*100</td><td>14.3</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colspan="8">성과목표 2.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높인다.</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활동으로 건강한 경찰 의식・문화 확립</td><td colspan="2">제도개선 실적</td><td>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실적
- 산식 : ∑(유형별 배점 × 조치수위별 배점)
< 배 점 >
<table><tr><th colspan="4">개선 유형별</th><th>조치 수위별</th></tr><tr><th>법령 제·개정</th><th>자체규정·지침 제·개정</th><th>기 타 행정</th><th>개선 요구</th><th>권고·통보</th></tr><tr><td>5.0</td><td>3.0</td><td>1.0</td><td>3.0</td><td>1.5</td></tr></table></td><td>240</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colspan="2">적극행정 면책 실적</td><td>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개최 건수</td><td>212</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colspan="2">내부비리 신고 실적</td><td>내부비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건수</td><td>82</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abl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예방·진단 중심 감찰활동 전개	감찰첩보 수집건수	경찰청 첩보수집건수 +시·도청 첩보수집 건수 +경찰서 첩보수집 건수	3,780	정량	산출	
		유가치 첩보 활용도	전체 감찰첩보 대비 유가치첩보 (감찰조사/사실확인/관련 기능 통보) 현황	37.0%	정량	산출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경찰청장 보고건수×10) +(경찰관서장 참고자료 건수×5) +(소관기능·청문기능 통보건수×3) +(대상자 통보 건수(사전경고 등)×2)	160점	정량	산출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全 직원 대상 메일 설문조사)	90%	정량	산출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성평등 관점 개선 의견 수용도(수용 건수/개선의견 건수) 기준, 경찰청·시도청·부속기관 합산 평균치	94.5%	정량	산출	
		성평등 교육 정착도	[(경감 이상 이수 인원 / 경감 이상 전체인원) × 100] × 0.4 + [(교육 참여 인원 / 전체 인원) × 100] × 0.6 *경감 이상 참여도(40%)+전 직원 참여도(60%)	94.3%	정량	산출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 경찰 구현	조직 내 인권문화 확산	인권소식지 조회수 + 인권아카데미 참여자 수 + 인권영화제 소재 공모 및 조회수	200,000건	정량	결과	
		인권영향평가 경찰청 인권위 안건상정 건수	경찰청 인권위원회 안건상정 건수	12건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성과목표 3. 처우 개선・사기 진작으로 현장의 활력을 높인다.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마음동행센터 상담제공 건수	30,217	정량	산출	
		상담사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이수) (신규지표)	상담사 1인당 연 4회(분기별 1회) 교육 이수율 평균값	90%	정량	산출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해당연도 취업인원 / 전직지원센터 컨설팅인원	73%	정량	산출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지원으로 현장활력 제고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10월 중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86.0점	정성	결과	
		연가사용 실적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 (1~10월)	경정·5급 이상 : 52% 경감·6급 이하 : 62.5%	정량	산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인사관리 4개 항목 평균값	81.1점	정성	결과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경찰청장 표창 발부 대비 현장 우수사례 포상 비율	52.9%	정량	산출	
		인적 구성의 성별 균형	여성경찰관 비율	15.4%	정량	산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각 계정 통계 활용 ※ ① 경찰청 SNS 5채널 친구 수 ② 경찰청 SNS 5채널 좋아요 수 ③ 경찰청 SNS 5채널 콘텐츠 수 ④ 블로그 기사 조회 수 ⑤ 경찰내부 직원 활용 콘텐츠 건수	① 1,831,116 ② 1,399,649 ③ 1,586 ④ 848,690 ⑤ 24건	정량 + 정성	결과	
		주요정책 언론홍보 실적	언론보도 실적 취합	1,644건	정량	결과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	온라인 이슈 및 오보 대응 실적 취합	250건	정량	결과	

붙임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성과목표 1.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1 플랫폼 치안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 주변 불안·불법요인 해소	범죄예방정책	국정 63-2 업무 Ⅰ-다
	2 범죄·재난 대비 예방적 정보활동으로 국민안전에 기여	정보분석	업무 Ⅲ-라
	3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	치안상황관리	업무 Ⅲ-가 업무 Ⅳ-가, 추진-다
	4 외사치안활동 고도화를 통해 사회안전 확보	외사기획정보	업무 Ⅰ-나, Ⅱ-라 Ⅲ-라, Ⅳ-라
	5 자치경찰제 내실화	자치경찰	국정 111-5 업무 Ⅰ-다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 한다			
	6 [핵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고도화	여성안전기획	국정 69-2 업무 Ⅰ-나
	7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업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아동청소년	국정 69-2 업무 Ⅰ-나
	8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여청수사	국정 96-2 업무 Ⅰ-나
	9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확립	수사인권	국정 64-1·2·5 업무 Ⅰ-나, Ⅱ-마, Ⅳ-마
성과목표 3.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10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 수사 활동 강화	경제범죄수사	국정 63-2, 업무 Ⅰ-가, 나
	11 강절도·폭력 등 악성범죄 총력 대응	강력범죄수사	국정 63-2·3, 64-2, 69-1 업무 Ⅰ-가, Ⅱ-다
	12 마약·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조직범죄수사	국정 63-2 업무 Ⅰ-가
	13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	사이버범죄수사	국정 58-1, 63-5, 64-3 업무 Ⅰ-가, 나 Ⅱ-나
성과목표 4. 당당한 법집행을 지원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14 맞춤형 장비 개발·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장비운영	업무 Ⅰ-라, Ⅳ-가 추진 -다
	15 입법대응 및 현장 법률지원 강화, 국민안전 보호 기반 확충	규제개혁법무	업무 Ⅰ-라, Ⅲ-라
	16 치안현장 항공 지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항공	업무 Ⅳ-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 준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성과목표 1.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확산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17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경비	국정 69-4 업무 Ⅱ-가
	18 인권·준법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관리	국정 69-4 업무 Ⅱ-가, Ⅲ-라, Ⅳ-가
	19 상황정보 역량 강화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정보상황	국정 69-4 업무 Ⅱ-가
성과목표 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고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20 [핵심]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반부패 공공범죄수사	국정 69-4 업무 Ⅱ-나
	21 경찰수사의 공정성·책임성·완결성 제고	수사심사정책	국정 04-3 업무 Ⅱ-마
	22 경찰 수사 전문역량 제고	수사기획	국정 04-3 업무 Ⅱ-마
성과목표 3. 국민 중심 교통정책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23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	교통기획	국정 69-1 업무 Ⅱ-다
	24 국민 중심의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운영	국정 69-1 업무 Ⅰ-나, Ⅱ-다 Ⅳ-가, 다
	25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교통안전	국정 69-1 업무 Ⅱ-다
성과목표 4. 대테러·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26 책임안보 수사체계 고도화 등 안보역량 강화	안보기획관리	업무 Ⅱ-라
	27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안보수사지휘	국정 101-1 업무 Ⅱ-나
	28 국내외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분석역량 제고	안보범죄분석	업무 Ⅱ-라
	29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강화	대테러위기관리	업무 Ⅱ-라
	30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완벽한 경호행사로 국가안전 확보	경호	업무 Ⅱ-라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Ⅲ.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미래치안을 전개한다			
성과목표 1.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을 구현한다			
	31 **[핵심]**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조성	미래치안정책	국정 69-3 업무 Ⅳ-가, 다
	32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과학치안 핵심 인프라 확충 토대 마련	과학치안산업	국정 69-3 업무 Ⅳ-가, 다
	33 미래치안을 위한 경찰 정보화 기반 고도화	정보화기반	업무 Ⅳ-다, 추진-나
	34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기반 조성	데이터정책	업무 Ⅳ-가
성과목표 2.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수사기법 기반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35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과학수사	국정 69-3 업무 Ⅱ-마, Ⅲ-다, 업무 Ⅳ-가, 나
	36 책임수사 지원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범죄분석	업무 Ⅱ-마, Ⅲ-다 Ⅳ-나
	37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업무 Ⅳ-나
성과목표 3.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38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	업무 Ⅳ-라
	39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인터폴국제공조	국정 100-1 업무 Ⅰ-가·나, Ⅳ-라
	40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수사기획	국정 101-5 업무 Ⅳ-나
	41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사이버테러대응	국정 101-1·3·5 업무 Ⅱ-라, Ⅲ-가, Ⅳ-라
전략목표Ⅳ. 진취적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42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혁신기획조정	업무 Ⅳ-다
	43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	업무 추진-가, 다
	44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정책	업무 추진-가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2.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높인다.			
	45 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 활동으로 건강한 경찰 의식·문화 확립	감사	업무 추진-나
	46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예방·진단 중심 감찰활동 전개	감찰	업무 추진-나
	47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양성평등정책	업무 추진-나
	48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 구현	인권보호	업무 추진-나
성과목표 3. 처우 개선·사기 진작으로 현장의 활력을 높인다.			
	49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복지정책	국정 14-3 업무 추진-다
	50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지원으로 현장활력 제고	경무	업무 추진-나
	51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	업무 추진-가
	52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신뢰·지지기반 마련	홍보	업무 추진-다